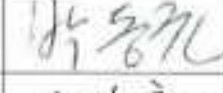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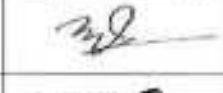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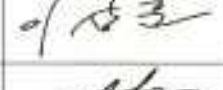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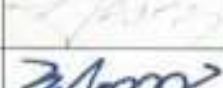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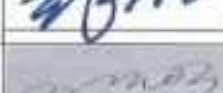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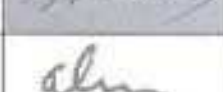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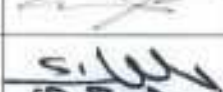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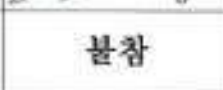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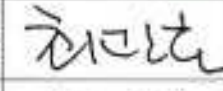

2021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경 찰 청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21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

기 간	'21. 3. 25.(목) ~ 31.(수)						
의 안	'21년도 경찰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자체평가계획						
심의안건	위 의안에 대한 심의						
심의결과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 28)명 중 28)명이 찬성 반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수정의결, 부결)함						
이건사항							
대상인원	30명	의 결 인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위 원	서 명	
의결인원	28 명		차용진 (위원장)		금현섭		
불참인원	2명		허금탁		이찬희	이찬희	
			박동균		장다혜		
			이상훈		신승근		
			김익제		김수진		
			강원석		박미랑		
			최여경		김지윤	불참	
			조준익		조은경		
			안상현		송진섭		
			강영석		조진형		
			윤지섭		김상옥		
			최경희	불참	김경희		
			이승은		차 장		
			서찬동		기획조정관		
			이은영		정보화장비 정책관	이은영	

※ 코로나19 상황으로 외부위원들은 서면(e-mail) 심의·의결 진행

목 차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4
2. 2021년도 정책 추진방향	8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경찰청 일반현황	15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8
III.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I	28
전략목표 II	170
전략목표 III	308
IV.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411
2. 평가결과 환류체계	415
3. 변화관리 계획	417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419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421
1-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주요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433

I .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21년 정책 추진방향

총 평

▶ **안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기본사명에 헌신하며 안정적 치안 유지

정부업무평가 결과, '18년·'19년 '보통' → '20년 '종합우수' 기관으로 도약
국정과제·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쏠 분야 우수(A) 등급

- 그 외 공신력 있는 국내외 평가에서도 눈에 띄는 성적을 거두며 치안강국의 위상 제고

※ (국외) △美사회발전지수 '안전' 163개국 중 5위(범죄안전인식 1위) △美사법정의프로젝트(WJP) '법질서 지수' 128개국 중 17위 △외래관광객 만족도 8년 연속 '치안' 1위 △美외교잡지(6월), "韓경찰에게 배우자"
(국내) △중앙부처 SNS대상(9년연속) △민원제도개선대상 정부혁신(금상 2) △적극행정우수상 2 등 각종 경진대회 수상

▶ **존경과 사랑** 우수한 역량과 강도 높은 자기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 제고

1.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경찰활동으로 일상의 평온 확보

□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쏠 경찰의 역량 집중

- 코로나19에 맞서 전국 관서에 총력대응 체계 구축, 보건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방역방해 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사회불안 해소

- (방역지원) △신속대응팀 8,559명 편성, 소재추적(15,474명)·동선확인(51,646명) △자기격리 이탈 소재확인(946명), 불시점검(21,075명) △고위험시설 합동점검 및 생활치료센터 경력지원 등
- (방해행위 처벌) △허위조작정보 유포(276명) △마스크 판매사기(563명)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2,170명) △마스크 미착용 시비(609명)

— 국제사회에 방역적 경찰활동 노하우 전수, 'K-방역' 세계화에 일조

※ △영문자료 배포(4월) △UNDP 웹세미나(4월, 37개국) △인터폴 웹세미나(5월, 22개국)

- 기록적인 집중호우 등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복구 전념

※ △집중호우(12회) △태풍(3회) 관련 예방순찰·교통관리·실종자수색 등 연 267,982명 동원

□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안전 공동체 구현

○ ‘텔레그램’ 등 이용 디지털 성착취 근절 및 소통에 기반한 여성보호체계 확충

-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발족(3월), ‘박사’, ‘갯갯’ 등 성착취사범 3,575명 검거(245명 구속)
- △여성안전 정책자문단(5월) △여성안전 종합계획(4월) △성평등운영규칙 제정(7월)
- △여청강력팀 확대(8월) △이주여성 보호협의체(7월) △여성 불안환경 점검·개선(CPTED)

○全社会적 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아동·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 (아동) △학대 위기아동 전수조사(6~11월) △학대 신고현장 전담공무원 동행출동 강화(9월)
△편의점 업계 ‘도담도담’ 캠페인 진행(8월) △2회 이상 신고된 아동 응급조치(12월)
- (청소년) △청소년 정책자문단 △부모참여 선도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중심 SPO 활동

○어린이 등 교통약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교통사망사고 대폭 감소

- △‘민식이법’ 시행(3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태호·유찬이법’ 시행(11월, 통학버스 안전)
△원스톱 면허반납(6월, 민원제도 大賞) △비접촉 음주감지기 개발·시행(5월) △고령자 안전대책(9월)

□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각종 불법행위 엄단

○반복적·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국민 생활주변 범죄에 선제적 대응

- △생활주변 폭력 2.5만명 검거(9~10월) △강절도 3만명 검거(7~9월) △조폭 일제점검(8~9월)
- △마약류 범죄 2,640명 검거(10~12월) △사이버 도박 7,207명 검거 △외사안전구역 확충(23~28개소)

○악화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경제사범 척결

- △서민경제 침해사범 7.6만명 검거(2~10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2천명 검거(8~11월)
△기술유출사범 345명 검거 △불법사금융 6.7천명 검거 △범죄수익 813억 보전

□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대화과 소통, 법과 원칙에 입각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 (대화경찰) '19년 5월~'20년 12월 전체 집회 中 37% 배치, 갈등완화 등 2만5천여건 △행정한류 콘텐츠 선정
- (인프라) △집시법규 개정(금지장소(6월), 소음기준(9월), 살수차(9월), 채증(10월)) △안전펜스 개발(10월)

○21대 총선(4.15.)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2,241명 단속)

○드론 테러 등 다각화된 위협에 대비, 인프라 확충 및 위험인물 차단

- (인프라) △특공대 3개소 추가 △경찰견 센터 개소(6월) △드론테러 대비 전파차단기 확충
- (테러 위험인물) 입국금지(147명) · 강제퇴거(27명) / (탈북민) 사회배출 5년내 보호강화

2. 부단한 개혁과 쇄신으로 신뢰받는 경찰像 확립

□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며 책임있는 경찰개혁 추진

- ‘수사권 개혁’에 담긴 국민적 뜻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매진
 - － ’21. 1. 1.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에 맞춰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및 하위법령(수사준칙, 수사규칙 등) 정비
 - －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 ‘책임수사’ 체계구축을 위한 수사시스템 혁신

- (전문성) △ 수사부서 과·팀장 자격제(2월) △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 ‘선발 종합평가제’(2월)
△ 수사지휘 역량 진단 Tool 시행(8월) △ 디지털포렌식 KOLAS 인증 △ 지문관리체계 ISO 인증
- (공정성) △ 영장·수사 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총 606명) 배치 △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운영
△ 사건배당 표준화(5월) △ 전자기기 사용 메모권 보장(4월) △ 조사환경 개선(22개서)
- (개정 형사소송법 대비) △ KICS 개편(11월) △ 불송치 결정서 작성기법 제작 및 교육(11월)

- 민주·분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주민밀착·지역특화 경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법안 국회 통과(12.9.) 및 공포(12.22.)
-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화(경직법, 경찰법)하고 정치 관여시 처벌 규정을 마련(경공법)하는 등 정보경찰 개혁의 핵심과제 법제화
- 민주·인권의 가치를 실현하고, 피해자를 우선하는 경찰행정 고도화

- (인권) △ 인권강령 선포(6월) △ 집회시위 영향평가 도입(9월) △ 상담센터 수도권 재편(5월)
- (역사) △ 5·18경찰 징계취소(5월) △故이준규 서장 경찰영웅 현양(10월) △ 임시정부 자료집(4월)
- (피해자) △ 회복적 활동(4월)·범죄피해평가(7월) 확대 △ 2차피해예방계획(3월) △ 장발장은행 MOU(2월)

□ 4차 산업혁명·초국가적 범죄 등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각종 경찰활동에 AI·드론·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 △ AI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 도입(59개서) △ 폴리스랩 연구성과(7개) 현장실증
△ 실종자 수색용 드론 전국 확대(6월) △ 차세대 112, 순찰차 영상관제 시스템 도입(12월)
- △ 재택근무 도입(7월) △ 모바일 교통민원·운전면허확인 서비스(6월) △ 폴리폰 영상회의(11월)

- 제한된 교류 여건 속에서 국제경찰공조를 확대하고 K-COP 위상 제고

- △ 인터폴 펀딩 조인식(2월) △ 글로벌 IT기업 공조요청 일원화(회신율 58%→89%)
- △ 치안산업박람회 및 CSI·사이버범죄 국제회의(10월) △ KOTRA(9월)·KIST(11월) MOU 체결

□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시스템 정비로 현장의 자긍심 제고

○ 인사·복지제도 및 치안인프라 개선을 통해 일선경찰 처우증진

- (인사) △경감근속 기간단축(10년→8년) △정년임박자 우선근속(11월) △승진시 동료평가 강화
- ('21년 인력·예산) △소요정원 2,785명 ↑ △경정·경감 479명 직급상향 △예산 2.0% ↑
- (복지) △직장어린이집 22개소 확충 △예방접종 예산 확보(15억원) △퇴직자 일자리 발굴(14개)

○ 당당한 법집행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결정에 현장참여 확대

- △공무원 책임보험 가입(2월) △경찰법률보험 보장확대(6월) △긴급車 특례범위 확대(12월)
- △동행메신저 △청년경찰정책단 △경비경찰 자문단 △지역경찰 자문단(지역경찰소식지) △성과평가 자문단 △교육발전 동행단 △도교법 자문단 △책임수사추진본부 자문단 △112현장 자문단 등

□ 실무 중심의 전문 역량을 함양하고 청렴한 경찰 이미지 구현

○ 시뮬레이션 등 실습형 교육을 확대하고 부서장 역량·책임성 강화

- (교육) △교육기관→시뮬레이션 훈련·평가 도입 △사·도경찰청 교육센터→팀장 상시훈련 체계 구축
- (부서장) △부서장 책임제 종합계획(10월) △적극행정 면책 가이드(9월) △관용차 지원 강화(8월)

○ 의무위반의 근원을 제거하는 경찰관 성비위·반부패 대책 마련

- (성비위) △성희롱 처리규칙 제정(11월) △대상자별 대응가이드(12월) △'관리자 책임제' 도입 등
- (반부패) △반부패협의회 발족(12월) △총경 이상 정기순환 인사제 △접촉금지 내실화 등

3. 보완 필요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부 부작용이 경찰활동에도 영향, 치안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약화*되고 범죄 양상이 변화**

* 예) 코로나 19로 돌봄공백이 커지자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

** 예) 비대면 생활양식 확산으로 온라인 범죄·이륜차 사고 우려 확대

○ 경기침체로 재산범죄 증가, 특히 보이스피싱 수법진화로 피해액 급증

※ '19년 대비 '20년, △사기범죄 발생 13.4% ↑ △보이스피싱 피해액 11.0% ↑

○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미담사례*가 여러 차례 조명을 받았으나, 일부 경찰관의 고비난성 비위가 보도되며 긍정적 이미지 퇴색

* △우한교민 수송 자원 △급류에 휩쓸린 아이 구조 △장기기증 경찰관 등

2021년의 의의

▶ 제2의 경찰 창설 75년 국가경찰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대전환기

- ✓ 수사권 개혁(1.1. 개정 형소법 시행) ⇨ 수사주체로서 온전한 권한과 함께 **막중한 책임** 부여
- ✓ 자치경찰제 ⇨ 주민밀착 경찰사무와 자치행정 융합, 분권·안전 가치 실현의 **큰 도전에 직면**
- △창경(1945년) △경찰청 독립(1991년) 이후 가장 중대하고 뜻깊은 역사적 분기점

▶ 기회이자, 위기 국민적 기대와 우려 교차, **역량증명·기대부응**의 시험대



<“수사권” 관련 키워드>



<“자치경찰제” 관련 키워드>

※ 출처: 행안부 빅데이터 플랫폼 ‘헤인’(최근 1개월 간 소셜미디어 검색)

- 성공적인 개혁완수와 안전확보를 통해 경찰에 대한 신뢰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면서, 실망과 우려가 가중될 수도 있는 '위기' ⇨ **조직의 명운이 결정**

1. 대외적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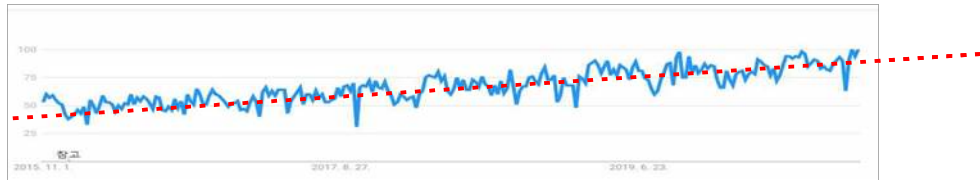
□ 총체적 혁신으로 국민의 경찰로 탈바꿈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

- 새로운 경찰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경찰개혁의 목적과 취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해내야 할 엄중한 사명 부여
- 국가 수사·치안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제도로부터 야기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민 권익·편익의 가시적 향상 도모
- 이는 수사·생안·교통 등 일부 기능이 아닌, **쫄** 경찰의 과제이며, 제도 뿐만 아니라 업무·문화·인식 등 모든 틀의 대대적 변화 요구
- 동시에, 인권친화적 경찰행정을 체질화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현장에 착근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경찰개혁의 토대를 완성해야 할 시점

□ 소외계층 · 서민생활에 대한 안전망 보강 시급

- 연이은 재난·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

※ 최근 5년('15~'20)간 '안전' 키워드 검색량(구글트렌드)



- ‘거리두기 보편화’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대상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등 ‘안전격차’가 심화되며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 집중 우려
- 침입절도·생활폭력 등 일상을 병들게 하는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도 긴급
- 한편으로, '20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보강된 입법적·정책적 기반과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의 현장대응력 향상 기대

- **(여성·청소년)** △응급조치에 현행법 체포 추가(가폭처벌법, '21.1. 시행) △전자발찌 관리 강화(사법경찰 직무법, '21.6. 시행) △포털의 성착취물 삭제의무(정통망법, '20.12. 시행) △성매수 대상 청소년 ‘피해자’ 명시(청소년성보호법, '20.11. 시행) △청소년 랜덤채팅 이용금지(여가부 고시, '20.12. 시행) 등
- **(아동)** △수사 의무화, 조사장소 확대 등(아동학대처벌법, '21.1. 법통과)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아동복지법, '21.3. 시행) △실종아동 정보 문자전송(실종아동법, '21.6. 시행)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기 확충(천여개소) 및 주차 금지구역화(도교법, '21.10. 시행) △통학버스 적용 확대(도교법, '20.11. 시행)

□ 경제 · 사회 · 정치적 변화와 현안 관련

- 경제위기*로 재산 범죄가 늘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위협이 증가, 특히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고도화되고 있는 각종 사기범죄에 대한 대책 긴급

* '19년 대비 '20년 △취업자 수 22만명↓ △소득 최상위~최하위 간 차이 확대 <통계청>

- 고령화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려 불안요소가 증가하고, ‘코로나 우울(블루)’·경제적 빈궁 등으로 인한 자살**에 주목 필요

* △65세 이상이 인구의 15.7%(’20년) △전체 가구 중 1인가구 30.2%, 그중 절반은 여성(’19년)

** '19년 대비 '20년 상반기 기준 △20대 여성 자살 43%↑ △60~80대 자살 10%↑ <복지부>

- 코로나19로 집회가 未개최·연기되면서 분야별 정책적 요구·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누적, 감염병 위기상황 완화시 급증 가능성

* '19년 대비 '20년 집회건수 18.7%↓, 집회 참가 인원 66.5%↓

- 지자체장 재보궐 선거(4.7.)의 공정한 관리도 중요한 현안

• <참고> IMF위기 당시('98년) 사기 17.1%, 자살 42.0%, 집회시위 21.3% 증가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상과 초연결 사회의 현실화

-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비대면’ 생활양식이 정착되고 생활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디지털 기반사회가 조기 도래, 사이버범죄 폭증
 - ※ “2021년은 코로나 일상(위드 코로나)의 원년”<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
 - ※ ’19년 대비 ’20년, 사이버범죄(29.7%↑), 그중 사이버 금융범죄(92.1%↑) → ’21년 검찰 직접 수사가 배제되는 분야인 만큼, 경찰 수사역량과 민생치안 확보의 가늠자 역할을 할 가능성
- 특히, 정보가 집적되고 전방위로 연계되는 초연결망을 타고 개인정보 등에 대한 해킹위험이 심화, 가짜뉴스(인포데믹)·음란물 유포도 증가 전망
 - ※ ’19년 대비 ’20년, △정통망 침해 범죄(19.4%↑) △불법콘텐츠 범죄(20.9%↑)
- △개인형 이동수단 △이륜차 △드론 관련 범죄·사고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AI를 악용한 범죄(딥페이크 등)가 우려되는 등 新기술 사각지대 주의 필요
 - * ’19년 대비 ’20년,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집중) 98.4%↑ △이륜차 교통사망(집중) 5.8%↑ △‘드론’ 관련 112신고 31.6%↑

□ 세계적 현상에도 주목하며 거시적 관점에서 대비

- 기후변화로 재해·재난(태풍한파폭염산불 등)이 일상화된 위험사회 도래
 -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탄소배출 감축에 동참* 필요, 정부도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범정부적 친환경 정책 추진
 - * ’21.1월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15) 이행이 의무화되는 ‘新기후체계’ 돌입(우리나라는 ’30년까지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 / P4G(녹색성장 연대) 2차 정상회의 한국 개최(5월)
- 국제적으로 △국경폐쇄 △생산라인의 자국이전(리쇼어링) 등 ‘지역화’가 강화되는 중에서도, 보건·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원격 통신 기술에 기반한 글로벌 연대가 강조되는 ‘세방화’* 추세 가속화
 - * 세계화(globalization)+지방화(localization) : 세계화와 지역화가 함께 심화되는 현상을 지칭
- ‘자치경찰’ 도입으로 지역화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앞선 역량을 바탕으로 한 치안한류(K-COP)를 국가적 브랜드로 성장시킬 호기

2. 대내적 여건

□ 개혁과제 수행 및 완수를 위한 추동력 확보 필요

- 경찰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들을 현장에 안착시켜 체감성으로 이어지도록 세밀하고 체계적인 정책관리가 필수
 - － 수립된 계획이 현장의 공감을 얻고 실제로 이행되는지, 장애요인은 없는지 끊임없이 모니터링·소통하는 ‘정책환류’ 일상화
- 한편, 국수본·자치경찰 등으로 부서 간 경계가 보다 뚜렷해지는 직제개편 이후 조직 내 협업·소통이 약화될 우려 존재
 - － ‘조직역량의 총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는 등 ‘융합행정’ 고도화 필요
- 높아진 책임성에 걸맞은 청렴성 및 성인지 감수성 함양도 시급

□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춘 업무혁신도 긴요

- 초고속으로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최적화된 직급별 교육훈련 체계 혁신과 부서장 중심의 민첩한(agile) 조직구조의 필요성 부각
- 의경폐지*에 따른 인력감소에 대비한 업무효율화·자동화도 필요
 - * '21년 112타격대 포함 32中 폐지 예정, '23년 폐지 완료
- ‘빅데이터 플랫폼’(12.28. 정식운용)을 비롯, 첨단과학기술 활용폭이 넓어짐에 따라 예방적·과학적 경찰활동 고도화 기회

□ 업무환경과 여건 개선에 대한 현장의 기대 고조

- 수사권 개혁 등 조직 위상이 제고되고,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내부의 목소리가 결집되면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처우개선 요구
- 소신껏 당당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 확충도 필수
- ‘週52시간 근무 전면적용’(’21.7.) 등 사회 분위기와 90년대생 공무원의 새로운 가치관에 맞는 일·생활 균형 및 건강한 조직문화 요구 집중
 - ※ 90년대생 공무원이 추구하는 가치 : ‘일·가정 양립(67.7%)’ > ‘일한 만큼의 보상(44.6%)’ 順(행안부)

3. 정책추진 방향



<총괄>

- 비전·전략·원칙 등 기존 정책방향의 골격을 유지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연속성을 확보하고 공유된 치안철학을 조직 전반에 확고히 착근

<비전>

- 경찰의 기본사명이자 국민의 가장 큰 요구인 ‘국민안전’을 빈틈없이 수호하여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한편,
 - 진정성·공정성·책임감 있는 경찰활동을 통해 국민의 인정과 공감을 얻고 신뢰로 이어지는 선순환 속에서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도약

<전략과 일하는 원칙>

- 기존 3대 전략(이웃·책임·공감경찰)에 ‘국민체감 경찰개혁’을 추가하여 국민 중심 경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

- (경찰개혁) 법·제도 개혁의 목적과 취지를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창출
- (이웃경찰) 범죄기회·징후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체질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서민생활 보호
- (책임경찰) 불법과 범죄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을 통해 반칙과 특권이 없고 법과 원칙이 우선되는 성숙한 공동체 구현
- (공감경찰) 인권·청렴 정책의 내실을 다지고 경찰관 자긍심을 제고하는 한편, 글로벌 치안활동의 외연을 넓혀 국민·현장과의 공감대 확장

– ‘4대 핵심과제*’를 각 전략의 부제로 설정하여 목표의 선명성 부각

* △ 경찰개혁 완수 △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 공정한 법집행 △ 자긍심 제고

<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 >

국민체감 경찰개혁	• 수사권 개혁 정신을 담은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 • 분권과 안전이 조화된 자치경찰제 안착 • 지속가능한 경찰개혁의 토대 완성
튼튼한 이웃경찰	•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 체질화 • 불편·불안·불만 없는 평온한 일상 확보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치안 사각지대 해소 • 부단한 교육·훈련으로 준비된 치안전문가 양성
당당한 책임경찰	•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관행 정착 • 소신있고 당당한 현장 법집행 지원 • 포스트 코로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 • 국가적 위기상황 대비 태세 확립
따뜻한 공감경찰	• 인권존중 문화 정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K-COP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치안표준 선도 • 청렴하고 친근한 경찰상 확립 • 일선 경찰관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 ‘일하는 원칙’의 요소를 상기하기 쉽도록, ‘기본’을 상징하는 알파벳 ‘ABCD’와 결부시켜 조속한 체질화·내면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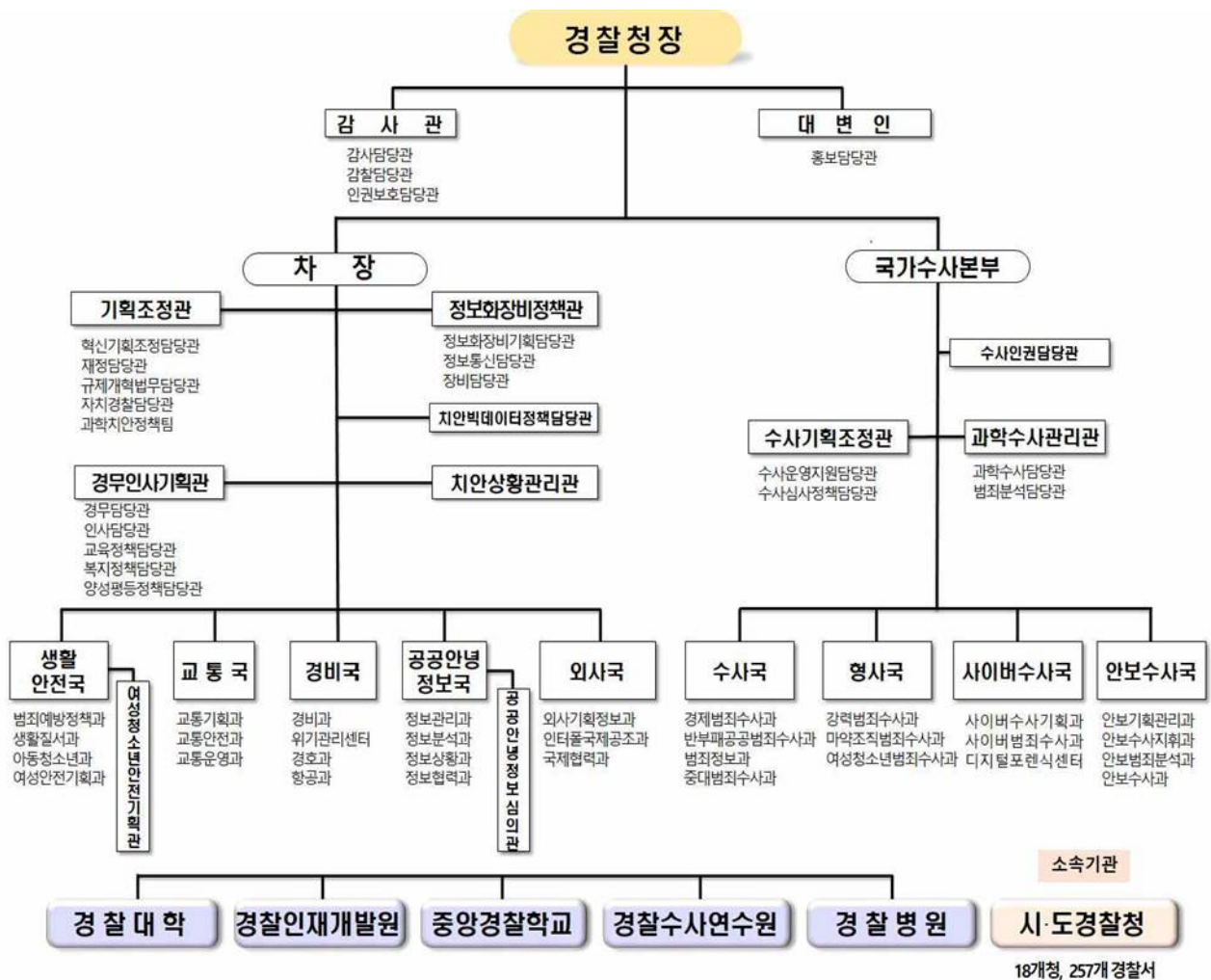
※ ‘마음가짐’(진정성·공정성·책임감)을 출발점으로, ‘기반’과 ‘역량’을 갖추고, 종국적으로 선제적·능동적·적극적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순차적으로 표현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경찰청 일반현황

(1) 조직

(’21. 2월 말 기준)



- ✓ 본청은 1차장, 1본부, 9국, 10관, 32과, 22담당관, 1팀
- ✓ 부속기관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 ✓ 시·도경찰청 18개, 경찰서 257개, 지구대 599개, 파출소 1,427개

(2) 인원

(정원 '21. 2월 말 / 현원 '21. 1월 말 기준)

□ 인력 구성

구분	총 원	경찰관	의 경	일반직	임기제	교육직
정원	139,997 (100%)	126,746 (90.5%)	7,242 (5.2%)	5,056	931	22
				6,009(4.3%)		
현원	141,603 (100%)	128,416 (90.7%)	8,369 (5.9%)	4,115	681	22
				4,818(3.4%)		

□ 계급별(이하 경찰관)

구분	총계	치안 총감	치안 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정원	126,746	1	7	30	77	575	2,885	9,745	15,762	25,883	32,093	39,688
	100%	0.5% (690)					2.3%	7.7%	12.4%	20.4%	25.3%	31.3%
현원	128,416	1	6	30	90	610	2,805	15,387	49,417	21,214	22,433	16,423
	100%	0.6% (737)					2.2%	12.0%	38.5%	16.5%	17.5%	12.8%

□ 관서별

구 분	총 계	경찰청	부속기관	시·도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역경찰
정원	126,746 (100%)	1,199 (0.9%)	533 (0.4%)	25,843 (20.4%)	49,014 (38.7%)	50,157 (39.6%)
					99,171(78.2%)	
현원	128,416 (100%)	1,335 (1.0%)	609 (0.5%)	25,851 (20.1%)	50,346 (39.5%)	50,275 (40.0%)
					100,621(78.4%)	

□ 기능별

구분	총계	대변인	간사	정무화	경무	치안 상황	경비	정보	외사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지역 관서	부속 기관
										과수	수사	형사	사이버	아보	생안	여청	교통		
정원	126,746	169	1,883	1,132	3,240	4,647	14,926	3,018	1,215	1,271	9,993	9,430	2,043	2,281	3,416	6,866	10,526	50,157	533
현원	128,416	185	1,870	1,095	6,387	4,906	13,682	2,854	1,444	22,439				2,120	9,940		10,610	50,275	609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1	'22	'23	'24	'25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119,651	123,321	127,615	134,085	141,558
(전년대비증가율, %)		3.1	3.5	5.1	5.6
○ 총계	120,140	133,292	139,881	147,641	156,312
(전년대비증가율, %)		10.9	4.9	5.5	5.9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91,163	97,544	104,372	111,679	119,496
(전년대비증가율, %)		7.0	7.0	7.0	7.0
○ 기본경비	3,704	3,815	3,930	4,047	4,169
(전년대비증가율, %)		3.0	3.0	3.0	3.0
○ 주요사업비	24,784	31,391	30,989	31,249	31,793
(전년대비증가율, %)		26.7	△1.3	0.8	1.7
□ 예산					
○ (총)지출	119,651	123,321	127,615	134,085	141,558
(전년대비증가율, %)		3.1	3.5	5.1	5.6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일반회계】					
· (총)지출	118,824	122,466	126,726	133,158	140,589
(전년대비증가율, %)		3.1	3.5	5.1	5.6
· 총계	119,267	132,362	138,906	146,586	155,064
(전년대비증가율, %)		11.0	5.0	5.5	5.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총)지출	781	836	877	954	1,143
(전년대비증가율, %)		7.0	4.9	8.8	19.8
· 총계	827	883	926	1,004	1,195
(전년대비증가율, %)		6.8	4.9	8.4	19.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총)지출	46	47	49	51	53
(전년대비증가율, %)		2.2	4.3	4.1	3.9
· 총계	46	47	49	51	53
(전년대비증가율, %)		2.2	4.3	4.1	3.9

* '21년은 예산, '22년 이후는 기재부에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 상의 예산액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전략계획과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한 과제 선정

- 「성과관리 전략계획('20~'24년,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기반으로
△ 100대 국정과제 △ 국정철학(사회적 가치 등) △ 대통령·국무총리 지시사항 △ 주요업무계획 △ 연두업무보고 등을 고려한 과제 발굴
- 경찰의 기본 사명인 '국민안전 확보'에 충실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개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과제 중심 설계

□ 현장의 노력이 경찰 전체의 성과로 귀결되는 평가체계 구성

- 연초 자체평가위원회 대면 컨설팅을 거쳐 시행계획 관리과제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치안종합성과평가의 성과지표를 상호 연계
- 부분적·단편적 성과관리 방식을 탈피하여 업무 전반에서 국정 기조와 관서·부서·개인의 성과가 연계된 통합 성과관리체계 구축

□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 및 환류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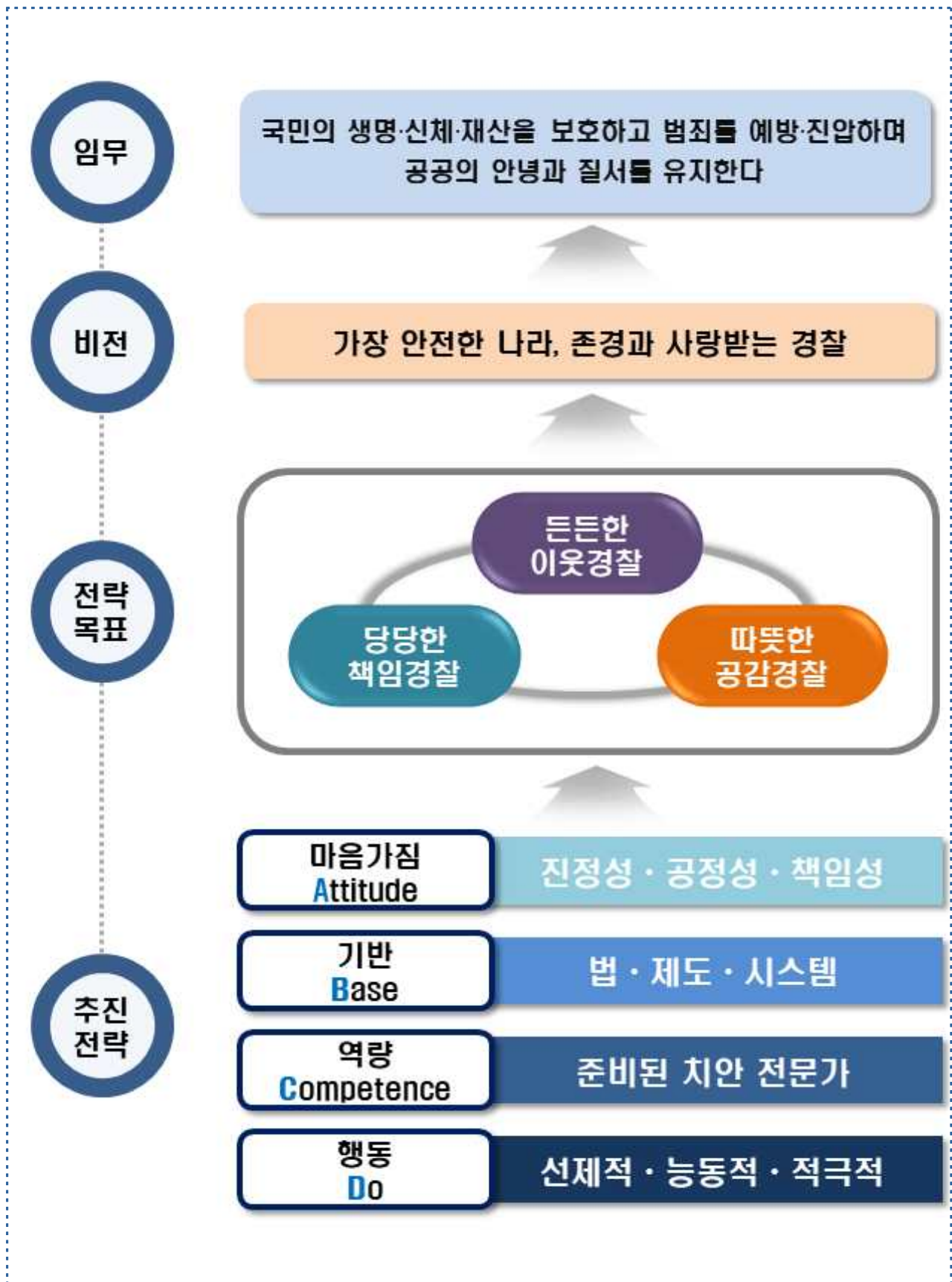
- 자체평가위원회와 성과관리 지원팀* 주관으로 과제 이행상황 점검을 강화, 부진과제 독려 등 계획에 따른 업무추진 관리

* △ 평가지원 총괄팀(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분과별 지원팀(성과담당자 및 외부전문가)

- 각 정책과제를 항목별(△ 계획수립 적절성 △ 정책추진 노력도 △ 목표 달성도·정책효과성 △ 정책홍보) 평가매뉴얼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성과중심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결과 활용도 제고*

* △ 성과상여금·성과연봉에 반영 △ 심사승진·각종 선발 시 참고자료로 활용 등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임무

법령상 경찰의 임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경찰법)」 제3조 -

비전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국민 안전을 빈틈없이 수호하여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한편,
진정성·공정성·책임감 있는 경찰활동으로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도약

전략목표

임무·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 3대 정책목표 선정

① 든든한 이웃경찰 ② 당당한 책임경찰 ③ 따뜻한 공감경찰

추진전략

일하는 원칙

마음가짐(Attitude)	: 진정성·공정성·책임성
기반(Base)	: 법·제도·시스템
역량(Competence)	: 준비된 치안 전문가
행동(Do)	: 선제적·능동적·적극적

임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진압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한다

비전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전략 목표	I	II	III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공정한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현장 자긍심 제고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성과 목표	1	1	1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2	2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현장활력 기반을 마련한다
	3	3	3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 추진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4	4	4
	국제·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12	12	53	151

성과 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I.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성과목표 1.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범죄예방정책	국정 14-1, 업무 II-①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	자치경찰	국정 13-3, 업무 I-②
	㉢ 112중심 치안상황 관리 고도화	위기관리	국정 55, 56, 업무 III-②
	㉣ 살인·강절도·폭력 등 강력범죄 엄정 대응	강력범죄수사	국정 14-1, 14-2 업무 II-②, II-③
	㉤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범죄정보 수집으로 국민안전 확보	정보분석	업무 II-①
성과목표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국정 14-2, 업무 II-③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수사 및 여청수사 역량 제고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국정 14-2, 업무 II-③
	㉧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 고도화·여성안전망 구축	여성안전 기획	국정 14-2, 66 업무 II-③
	㉨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확대 및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보호	국정 14-2, 업무 IV-①
성과목표 3.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 추진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안전	국정 55, 업무 II-③
	㉪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통관리	교통기획	국정 55, 업무 II-③
	㉫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교통운영	국정 34, 55, 업무 II-③

성과 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성과목표 4. 국제·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13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수사 기획	업무 II-①, III-③
	14 사이버범죄 검거 및 피해 보호 조치 등 수사활동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대통령 지시-9604 업무 II-②, III-③
	15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인터폴 국제공조	국정 10 업무 III-③, IV-②
	16 선제적·예방적 외사경찰 활동으로 사회안전 확보	외사기획정보	국정 14-2, 65 업무 II-①, II-③, III-④
	17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협력	업무 IV-②
전략목표Ⅱ. 공정한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성과목표 1.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18 반부패·공공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반부패 공공범죄수사	업무 III-①
	19 마약류·조직폭력·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마약조직 범죄수사	국정 14-2 업무 II-①, II-②
	20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경제범죄수사	대통령 지시-9829, 9830, 9588 총리 지시-5009663 업무 II-②
	21 기초치안 확보 및 유흥시설 등 합동단속으로 생활질서 확립	생활질서	국정 55, 56, 업무 II-③
성과목표 2.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22 인권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스템 구현	인권보호	국정 13-4, 업무 IV-①
	23 인권 보호와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정보관리	국정 13-4, 업무 I-③
	24 평화적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 및 상황분야 정보관 역량 강화	정보상황	국정 13-4
	25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관련 제도 개선	수사인권	업무 I-①
	26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경비	국정 14-5, 업무 III-①

성과 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성과목표 3.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㉔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기반 마련	수사운영지원	국정 13-4, 업무 I-②
	㉕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수사구조개혁	국정 13-4, 14-7
	㉖ 국민중심 책임수사 완성을 위한 심사체계 구축	수사심사정책	업무 I-①
	㉗ 미래환경을 대비한 경찰책임수사 지원 강화	범죄분석	국정 14-4 업무 I-①, II-①
	㉘ 디지털증거분석 역량 강화로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 확보	디지털포렌식	국정 14-4 업무 III-③
	㉙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견인하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	과학수사	국정 14-4 업무 I-①, II-② 업무 III-②, IV-④
성과목표 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㉚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대테러	국정 14-5, 업무 III-④
	㉛ 안보수사 역량·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및 예방적 안보상황 관리	안보기획관리	국정 13-4 업무 I-③, II-③
	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안보수사지휘	업무 III-①
	㉝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 보호를 위한 안보정보 분석 능력 강화	안보범죄분석	국정 14-1 업무 I-③, III-④
	㉞ 경호역량 강화를 통해 빈틈없는 경호업무 수행	경호	업무 III-④
전략목표Ⅲ. 현장 자긍심 제고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성과목표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㉟ 정책추진 프로세스 강화로 국민체감 성과창출 견인	혁신기획조정	국정 13-3, 14-5 업무 I-②, III-②, IV-④
	㊱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	업무 IV-④
	㊲ 입법대응 체계화 및 현장 법률지원 확대로 경찰 법집행력 강화	규제개혁법무	국정 14-6
	㊳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정책	국정 13-4, 업무 II-④
성과목표 2.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현장활력 기반을 마련한다			
	㊴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감사	업무 IV-③
	㊵ 위기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예방·문제해결 중심 감찰활동 전개	감찰	업무 III-②, IV-③
	㊶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양성평등정책	국정 66, 업무 IV-①

성과 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성과목표 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43 치안R&D와 치안산업 진흥으로 현장 지원	과학치안정책	국정 14-3, 업무 Ⅲ-②
	46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정보화장비 기획	국정 8, 업무 Ⅱ-①
	47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정보화 서비스」 구현	정보통신	국정 56, 업무 Ⅲ-③, Ⅲ-④, IV-④
	48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장비	국정 14-3, 업무 Ⅲ-②
	49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항공	업무 Ⅱ-③, Ⅲ-②
성과목표 4.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50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적극 지원	경무	국정 14-6, 71 업무 IV-④
	51 현장활력을 제고하는 복지기반 확충	복지정책	국정 14-6, 업무 IV-④
	52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재정	국정 14-6, 업무 IV-④
	53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기반 마련	홍보	업무 IV-③

Ⅲ. 세부 추진계획

III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I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기 본 방 향

- ◇ 경찰의 기본 사명인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활동의 축을 예방중심으로 전환, 사회적 약자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
 -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활 주변의 불안요인을 예측·발굴하고, 주민·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 함께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치안 활성화
 -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 등 대응역량을 향상하여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
- ◇ 급변하는 치안환경 속 위협요소에 대한 전략적 예방·대응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조성
 - 교통문화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으로 전환,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에 주력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증가하는 초국가적 범죄·사이버범죄에 대해 국제공조·협력 네트워크 내실화를 기반으로 예방 및 검거역량 강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4	4	16	45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5대 범죄 검거율
	성과목표 1.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사회안전성 인식
	㉠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탄력순찰 이행도 / CPTD사업 참여 노력도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	자치경찰제 전국확대 대비 시·도 조례 정비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실질화 / 자치경찰제 교육·홍보 등 대내외 공감대 확보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㉓ 112중심 치안상황 관리 고도화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 국민 긴급신고 신속 현장대응 달성도 / 위기대응 역량지수
	㉔ 살인·강절도·폭력 등 강력범죄 엄정 대응	살인·강도·절도 통합 검거성과 / 강절도 피해품 회수건수 / 상습 주취폭력배 검거인원 / 인피뺑소니 검거율
	㉕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범죄정보 수집으로 국민안전 확보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 견문작성 실적 및 활용도 / 치안시책 보고서·정책 참고자료 준법 준수율 /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지수
성과목표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범죄안전도
	㉖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 아동학대 보호조치율
	㉗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수사 및 여청수사 역량 제고	성폭력 미검률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율
	㉘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 고도화·여성안전망 구축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㉙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확대 및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 지원활동률 /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 / 민간단체와의 협업 노력도
성과목표 3.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 추진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교통문화 지수
	㉚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
	㉛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통관리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편의 제공 노력도
	㉜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 /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율
성과목표 4. 국제·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사이버범죄 검거율
	㉝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지수 / 사이버 첩보활용 지수 / 사이버국제공조 활성화 지수
	㉞ 사이버범죄 검거 및 피해 보호 조치 등 수사활동 강화	사이버범죄 검거 증가율 / 피해 보호조치 증가율
	㉟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인터폴 조직 및 D/B 활용도 / 국외 도피사범 송환실적 / 해외파견자 증원 및 교육·업무 노하우 공유 등 활동 실적
	㊱ 선제적·예방적 외사경찰 활동으로 사회안전 확보	외사정보 활용도 /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 대테러·방첩 활동 실적
	㊲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교류지수 / 치안인프라 전수지수 / 홍보지수

(1) 주요 내용

- **<공동체 치안 활성화>** 분권과 안전이 조화된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밀착형 경찰사무를 제공하고 경찰활동의 축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국민 피해 예방·최소화
 - * △문제해결적 경찰활동 △지역안전순찰 △예방적 형사활동 △예방정보활동 등
 - **<사회적 약자 보호>** 학대·방임 등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성·가정폭력 등에 예방·대응하는 여성안전망 구축
 -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18년~)*’에 발맞추어 보행자가 최우선으로 보호받는 교통환경 조성
 - * ’22년까지 국민생명 관련 3대 분야(△교통 △산재 △자살)에서 사망자 절반 감축 목표
 - **<사이버·국제범죄 대응>** 범국가적 민·관 협업을 통해 사이버공간의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치안 사각지대 해소
- ⇒ 각종 치안위협 요소에 전략적 예방·대응하여 국민안전을 빈틈없이 수호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5대 범죄 검거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5대 범죄 검거율	77.0	78.8	78.1	78.1	76.8	80.0	검거율은 '17년 최고치 달성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찰의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등 수사역량이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역대 최고치보다 1% 이상 상승한 80.0%를 '25년 목표치로 설정	5대범죄* 검거건수 ÷ 발생건수 × 100 *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력	KICS* 통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범죄 관련 이슈가 잇따라 발생,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치안이 삶의 질 제고의 전제조건으로 부각
 - ※ △ 텔레그램 디지털 성착취 사건(3월) △ 9세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6월)
△ 조두순 출소(12월) 등(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1」 2020년 10대 치안이슈)
- **<갈등요인 및 관리계획>** 비대면 생활양식 확산으로 공동체의식 약화, 사회통합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사이버 공간의 안전 역시 중요
 - * 국민 5명 중 1명(19%)이 ‘필요할 때 의지할 사람 없다’ 응답, 사회관계망의 질 분야는 41개국 중 40위로 OECD 최저수준(OECD Better Life Institute)
- 지역 공동체 치안을 기반으로 범인 검거·환경 개선 등 모든 분야의 안전확보 추진 →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안감 해소 필요

(4)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의식 조사(상·하반기)」 / 「2020년 지역안전지수」
- 한국행정연구원,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OECD 더 나은 삶 연구소(Better Life Institute), 「2020년의 삶은 어떨까?(How's Life in 2020?)」

(1) 주요 내용

- **<공동체 중심 예방치안>** 지자체 등 지역사회 공동체의 참여·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주민밀착형 예방정책 추진
 - － △범죄예방진단을 통한 지역문제 분석·공유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활성화 △탄력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수요자 중심 문제해결 활동 정착
- **<자치경찰제 확대 시행>** △시·도별 조례 정비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이후 준비된 시·도부터 시범운영하여 제도 개선·보완
 - － 내부직원 교육·간담회 및 △시·도 공무원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토론회 등 개최로 자치경찰제 관련 대내·외 공감대 확산 추진
- **<112중심 치안상황 관리 고도화>** 국민안전과 직결된 112 접수처리 및 각종 재해·재난 등 위기상황 초동조치 역량 강화
 - － 112신고대응 신속성·전문성 등 만족도 관리를 통한 치안서비스 품질 향상 및 재난대응 훈련·교육 강화로 위기관리 역량 제고
- **<민생침해 범죄 엄정대응>** 강절도·생활폭력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전략적 수사활동 전개로 체감치안 향상
 - － △지역별 위험요인 분석으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형사활동 △보복범죄 차단·피해품 회수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병행
- **<재난·안전사고 정보 및 범죄정보 강화>** 재해·재난 및 사회 속 안전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토록 조치(관계기관 통보 등)
 - － △공공안녕·안전비리 △생활 주변 악성범죄 △불공정·부조리 등을 범죄정보 중점 수집대상으로 설정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사회안전성 인식
관리과제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탄력순찰 이행도 / CPTED사업 참여 노력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	자치경찰제 전국확대 대비 시·도 조례 정비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실질화 / 자치경찰제 교육·홍보 등 대내외 공감대 확보
	112중심 치안상황 관리 고도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 국민 긴급신고 신속 현장대응 달성도 / 위기대응 역량지수
	살인·강절도·폭력 등 강력범죄 엄정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살인·강도·절도 통합 검거성과 / 강절도 피해품 회수건수 / 상습 주취 폭력배 검거인원 / 인피뺑소니 검거율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범죄정보 수집으로 국민안전 확보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 건문작성 실적 및 활용도 / 치안 시책 보고서·정책 참고자료 준법 준수율 /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지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사회안전성 인식	5.2	5.2	5.2	5.3	전 3년도 실적이 5.2점을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21년 목표치는 상승을 독려하여 5.3으로 도전 적인 목표치 설정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10점 만점)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위드(With) 코로나’ 시대 도래로 국민들의 생활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한 치안수요에 대한 선제적 분석 및 대책 마련 필요
- ※ '20년 전국 112신고건수(18,296,631건)는 전년 대비(18,976,334건) 3.6% 감소하였으니, 최근 3년간 중요사건(Code0·1)은 전체 신고건수의 약 15% 수준 지속 유지

- 강력범죄는 감소했으나 수법을 고도화하여 광역화·지능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주거침입 등 일상의 위협행위가 지역문제로 대두
- ※ <강력범죄(살인·강도 등) 및 절도범죄> '17년 203,946건→'20년 210,995건(3.3%↓)
<기타형법범(주거침입 등)> '17년 101,124건→'20년 107,598건(6.4%↑)

< 다수팀 동원 중요사건 >

- ▶ (처·자녀 살해사건) '20. 3. 12. 경남 진주에서 처와 자녀를 살해 후 도주 중인 피의자를 경남청·전북청 공조, 3일간 연인원 1,100여명 동원·추적하여 검거
- ▶ (인질강도) '20. 8. 13. 서울 강동에서 부녀자 인질강도 발생, 피의자를 3개 시·도 경찰청 5개서 공조하여 총 127명(차량 52대) 긴급배치, 경기 구리에서 대치 끝에 설득·검거하고 피해자를 안전하게 구출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지역맞춤형 예방정책 활성화 △치안·복지행정 연계 등 지역별 「치안 거버넌스」의 중요성 배가
- 이에, '선제적 문제발굴 → 능동적 해결'의 예방정책* 정착 및 유관기관·단체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시·도경찰청 지원 확대
 - * <지역안전순찰·범죄예방진단팀> 지구대·파출소 내 지역안전순찰 전담경찰관이 주민과 직접 만나 문제 확인 → 즉시 해결 or 범죄예방진단팀 현장조사 後 대책 마련
 - **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범죄예방진단팀이 △지역 치안문제 △복지 사각지대 등 문제 발굴, 경찰 쏘 부서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 間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 도출
- 아울러, 자치경찰 종합 홍보방안 마련, 대국민 홍보·교육자료 제작 및 설명회·토론회 등을 통해 대내·외 정책 수용성 확산에 주력

(4) 참고자료

- 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
- 112 긴급신고 앱 / 112 신고·접수 매뉴얼 등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www.pcad.go.kr)

1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 추진배경

- 「사후대응 → 사전예방」 중심으로 국민적 관심·기대가 높아진 만큼, 지역공동체 참여·협력 기반의 예방활동이 중요
 - － 이에, '17년부터 범죄·불안의 해결책으로 공동체 참여·회복에 주목, 국정과제로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추진 중
-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범죄 위험요소 개선 등 치안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치안'을 통해, 범죄예방 및 체감안전 향상 도모
 - － 특히,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생적 예방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확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범죄예방진단팀·지역안전순찰 중심으로 지역 치안문제 발굴·개선
 - － (지역사회 불안요인 개선) 범죄예방진단팀을 중심으로 '취약요인 진단 → 범죄취약·불안환경 개선' 등 지역문제 해결 노력 지속
 - ▶ (진단) 지역경찰·주민 요청 등에 대해 현장진출하여 취약요인 점검
 - ▶ (순찰) 지역특성·취약요소에 따라 순찰시간·장소 등 순찰선 정밀 조정
 - ▶ (환경개선) △ 경찰청 주관 범죄예방환경조성 공모 사업 △ 지역 단위 지자체 협업사업 등을 통해 불안환경 개선
 - － (예측적 경찰활동 강화)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을 활용, 범죄 예방정보 통합관리·분석 및 순찰·시설개선 등 예방정책 고도화
 - － (지역안전순찰 확대) 지구대·파출소의 순찰활동 중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 지역문제를 확인·해결하는 지역안전순찰 전국 확대
 - ※ '20. 9월부터 30개 경찰서 217개 지구대·파출소 대상 시범운영, '21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시·도경찰청 자율확대 추진 중

- 지역사회 참여 확산을 통해 공동체적 범죄예방노력 활성화
 -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역할 확대) 지역주민·전문가 등의 참여 확대,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를 통한 치안거버넌스 활성화
 - * 경찰서 부서간 협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현안을 공유·분석·활용
 - (범죄예방대상 개최) 중앙일보와 제6회 범죄예방대상 공동 주최, 범죄예방에 참여·공헌이 큰 지자체·단체·기업 시상
 - ※ CPTED(범죄예방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사회적약자 보호 등 시상 분야 및 인센티브 확대, 지역 공동체 참여 확산 독려
 - (치안 관련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기업·재단 등 민간과 협업, 범죄예방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
 - (시민 참여 유도) △시민경찰학교 △警·學 학점제 등 운영, 다양한 집단이 범죄예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
-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등 수요자 중심의 범죄예방정책 지속
 - (탄력순찰 내실화) 순찰신문고*로 주민의 순찰 희망장소 취합, ‘주민요청·112신고량’ 등 우선순위에 따라 탄력순찰 실시
 - * 순찰신문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 주민들이 상시 순찰요청 가능
 - (중요시기별 종합치안대책 추진) 연말연시·명절 등 범죄 집중 시기에 쏠 가용경력을 활용한 선제적·가시적 활동 추진
-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위험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 (범죄예방강화구역 관리) 여성안심귀갓길·안심구역·서민보호 치안 강화구역 등 위험지역에 대해 관리체계 개선 後 집중 관리
- (부처간 협업 확대) 행안부·국교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환경 개선 사업에 적극 참여, 경찰의 범죄예방진단 결과·의견 반영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1년 설명절 종합치안대책 추진	'21. 1월	
	범죄예방·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협의체 운영 계획	'21. 1월	
	여성인프라구축, 전통시장 등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 추진	'21. 3월	
	'21년 경학 실습학점제 시행	'21. 3월	
2/4분기	범죄예방강화구역 점검 및 재정비	'21. 4월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 운영 계획	'21. 4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설명자료 배포	'21. 5월	
	'21년 시민경찰학교 운영계획 하달	'21. 5월	
3/4분기	피서지 안전 확보를 위한 여름경찰관서 운영 추진	'21. 7월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 추진	'21. 9월	
4/4분기	제6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21. 10월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 경진대회 개최	'21. 11월	
	연말연시 종합치안대책 추진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모든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없음

□ 기대효과

- 탄력순찰·지역안전순찰 등 수요자 중심의 예방정책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치안문제 해결 노력
- 범죄예방진단팀을 주축으로 경찰 모든 기능, 유관 기관·단체 등이 협업하여 지역 문제를 분석 및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를 활성화, 종합적인 문제해결 방안 마련
- 경찰·지자체·지역주민 간 치안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범죄취약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범죄예방(I-1-일반재정①)				
① 범죄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1131)		일반회계	475.1	209.9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311)			195.5	209.9
■ 범죄대응역량강화(312)			279.6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탄력순찰 이행도 (50%)	56.4%	61.2%	69%	75%	공동체치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 불안 요인을 선제적·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문제의 진단·해결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요구됨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경찰력을 집중할 때 가능하며, 탄력순찰은 국민이 원하는 시간·장소에 순찰을 실시하는 공동체치안 핵심 모델이며, 국민의 참여와 경찰의 조치 여부가 제도성공의 핵심인 만큼, 지속적인 정책수행여부 관리가 필요함 본 지표는 '17년 9월 정부출범 직후 최초로 도입되어 운영된 것으로 기존의 운영 기반이 없어 수행 난이도가 높으며, 국정과제로 높은 관심을 갖고 추진했음에도 '19년 기준 61.2%의 실적치를 달성하는 등 긴급 112신고 현장대응 및 한정된 현장인력으로 인해 임계치가 명확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예방 △체감치안 향상 등을 통해 공동체 구조를 회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장소'를 순찰하는 탄력순찰 활성화가 절실한 만큼, 목표치를 3년간 상승 추세치(5.47%)를 상회하는 75%로,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 (전년 목표치 66.5%에 비해 8.5%p 상향)	순찰희망장소 순찰계획 간 일치율	스마트워크 시스템에서 지역주민 순찰 희망장소와 순찰계획 간 좌표매칭률 추출
CPTED사업 참여노력도 (50%)	59.2%	61.2%	77%	86%	지자체별로 이루어지는 셉테드 사업은 지역 사회 치안 전문가인 경찰 협력이 필수적임 특히, 사업 추진 이전에 경찰에 의한 치안 현황 분석과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정책이 이루어져야 CPTED사업의 효과성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지자체 사업 참여 현황을 지표로서 지속 관리 필요함 본 지표는 전국 지자체(3,484개)에서 추진된 CPTED 사업 중에서 경찰이 제시한 의견이 실제 반영되어 추진한 사업의 비율임 ('19년 1,958개 중 1,200개 / '20년 3,484개 중 2,684개) '21년 목표치는 3년간 상승 추세치(8.9%)를 상회하는 86%로,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 ※ 사업 기준 : ①경찰의 범죄예방진단 결과 반영 ②투입 예산 최소 100만원 이상	경찰 제안으로 추진된 셉테드 사업 건수 ÷ 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셉테드 사업 총 건수 × 100%	수기 취합 및 지자체 공문 등 근거자료 첨부

2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

□ 추진배경

- 자치경찰 법안 국회통과('20.12.9) 및 대통령령 제정('20.12.31) 이후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및 전면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 중
- △시·도별 조례 제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준비된 시·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개선·보완
 - － 동시에, 내부 교육·간담회 및 시·도 공무원, 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 관련 대내·외 공감대 확산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법제화 완수]

- 법령 시행 이후('21.1.1) 시범운영 및 향후 전국 시행을 위해서는 시·도별 조례 정비*가 필요한 만큼, 시·도 대상 적극 설득·독려하여 전면 시행('21.7.1) 이전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 * 시·도 조례로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및 운영 세부사항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위임
- － 경찰청 소관 △행정규칙 △내부지침 개정·폐지 등 정비 추진

[시범운영 및 전면시행]

- 시·도자치경찰위원 선임 後 위원회를 조속히 출범하고, 위원회 사무기구 구성 및 사무 공간 마련 추진
 - －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준비가 완료된 시·도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돌입토록 관계기관 간 적극 협력하고,
 - － 시범운영 및 전면 시행 과정에서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통해 제도의 보완·개선사항을 지속 발굴

[대내·외 공감대 확보]

-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 종합 홍보방안 마련 및 대국민 홍보·교육자료 제작 추진
- － 현장 경찰관 대상 자치경찰제 관련 △사이버·오프라인 교육 △내부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 － △시·도 공무원 △지역 주민 등 대상으로도 설명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대내·외 정책 수용성 및 공감대 확산에 주력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찰청 소관 내부 규칙·훈령 등 정비	'21. 3월	
	자치경찰제 관련 사이버 교육 자료 제작	'21. 3월	
2/4분기	자치경찰제 법령 해설서 제작·공유	'21. 4월	
	시·도 공무원 대상 자치경찰제 교육 실시	'21. 4월	
	쉴 시·도 조례 제정·완비	'21. 5월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21. 5월	
	위원회 사무기구 구성 및 사무 공간 마련	'21. 5월	
3/4분기	자치경찰 전국 시행 기념식 개최	'21. 7월	
	자치경찰제 관련 내부 간담회,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등 의견 수렴	'21. 9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실질화	연중	
4/4분기	자치경찰제 관련 운영 성과(우수사례 등) 분석 및 보완사항 발굴	'21. 10월	
	자치경찰제 관련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21. 11월	
	대국민 홍보물 제작(자치경찰 도입 성과 등)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경찰과 경찰관 개인, 시·도 공무원,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 국회, 관계부처(행안부, 기재부 등), 자치단체 등

□ 기대효과

- 이번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업무 수행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현재의 안정적 치안 유지가 가능하며,
 - － 조직 분리·신설이 없어 △상위직 신설 최소화 △별도 청사 불필요 등 ‘이원화 모델’의 업무 혼선·과다 비용 우려를 해소
- 각 기관의 담당업무만 처리·인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지자체 원스톱처리 등 통합적 업무수행으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만족도 향상이 기대되며,
 - ※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 (기존) 경찰서 방문·반납, 이후 자치단체 방문·인센티브 수령 ⇨ (개선) 자치단체만 방문 원스톱 처리(실시간 정보연계)
 - － 경찰청, 지자체, 부처로 산재되어 운영 중인 주민안전 예산을 지자체가 통합 운영하는 만큼, 주민요구를 신속·충실히 반영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민밀착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대비 시·도 조례 정비 (30%)	신 규			85점	하단 참조	하단 참조	공문, 검토보고서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실질화 (30%)	신 규			80점	"	"	공문, 검토보고서 및 회의록 등
자치경찰제 교육홍보 등 대내·외 공감대 확보 (40%)	신 규			70점	"	"	공문, 언론보도, 세미나 자료집 등

<지표 1>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대비 시·도 조례 정비

○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및 측정 산식

- 자치경찰 관련 법령 시행('21.1.1.) 이후, 시범운영 및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시·도별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
- 쏘 시도(가)가 전면시행('21.7.1.) 이전 충분한 시범운영을 거치기 위해 시·도가 조례를 보다 신속히 완비토록 적극 독려·설득하는 것이 중요
- 각 시·도가 가급적 5월 이내에 조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아래 표와 같이 17개 시·도별로 '조례 공포 시기'에 따라 차등 점수를 부여, '21년 85점 목표·추진

공포 시기	'21.4.15限	4.30限	5.15限	5.31限	6.15限
점 수	100점	95점	90점	85점	80점

※ 예) 5.15限 공포 : 3개 시·도 / 5.31限 공포 : 10개 시·도 / 6.15限 공포 : 4개 시·도 → 84.7점

<지표 2>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실질화

○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및 측정 산식

- 시·도지사 소속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자치경찰 사무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 감독(독립적 직무 수행 보장)
-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경찰권 분산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와 부합하는 만큼, 각 시·도별 '위원회 운영 실적'을 수치화·정량화하여 평가 진행 → '21년 각 시·도 평균값 80점 목표·추진

* (점수 산정) 月 미개최 : 60점 / 月 1회 : 80점 / 月 2회 이상 : 100점

※ 단, 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부터 측정

<지표 3> 자치경찰제 교육·홍보 등 대내·외 공감대 확보

○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및 측정 산식

- 자치경찰제 도입은 치안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대내·외 이해도 제고 및 지속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
- 이에, 내부 직원 및 △시·도 공무원 △지역주민 등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 및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노력을 전개하고자 함

[측정 산식]

목표	자치경찰제 교육		설명회, 간담회 세미나, 토론회 등		대외 설명자료 제작·공유		대국민 홍보					
70점	사이버	오프라인	주관	참여지원	해설서	리플릿 등	행사 개최			홍보물	SNS	보도자료
	컨텐츠당 10점	1회당 5점	1회 실시 10점	1회 실시 3점	1건당 15점	1건당 3점	대통령 참석	총리급 참석	장관 청장	건당 5점	건당 5점	건당 5점
							15점	10점	7점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간담회 △오프라인 교육 △행사 등 개최가 지속 어려울 시 목표치 변경 가능

3 112중심 치안상황 관리 고도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 추진배경

- 국민 안전과 직결된 112신고 및 각종 재해·재난 등 주요 치안상황 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응은 경찰활동에 대한 국민 신뢰도 유지에 필수
- 최신 IT기술 반영 112시스템 고도화 등 치안상황관리 인프라 구축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한 각종 위기대응능력 강화로 경찰초동조치 역량 제고, 사회적 요구와 국민 눈높이 상응 재난 대응 역량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첨단 IT기술을 접목한 112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 <개요> AI·빅데이터 등 최신 IT기술을 활용, 112신고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미래 확장성·범용성 갖춘 차세대 시스템 추진
- <지능형 신고 접수체계> 신고 접수단계에서 AI(인공지능)·STT* 등 기술 적용, 접수·지령요원의 신속·정확한 상황 판단·분석 지원

* STT(Speech To Text) : 112신고자의 통화내용(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

※ 신고자 음성분석(例: 목소리 떨림, 비명, 주변 소음 등)을 통해 위험도 측정 △ 음성신고내용 문자화(STT)로 접수내용 확인 △ 키워드 분석으로 코드 자동 부여 등

- <빅데이터 분석체계 도입> 신고 접수·지령 내용 등 단순 문자로 구성된 비정형적 112신고 자료를 분석, 범죄예방 및 위험요인을 파악·지원 가능토록 ‘빅데이터 기반 112 자료 분석 시스템’ 구축
-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시·도경찰청별로 구축된 서버와는 별도로 폴맵·LBS* 등 전국 공통 사용 핵심기능은 클라우드 형태로 이중화

*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

사업 추진 현황

- ▶ '19년 ISP 사업을 통해 4개년 사업계획 수립(총 665억 소요)
- ▶ '20년 120억 → '21년 171억 → '22년 162억 → '23년 213억
- ※ 20·21년은 확정, 22·23년은 추정예산

- <112 신고분석 시스템 개발> 신고 접수단계부터 112신고 정보와 경찰 보유정보를 결합·분석, 범죄 위험성을 예측하는 시스템 구축

- ▶(정보수집) 신고 내용뿐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도 DB化, 구두제보, 경찰관 인지 정보(他기관 접수 민원 등) 등도 신고정보로 활용
- ▶(자료 분석) 상습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내역과 보유정보를 결합하는 등 입체적·종합적 분석을 통해 위험성 및 범행 가능성 제시
- ▶(현장 활용) 신고 출동시 피신고 인력 우선 확인, 상습성·위험성 확인시 적극 형사입건하고 정신질환자의 경우 행정(응급)응원 등 선제적 조치

[현장 모니터링 역량 제고를 통한 입체적·효율적 상황관리]

-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 순찰차에 영상전송용 카메라 설치, 112상황실에서 현장상황을 직접 조망·지휘·조정하는 시스템 구축
- <보이는 112시스템> 112신고를 접수하면 신고자 휴대전화로 URL 전송, 클릭하면 신고자의 위치와 휴대전화로 찍는 현장영상이 실시간 상황실·현장경찰관에게 전송, 초·시·도경찰청 확대
- <지자체 CCTV 연계> 신고자 주변 최근접 5개소 CCTV를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로부터 전달받는 시스템, 국토부와 협의하여 '25년까지 초·기초자치단체(229개) - 경찰서 연계 추진
- <112상황전파앱> 112신고 출동시, 경찰서장 등 지휘부 및 관련 기능에서 신속하게 신고 관련 정보 확인 가능토록 앱 개발·활용
 - ※ 주요 기능 : △112신고 내용 확인 △녹취내용 청취 △사진 등 관련 자료 확인 △사건발생장소 길안내 등
- <노후 112상황판 교체> 전국 시·도경찰청 112종합상황실 통합 관제상황판을 최신 장비로 교체, 현장상황 실시간 조망(보이는 112·지자체CCTV·순찰차캠) 등 실질적 확인·지휘에 활용

'20년도 추진 현황

- ▶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 6개청 17개서(대구 10, 서울3, 부산·인천·광주·경기南 각 1개서) 완료
※ '20년부터 5개년 총650억 예산 사업
- ▶ (보이는 112시스템) 제주청 시범운영
- ▶ (지자체 CCTV 연계) 전국 82개서 구축 완료
- ▶ (노후 112상황판 교체) 13개 시·도경찰청 완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南·경기北·강원·충북·충남·충남·전남)

[치안상황대응 분석역량 및 전문성 강화]

- <교육 종합계획 수립> 교육대상·내용·일정 등 전반적 교육 커리큘럼 반영한 '112 교육 종합계획' 수립, 체계적 교육 체계 마련
 - － (수준별 맞춤형 교육) △(오프라인) 기초는 시·도경찰청, 심화는 인재개발원 △(온라인) 중요사례별 상황관리요령 직무맞춤형(팀장, 지령·접수 요원) 강의 동영상 제작, 학습자 중심 교육 실시
 - － (토론식·실습 위주 교육) 강력사건·재해재난 등 주요 상황별 시나리오 마련, 실제 대응사례 바탕으로 사례·단계·기능별 행동요령 등 토론 및 실습을 통해 내용 숙지
- <업무 매뉴얼 제작·보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역량강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 개선, 개인역량 평가 등을 통해 전문화된 인력 배양
 - －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업무 매뉴얼 제작) △역할 및 책임 △평시 업무지휘, 중요사건 및 재해·재난 발생시 지휘 △비상시 경력 운영 등
 - － (접수·지령 매뉴얼 개선) '19년 이후 신설된 사건종별(6종) 내용 추가 및 법령 개정·타기능 업무 매뉴얼 변경 내용 반영
※ △'19년(마약류·피싱사기·음주운전) △'20년(재해재난·위험동물) △'21년(동물학대)
 - － (112 문제집 제작·평가) 개선 매뉴얼 기반하여 '112 문제집' 제작(문제은행 형식), 年2회 112요원 대상 개인역량 평가 등에 활용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 치안상황관리 체계 정비]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체계 정비> '21. 1월 제도도입에 따라 국가·자치사무 귀속을 불문, 국민안전과 직결된 112신고 접수시 처리 결과의 균질성 유지될 수 있도록 소관 법령 등 정비 필요
- － (112신고 기본법 제정) 112신고처리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자치·수사경찰이 상호 협조, 총력대응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
- －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개정) 자치사무 112신고도 중요사안의 경우 현행 본청 치안상황실로 상황보고체계 유지토록 관련규정 정비
- － (112코드체계 정비) 지자체별 시·도 조례 제정시 112코드 추가 등 요구사항을 본청에서 일괄 조정하여 국가적으로 통일된 112 접수 코드체계 유지, 관리

[대내외 만족도 제고 위한 112 요원 처우 개선 및 홍보활동 전개]

- <핵심 정책과제 특진 확대> 업무 특성상 경위 비율 높고, 중요 신고 접수시 주도적 지휘·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 경감 T/O 확대로 기능 사기 제고 및 업무 추진동력 확보
- ※ '20년 112기능 최초 정책과제 선정(경감 2, 경위 2, 경사 1 특진 T/O 배정)
- <심신안정실 구축> 시·도경찰청 112신고 접수요원의 심신회복 및 체계적 스트레스 관리 위한 심신안정실 구축 추진
- － 공간 旣 확보된 시·도경찰청(서울·대전·전북 등)에 우선 구축, 여타 시·도경찰청은 순차적 도입 예정
- <‘112의 날’ 64주년 기념식 개최> ‘안전’의 가치를 함께 수호하는 유관기관(소방·해경·권익위 등), 일반시민, 전문가 그룹 초대, 표창·감사장·감사패 증정으로 협업 분위기 및 대국민 관심·호응도 제고

- <우수사례 모음집 발간> 112요원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한 주요사건 해결·미담 사례 편집, 112 우수사례 모음집(3집) 발간
- <112 공모전 개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치안 홍보 추진, 공모전 개최 통해 국민 긴급신고 인식 개선 및 소통치안 도모
 - **쏘 국민 대상** △112홍보UCC △포스터·표어(캘리그래피) 공모전 추진하여 당선작을 대국민 112홍보의 킥핀으로 활용
 - 공모전에서 선정된 문구 및 포스터는 순찰차량 측·후면에 야광 스티커와 함께 부착, 112홍보와 교통사고 예방 효과 병행

[마스크 없는 일상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 <백신 관련 범정부 협력 총괄> 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예방접종 과정에서 안전관리 지원 및 불법행위 차단 등 협업

우리청 주요역할

- ▶ (백신 수송·보관·접종 중 안전관리) 백신 수송 중 에스코트 등 교통관리 지원, 백신 생산·보관·접종시설에 대한 인적 취약요소 차단 및 질서유지 등 지원
- ▶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단속·수사) 백신의 효능·부작용 등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여 정부의 예방접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삭제·차단 및 수사
- ▶ (불법접종 등 백신 관련 불법행위 수사) △非의료인의 접종 △정상 백신 반출·접종 △불법 백신 제조·판매·광고 △예방접종증명서 거짓발급 등 각종 불법행위 엄정 단속
- ▶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 백신 관련 변사사건 발생시 국과수와 협업, 부검 및 약물검사 등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질병청과 결과 공유

- <백신 수송·보관·접종 지원> 백신수송지원본부와 적극 협업, 백신 수송·보관·접종 쏘 과정에서 인적 취약요소 차단 등 지원
 - ※ 수송경로별, 보관시설별 중요도에 따라 A·B·C 3개 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적정 수준의 안전관리 지원

[체계적 재난장비 관리를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

- <현장경찰관 안전장비 보급> 다양한 재난상황에서 임무 수행하는 경찰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안전장비 보급
 - ※ △ 화생방보호장비 △ 감염병보호복 △ 산불용장화 △ 방사능선량계 등
- － 기타 자동심장충격기 및 각종 재난대응소모품을 구매·보급하여 재난상황에서 경찰의 현장대응력 제고
- <재난장비관리시스템 구축> 관서별 장비의 출납·점검·폐기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난장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 관서별 보유장비를 체계적으로 관리,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적시 보급하고 중·장기 구매·보급 계획 수립에도 활용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체계 정비]

- <법적기반 정비> 「경찰 재난관리 규칙», 「경찰 비상업무규칙」 등 위기관리 소관 경찰청 훈령 일제정비를 통해 법적기반 확립

개정 추진방향

- ▶ (경찰 재난관리 규칙) 치안상황관리관을 중심으로 경찰 재난관리체계를 재편, 코로나19 대응에서 얻은 교훈을 반영, 대규모 재난 대응 역량 제고
- ▶ (경찰 비상업무 규칙) 재난으로 인한 치안질서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비상 신설, 다수 기능 관련된 비상사태시 주된 기능에서 업무 총괄하게 하여 책임감 제고

- <재난대응 훈련 활성화> 각종 재난상황 대응절차를 숙달 가능토록 실효성 있는 자체·합동 훈련 적극 추진
 - － 가상의 재난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마련, 본청-시·도경찰청-경찰서간 토론형 합동훈련을 통해 상황별 대처요령 숙달
 - － 범정부 재난대응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훈련을 확대하여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 <현장매뉴얼 제작> 現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33종의 핵심·공통 사항을 단권화하여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표준매뉴얼 제작
 - － △ 현장 착안점 △ 초동조치 체크리스트 △ 필요장비 등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현장 활용도 제고

[지역경찰 대상 상시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역량 제고]

- <지역경찰 상시교육훈련 활성화> 선제적·적극적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경찰의 ‘전문역량 강화 상시교육’ 활성화
 - － ’20년 지역경찰 상시교육훈련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 코로나 상황 및 지역관서 교육여건에 맞춰 탄력적·점진적 확대 추진
 - － ‘지역경찰 상시교육 가이드(案)’ 마련, 시·도경찰청별 상시교육 결과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로 제도 정책 및 효과성 제고
- <지역경찰 교육자료 제작·배포> 지역경찰 상시교육과 신고처리 참고를 위한 교육자료 수시 배포 및 ‘현장사례집 100선*’ 등 제작
 - * 현장사례집: 중요유형(100개)별 최신 현장사례와 착안사항을 중심으로 판례·인권위 권고·현장 Q&A 등을 정리한 사례집 제작·배포

[효율적 지역경찰관서 운영 모델 발굴 등 현장대응력 향상]

- <광역단위 지역경찰관서 시범운영> 지역경찰 인력증원 효과 극대화 및 효율적 지역경찰관서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 모델 마련
 - － 지역별 치안수요 분석 後 농어촌 등 치안수요 편차가 큰 지역 위주, 관서별 인력 재배정으로 광역 지역관서(중심 지·파+주간파출소) 운영
 - ※ ‘주간파출소’에 소규모의 일근근무자 배치 및 ‘중심관서’로 인력보강 후, 4조2교대·야간대기 등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대응력 강화
 - －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21년 上 ‘도’ 단위 시·도경찰청 위주로 1~2개 경찰서 시범운영 및 효과성 분석 後 점진적 확대 전환

- <현장종결 대응 체계 강화> 급변하는 사건현장에서 신속·정확한 초동조치의 부담이 있는 업무 특성 고려한 신고처리 사후관리 등 절차개선
 - 112 신고에 대한 지역경찰의 현장 종결 時 중간관리자 확인 및 관련 기능별 사후확인 절차를 추가하여 촘촘한 현장대응능력 제고



[지역경찰 근무환경·제도 개선 등 현장경찰관 사기 진작]

- <근무환경 개선> 냉난방기·CCTV 등 노후물품 교체 및 일상적·반복적 교육을 위한 각종 기자재 구입 지원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 ※ △ 세탁건조기·의류관리기 △ 보호센터 조성 △ 스마트워크 고도화 등 '22년 지역경찰 근무환경 개선 예산확보 지속 노력
- <업무추진비 등 지급> 지역관서 인력규모에 따라 '순찰팀장 업무추진비' 지급으로 순찰팀장 지원 확대 및 지휘역량 제고
 - ※ '21년 신규 10억 확보 및 '22년 예산 증액 추진
- <지역경찰관서장 선발기준> 자치경찰제 시행 등 변화되는 치안환경과 국민요구를 감안, 지역실정 등 고려한 지역경찰관서장 선발 기준(案) 마련
- <지역경찰 근무제도 정비> 지역경찰 관련 지침·규칙 정비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직·복무 등 분야별 지침 개선사항 현행화

지역경찰 운영지침 개정(案)

- ▶ **조직** : 지구대·파출소 신설기준 / 치안센터 점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 **복무** : 자원근무 기본원칙 / 3조1교대 실시 기준 / 사회복무요원 일일근무 지정 / 야간 대기 3시간 원칙 / 교대근무자 휴가일수 계산
- ▶ **장비** :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 무기탄약 지급중지 / 총기휴대방식
- ▶ **인사교육** : 부적격자 배치 배제·제한 / 교육훈련 참석 기준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본부 설치	'21. 2월	
	백신 관련 현장조치 매뉴얼 제작·배포	'21. 3월	
	지역경찰 상시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21. 3월	
	광역단위 지역경찰관서 시범운영 계획 수립	'21. 3월	
2/4분기	지역경찰 현장사례집 제작·배포	'21. 4월	
	광역단위 지역경찰관서 시범운영 시행	'21. 4월	
	교육 종합계획 수립	'21. 4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 수립	'21. 6월	
3/4분기	시·도경찰청별 재난장비 관리 실태 점검	'21. 9월	
	위기관리 현장매뉴얼 제작	'21. 9월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업무 매뉴얼 제작	'21. 9월	
	112신고·접수지령 매뉴얼, 문제집 제작	'21. 9월	
4/4분기	심신안정실 구축 완료(3개 시·도경찰청)	'21. 11월	
	(112 기념식) 창설 제64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21. 11월	
	(우수사례 모음집) '소리로 보는 사람들' 시즌 3 발간	'21. 11월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완료(12개 시·도경찰청)	'21. 12월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 수립	'21. 12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21. 12월	
연중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연중	
	보이는 112, 112상황전파앱 순차적 전국 시·도경찰청 확대		
	지역경찰 환경개선 사업 지속 추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모든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없음

□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발맞춰 AI·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기술을 접목시켜 고도화된 치안상황관리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통해 국민 안전 치안활동 강화
- 경찰의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Ⅰ-1-일반재정②)			
치안상황관리(1133)			
① 범죄대응및재난안전관리(1133-311)	일반회계	113.0	128.3
■ 112상황운영(1133-311)		22.8	22.8
- 교육훈련 계획(1133-311)		0.9	0.9
- 업무매뉴얼 제작·보완(1133-311)		0.2	0.2
- 심신안정실 구축(1133-311)		-	3.9
- 112의 날 64주년 기념식(1133-311)		1	1
- 우수사례 모음집(1133-311)		0.1	0.1
■ 재난안전활동 및 장비관리(1133-311)		37.8	30.2
- 현장경찰관 안전장비 보급(1133-311)		36.6	26.0
- 재난대응 훈련 활성화 (1133-311)		0.6	1.9
- 현장 매뉴얼 (1133-311)		-	0.6
② 112시스템 운영(1133-511))	일반회계	185.8	285.8
■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1133-511)		89.6	159.6
■ 순찰차 캠 영상관제시스템(1133-511)		18.1	70.9
■ 노후 112 상황판 교체(1133-511)		30.1	11.4
생활안전국(1131)			
① 범죄예방및사회적약자보호(1131-311)	일반회계		
■ 지역경찰 교육훈련 및 현장회의 경비(1131-311)		3.0	3.0
■ 지구대파출소 업무추진비(1131-311)		-	10
■ 지역관서cctv 및 냉난방기 교체 등(1131-311)		-	2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30%)	84.6	84.7	86.3	87.2	하단참조	하단참조	하단참조
국민 긴급신고 신속 현장대응 달성도 (40%)	5분20초	5분 18.5초 (-0.5%)	5분 10초 (-2.7%)	5분 5초	하단참조	하단참조	하단참조
위기대응 역량지수 (30%)	신규	신규	1,245.6점	1,371점	하단참조	하단참조	하단참조

【112신고 접수처리 만족도】

- **(개요)** 경찰 112신고접수에 대한 국민 만족 수준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민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치안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국민 만족도 제고하고자 함
- **(구성)** 112신고 접수 신속성·신고접수 경찰관 친절성·신고접수 경찰관 전문성·종합 만족도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
- **(측정산식)** ①신고접수 신속성 + ②신고접수 경찰관 친절성 + ③신고접수 경찰관 전문성 등 3가지 항목의 평균치와 ④종합 만족도 수치를 가중치(70 : 30)에 따라 환산
- **(측정방법)**

조사 기간 : '21. 1. 1. ~ '21. 10. 31. 종결민원 기준

조사 기관 :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 센터

조사 방법 : 카카오톡문자 이용, 설문조사시스템 접속 안내하여 112신고접수처리 분야 문항에 점수를 부여

조사 대상 : 2021년도 경찰 112신고자 전원(관서별 code0, code1, 신고)
- **(목표치)**
 - △ '21년 자체평가 정책과제(성과지표) 설정 기준에 따르면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 등에 근거하여 적극적 업무 수행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바,
 - △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성과지표 최근 3년간 실적('18년 84.6 / '19년 84.7 / '20년 86.3) 대비 추세치는 1.0%('18 ~ '19년도 0.1% / '19 ~ '20년도 1.9%)로서,
 - △ 이를 상회하여 전년 실적 대비 '0.9점(1.0%↑)이 상승한 '87.2' 점을 목표치로 '도전적 설정'

※ 최근 3년간 평균치는 85.2점으로 '2.0'점 상승한 목표치
- **(목표 관리 방안)** 112종합상황실장 업무 매뉴얼 신규 제작, 접수·지령 매뉴얼 개선, 112요원 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 112신고처리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체계적 목표관리 추진

【국민 긴급신고 신속 현장대응 달성도】

- **(개요)** 사건 발생 후 골든타임 內 현장 도착,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긴급신고 신속 현장대응 달성도」를 성과지표로서 관리
- **(목표)** 신속한 현장출동이 국민안전 확보 및 신뢰도 제고와 직결되는 만큼, 현장대응시간 단축을 통해 '현장대응 골든타임' 확보
- **(구성)** 국민 긴급신고는 code0, code1 신고 사건으로 분류
- **(측정산식)** 국민 긴급신고 신속 현장대응 = 지령 후 현장 도착시간(현장출동)
- **(측정방법)** 112신고시스템 내 통계 자료 자동추출(외부요인 투입 등 차단)
- **(실적)** '16년말 시범 측정하여 '17년부터 실적 관리, '18년은 5분 20초이고 '19년은 5분 18.5초, '20년은 5분 10초를 기록
 - ※ 美 샌프란시스코 5.46초 / LAPD 6.1초 / NYPD 6.69초 등으로 미국 대도시의 911 현장 대응 시간 평균 7분 22초와 비교해 볼 때 매우 빠른 측에 속함
- **(목표치)**
 - △ 국민 안전과 직결된 국민 긴급신고 신속 현장 대응 달성도는 지속 향상 필요
 - △ '21년 자체평가 정책과제(성과지표) 설정 기준에 따르면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 등에 근거하여 적극적 업무 수행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바,
 - △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성과지표 최근 3년간 실적('18년 5분20초 / '19년 5분 18.5초 / '20년 5분10초) 대비 추세치는 -1.6%('18 ~ '19년도 -0.5% / '19 ~ '20년도 -2.7%)로서,
 - △ 이를 상회하여 전년 실적대비 '5초'(-1.6%↑) 단축된 '5분5초'를 목표치로 '도전적 설정'
 - ※ 최근 3년간 평균치는 5분16초로 '11초' 단축한 목표치
- **(목표 관리 방안)** 112접수요원 지리감 향상을 위해 신고 다발지 대상 중점 길학습, 지역경찰 관할 신고 다발지역 순찰차 사전배치·지속순찰 등 예방순찰활동 전개로 112신고 접수시 정확한 신고 위치 지정·신속현장도착 지원·현장대응시간 중점 점검 등

【위기관리 역량지수】

- **(개요)** 국가차원의 재난대응 종합훈련 및 재난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 경찰 재난대응 역량 제고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를 성과지표로서 관리
- **(측정산식)**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훈련 횟수 + 경찰서 교육 횟수
- **(측정방법)** 시·도경찰청 성과보고서
- **(목표치)** '20년 목표(1,056점) 대비 초과 달성 1,245.6점,
 - △ '21년 자체평가 정책과제(성과지표) 설정 기준에 따르면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 및 전년도 성과 등에 근거하여 적극적 업무 수행 관점에서 도전적으로 설정토록 하고 있는 바,
 - △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년도 실적치 대비 10%이상 목표치 설정할 경우 '도전적 설정'으로 판단
 - △ 최초 지표도입한 20년도 목표(1,056점) 대비 초과 달성(1,245.6점, 18.0%↑), 21년도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성과 달성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 건강·안전 확보 시급한 바, 전년 실적 1,245.6점 대비 10% 이상 상향한 1,371점을 목표로 설정
- **(목표 관리 방안)**
 - △ 합동훈련 대상을 재난주관기관부터 지자체 등까지 폭넓게 선정, 합동훈련 참여 독려
 - △ 합동훈련 기반으로 유관기관 협조체제강화를 위해 훈련 종료 후 경찰 요청사항 등 기관의견 지속 수렴
 - △ 소방·적십자사 등 유관기관 및 전문 외부강사 초빙, CPR 등 내실화된 교육 실시
 - △ 훈련 및 교육 성과 자체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미흡사항 개선, 소 경찰관서간 공유

4 살인·강절도·폭력 등 강력범죄 엄정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

□ 추진배경

- 강·절도는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범죄로, 신속한 수사를 통한 사건해결이 매우 중요하므로
 - －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경미절도에 대한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품 회수 등 피해회복에 주력, 실질적 ‘사건 해결’ 도모
- 생활주변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린 폭력행위는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누적된 피해는 큰 경우가 대부분
 - － 단순 폭행의 경우에도 단건 처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습성·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엄정 대응
- 인피 뺑소니는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로 인해 피해자 구호의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결과 초래
 - － 뺑소니 사고는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로 국민적 공분과 체감 교통안전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 ※ 「20대 배달원 목숨 앗아간 뺑소니..가해자는 무면허, 음주운전」(연합뉴스 '21. 2. 5)
 - － 감소 추세에 있던 인피 뺑소니 교통사고가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생명·안전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침입 강절도 근절 추진]

- <적극적이고 밀도있는 단속> 연중 상시단속과 병행, 3월부터 상반기 「강절도 집중검거 기간(3개월 간)」 운영, 수사력 집중
 - ※ 집중검거 기간은 다발시기에 맞춰 연 2회 실시(하반기는 잠정 9 ~ 11월)
 - － 경미 검거 건수를 늘리기보다는 ‘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준다’는 차원에서 상습·직업적 악성 범죄 근절에 단속 방점

- <피해자 보호·지원 만전> 단계별 명확하고 종합적 안내 등 수사 절차상 피해자 권리 고지를 강화하고, 사건 접수 시부터 다각적인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극 활용

* △재범·보복 우려 높은 출소자에 대한 필요적 통보체계 구축(법무부 협의) △보호시설 연계·신변경호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위치추적장치 제공 등

- 또한, 피해품 회수율을 제고하고 ‘범죄피해 평가제도’ 등 활용하여 신체적·재산적·심리적 피해 신속한 회복 지원

- <선제적 예방활동 정착> 관련 기능 간 협업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범죄위험 요인 분석, 선제적 맞춤형 예방활동 전개

- <회복적 형사활동 전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時 ‘회복적 요소’ 적용을 강화하고, 관련 기능과 협력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 갈등을 적극 조정(회복적 대화) ⇨ 실질적 피해회복 도모

※ 생계형 범죄는 사회보장 제도와 연계한 다각적 지원으로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유도, 지속 가능한 공동체 안전 확보

[고질적 ‘생활주변 폭력행위’ 엄정 대응]

- <집중단속>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체감안전과 직결되는 생활 주변 사회적 약자 대상 고질적 폭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추진

▶(단속개요)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정책집중도 제고를 위해 상·하반기 집중단속 실시('21.3.1.~5.31. 상반기 집중단속 예정)

▶(단속대상)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공무집행방해 및 폐쇄내집단 폭력(직장·대학·체육계 內 반복적 폭력행위) 등 사회 전반의 고질적 폭력행위

- <수사체제> 경찰서 전담팀(1급서 강력 1개팀 / 2·3급서 2명 이상) 편성 / 폐쇄내집단 폭력 등 중요사건은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 담당 팀장은 사건 배당부터 피해자 보호·신병처리 판단 등 쏙 수사과정 직접 지휘, 과장은 병합수사 등 지휘·조정 철저

- <보복·재범 차단> 접수 단계부터 관련 기능(112·형사·청문·지역 경찰 등) 정보공유 및 협업, 피해자에 대한 위해요소 제거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및 위해 시도 시 분리조치 확행하고, 관련 기능 합심으로 재발방지 신속 조치

구 분	조치 내용
피의자 석방통지	피의자 석방(현장종결 포함) 前 피해자에게 미리 석방 통지 및 피의자 상대 재범방지 강력경고 / 핫라인 구축 및 신변보호(스마트워치, 순찰 등) 실시
피해자 신변보호	△보호시설 연계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 강화 △112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위치추적장치) 제공 △CCTV 설치 △신원정보 변경 등
보복·재범사건 재발방지	① 피의자 체포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등 분리조치 → ② (서장 보고 後) 담당과장 주재 합심, △ 피의자 신병처리 △ 피해자 신변경호 등 재발방지 조치

- <‘피의자 불특정 폭력 사건’ 신속 해결> 사안의 중요성* 등 고려, 수사팀 추가투입 등 집중수사로 필검

* △ 중한 피해 △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 불특정 다수 상대 범행 등

- <병합수사> 동일 피의자에 대한 중복사건은 병합수사 원칙으로 엄정 조치 / 과장은 소속부서의 중복사건 접수 여부 일일점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인피 뺑소니 교통사고 엄단]

- <엄정 대응>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교통수사 체제 정비, 인피 뺑소니 사건 피의자 검거율 제고로 국민안전 확보

- 관서별 업무량 진단, 적정 업무량에 따른 인력증원 추진으로 가용 경력 확보하여 신속한 검거활동에 기여
- 교통수사 조직 정비 등 인피 뺑소니 사건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여 교통사고 초동조치 후 즉각적인 추적수사 진행

-
- ▶ (전담팀) 교통범죄수사팀을 전담팀으로 편성
 - ▶ (초동조치) 인피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범죄수사팀 투입, 피해자 안전확보 및 교통소통 정리 등 현장 초동조치
 - ▶ (추적수사) 블랙박스·CCTV분석, 탐문 등 신속한 추적수사 진행
 - ▶ (차량압수) 상습 음주운전자로 차량압수 요건 충족 시 차량 압수 검토
-

- 피의자의 상습성(음주운전 전력 등)·재범가능성 및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압수 등 엄정 대응

- <체계 정비> 인피 뺑소니 사건 검거율*은 감소 추세로 검거율 제고를 위해 시·도경찰청과 연계한 종합적 대응체제 구축

< *인피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검거·검거율 >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잠정)
발생(건)	8,326	7,883	7,601	7,129	7,340
검거(건)	8,212	7,695	7,245	6,770	6,841
검거율	98.6%	97.6%	95.3%	95.0%	93.2%

[우수한 형사의 수사 역량을 활용, 경찰 전체의 수사품질 제고]

- <예방적 형사활동> 검거에만 주력하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①취약지역 범죄예방, ②범죄징후 조기발견·차단, ③ 신속대응 등 범죄 단계별 국민이 체감하는 형사활동으로 패러다임 전환

- ▶(취약지역 범죄예방) Geo-Pros 등 과학적 분석기법 활용한 지역별 치안수요 정밀 분석 후 형사·특성화부대를 사전에 투입하는 등 강력범죄 예방
- ▶(범죄징후 조기발견·차단) 수집정보 다각적 분석 및 범죄예방·신고요령 안내 등 찾아가는 형사활동으로 범죄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해소
- ▶(신속대응) △발생 초기부터 수사지휘망 운영 △광수대 투입 및 법률·수사 전문가 지원 등 총력대응 △강·절도 등 여죄수사 및 유통경로 역추적

- <중요사건> 살인·대형 안전사고 등 중요사건은 △종합대응팀 편성, △경력·장비 집중 투입 등을 통해 신속 해결 및 검거율 제고
-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 사회적 약자(여성·아동 등) 대상 범죄, 외국인 집단폭력 등 사회적 이슈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 <미제수사 역량 강화>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중요 미제사건 수사역량 강화

- △시·도경찰청 미제팀에서 미제 살인사건 책임수사 △중요 미제사건 수사기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등 미제수사 역량 강화

* '21년 예산 8억 6,100만원 확보 / 미제 살인사건 수사기록(272건 약 150만 페이지) 훼손·멸실 방지, 사건 열람·관리·검색 등이 가능하도록 DB구축 예정

- <데이트폭력> 언제든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 對여성 범죄인 데이트폭력 엄정 대응하여, 여성안전 확보

- ▶ 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형사·여청·청문 등 전담팀 재정비, 대응체계 구축('20년 전국 255개서 4,001명)
- ▶ 신고 활성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집중신고기간 운영(7~8월 중)
- ▶ 상습·악질범 엄정 수사, 맞춤형 신변보호·사후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

- <자살 예방> 심리부검 등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정책」 적극 협조

- ▶ 자살의심 변사 통계, 자료 공유로 자살원인 규명을 위한 '심리부검' 적극 참여
- ▶ 동기·수단을 포함한 자살위험 촉발요인 노출 최소화 등 「자살보호 가이드라인 3.0(자살사건 비공개 원칙)」 철저 준수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설 명절 특별 형사활동 추진	'21. 1월	강력
	상반기 서민생활 침해범죄(침입 강절도·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	'21. 3~5월	강력, 폭력
	인피 뺑소니 검거율(신규) 관련 시·도경찰청 성과평가 계획 하달	'21. 2월	교통수사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	'21. 3~10월	교통수사
2/4분기	부처님오신날 전·후 형사활동 강화	'21. 4월	강력
	상반기 서민 생활 침해범죄 집중단속 성과분석	'21. 6월	강력, 폭력
	뺑소니 등 전담, 교통범죄수사팀 개선 계획 하달	'21. 4월	교통수사
3/4분기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	'21. 7~8월	폭력
	하절기 특별 형사활동 추진	'21. 7~8월	강력
	하반기 서민생활 침해범죄(침입 강절도·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	'21. 9월	강력, 폭력
4/4분기	추석절 특별 형사활동 추진	'21. 10월	강력
	하반기 서민 생활 침해범죄 집중단속 성과분석	하반기 중	강력, 폭력
	시·도경찰청 인피 뺑소니 검거율 성과평가	'21. 11월	교통수사
	강·절도, 생활폭력, 교통사고 등 주요 단속분야 성과 평가·포상	'21. 11~12월	강력범죄수사과
	연말연시 특별 형사활동 추진	'21. 12월	강력
	상습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현황 관리	매월	교통수사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 기대효과

-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살인, 강·절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체감치안만족도 제고
- 강절도 피해품 회수 및 맞춤형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 피해 회복 도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살인·강도·절도 통합 검거성과 (25%)	60.6%	61.1%	62.2%	62.1%	최근 3년 평균치(61.3%)+0.8%p인 62.1%로 산정 ⇒ 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추세치를 상회하는 '상'에 해당 ※ 전년 목표치 61.4%와 비교해도 0.7%p 높은 적극적 목표임 ※ 살인·강도 검거율은 10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강력범죄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는 해외 사례('17년 기준 日 31.2%, 美 13.6%)를 비교해볼 때 50% 이상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운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검거율이 이미 임계치에도 달한 것으로 판단	((범죄통계시스템 살인강도·절도 검거건수 + 즉결 및 통고처분 시스템 절도 처리건수)) ÷ ((범죄통계시스템 살인강도·절도 발생건수 + 즉결 및 통고처분 시스템 절도 처리건수))	범죄통계시스템, 즉결 및 통고처분시스템
강·절도 피해품 회수건수 (25%)	58,812 건	57,172 건	60,604 건	59,000 건	최근 3년 평균치(58,862건) 보다 138건 높은 59,000건으로 산정 ⇒ 최근 3년간 실적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위 목표치는 평균을 초과하는 목표치 적극성 '상'에 해당	범죄통계시스템 회수건수 + 즉결 및 통고처분 시스템 회수건수	범죄통계시스템, 즉결 및 통고처분시스템 (재산범죄 회수현황)

상습·주취폭력배 검거인원 (25%)	-	5,766 명	5,966 명	6,175 명	최근 2년 실적의 상승세(3.5%)를 반영한 6,172명보다 큰 6,175명으로 산정 ⇒ 상습 주취폭력배의 개념이 정립된 '19년 이후의 통계치를 * 활용하되, 2년간 실적치의 상승세 이상에 해당하는 적극성 '상'에 해당	상습 주취폭력배 검거인원 * 최근 3년간 동종범죄전력 2건 이상인 자	검거인원 수기 통계(월보) 취합 ※ 특진, 특별승급 등 포상을 위해 실적을 검증하므로 통계의 진정성이 담보됨
인피 뺑소니 사건 검거율 (25%)	95.3%	95.0%	93.2%	94.6%	최근 3년 평균(94.5%) + 0.1%p ⇒ 최근 검거율이 감소추세이나 '20년 교통범죄수사팀 증원(58명) 고려하여 3년 평균치를 상회하는 도전적·적극적 목표치 설정	인피 뺑소니 검거건수 ÷ 발생건수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5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범죄정보 수집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 추진배경

- 최근 코로나 19 상황을 겪으면서 국민안전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
 - －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은 정부의 ‘적절한 사후대처’를 넘어 ‘충분한 사전대비’로 상향
-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는 각종 재해·재난 위험요인을 비롯하여 생활 곳곳에 잠재해 있는 안전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탐지하여 사전 조치하는 경찰의 정보활동으로,
 - － 위험정보의 수집·분석 → 위험요인 제거를 통해 국민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각종 불공정·부조리 범죄 근절 등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계침해형 갈취·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생활 주변 악성 범죄를 근절해달라는 요구도 지속
- 정보분석과는 △범죄정보 수집 활동의 비중 확대 △국민 안전 위협요소의 선제적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안전’·‘공정’이라는 시대적 가치에 부응하는 정보활동에 역량 집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통해 위험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공공안녕·안전비리 등을 범죄정보 중점 수집대상으로 설정하여 범죄 정보 활성화 도모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

- 경찰 정보활동의 패러다임을 ‘예방적 안전활동’으로 전환
 - －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활동은 과거에도 현장 정보관들의 활동 중 하나였으나, 크게 강조되지 않았던 실정
 - － 이 같은 업무체계를 변화시켜 경찰의 정보활동 중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활동’을 중점 업무로 강조하고, 비중 확대
- 先 조치·後 보고하면 본청에서 점수 부여하는 체계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활동 촉진
 - － 특정 지역의 안전 취약요인에 대한 정보는 본청에서 활용되기 어려워 일선 정보관들이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음
 - －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선 정보관이 유가치한 지역안전 정보 취득 시 지자체 통보 등 先 조치 후 시도경찰청·본청에 보고하면 본청에서 점수를 부여하는 체계 구축
 - ※ 즉, 기존 정보순환 시스템에서는 정보의 활용에 앞서 상급기관 보고가 선행되었지만,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순환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先 조치 → 後 보고 체계
- 재난·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활성화를 위해 각 기능과 유기적 협조
 - － 지역밀착형 안전정보 수집을 위해서는 정보관뿐만 아니라 지역경찰 등 非정보부서의 정보 수집·공유가 필수적인 만큼, 他 기능과 원활한 협조 체제 구축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로 안전·공정사회 구현]

- 공공안녕을 확보하고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안전·공공분야와 관련된 범죄정보 수집 강화
 - ※ (안전 관련 비리) △감염병 관련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 △철도 등 건설 안전 관련 비리 △다중이용시설 관련 각종 비리 △부실허가·건설자재 납품 비리 △화재안전·산업안전 인·허가 관련 제반 불법행위 △식품안전·의약품 안전 등 불법행위
 - ※ (공공분야 부패) △공공분야 직권 이용 이익추구형 범죄 △정보유출·국고횡령 △공공분야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 및 비밀누설 등 2차 피해 범죄 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계침해형 갈취·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 생활 주변 악성 범죄에 대한 첩보 수집도 강화

※ (생활 주변 악성 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관련기기 유통 등 디지털 성범죄 △보육시설 아동폭행·학대·성착취 등 범죄 △노인요양시설·장애인 보호시설 피보호자 대상 범죄 등

-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정착을 위해 불공정·부조리 범죄에 대한 첩보도 적극 수집

※ (불공정·부조리) △보조금 부정수급 △인사·채용 관련 금품수수 및 특혜 제공 △부정 입학 비리 △직위를 악용하거나 사칭한 범죄 △기맹점·소상공인 대상 불공정 거래 등

- 정보관들의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화 교육 및 본청의 현장 지원 역할 강화

- ▶ 경찰인재개발원 범죄정보 교육과정 확대 (2주 2회<40명> → 1주 4회<80명>)
- ▶ 본청 분석관들이 첩보 수집단계부터 수집 노하우·혐의 입증방안·법률 조언 등을 지원하는 1:1 코칭 시스템 운영

[정보경찰 개혁 안착을 위한 현장 이해도·역량 제고]

- 변화된 정보활동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체득화

-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정 등 그간 추진된 정보경찰 개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정보관 대상 워크숍·교육 강화

※ 보고서 작성 및 정보활동시 법령·정보활동규칙 등 위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반복적 교양·교육 실시

- 상시적 성과 점검 및 포상 등 성과관리 체계 구축

-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 부서 성과보고회 개최 △인센티브(특별승진·포상 등) 부여를 통해 효율적·체계적으로 성과 관리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치안캘린더 작성·배포	'21. 1월	
	범죄정보 담당자 워크숍 개최	'21. 3월	
	재난·안전사고 정보 담당자 워크숍 개최	'21. 3월	
2/4분기	1분기 정보분석과 성과보고회 개최(정책 참고자료 우수사례 분석 등)	'21. 4월	
	인재개발원 內 범죄정보 수집 전문화 교육과정	'21. 6월	
3/4분기	2분기 정보분석과 성과보고회 개최(정책 참고자료 우수사례 분석 등)	'21. 7월	
	정책 참고자료 담당 정보관 워크숍 개최	'21. 9월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활동 '위탁교육' 실시	'21. 9월	
	경찰청·감사원 협의회 개최	'21. 9월	
	인재개발원 內 범죄정보 수집 전문화 교육과정	'21. 9월	
	범죄정보정책 참고자료 수집 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경찰청 순회 교육	'21. 9월	
4/4분기	3분기 정보분석과 성과보고회 개최(정책 참고자료 우수사례 분석 등)	'21. 10월	
	우수 정보관 격려 간담회 개최	'21. 11월	
연중	汎정보부서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汎정보협의체 운영 내실화	연중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활성화를 위한 '현장데스크 TF' 운영		
	실시간 이슈 모니터링 및 오늘의 온라인 사이버이슈 작성		
	주간·월간 주요 치안현안 작성		
	'우수 정보수집 정보관 선발' 제도 운영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청> 국정과제 등 조직의 성과 달성 및 치안정책 고도화
- <일선 정보관>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및 범죄정보 수집 역량 강화와 정보개혁 수용도 제고
- <정부부처> 정책 추진에 따른 미비점을 신속·정확하게 파악
- <국민> △ 정부·치안정책 개선 △ 범죄정보 수집활동 강화로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생활 영위

□ 기대 효과

-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의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예방적 정보 활동을 전개,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을 적극 보호
- 내실 있는 범죄정보 수집을 통해, 공공안녕의 위험을 예방하는 등 안전 사회 구축에 기여
- 조직의 핵심 정책과제 달성을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경찰청장 지휘권 보좌로 원활한 조직운영 뒷받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 전문작성 실적 및 활용도 (45%)	신규			9,756점	① 재난·안전사고 분야 의무제출 건수의 110.1%로 설정 (보고서 1건당 1점) + ② '20년 활용 점수인 13,050점의 110.1%로 설정 → 14,369점	① 보고서 작성 건수 50% + ② 정보 활용도 50%	경찰 견문 관리시스템 (PORMS) 통계 분석
치안 시책 보고서·정책 참고자료 준법 준수율 (20%)	신규		99%	100%	법령·정보활동규칙 未준수 보고서가 年 0건이 되도록, 목표 준수율을 100%로 설정	(전체 보고서 작성 건수 -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 위반 징계 요구수사 건수) ÷ 전체 보고서 작성 건수 × 100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 위반 징계 요구·수사의뢰 건수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지수 (35%)	신규			31.52%	'20년 범죄정보 제출건수 대비 배당 건수 비율의 110.1%로 설정	(배당 건수 ÷ 제출 건수) × 100	경찰견문 관리시스템 (PORMS) 통계 분석

【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세부 설명자료 】

①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 보고서 작성 실적 및 활용도(45%) ⇨ 신설

- 제출된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 보고서를 양적으로 평가하고, 동시에 보고서가 실제로 사회에 어떻게 활용되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 <작성 실적 50%>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 분야 의무제출 건수의 110.1%를 목표치로 설정

- 점수를 획득한 유가치 견문뿐만 아니라,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견문일 지라도 지역 단위 활용을 위해 작성된 만큼 건수로 인정
- <활용도 50%> 제출된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 견문의 총 점수를 활용도 지표로 선정
- 재난 및 안전사고 정보 분야가 '20. 11월 본격적으로 추진된 관계로 전년도 실적치가 없는 점을 고려, '20. 11~12월 2개월간의 활용도를 연간 활용도로 환산하여 전년도 실적으로 대체 (목표치, 전년도 실적의 110.1%인 14,369점)
- 활용도 측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배점 기준표를 마련, 점수는 견문 가치에 따라 1점, 2점, 5점, 10점으로 차등 부여

구분 기준	점수
· <u>국민안전을 해할 우려가 높은 중대한 사안</u> 으로 즉시 조치가 필요하여, 경찰 內 소관 기능 또는 他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전파한 경우 · 정보관이 △사안에 대한 세밀한 정보수집 활동, △기관 간 갈등 중재 또는 설득 등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10점
· <u>국민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u> 으로 즉시 조치가 필요하여, 경찰 內 소관 기능 또는 他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전파한 경우 · 정보관이 △사안에 대한 세밀한 정보수집 활동, △기관간 갈등 중재 또는 설득 등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5점
· <u>국민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안</u> 으로 조치 검토가 필요하여, 경찰 內 소관 기능 또는 他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전파한 경우	1~2점

- 정보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세밀한 정보활동을 하거나 기관간 갈등을 중재 또는 설득하는 경우 기여도 부분도 배점 時 고려
- 한편, 전국·광역정보로서 본청에서 정책참고자료로 비중있게 활용된 경우, 기존 정책참고자료와 같이 30점까지 점수 부여 가능

② 치안 시책 보고서·정책 참고자료 준법 준수율(20%) ⇨ 기존 지표 유지

- 정보분석과에서 작성한 △대내 전파 치안 시책·현안 관련 보고서 △대외 전파 정책 참고자료 등 보고서가 법령·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적절히 준수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지표
- 작성된 보고서는 경찰청 정보관리과 준법지원팀의 심사를 받고, 법령이나 정보활동규칙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징계 등을 시행, 이를 통해 보고서 작성 시 법령·정보경찰 활동규칙*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통제

- *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4조(정보활동의 범위): 1. 범죄정보 2. 국민안전과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5.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 등 생활의 평온과 관련된 정책의 입안·집행·평가에 관한 정보 ... 7. 그 밖에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정보

③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지수(35%) ⇨ 신설지표

- 범죄정보의 배당률을 기준으로 활용도를 평가하는 지표
 - 범죄정보는 양적 확대보다는 실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출 건수는 평가 요소에서 제외
- 범죄정보 수집은 공공의 안녕·국민 평온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로서 정보경찰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업무인 점을 고려,
 - 범죄정보의 직무 비중·활용도 확대를 위해 범죄정보 성과지표 비중 확대 (작년 30% → 올해 35%)

(1) 주요 내용

- **<아동학대·학교폭력 근절>**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시기별·대상별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신속·정교한 조치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 * △아동학대 집중 추진기간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 ** △경찰청-복지부 아동학대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 △신종 학교폭력 정보수집 강화
- 위기 아동·청소년 조기발굴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학대우려아동 합동 방문점검 및 발굴기관 연계 확대 등 공동대응 체계 구축
- **<여청수사 역량 강화>** 아동학대전담팀 등 조직체계를 개선, 사례회의·테마점검 등 수사과오 방지를 위한 점검·공유시스템 구축
 - △AI음성인식 조서 △인권친화형 조사환경 개선 등 피해자 중심 조사환경을 조성하고, △전수합동조사 △맞춤형 교육 등 역량 강화
- **<여성안전망 구축>** 여성범죄 예방·대응 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여성대상범죄 총력 대응체계 고도화 △성폭력 예방 및 불법촬영 대응 강화 △가정폭력 대응체계 정립 등 추진
 - 다각적인 관점에서 여성안전 불안요인을 발굴, 사후 대응뿐만 아닌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 개선 목표
- **<회복적 경찰활동* 및 피해자 보호>** 경찰의 실질적 피해회복 활동을 강화하고, 신변보호·범죄피해평가 등 체계적인 보호·지원 내실화
 - * 학교폭력·이웃 간 분쟁 등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사건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주관 가·피해자 대화모임 실시, 관계회복·재발방지 등 실질적 피해회복 도모
 - ※ '19년 수도권 15개시 시범운영 → '20년 전국 142개시 → '21년 전국 200개시로 확대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범죄안전도
관리과제	아동학대 학교폭력 선제적 예방 및 위기 아동 청소년 보호 강화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 아동학대 보호조치율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수사 및 여청수사 역량 제고	성폭력 미검률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율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 고도화·여성안전망 구축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확대 및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활동 전개	피해자 지원활동율 /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 / 민간단체와의 협업 노력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범죄안전도	79.3	80.2	83.2	85.0	국민 범죄안전도는 '18년 이후 지속 상승하였고, 전 3년도 실적 평균값 (80.9)과 과거 추세선을 바탕으로 예측한 값(84.8)을 고려, 상승세 지속을 목표로 '20년 실적보다 1.8%p 높은 85.0를 목표치로 제시 하여 역대 최고치 경신을 독려	국민 체감안전도 조사결과 중 '범죄안전도' 분야	경찰청 주관 대국민 전화조사 (외부 조사업체 이용, 일반 국민 총 51,400명 대상)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발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선제적 예방활동'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아동학대 신고건수) 12,619건^{'17년}→12,853건^{'18년}→14,484건^{'19년}→16,149건^{'20년}

** (아동학대 발견율 비교) 한국 3.81%('19), 미국 9.2%('18), 호주 10.1%('18)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유관부처와의 협업* 강화 및
선제적·예방적 경찰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개선** 추진

* 경찰청-복지부 간 「현장대응 공동협의체」 구성(1.22.), 주 1회 실·국장급 회의

** △아동학대처벌법상 경찰관 면책규정 신설 △현장 체크리스트 전면 개선

- 또한, 학교폭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학교폭력 미투’가 체육계에서 사회 각 분야로 확산되는 등 사회적 관심 고조
 - * ('19→'20) △ 학교폭력 검거 13,584→11,331명(16.6%↓) △ 117신고 61,302→28,241건(53.9%↓)
-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 학생 중심의 홍보 강화
 △ 경찰-학생 간 소통창구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 인식 개선 추진
 - ※ 학교폭력은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지속 전파
- 여성대상 범죄 발생 등 객관적 지표*는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여성 불안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 * <성폭력> 31,396→29,496(6.1%↓), <가정폭력> 240,564→222,046(7.7%↓)/'19년 대비
 - ※ (언론보도) 「n번방 후에 텔레그램서 기승...‘21만명 모인 방도 있어」(’21.2.23. 한국일보)
- 정책 입안-검토-시행-환류 순 과정에서 관련부처·유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내·외부 지지 강화, 수요자 맞춤형 정책 추진
 - ※ 현장사례와 언론보도 분석도 병행,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보완으로 완성도 제고

6 아동학대·학교폭력 선제적 예방 및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추진배경

○ 최근 아동이 보호자에 의한 학대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건 발생, 아동학대 예방·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

－ 또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반면, 발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선제적 예방활동’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최근 아동학대 사건) △경남 창녕(’20.5.) △충남 천안(’20.6.) △서울 양천(’20.10.)

▶ (아동학대 신고건수) 12,619건^{’17년}→12,853건^{’18년}→14,484건^{’19년}→16,149건^{’20년}

▶ (아동학대 발견율 비교) 한국 3.81%(’19), 미국 9.2%(’18), 호주 10.1%(’18)

○ 한편, 학교폭력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나, 정서적 폭력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의한 학교폭력 등 범죄는 지속 발생

▶ (학교폭력) 검거인원 13,584→11,331명(16.6%↓), 117신고 61,302→28,241건(5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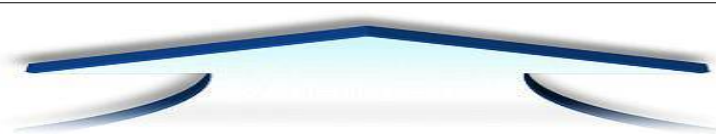
▶ (정서적 폭력 비중) 집단따돌림(23.2%→26.0%), 사이버폭력(8.9%→12.3%)

▶ (학교밖청소년) △전체 소년범 中 비중 40.0% △인구 24.4만명 추정(여가부)

－ 특히, 최근 ‘학교폭력 미투’가 체육계에서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고 운동부 학교폭력 이슈화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실정임

⇒ **최근 사회현상·정책환경 반영,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청소년 선도·강화 정책 추진 필요**

< 성과목표 및 추진전략 >

성과목표	아동·청소년의 현재와 미래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성과지표	① 아동학대 보호조치율 12.7% ↑ ②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38.2% ↑,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율 20.6% ↓		
추진전략			
	유관기관 협업,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강화	위기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 안전망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유관기관 협업, 위기 아동·청소년 발굴 강화]

○ 관계부처 합동 고위험 아동 및 위기청소년 발굴

－ (합동 점검) 아보전·지자체 등과 협업, 학대우려 아동 점검 강화

- ▶ (반복신고 점검)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 간 협업,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합동 방문점검 정례화(반기별 1회 이상)
- ▶ (특별 점검) 교육부와 협업 '21년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아동 추진, 학교·지자체 합동으로 아동(약 44만명) 대상 점검 후 소재 미확인 시 경찰에 수사의뢰

－ (발굴 체계화) 학교·가정 밖 청소년 일제 발굴기간(6·11월) 운영 이외 위기청소년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발굴활동 상시화

- ▶ (발굴 경로 다양화) 112 및 117학교폭력신고 등 外 전일 신고·접수된 청소년 비행 등 소년사건을 면밀히 파악, 위기청소년 발굴 방식을 다양화
- ▶ (SPO통보 기준 확대) 외근기능에서 위기청소년 발견 시 SPC에게 통보 중으로, 기존 '학교·가정 밖 청소년' 外 선도·보호가 필요한 비행청소년까지 통보 대상 확대
- ▶ (발굴기관 연계 확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 위기청소년 지원 기관에 담당 SPO 지정, 정보 공유 강화 및 보호·지원 사각지대 해소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유관부처 간 아동·청소년 정보공유 강화

－ (APO 업무관리시스템 연계)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부처 간 상호 공유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지원

- ▶ (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APC시스템에 아동학대 정보 입력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동통보, 복지·지원서비스 제공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 가능('21.2월 완료)
⇒ 現 일방향(경찰→복지부) 정보연계 방식을 개선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 시스템에 정보입력 시 APO시스템으로 자동연계되도록 개선 추진(연내)
-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APO시스템에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입력 시 복지부에 자동통보(기존 공문 통보), 대상자에게 신속한 복지·지원 서비스 가능(연내)

－ (위기청소년 정보 연계) 위기청소년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제도 간 위기청소년 정보 연계 및 지원 서비스 다각화 추진(∼'22년)

※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유관부처 4대 핵심 사업* 간 연계체계 표준화

* △(경찰청) 선도프로그램 △(여가부) 청소년 안전망 △(복지부) 드림스타트 △(교육부) 학업중단 숙려제

[위기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장대응 강화]

○ 신속·정교한 현장조치로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서 경찰-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간 원활한 협업을 위해 ‘공동업무수행지침’ 제작(~4월)

- ▶(개요) 아동학대 관련법 개정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등에 따라 경찰청-복지부 간 협업을 위해 기존 매뉴얼(공동업무수행지침) 개정 필요
- ▶(추진체계) 경찰청-복지부 간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 구성(1.22.), 매주 정기회의 통해 아동학대 신고·출동부터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역할 규정
- ▶(주요 논의사항) △전담공무원-경찰 정보공유 활성화 △현장에서 전담 공무원-경찰 역할 분담(응급조치·일시보호조치 등) △통합사례회의 개최·즉각분리제도 시행(3.30.) 대비 매뉴얼 △(긴급)임시조치 절차 활용 구체화

- (체크리스트 개선) 현장에서 신속·정확하게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 하도록 전문가 의견 반영, ‘아동학대 현장 체크리스트’ 개선(3월)

※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체크리스트 단점(△낮은 시인성 △복잡한 항목 △현장과 맞지 않는 질문항목) 개선, 시범운영(2.19.~3.10.) 및 현장의견 수렴 후 확대시행

- (신종 학교폭력 대응) 최근 학생 간 ‘SNS 계정 뺏기’ 등 학교폭력 유행, 신속한 정보입수·공유 및 엄정 수사를 통해 유사사례 확산 차단

- ▶(정보입수·공유) △SPO 학폭위 등 참여 △학생·교사 상담 △117처리 시 신종 학교폭력 유형 정보입수 및 학교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상시화
- ▶(정보활용) △전문단체(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정책제언 수집 활성화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의 학교폭력 예방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 조치
- ▶(학교폭력 수사) SPO-여청수사팀-교육기관 간 협업, 학교폭력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화된 수사 대응체계 구축 및 신고·상담 건 수시공유

○ 코로나19 등 언택트 환경에 맞는 아동·청소년 보호 활동 전개

- (현장조치 강화) 언택트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협의 입증에 다소 어렵더라도 응급조치 규정 적용·보호조치

- ▶(적용요건) 2회 이상의 아동학대 의심 심고가 있고, ①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② 멍·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 규정 적용, 보호시설 인도 및 내·수사 착수

- (비대면 예방활동) 최근 정서적폭력(사이버폭력 등)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학교폭력 환경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

- ▶(사이버범죄 예방) 피해학생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채널(117신고 등) 적극 홍보 및 사이버범죄 예방 표준강의안을 활용한 전문교육 실시
- ▶(비대면 교육) 교육지원청(학교)과 협업, 교육기관 온라인 교육 플랫폼(줌·구루미 등)을 활용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 대상 비대면 교육 실시

- (선도표준안 마련) 대면 접촉 위주의 운영방식으로 코로나19에 취약한 선도제도 운영방식 보완, ‘비대면 선도표준안’ 개발 추진

< 경찰 단계 선도제도 및 선도표준안 마련 방안 >

- ▶(전문가 참여제) 비행소년 조사 시 범죄심리사가 참여, 비행촉발요인 검사 등을 통해 재비행 위험성 분석 후 처우 기초자료로 활용('02년~)
⇒ 범죄심리사-비행소년 온라인 1:1 면담 및 오프라인 방역지침 마련
- ▶(선도심사위원회) 경미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 대상, 전문가 참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처분 여부 심사, 훈방·즉결심판 청구여부 결정('12년~)
⇒ 화상회의·서면·전자서명(e-mail) 위원회 개최 진행 방법 마련
- ▶(선도프로그램) 비행소년의 재범·재비행 방지를 위해 개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경찰 자체 선도 △전문기관 연계 선도)('83년~)
⇒ 비대면 운영 방식의 별도 프로그램 마련(총 10회)

○ 시기별·대상별 맞춤형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활동 추진

- (아동학대 예방) 매년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9.)부터 연말까지 집중추진기간 운영, 아동학대 가정 전수점검 및 대국민 홍보 추진

- ▶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가정 합동 방문점검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참여 홍보 캠페인(공익광고·홍보영상 등 제작) 등 진행

- (학교폭력 예방) 학사일정에 맞춰 △신학기 △방학 △수능 전후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 밖 등 위기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추진

- ▶(주요 착안사항) ‘학교폭력 미투’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 고려, 시·도경찰청별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붐(Boom)’ 조성
- 특히, 운동부·폭력서클 관련 학교폭력 발생 시 추가적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SPO-여청수사팀-교육(지원)청 협업, 합동 전수조사 등 대응에 만전

[지역사회와 아동·청소년 보호 안전망 활성화]

- 시민 참여적 요소를 도입, 위기 아동·청소년 문제에 공동 대응
 - － (시민감시망 강화) 아동과 접촉이 잦은 편의점(전국 4만여개) 등과 네트워크 강화, 아동학대 신고망 확대 및 위기아동 보호 활성화
 - ※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아동학대 긴급임시보호소로 지정, 신고임무 부여 등 역할 확대
 - － (정책자문단 운영) 청소년 의견을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에 반영하는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전국 확대, 청소년 눈높이 정책 적극 발굴
 - * 시행 착오를 줄이고 적합한 운영방식 도출을 위해 52개 관서 시범운영(20.7~12월)
 - ▶(시범운영 결과) 정책자문단에서 총 323개 제언 및 제언사항이 실제 경찰 시책이 반영(학교밖지원센터에 담당 SPO 지정)되는 등 긍정적 결과 도출
 - － (학생 중심 활동) 학교폭력은 심각한 범죄라는 학생 간 공감대 확산
 - ▶(학생인식 전환) 現 ‘학폭 미투’ 현상은 학교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함에서 기인, 방송매체·SNS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문구·영상 지속 송출
 - ▶(또래상담자 육성) SPO가 또래상담 지도자 교육을 받은 후 직접 학생을 또래상담자(주변 또래의 고민상담 및 학교폭력 공동대처 역할 부여)로 육성
-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활용
 - － (통합사례회의 활성화) 기존 지자체 아동학대 ‘자체사례회의’를 유관기관·전문가(의사·변호사)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로 확대
 - ※ 학대판단이 애매한 경우, 보다 전문적인 학대 판정 및 사후관리 가능
 - － (청소년비행예방팀 운영) 경찰서별 ‘청소년비행 대책협의회*’ 내에 교육기관·지자체 등의 현장실무진으로 ‘청소년비행예방팀(가칭)’ 구성
 - * 경찰·지자체·교육지원청(학교)·유관단체 등 협업, 정기회의 개최(분기 1회)를 통해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 △위기청소년 지원 △유해환경 정화 등 논의
 - ▶(주요역할) △주요사건 공동대응 △위기청소년 지원 △소년범 선도 등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에 대해 유관부처·단체가 종합적 관점으로 접근
 - － (위탁보호위원 지정 확대) 위탁보호위원으로 지정된 SPO를 확대하여 송치 이후 단계까지 학교 밖 등 위기청소년 선도 강화 조치
 - ※ 소년범 상 보호처분 대상 소년범에 대해 위탁보호위원 지정, 선도·생활지도 가능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예비소집 불참 아동 및 미취학·장기결절 아동 합동점검	'21. 2월	
	'21년 학교폭력 근절 및 위기청소년 보호 종합 대책 수립	'21. 3월	
	경찰단계 선도제도 가이드라인 배포	'21. 3월	
	청소년 참여 정책자문단 전국 확대 시행	'21. 3월	
	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 운영	'21. 3~4월	
2/4분기	개선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전국 확대 시행	'21. 4월	
	경찰·복지부 '공동업무수행지침' 시행	'21. 4월	
	아동학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	'21. 5월	
	학교·가정 밖 청소년 일제 발굴기간 운영	'21. 6월	
3/4분기	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21. 7~8월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대상 전수조사 실시(상반기)	'21. 7월	
	117 상담사 워크숍	'21. 8월	
	학기 초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 운영	'21. 9~10월	
4/4분기	복지부 협업, 만 3세 아동 합동점검	'21. 10~12월	
	아동학대 예방 집중추진기간 운영	'21. 11월	
	학교·가정 밖 청소년 일제 발굴기간 운영	'21. 11월	
	수능 전·후 청소년 비행예방활동	'21. 11월	
	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21. 12월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대상 전수조사 실시(하반기)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아동·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 관계부처 :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법무부, 가정(지방)법원 등

⇒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협력 관계(교육부), 학교·가정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발굴·연계(여가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협력 관계(복지부·법무부), 소년법 선도·보호(법원) 등 분야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필요

- 지역사회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안전망 운영 및 선도프로그램 연계기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연계), 청소년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 사후 모니터링, 사례관리) 등
- 유관단체 : 청소년육성회 등 청소년단체,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 등 아동학대 관련 단체 등

□ 기대효과

- 학교폭력 미투의 심각성 및 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것을 인식시켜 학교폭력 예방·근절 도모
-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와 협업 강화 및 실질적인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공동체 치안체계 구축
-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업, 촘촘한 아동 안전망 구축으로 선진국 수준(약 9%)으로까지 ‘아동학대 발견율*’상승 도모
* 아동인구 1,000명 당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의 수
- 학대 피해아동과 가해부모 분리 등 보호조치를 통해 학대 상황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하여 아동보호 강화 및 건전한 성장 도모
※ 가정폭력 가해자의 89.5%가 아동기에 부정적 사건 경험('20.7.9. 중앙일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아동청소년 보호활동				
① 사회적 약자보호(1132)		일반회계	102	97
■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311)			102	9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선도프로그램 연계율 (25%)	38.8 (29.0)	39.2 (34.0)	36.3 (35.7)	38.2 (-)	'21년 목표치는 과거 실적치에 상회하도록 설정하여야 하나, 현재 까지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정상적인 선도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선도프로그램은 집단으로 운영되고 대인접촉이 많아 호흡기질환에 취약) 따라서, 現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부터 정상적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정상 운영이 되더라도 감염 우려에 따라 대상자들의 소극적 참여가 예상됨. 다만, 비대면 방식의 선도프로그램 운영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므로,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 연계를 위해 '목표치 설정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인 3년간 실적치의 평균치인 38.1%를 초과하는 38.2%를 목표치로 설정하고자 함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 전체 소년범) × 100 (선도프로그램 중지 기간 동안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및 소년범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	·선도프로그램 연계 인원(월보) ·소년범(202 통계)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25%)	20.5 (-)	20.0 (-)	21.5 (19.7)	20.6 (-)	최근 3년간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 중 재범인원을 산출한 결과, 실적이 '18년 대비 '19년에 상승(하락지표)하였다가 '20년에 다시 '19년 대비 하락하였으므로, '목표치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인 3년간 실적의 평균치(20.7%)를 초과하는 20.6%를 목표치로 설정하고자 함	(재입건인원 ÷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 100	·선도프로그램 연계 인원(월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아동학대 보호조치율 (50%)	8.1 (-)	9.5 (-)	10.9 (-)	12.7 (-)	학대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 접근금지 등이 가능한 「아동 학대처벌법」 상 임시조치(법 제19조) 관련 지표를 신규로 도입함 최근 3년간 아동학대 112신고 건수 대비 임시조치 신청 비율을 산출한 결과 상승추세이며, '목표치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인 '상승세 평균(16%)'를 적용한 수치(12.6%)를 초과하는 12.7%를 목표치로 설정하고자 함	(임시조치 신청 건수 ÷ 아동학대 112신고건수) × 100	·APO업무지원 시스템 ·사후지원 통보건수 ·사후지원 관련 공문 ·아동학대 월보 ·112신고 시스템 ·KICS시스템

7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수사 및 여청수사 역량 제고

□ 추진배경

['21년 정책여건 분석]

- 국민 관심이 집중되는 사회적 약자 관련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 남성 및 여타 연령대에 비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크다는 특성을 지님

▶ (최근 아동학대 사건) △충남 천안('20.6.) △서울 양천('20.10.) △경기남부 용인동부('21.2.)

▶ (성별) '20년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격년 실시), 야간보행시 두려움에 대해 여성은 49.8%가 불안('18년 47%)하다고 답변(남성은 16.9%에 불과)

▶ (연령대) 13~19세의 36.5%가 불안하다고 응답, 연령대 중 최대치(평균 33.5%)

- 또한, 연이은 재난·위기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진 점을 고려, 엄정 수사와 함께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경찰활동 강화 요구

※ 최근 5년('15~'20)간 '안전' 키워드 검색량(구글트렌드)



- ⇒ 여청수사관들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케어로 2차피해 방지 필요

[사회적 약자 대상 주요범죄 동향 및 시사점]

구 분 (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실종	신상 대상자 (명)
	발생	검거	112신고	사법처리	112신고	사법처리	발생	
'17년	32,234	31,041	279,082	38,583	12,619	3,320	104,619	47,547
'18년	31,396	30,045	248,660	41,905	12,853	3,696	118,584	59,407
'19년	31,396	29,971	240,564	50,277	14,484	4,645	117,822	70,001
'20년	29,496	28,150	220,046	52,128	16,147	5,551	106,108	80,939
대비(%)	6.1 ↓	6.1 ↓	8.5 ↓	3.7 ↑	11.5 ↑	19.5 ↑	9.9 ↓	15.6 ↑

- <성폭력> 전체 성폭력은 감소세이나, 범행 특성상 피의자가 불상인 범죄(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다중장소침입)의 검거율이 하락
※ 상대적으로 피의자가 명확한 범죄(강간·강제추행)는 하락 추세

구 분(건)	총계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17년	32,234	31,041	24,106	23,284	6,465	6,220	1,249	1,142	414	395
'18년	31,396	30,045	23,467	22,633	5,925	5,613	1,365	1,218	639	581
'19년	31,396	29,971	23,531	22,680	5,762	5,440	1,437	1,224	666	627
'20년	29,496	28,150	21,723	21,076	5,037	4,744	2,050	1,701	686	629
대비(%)	6.1 ↓	6.1 ↓	7.7 ↓	7.1 ↓	12.6 ↓	12.8 ↓	42.7 ↑	39.0 ↑	3.0 ↑	0.3 ↑

- 조직체계 개선·책임수사체제 강화 등으로 수사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내외 협업을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지원도 만전 요구
- <가정폭력> 적극적 현장대응 기조가 강조되며 발생 대비 사법처리 건수 등 대응지표가 증가하는 등 엄정대응 기조 감지
 - 지속적으로 지역경찰-여청수사팀-APO 등 기능 간 협업을 내실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로 가정폭력 근절
- <아동학대> 그간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인식개선 홍보 등 노력 결과 112신고 및 검거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다만, 아동학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복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아동학대 발견을 제고 필요
- <실종> 전년 대비 발생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실종사건 발생 건수는 연간 10만건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실종사건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 사건 초기 중심깊은 수사를 통한 조기발견 주력
- <학교폭력> 등교일수 감소·언택트 기조에 따라 폭행·상해, 성폭력은 감소하나, 강요·금품갈취(인터넷 상) 등은 증가 추세*이며,

구 분	계	폭행·상해	성폭력	금품갈취	기타**	모욕·명예훼손	강요	재물손괴
'18년	13,367	7,935	2,529	1,377	655	623	125	123
'19년	13,584	7,485	3,060	1,328	833	615	164	99
'20년	11,331	5,863	2,462	1,184	754	733	224	111
대비(%)	-16.6	-21.7	-19.5	-10.8	-9.5	19.2	36.6	12.1

* '19년 대비 '20년 • 폭행·상해는 7,485 → 5,863건으로 21.7% ▼

• 성폭력은 3,060 → 2,462건으로 19.5% ▼ / • 강요는 164 → 224건으로 36.6% ▲

** 기타 :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정통방법 위반 등

- 최근, 학교 내 운동부·폭력서클이나, 교사에 의한 체벌·성추행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특히, ‘학폭미투’*로 이어지고 있는 경향
 - * 현역 배구선수 자매 중학교 시절 폭행 / 현역 프로야구 선수 고교 시절 강요 등
- 피해학생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강력범죄 소년범은 엄정수사하는 한편, ‘학폭미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적극 조치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법령에 따른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등록기간은 최대 30년에 이르고 그 수(數) 또한 급증하는 상황에서,
 - 조두순 출소로 인한 대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 전력자 종합 관리대책(‘20.9월)을 마련·시행 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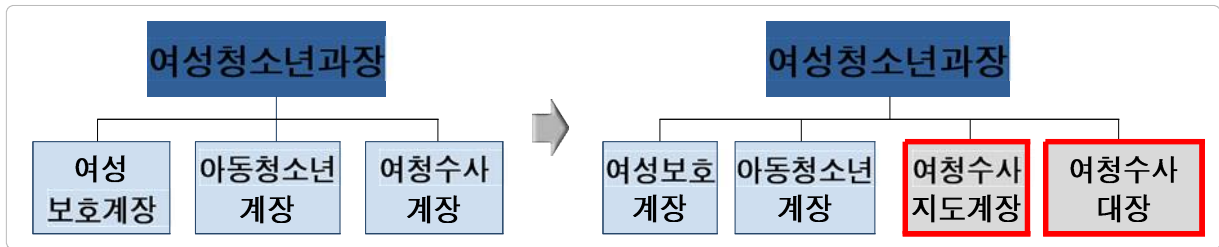
[여성청소년수사 조직 체계 개선]

- <여청강력팀 확대> 수사 연속성 및 불상 피의자 추적수사·검거 등을 위해서 ‘여청강력팀’을 쏙 1급지 경찰서로 확대

< 여청강력팀 >

- ▶ (추진배경) 여청수사팀 특성(신고출동·외근수사 병행)으로 인한 초동 조치 등 한계를 보완하고 신상대상자 등 추적수사·검거능력을 향상
 - ▶ (운영현황) '20. 2월부터 희망 경찰서 (14개) 기존 인력을 재편·보강하여 여청강력팀 신설 → 불상 성폭력, 소재불명 신상대상자 전담
 - ▶ (운영성과) '19년 대비 '20년 ‘불상 성폭력’ 검거 소요일 54% 단축, ‘전체 사건’ 검거 소요일도 52% 단축되는 등 정량적 성과 확인
 - ▶ (확대추진) '21년 증원 인력 165명과 형사 현원 282명을 1급지 149개 경찰서에 여청강력팀으로 배치 → 수사 연속성·집중도 강화
- ※ (취급사건) ① 아동학대 ② 불특정 피의자 강간·강제추행 ③ 학교 주변 등 공연음란 ④ 소재불명 신상대상자 추적 ⑤ SNS 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 행위

- <여청수사대> 시·도경찰청 여청수사제를 수사지도계/여청수사대로 분리하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지휘를 강화



- 여청수사대에는 13세 미만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아동학대 전담팀’을 신설하여 시·도경찰청 중심 책임수사체제 구축
 - ※ 13세 미만, 장애인 사건 등 주요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저명인사 등 사건도 포함하여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

- <AI음성인식> 조사 문답을 인식해 조서형태로 출력하고, 진술 내용에 따라 후속질문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시스템 구축(59개서, '19.12월)
 - ※ 음성인식 조서는 조사과정이 전부 드러나는 만큼 폐쇄·유도질문 등 부적절한 조사로 진술의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전문성 강화
- (시행관서 확대) '20년 59개서(4.14억)에서 '21년 전체 1급지 추가 설치(90개서, 8.12억) / '22년까지 전체 경찰서(257개) 설치 추진
- (고도화) 사투리 등 음성 인식을 제고 계속 / 축적된 텍스트·음성을 분석해 수사질문 적정성 및 진술신빙성 판단 도구 개발



- (전문수사기법) 現 전문기관 위탁과정은 아동·장애인 조사기법 교육만 운영 중이나 성폭력사건 특성상 성인 피해자에 대한 전문수사기법 체화가 필요 ⇨ 전문교육과정 도입 추진

<전문위탁교육> 인지심리학 등 전문 교육기관인 동국대(법심리학회) 등과 MOU 체결 ('20.10.16) ⇨ 수사연수원외부전문기관이 함께 전문조사기법 습득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개설 추진

- <인권친화형 조사환경 개선> 피해자가 ‘별도 공간’에서 심리적 안정을 취한 후 진술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 조사환경 개선사업 시행
 - － △가·피해자 동선 분리 △사무·조사 환경 구분 △피해자 통합 지원공간 신설 △사무실 출입문에 경찰관 호출 시스템 마련
- ※ '17~'20년(4년간) 약 34억원, 78개 경찰관서 조사환경 개선사업 완료 / '23년까지 쏙 경찰관서 구축 목표, 매년 35~46개씩 개선 추진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

- <전수합동조사 내실화> 전일 접수된 쏙 가정폭력 및 아동·노인학대 사안(112신고, 고소·고발·수사의뢰 등 불문*)을 대상으로 전수합동조사 실시
 - ※ 특히, 아동학대 사건은 부서장 주관 전수합동조사 실시 후 반드시 관서장에게 보고하고, 주요사안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장하여 확인
- － 전수합동조사 대상이 아닌 △성폭력 △소년범(학교폭력) △실종사건 등은 관서장 ‘일일사건 보고*’를 통해 필수 초동조치 사항 공백 방지

<일일사건보고> 아동학대·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 접수 시 △신고경위 △피해자 보호·지원사항 △현장종결 및 내·수사 착수 등을 관서장에게 보고 ('21.1월~)
- <실종자 조기발견> 실종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단서가 소실되어 소재발견이 어려워 실종 초기 수사역량을 집중·총력 대응함이 중요
 - ※ <발견율> 최근 3년간 7일 이내 누적 발견율은 평균 91.3%, 30일 내 3.85%, 1년 이내 3.05%, 1년 이상 장기 실종시 0.4%로 급격히 떨어짐
- － 시·도경찰청 중심 점검·지도 강화로 범죄관련성·수사진행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체계 마련

▶(위원회 구성) △경찰서 실종 미발견 사건에 대하여 시·도경찰청 담당 계장 주관 4명 이상 △실종 골든타임(12시간~7일) 內 미발견 사건 집중 점검
- <학교폭력 수사> 112·117 신고 및 SPO 직접 상담 건에 대해 SPO - 여청수사팀 간 수시 공유, 수사 진행 판단

[학폭 미투 관련] • 신고(112·182 등), 고소·고발시 관할·공소시효 등 불문 접수 • SNS·언론 보도 등 상시 모니터링 → 미투 인지시 사실관계 적극 확인, 처벌 가능성·내수사 진행 판단
- － 지역별 교육(지원)청·학교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학교별 Wee 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조 체계 구축

[여청수사관 수준별 맞춤형 교육 등 역량 강화]

- <기초교육> 시·도경찰청 주관, 신규전입 수사관 대상 ①여청수사(2일) ②실종수사(2일) ③여청수사 지휘(2일) 등 교육 실시
 - <전문교육> △성범죄대응능력·가정폭력·실종수사(인재개발원) △여청수사지휘·수사실무 등 직급별 과정(수사연수원) △국과수·국립특수교육원·동국대 증거수집 등 전문조사기법 등 교육 실시
 - <내·외부 전문가 역량 강화> 성폭력 피해 전담 조사관(해바라기센터 조사관) 교육 강화 및 진술분석전문가 역량 고도화
 - － (해바라기센터수사관) 아동·장애인조사기법(NICHD) 수준·단계별 필수 교육* 및 고급 이상 이수자에 대한 정기 보수교육
 - * 초급→중급→고급→동료전문가 과정→보수교육(고급이상 이수자)
 - － (진술분석전문가) 전문역량 교육 극대화 위해 수준·테마별 교육, 동료슈퍼바이저 양성 확대 등 역량강화 방안 지속 추진
- ▶ '20년 역량평가자 70명 中 미흡자(14명)에 대해 소그룹(7인 이내) 기본 이론교육 강화 등 전문가 역량별 맞춤 교육과정 개설

▶ 동료슈퍼바이저 양성 → 중요사건 진술분석 및 동료 강사 등으로 활용

[수사과오 방지를 위한 점검 및 공유시스템 구축]

- <사례회의> 관서별 분기 1회 이상 아동복지심의위, 성폭력상담소 등 민간전문가와 함께 '사례회의 개최', 객관적·인권친화적 수사 유도
 - － (조사모델 특화교육) 성폭력피해자 표준조사모델* 정착을 위해 신규전입 여경 상대 '소규모 사례 중심 실습 교육' 실시
 - * △수사관의 잘못된 고정관념·태도 개선 △조사시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필요사항을 확인하는 조사 가이드
- <내부 전문가 양성>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실종 등 여청수사 전문수사관을 선발, 동료강사로 활동하며 교육 및 수사지도
- <테마별 수시 점검> 시기·대상별 테마 점검 및 확인된 과오는 수시 원인 분석 → 개선사항 발굴·공유로 수사과오 사전 차단
 - ※ 여청사건은 최종별로 시기를 달리하며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봄-가정폭력 / 여름-성폭력 / 가을-불법촬영 / 겨울-데이트폭력 등 테마를 설정

- <현장학습> ‘중간관리자 주도 현장학습’을 정례화(월 1회 이상)하여 우수사례는 교육 자료로 제작·공유, 수사비 지원 및 표창 등 포상

[여청수사관 심리 상담]

- 여청수사 기능은 高스트레스 직업군으로 분류('19년~), ‘지정상담’* 실시 중이나 인사상 불이익 우려 등으로 인해 참여에 소극
 - * 마음동행센터에서 1:1로 스트레스 검사·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
- － 교육과정에 ‘지정상담’을 의무 편성, 상담프로그램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스트레스 관리 및 대리외상* 등 조기 발견·치유 제공
 - * 사건·사고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간접 경험으로 인해 자신이 그와 같은 일을 겪은 것처럼 비탄·불안감 등을 느끼는 심리적 외상

< '20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도경찰청 여청수사대 신설 및 전 1급지 경찰서 여청강력팀 운영	'21. 1월	
	'21년 아동·장애인 조사기법 교육 계획 수립	'21. 2월	
	여성청소년수사 교육계획 수립	'21. 3월	
	신상등록제도 실무협의회 개최(경찰청 주관)	'21. 3월	
2/4분기	인권친화형 조사환경 개선 수요파악 및 기본계획 수립	'21. 4월	
	진술분석전문가 역량강화 계획 수립	'21. 5월	
	AI음성인식 활용 피해조서 작성 지원 고도화 사업 계약	'21. 5월	
	소재불명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집중검거기간 운영	'21. 6월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 개정	'21. 6월	
3/4분기	여청강력팀 운영 현장 점검	'21. 7월	
	일일사건보고 등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대응현황 점검	'21. 8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실태 현장점검	'21. 9월	
	인권친화형 조사환경 개선 사업 현장실사	'21. 9월	
	실종수사 매뉴얼 개정	'21. 9월	
4/4분기	여청수사 전문수사관 선발	'21. 10월	
	음성인식 AI 피해조서 고도화 실시	'21. 11월	
	여청수사 현장학습 우수관서 선발·포상	'21. 12월	
연중	해바라기센터 수사관, 진술분석전문가 전문성 강화 교육	연중	
	여성범죄수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국민 전체
- <이해관계집단>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 여성·청소년·아동 관련 시민단체

□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사 역량제고 방안 추진을 통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신속·민감한 대응체계 및 수사인프라 구축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각종 사회적 약자 대상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엄정한 처벌을 구현함으로써, 강력한 대응을 원하는 국민요구에 부응 및 체감안전도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여성청소년 보호활동(I-1-일반재정②)			
① 여성청소년보호활동(1132)	일반회계		
■ 성폭력예방지원 및 여성청소년범죄수사(312)		136	15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성폭력 미검률 (50%)	4.3	4.5	4.5	4.3	미검률은 '12년 15.5%→'13년 11.1%→'15년 3.6%→'16년 3.9%→'17년 3.7%로 임계치에 도달하였다가, '18년 미투운동 영향으로 △발생 후 1개월 이상 경과되어 증거수집이 어려운 사건 비율 증가 △신고사건 대비 인지사건 비율 감소 등 검거 여건이 악화되고,	{1- (성폭력범죄 검거건수 / 발생건수)} x 100	·범죄통계 시스템 (성폭력 발생·검거) ·국정과제(민생치안 역량강화 및 사회적약자 보호) 핵심성과지표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찾기 어려운 통신매체 이용 음란 증가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치안환경의 변화로 미검률이 정체 '21년은 前 3년 미검률 평균 (4.43%)보다 3% 감축치인 4.3%를 목표치로 설정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율 (50%)	50.9	57.2	48.7	50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해 상담·의료·법률수사 (증거채취, 피해자 조사) 등 24시간 통합지원을 목표로, 전국 33개소 여경 162명 배치·운영 중이나 경영악화 등 이유로 병원측에서는 운영에 소극적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으로 인하여 지원건수는 임계치에 도달, 아동학대의 평균 증가치 22.5%를 감안, 목표치를 50%로 설정 ▶ 연도별 아동학대 사건의 해바라기 센터 지원을 <table><tr><td>연도</td><td>해바라기</td><td>아동학대</td><td>연계율</td></tr><tr><td>'18</td><td>1,883</td><td>3,696</td><td>50.9%</td></tr><tr><td>'19</td><td>2,657</td><td>4,645</td><td>57.2%</td></tr><tr><td>'20</td><td>2,707</td><td>5,551</td><td>48.7%</td></tr></table>	연도	해바라기	아동학대	연계율	'18	1,883	3,696	50.9%	'19	2,657	4,645	57.2%	'20	2,707	5,551	48.7%	아동학대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지원 ÷ 아동학대 사건	아동학대 사법처리 건수 및 해바라기센터 실적을 월 단위 취합
연도	해바라기	아동학대	연계율																				
'18	1,883	3,696	50.9%																				
'19	2,657	4,645	57.2%																				
'20	2,707	5,551	48.7%																				

□ 추진배경

- 그간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 발생 등 여성안전 관련 지표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 ※ <성폭력> 31,396→29,496 (6.1%↓), <가정폭력> 240,564→222,046 (7.7%↓) / '19년 대비
- － ‘n번방 사건’으로 촉발된 여성의 불안감은 경찰의 대응 및 예방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현재 진행형으로
 - ※ (언론보도) 「n번방 후에 텔레그램서 기승... ‘21만명 모인 방도 있어」 한국일보/21.2.23.
- － 여성의 범죄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 촉구여론 집중

▶ ‘n번방 사건’ 이슈화 이후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신고·고소·고발 등 폭증
 ○ 불법촬영물 유포 134→842(528.3%↑) ○ 아동성착취물 700→2,398(242.5%↑)
 ▶ <’20년 사회조사(통계청)> △성별에 따라 범죄를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선택한 비율
 여성(16.8%)·남성(9.6%) △야간보행 시 불안감 호소 여성(49.8%)·남성(16.9%)
 △야간보행이 불안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로 접한 사건·사고(44%)’
 ▶ <언론보도> △「‘지켜보고 있다’...불법 촬영 불안 확산」 題下 언론보도(KBS/20.8.24.)

- 다변화된 범죄유형에 따라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추진 및 빈틈없는 여성안전망 구축을 통해 실질적 불안요인 해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여성대상범죄 총력 대응체계 고도화]

-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따른 신속한 피해자 보호 및 선제적 대응
 - － 스톱킹처벌법(’21.10월 시행 예정) 제정으로 스톱킹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 범죄억제력 제고 및 피해자 보호 확대 기대
 - ※ (경과) ’17년 스톱킹법 제정위원회(경찰청·법무부·여가부 등 참여) 이후 입법 논의 지속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21.3.24.)

- ▶ **(처벌조항)** 기존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형사처벌(최대 징역5년↓, 벌금5↓)로 상향 ⇨ 범죄 억제력 강화로 강력범죄化 예방
- ▶ **(보호조치 요건 완화)** 범죄 이전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피해자 보호범위 확대
- ▶ **(잠정조치 불이행죄)**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해 별도 형사처벌(징역2년↓, 벌금↓)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잠정조치의 실효성 강화

— 관련 기능 합동으로 제도·실무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가이드라인 정비 △현장 사례 및 판례 취합·분석 △현장 대응방안 교육 추진 등 새로운 법률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 적극 지원

○ 내·외부 소통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내실 있는 여성안전정책 추진

- 정책 입안·검토·시행·환류 순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체계 활용, 정책에 대한 협업 강화 및 내·외부 지지와 공감대 형성 유도
-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여가부)」 추진방향 바탕, 유관 부처와 협의·교류를 통해 「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 ▶ **(내부)** 범죄예방·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협의체(月1회), 여청기능 현장 간담회
- ▶ **(외부)** 여성청소년안전 정책자문 회의(분기별 1회), 여성단체·전문가와 간담회, 관련 부처 간 협업과제 발굴·추진

○ 2차 피해 예방 종합 추진체계 점검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

- 그간의 2차 피해 예방 대응전략 평가, 평가결과 환류 등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보완을 통해 완성도 제고
- 세심한 현장대응을 위한 2차 피해 예방 교육 상시화 등 인프라 강화

- ▶ **(2차 피해 대응 점검)** △기능 합동 대응체계 마련 △2차 피해 실태조사 및 지표 개발
- ▶ **(예방 교육 강화)** △2차 피해 예방 전문강사 양성 △교육자료·강의안 보완·배포
- ▶ **(접근성 제고)** △2차 피해 예방 리플릿 제작·홍보 △신고창구 내 신고 코너 정비, 팝업창 현출

[성폭력 예방 및 불법촬영 대응 강화]

○ 시기·대상·유형별 맞춤형 예방활동 추진

- 성범죄 유형별 세부 대응전략을 발굴하고 시기·테마별 예방 활동에 치안역량을 결집, 지자체·유관기관 협업 활성화

▶ (테마별 예방) △신학기 교내 성범죄 예방 강화 △하계기간 ‘성범죄 전담팀’ 운영

▶ (유관기관 협력) △교육부 협업 예방 홍보물 제작 △장애인 시설 점검

○ 통계·빅데이터 및 과학기술 기반 치안활동 추진

- 성폭력 피해자 비대면 상담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 챗봇’ 도입, △간이고소장* △공소시효 계산기 기능 등 제공

* 피해자 동의 시 ‘상담 기록’을 간이고소장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요약

- 관서별 범죄통계 및 Geopros 활용, 범죄 취약지역·시간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방활동 추진

○ 불법촬영 대응 강화를 위한 지자체 협업 추진 및 탐지기술 고도화

- △탐지장비 개선 △시기별(신학기·하계기간 등) 집중 점검 △유관기관 협업 통한 피해자 보호·지원* 내실화 △신고 활성화 분위기 조성

*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유포 모니터링, 상담·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

▶ (탐지 장비) △무선 IP카메라 탐지장비 △행안부 협업 R&D 등 신규 탐지기술 개발

▶ (전문 교육) 불법촬영 범죄예방 담당자 대상 탐지 관련 교육 추진

▶ (지자체 협업)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대한 조례 제·개정 △예방환경 조성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 개정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단계별 汎 기능적 보호·지원 체계 구축

- ▶(유입 차단) △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성매매광고 차단 시스템 운영
- ▶(발굴·연계) 성매매 피해 우려 등 위기청소년 조기발굴, 쉼터 등 전문기관 연계
- ▶(교육·홍보) △SPO 특별예방교육 △신고 포상금 제도 등 관련 제도 홍보 활성화
- ▶(피해자 보호) △피해자 권리보장 △여가부장관 및 시·도지사 연계 활성화

- 유관기관과 협업 △상담 △긴급구조 △법률지원 등 피해회복 도모, 청소년성보호법 上 성적유인·권유행위 처벌규정 신설 추진

[가정폭력 대응체계 정립]

- 개정 「가정폭력처벌법('21.1.21.시행)*」 반영, 현장대응 지침 마련·배포

* △대상범죄 확대 △응급조치에 '현행범 체포' 추가 △임시조치 불이행 시 형사처벌 기능

-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 개정 지속 추진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추진 주요 내용>

△긴급 임시조치 청구절차 간소화(검사경유 배제) △긴급임시조치 유형에 '유치장 유치' 추가, 위반 시 '형사처벌' 등 규정 신설

- APO 시스템 개선* 및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대응역량·소통 강화

*재발우려대상자 조회(지역경찰 조회기) △신고이력 조회 △수기통계 전산화

-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국가-자치경찰, 경찰-지자체-민간기관 간 다기관 협업체계 내실화 추진 및 사회안전망 구축 노력

▶「범죄예방·사회적약자 보호 정책협의체」를 통해, 경찰청-시·도경찰청 및 시도 경찰위원회 간 가정폭력 예방·대응에 대한 정책 조정·협의 실시

▶경찰(112신고정보) ↔ 전문기관(상담정보) ↔ 지자체(복지원정보) 간 공유 등

- 학대예방경찰관(APO) 장기근무 동력 확보 및 전문성 제고 추진

- △APO 경력채용 추진사항 점검 △전문직위·특진 및 특별승급 확대
△여청기능 근무자 대상 '여청 전문관(가칭)' 선발 추진 등 인센티브 강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여성정책 자문위원 간담회 추진	'21. 2월	
	여성청소년 기능 연속성·전문성 제고 추진	'21. 2월	
	범죄예방·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협의체 참석, 안건 발굴	'21. 2월	
	신학기 성폭력 예방 계획 수립	'21. 2월	
	여성청소년안전 정책 자문단 회의 개최	'21. 3월	
	'21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21. 3월	
2/4분기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실시	'21. 4월	
	장애인 성폭력 예방 활동 추진	'21. 5월	
	범죄예방·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협의체 참석, 안건 발굴	'21. 5월	
	성폭력 예방 가이드북 개정	'21. 6월	
3/4분기	하계기간 성폭력 범죄 대응강화 계획 수립	'21. 7월	
	범죄예방·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협의체 참석, 안건 발굴	'21. 8월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실시	'21. 9월	
	여성청소년안전 정책 자문단 회의 개최	'21. 9월	
	학기초 성폭력 예방활동 추진	'21. 9월	
4/4분기	APO시스템 개선	'21. 11월	
	장애인 성폭력 예방 활동 추진	'21. 11월	
	여성대상범죄 체감안전도 조사	'21. 12월	
	성폭력 피해자 '상담 챗봇' 도입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성·가정폭력 등 여성대상범죄 피해자 및 국민전체
- 이해관계집단
 - － 관계부처 : 여가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중심, 총 14개 정부부처 (여가부·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고용부·방통위·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대검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 특히, 효과적인 여성대상범죄 대응을 위해 △법령 제·개정 관련 국회 및 법무부(대검찰청) △인프라 확충(예산·인력·조직 등) 관련 기재부·행안부·지자체 △피해자 보호·지원·연계 관련 여가부·복지부·지자체 등과 지속적·유기적 협업이 정책 실효성 확보의 필수 전제

－ 여성안전 관련 유관단체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사이버 성폭력대응센터,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여성긴급전화1366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 관련 단체·여성계와의 소통·교류 정례화 및 소통장구 일원화 등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관련 제안·의견을 지속 수렴, 치안정책 수립 및 국회·유관부처 대응

□ 기대효과

- 그간 구축한 여성대상범죄에 대한 치안정책·대응방안·치안이슈를 주기적으로 점검, 세밀한 재정비를 추진하여
- － 여성범죄 예방·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
- 다각적인 관점에서 여성안전 불안요인을 발굴, 사후 대응뿐만 아닌 선제적 예방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도 개선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증감률(%)
성폭력예방지원 및여성청소년범죄수사(1-1일반재정②)				
① 여성대상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코드번호) ³⁾	일반회계	14.96	17.51	17.0
■ 여성대상범죄 선제적 대응(舊 여성대상범죄 대응능력 강화)		2.25	2.40	6.7
■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		5.17	5.17	-
■ 불법촬영 예방·검거를 위한 탐사장비 구입		1.19	1.19	-
■ 가정폭력등 통합솔루션팀 운영		5.29	5.29	-
■ 챗봇 연계 범죄피해자 통합정보제공 웹서비스 신설		0	1.20	신규
■ 가정폭력·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		1.06	2.26	113.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50%)	26.8	32.4	46.6	45.2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대처를 요구하는 대국민 여론에 부합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적극 도모하여 일상생활 복귀 및 범죄로부터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 가능 ※ '18~'20년 3년 평균 35.6% 대비 3년 평균 증가폭 9.9%가 상승한 45.2%를 목표치로 설정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연계 건수 (20%) + 피해자 보호지원 건수(80%) / 성폭력 발생 건수] × 100	- 성폭력 보호지원 월보 - 성폭력 발생통계(CSS)
가정폭력 사건대응률 (50%)	46.0	50.6	56.8	61.8	가정폭력 사건대응률을 통해 가정 내에서 심화·반복되는 특성을 지닌 가정폭력에 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가·피해자 격리 등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여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도모 ※ '20년도 실적 56.8% 대비 5% 상승한 61.8%를 목표치로 설정	[(가정폭력 검거건수 + 피해자 보호조치 건수) / 가정폭력 실 신고건수] × 100	- 가정폭력 검거통계(CSS) - 가정폭력 보호지원 월보 - 가정폭력 112신고통계

9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확대 및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활동 전개

□ 추진배경

- 최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기존 가해자 처벌·검거에서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범죄·갈등의 근본적 해결까지로 확대
 - － 특히,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명실상부한 수사 주체로서 경찰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국민 기대는 더욱 상승
 - ※ 피해자 신변보호에 실패하거나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 시 국민적 비난으로 이어지며, 범죄뿐 아니라 대형 재난 사고상황에서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 요구
- 경찰청에서도 ‘피해자보호·피해회복’을 ‘국민중심 책임수사’의 핵심가치로 설정, 경찰활동의 패러다임 전환 도모
- 이에 '21년에는 ‘회복적 경찰활동’과 ‘범죄피해평가제도’ 운영을 확대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 － △신변보호 △심리적·경제적 지원 연계 등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책임경찰상, 따뜻한 이웃경찰상 구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확대
 - － (운영 확대) '20년 전국 운영 실시에 이어 '21년에는 약 200개서로 운영 확대, ‘회복적 경찰활동 패러다임’ 현장 정착
 - ※ '19년 수도권 15개서 시범운영 → '20년 전국 142개서 → '21년 전국 약 200개서 확대
 - － (전문가 양성) 퇴직 예정 경찰관 대상 ‘회복적 대화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외부기관 전문가 확보가 어려운 2·3급서에 배치
 - － (법령 정비) 구체적인 현장 활동 내용을 체계화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개정, 적극적 현장 활동 뒷받침
 - － (교육·홍보) △운영 확대 관서 담당자(피전·SPO) 온·오프라인 교육 △진행자 매뉴얼 제작 △카드뉴스·우수사례집 제작 등 현장 인식 제고

○ 경찰 피해자보호 전담체계 구축

- (피해자보호담당관 직제화 추진) 비직제 운영 중인 피해자보호 담당관(총경) 직제 반영 추진, 경찰 피해자 보호 정책 총괄기능 강화
- (시·도경찰청 전담인력 증원) '20년 신설된 시·도경찰청 피해자 보호계 인력 증원, △ 대형 사건·사고 대응 △ 3급서 피해자 보호·지원 △ 위기개입상담 등 시·도경찰청 중심 추진체계 강화
- (전문인력 채용) △ 심리학 학위 소지자 △ 심리상담 분야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경장 경채('21년 40명),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로 배치하여 사건 발생 직후부터 밀착 심리지원 실시
- (현장경찰 교육) 수사부서·지역경찰 현장 경찰 및 피해자보호관 (팀장급) 대상 교육 강화, 피해자 보호 중심 경찰활동 패러다임 정착

○ 현장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강화

- (신변보호 체계 강화) △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현장보급 확대('20년 2,300대 → '21년 3,000대), △ 신변보호 위치확인 시스템* 개발 등 신변보호 강화,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 방지

* (신변보호 위치확인 시스템) 스마트워치 활용 긴급신고 시 경찰서 112상황실에서 신고자 위치를 더욱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 (긴급단계 지원 강화) △ 범죄발생 직후 응급지원물품 제공 (구급약·담요 등) △ 외국인 범죄피해자 대상 심리상담 통역 지원 등 긴급단계 지원활동 강화를 통해 조속한 심리회복 도모
- (범죄피해평가 운영 확대) 전문가 면담을 통해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를 종합 평가하여 수사서류에 첨부, 가해자 구속·양형에 반영함으로써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 '20년 166개서 → '21년 전국 약 200개서로 운영 확대

- (대국민 홍보 강화) 대변인실 협업을 통해 카드뉴스·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유튜브·블로그 등 SNS 홍보 추진

○ 대내·외 협업 강화

- － (피해자보호 추진위원회)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회 재구성, 경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총괄 역할 수행

※ 기능별 피해자 보호 추진방안을 담은 「경찰 피해자 보호 종합계획」 수립 등

- － (민간협업 활성화)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피해자가 범죄 발생 직후 △심리상담 △치료비·생계비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경찰의 ‘지원 연계 허브 역할’ 강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담당자 온라인 워크숍 개최	'21. 2월	
	퇴직 예정 경찰관 회복적 대화 전문가 양성 교육	'21. 2월	
	2021년 피해자보호 교육 운영계획 수립	'21. 3월	
2/4분기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업무협약 체결	'21. 4월	
	상반기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관서 확대	'21. 5월	
	범죄피해평가제도 운영관서 확대	'21. 6월	
3/4분기	하반기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관서 확대	'21. 7월	
	범죄피해자 안내서 제작·배포	'21. 8월	
	피해자심리전문요원 채용	'21. 8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보급 확대	'21. 9월	
4/4분기	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개최	'21. 11월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 개발·운영	'21. 12월	
	피해자보호 사이버 교육자료 제작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범죄피해자

- 이해관계집단 : △유관부처(법무부, 검찰 등) △피해자지원기관(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등) △학계(한국피해자학회 등)

□ 기대효과

-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확대 및 빈틈없는 보호·지원 활동으로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회복 및 대국민 신뢰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피해자 보호·지원업무 내실화로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정착				
	■ 신변보호용 위치확인장치	범피기금	4.4억	6.6억
	■ 피해자 임시숙소	범피기금	4.8억	6.0억
	■ 강력범죄 현장정리	범피기금	4.1억	4.1억
	■ 신변보호용 CCTV	일반예산	5.7억	5.7억
	■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일반예산	2.8억	4.6억
	■ 범죄피해평가제도 운영	일반예산	2.7억	2.7억
	■ 응급지원물품 제공	일반예산	-	2.6억
	■ 피해자 권리고지	일반예산	2.3억	2.3억
	■ 피해자 여비	일반예산	2.0억	2.0억
	■ 심리상담 통역비	일반예산	-	0.7억
	■ 교육·홍보비	일반예산	0.6억	0.6억
	■ 맞춤형 사례회의 운영	일반예산	0.5억	0.5억
	■ 신고자 등 임시숙소	일반예산	0.3억	0.3억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피해자 지원활동률 (40%)	145 %	164 %	154 %	155 %	3년 평균치 154.3% 이상인 155%를 목표치로 설정 ※ 목표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 상·중·하 중 "상"에 해당	- 중요범죄 피해자 지원활동 건수 ÷ 중요범죄 발생건수 × 100 ※ 중요범죄 : 살인, 강도, 방화, 약취유인, 체포감금, 상해, 강간	- 케어포털 통계 - KICS 범죄통계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 (40%)	-	-	463 건	720 건	'20년 관서 평균 회복적 경찰활동 건수는 3.26건 ※ 463건 ÷ 142개서 = 3.26 '20년 평균 건수에서 10% 이상 향상된 평균 3.6건 목표로 설정 ※ 3.6건 × 200개서 = 720건 ※ 목표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 상·중·하 중 "상"에 해당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건수 (관서별 실시 건수 취합)	회복적 경찰활동 결과보고서
민간단체와의 협업 노력도 (20%)	-	-	16 건	18 건	'20년 실적치 16건에서 10% 이상 향상된 18건 목표 ※ 목표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 상·중·하 중 "상"에 해당	사도경찰청, 경찰서별 민간단체 업무협약 체결 건수 합계 (기부금 전달식 등 포함)	- 업무협약 계획서 - 업무협약서

(1) 주요 내용

-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사고 발생요인에 역량 집중 △단속 패러다임 전환 등 「사람 중심 교통문화」 정착으로 사망자 감축
- <맞춤형 교통관리>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환경에 대비하여 법령을 개선하고, 고령·음주·장애인 등 맞춤형 관리를 통한 안전 확보
-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 효과 거양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 추진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교통문화 지수
관리과제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통관리로 안전확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편의 제공 노력도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 /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율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교통문화 지수	75.3	76.6*	78.9	80.0	전 3년도 실적 평균값(76.9) 및 과거 추세를 기준으로 예측한 값(80.5)을 고려, '21년 목표치는 '20년 실적보다 1.1%p 높은 80.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교통문화 지수 (국민의 운전행태·보행행태·교통안전 지표를 관측·설문·문헌조사로 지수화)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교통안전공단)

* 하위항목 산출방식 변경으로 '19년 실적은 '20년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 재산정(77.5점 → 76.6점, 국토부·교통안전공단,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가운데, 비대면 문화 확산·생활패턴의 변화 등 교통환경 변화 가속화
 -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 한국('19년 1.2명), OECD 평균('18년 기준, 1.0명)
- － 배달 수요 확대에 따른 이륜차 통행량 증가*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 확대 등이 새로운 교통안전 위협요인으로 작용
 - * '20년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19년 대비 5.8% 증가(498→527명)
- － 대중교통 대신 자차 이용이 증가, 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도 증가
 - ※ 승용차 이용비율은 '19. 12월 35%→20. 5월 41%로 6%p↑(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자치사무의 시·도경찰청 이관 및 관계 재설정 등 교통안전 관련 업무의 프로세스의 변화 불가피
 - ※ 재난상황·고속도로 안전관리 이외의 안전업무는 기본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
- － 시·도경찰청 대상 △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 △ 자체 우수시책 전국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 지원

(4) 참고자료

- OECD 회원국 교통사고 비교(도로교통공단)
- 국토교통부,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10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 추진배경

-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 '18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는 7.3명으로 OECD 36개국 중 29위
- 특히, 보행자와 고령자의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교통 약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교통사고 발생 주요 요인 역량 집중]

① 보행자 사고 감소대책

- ① (사고다발지역 분석) 최근 3년간 보행자 등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 사고 위험지역* 자료를 시·도경찰청에 제공, 안전활동 지원
 - * 사망 또는 중상 사고 3건 이상 발생 지점(좌표) 반경 100m
 - － 시·도경찰청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제공된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예방 활동을 추진
- ② (안전속도 5030) '21. 4. 17.限 '안전속도 5030 적용' 전국 확대, 집중 홍보 및 단속 장비 설치와 시설 보강 등 조치도 병행
 - ※ 향후 5030 정착을 위한 시·도경찰청 및 지자체 노력을 교통안전지표 반영
- ③ (보행자 중심 법·제도 개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안전 시설물 등을 개선하여,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

-
- ✓ (법·제도)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의무 △교차로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과 등 도교법 개정 추진
 - ✓ (교통안전시설) △횡단보도 자동연장 시스템 효과 분석 및 전국 확대 △횡단보도 보행섬 설치 △국도변 마을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설치 확대
-

② 고령 운전자 사고 감소대책

- ① (단속 및 교육 강화) 고령운전자 사고 증가 시기를 예측하여 주요 사고요인 집중단속, 사고 비중이 높은 이륜차 단독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및 안전모 착용 교육 병행
 - ② (고령자 운전능력 관리)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과 교통안전 조화를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24년) /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 ③ (교통환경 조성)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의무화한 법안에 따른 점검체계 개선(검사 관리 요령 등 구체화) 등 후속 조치 추진
- － ‘실버마크’ 부착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양보 문화를 확산

③ 음주운전 사고 감소대책

- ① (통계 기반 단속 전개) 음주사고 다발 지역과 대리운전 회사 데이터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음주운전 발생 예상지역을 선정, 중점 단속
- ② (재발 방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음주운전 면허취소 결격기간 강화 △음주운전 위반자 특별교통안전 교육 개선 등 추진
- ③ (기획 홍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음주운전을 범죄화하는 분위기 조성

④ 이륜차 사고 감소대책

- ① (단속 강화) 이륜차 무인단속 장비의 단속 실효성 검증 및 관계부처 협업 등 다양한 단속 방안 강구

✓ (번호판 훼손 이륜차) 국토부와 협조하여 번호판 훼손 이륜차에 대한 단속 절차 간소화 검토

*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위험 운행하는 이륜차의 상당수가 번호판 훼손, 단속 곤란

✓ (과태료 신설) 캠코더 단속과 공익신고 확대에 따라 이륜차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중앙선 침범(제13조 제3항)에 대한 과태료 신설 추진

- ② (사고다발지역 정보 활용) 안전보건공단·배달앱 운영사 등 협업, 이륜차 배달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에 사고다발지역 정보 제공

* 사고·기상정보·교육 영상 등 제공 플랫폼으로, 배달앱 운영사에서 어플 구현

⑤ 고속도로 사고 감소대책

- ① (법규위반 등 집중단속)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항목을 주요 단속항목으로 지정, 시기별 테마 단속 추진

※ △행락철(4~5월, 9~10월)은 대형버스 및 승합차 △휴가철(7~8월)은 음주 및 과속운전 △겨울철은 결빙사고와 연말연시 음주운전

－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물차 안전운행 유도를 위해 사고 위험지역 심야순찰 강화 및 화물차 법규위반 중점 단속

※ 산업·물류단지 주변 심야 알람(사이렌·경광등) 순찰 / △지정차로 등 화물차 사고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위반 행위 집중단속

- ② (암행순찰차 활용) 일반순찰차로 단속이 어려운 난폭·과속운전에 엄중 대응하여 위반심리를 억제하고, 교통법규 준수 유도

[교통단속 패러다임 전환]

- ① (빅데이터 분석) 교통사고 요인(법규위반)별 정밀분석을 통해 사고 위험이 증가하는 항목·시간·장소·대상을 추출, 실효적 단속 전개
- ② (단속 방식 변화) 기계적 단속 확대, 인적 단속은 음주운전 및 이륜차 번호판 훼손 등 ‘선택과 집중’에 따라 단속 테마 지정, 운영
- ③ (공익신고 활성화) 시간·장소 등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 개선 / 담당자 인력증원과 업무부담 경감 노력 병행
※ 최근 10년간 공익신고 건수 : 2,097% 증가(96,896 → 2,128,435건)

[교통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① (교통안전지표 개발) 지자체 등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교통안전지표’ 개발, 지자체와 시·도경찰청의 관심 유도
※ 교통연구원, 도교통단 및 교통학회와 3월 중 지표 개발, 4월 중 시행계획 수립
－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교통안전이 취약한 지자체 등에 대해 특별실태조사와 현장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미비점 개선·보완
- ② 시·도경찰청 지원 「정책 플랫폼」 구축
－ 자치경찰 시행에 따라 지역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과 다양한 통계자료 제공 등 공급자로서의 경찰청 역할 강화

√ 통계 시각화 및 분석 프로그램인 ‘태블로’를 활용,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교통안전 관련 공간(100m × 100m) 정보*를 제공
* 해당 공간 내 교통사고 및 단속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 중
√ 내외·부 통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교통안전 통계 전문 분석팀’을 운영, 분기별 교통사고 등 통계 변화를 미리 감지하여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

- ③ (홍보 활동)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로 △추진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공감을 얻고, △우수시책 등을 시·도경찰청과 공유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설 명절 특별교통안전 관리 대책 수립·시행	'21. 2월	
	'20년 교통사고 감소 성과 등 보도자료 배포	'21. 2월	
	'21년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시행	'21. 3월	
	'20년 교통사고 통계분석 보도자료 배포	'21. 3월	
	최근 3년간 지역별 교통사고 다발지역 분석·하달	'21. 3월	
2/4분기	교통안전 홍보 계획 수립·시행	'21. 4월	
	봄 행락철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21. 4월	
	교통사고 줄이기 한마음대회 개최	'21. 5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조정
	교통안전 지표 개발, 활용계획 수립	'21. 5월	
	2분기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및 홍보 등 보도자료 배포	'21. 6월	
3/4분기	하계 휴가철 특별 교통대책 수립·시행	'21. 7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기본 규격 마련	'21. 7월	
	추석 명절 특별교통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행	'21. 9월	
	3분기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및 홍보 등 보도자료 배포	'21. 9월	
4/4분기	가을 행락철 대형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21. 10월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대책 수립·시행	'21. 11월	
	교통안전 성과분석 및 특진 등 포상 실시	'21. 12월	
	4분기 교통사고 통계 분석 및 홍보 등 보도자료 배포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전체

☐ 기대효과

-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및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을 통해 교통안전의식 제고 및 선진 교통문화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교통안전을 확보한다(I-3-일반재정①)				
① 교통사고 예방(1331)		일반회계	10,487.6	3,377.6
■ 교통안전교육홍보(311)			51.7	51.7
■ 교통안전활동(312)			946.9	690.6
■ 교통과학장비관리(313)			9489	1,188.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20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50%)	-9.7	-11.4	-80	-9.8	최근 3년간 전년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율은 평균(추세치) -9.7%로, '21년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3년 평균 추세치를 초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frac{[(\text{금년사망자수}) - (\text{전년사망자수})]}{(\text{전년사망자수})} \times 100$	교통경찰업무관리 시스템(TCS) 통계 확인
'20년 대비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 (50%)	0.1	58	-104	-1.6	최근 3년간 전년대비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율은 평균(추세치) -1.5%로, '21년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을 위해 3년 평균 추세치를 초과달성하는 것으로 설정	$\frac{[(\text{금년부상자수}) - (\text{전년부상자수})]}{(\text{전년부상자수})} \times 100$	교통경찰업무관리 시스템(TCS) 통계 확인

11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통관리로 안전확보

□ 추진배경

- '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79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 이에, 고령운전자 등 운전자 유형별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 대책 추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전인 필요
- 또한,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개선도 병행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변화된 교통 환경에 적극 대응]

①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본격 추진

-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환경에 대비하고, 보행자 보호 강화 등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교통법령 체계를 개선

-
- ✓ **(자율주행차 도입)** 자율주행차 정의규정, 자율주행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자율주행기록장치 관리에 대한 규정 도입
 - ✓ **(보행자 보호)** 도로 외의 곳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신설
 - ✓ **(어린이 보호)** 어린이 통학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학버스 수리기간을 명시하는 등 어린이 보호규정 개선
 - ✓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일반도로·교차로와 구분, 반시계 방향 통행 원칙·선진입 차량 우선 통행 등 회전교차로에 맞는 별도 통행방법 명문화
-

- '05년 전부개정 이후 복잡해진 조문 및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누구나 쉽게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순화 실시

②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개념 확대

- 쇼핑 카트, 노인 보행보조기, 어린이용 탑승형 놀이기구 등을 보행자로 간주하여 안전하게 보도 통행

✓ (법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를 개정, 보호가 필요한 보행자 개념을 확대

✓ (부령 개정) 보호가 필요한 보행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

③ 교통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구축

-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 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ISP 수립) ‘교통 빅데이터 분석·활용 시스템’ 구축 ISP 수립 예산확보

✓ (TCS 개선) 정책 결정 시 적시성 있는 통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④ PM 운전면허 신설 및 안전규정 개정 검토

-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관리를 위해 PM 특성을 반영한 운전면허 신설 및 안전규정 검토

✓ PM 안전규정(운전면허 필요여부, 운전자 주의의무 등) 도교법령 정비

- '21. 5월부터 PM 운전을 위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적성검사 기준·운전면허시험·운전면허 행정처분 등 정비
 - PM 운전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벌칙금 규정 신설 및 강화

✓ 도로교통공단과 협업 PM 전용 운전면허 신설 관련 연구 진행

- 운전면허 시험(적성검사, 운전학원 교육, 학과·기능시험 필요 여부) 제도 신설
 - PM 운행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결격 등 정비 병행
 - PM 면허 신설 등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 취득 조건에 대한 의견 수렴

⑤ 어린이 보호구역 內 교통사고 야기자 교육 강화

－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새로운 특별교통안전교육 마련

- ✓ (교육 의무) 어린이 보호구역 內 어린이 교통사고 야기자 교육 의무 부여
- ✓ (교육과정 추가) 교통안전교육에 어린이의 행동특성,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 시 주의할 점 등 위반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추가

[운전자별 맞춤형 관리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

① 고령운전자: 시행 제도 정착과 고령운전자 종합대책 세부계획 추진

－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운영 내실화

- ✓ (실무협의회 구성) 고령운전자 종합대책 추진실적 등 주기적 협의
- ✓ (운영규칙 제정) 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협의회 운영규칙” 제정 추진

－ 고령운전자 종합대책 세부과제 수립·추진

- ✓ (과제 추진) '20. 9월 수립한 고령자 교통안전종합계획 세부과제 추진
- ✓ (과제 발굴)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과제 내용 조정, 신규과제 발굴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 ✓ (보조금 지원) '19년부터 시행된 지자체 보조금 지원 시행 및 예산 확대 강구
- ✓ (민원편의 원스톱 행정) '20. 7월부터 시행 중인 자치단체(주민센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확대(164→182개)

② 음주운전자: 음주운전자 재범률 감소를 위한 운전면허 대책 추진

－ 음주운전 면허 면허취소자 재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 강화

- ✓ 음주운전 횟수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 세분화, 3회 이상 위반자 대폭 강화
- ✓ 음주 사상사고 후 미조치, 음주 사망사고 등 사고 결과에 대한 가중책임 부과

－ 음주운전 위반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개선

- ✓ (교육시간 증대) 현행 6~16시간인 교육시간을 최대 48시간까지 확대
- ✓ (새로운 교육방법 도입) 코칭 등 도입, 운전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
- ✓ (교육 미이수자 제재 강화) 미이수 범칙금을 4만원 → 15만원 상향

③ 장애인 운전자: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 확대

－ 장애인의 이동권 증진과 면허취득 확대를 위한 지원제도 확충

- ✓ (추가 개소)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추가 개소(원주·제주시험장)로, 접근성 제고
- ✓ (예산 확대) 센터 추가 개소를 위한 예산확보 지속 추진

④ 초보운전자: 도로교통 안전의 기본이 되는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을 추진

－ 운전면허 취득 제도를 정비·개선하여 양질의 운전자 배출

- ✓ (채점기 사용연한) 장내기능·도로주행시험 전자채점기 사용 연한 규정 신설
- ✓ (자격시험 개선) 운전학원 학과·기능강사 및 기능검정원 자격시험 개선
- ✓ (불법교육 단속)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운전학원 내 부정행위 등 점검

[국민 편의 증진을 서비스 제공]

① 운전면허증 모바일화 추진

－ 보안성 등 안전성을 담보하여 국민편의 극대화

- ✓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서비스 사용처와 플랫폼 확대 추진
- ✓ (모바일 운전면허증) 행안부 협업, 모바일로 발급 가능한 운전면허증 도입 검토

② 해외 우리국민 운전편의 증진

－ 우리 국민 주요 방문국 등에 대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과
영문운전면허증 사용가능 국가 확대로 해외 운전편의 증진

- ✓ (운전면허 상호인정)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약 체결 지속 추진
- ✓ (영문운전면허증) 외교부와 협업,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확대(37개국)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행정 서비스 확대 시행	'21. 1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실무협의회 구성	'21. 2월	
	PM 안전규정 도교법령 개정안 등 마련	'21. 3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 불법운전교육 특별단속 (상반기)	'21. 3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21. 3월	
2/4분기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추가 개소(원주)	'21. 4월	
	한국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조사 후 고시	'21. 5월	
	네비게이션 업체 활용 목적 교통 사망사고 위치 데이터 정제	'21. 6월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개선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	'21. 6월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경영성과협약 체결	'21. 6월	
3/4분기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확대 시행	'21. 7월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등 불법운전교육 특별단속 (하반기)	'21. 9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특별교통안전 도교법령 정비	'21. 9월	
4/4분기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추가 개소(제주)	'21. 10월	
	영문면허증 인정 및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 확대	'21. 11월	
	행안부와 공동,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운영 실시	'21. 12월	
	면허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 '교통위험도 측정' 시스템 구축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 집단 : 특이사항 없음

□ 기대효과

- 고령운전·음주운전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 어린이·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의 증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 -1-일반재정②)			
① 교통행정전산화(정보화)(1332)	일반회계	22 (22)	8 (8)
■ 교통행정전산화(정보화)(1332-511)		22	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 법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만 명당) (60%)	2.69	2.48	1.96.	1.70	지난 3년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 사고 사망자 수는 '17년 대비 '18년 11.26%, '18년 대비 '19년 7.99%, '19년 대비 '20년 20.79% 감소하 여 평균 13.35%의 감소율을 보임 지난 3년간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 사고 사망자 수 평균 추세치 13.35% 감소보다 상향된 13.5% 감소를 목표로 제시하여 매우 적극 적인 목표치 설정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 ÷ 총 고령운전자(65세 이상 면허소지자) 수 × 10,000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도 (40%)	신설			100	교통기획과는 법령 등 제도개선과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하고 대국민 교통 편의를 제 공하는 부서임 이에, 교통기획 업무로서 법령개선, 유관기관 협업, 외국과 면허 상호주의 등 노력도를 법령개선과 협업의 균형감 있는 추진을 위해 배점을 50:50으로 산출, 점수화하여 지표로 설정 목표치 산출을 위해 그간 법령 개정과 협업사례 등을 확인해 본 바, 최근 5년 연 평균 도로교통법 개정이 10.6건이며, 기획 업무 관련 협업 사례는 매년 5건 이하로 업무난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목표치를 100점으로 공격적으로 설정	①법령개선: 도로교통법 등 법령 개정 건당 배점 < 배점 > <table><tr><td>법</td><td>대통령</td><td>부령</td><td>훈령및 지침</td></tr><tr><td>5</td><td>3</td><td>2</td><td>1</td></tr></table> ②기관협업도: 부처별 협업 사항에 대해 기관별 배점 < 배점 > <table><tr><td>외국 협업</td><td>민관 기관</td><td>정부 기관</td><td>타 국관</td></tr><tr><td>5</td><td>3</td><td>2</td><td>1</td></tr></table> → ①, ② 점수를 합산	법	대통령	부령	훈령및 지침	5	3	2	1	외국 협업	민관 기관	정부 기관	타 국관	5	3	2	1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 등
법	대통령	부령	훈령및 지침																				
5	3	2	1																				
외국 협업	민관 기관	정부 기관	타 국관																				
5	3	2	1																				

12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 추진배경

-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선정, 범국가적으로 추진 中
 - * ’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 ’20년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8.1%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망자 중 보행사망자의 비율은 35.4%로 아직까지도 매우 높은 실정**
 - * ’19년 3,349명 → ’20년 3,079명 (잠정), 270명 감소
 - ** 보행사망자 점유율은 OECD 평균 18.6%(’19년)의 2배 가량 수치임
- 자율차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도로에서의 실험이 증가하면서 자율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선제적 제도·기술 정비의 필요성 부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구축]

① 이면도로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구축

-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확대하고,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확보하는 등 보행자의 법적 위상 강화를 위한 도교법 개정 추진

-
- ▶ (보·차 미분리 도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도로의 쏘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 ▶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가 도로의 쏘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신설하고 운전자에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 ▶ (도로외 구역) 아파트 단지내 등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운전자에게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

②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21.4.17)

- 보행사망자 감소를 위해 보행사고 92%가 발생하는 도시부를 대상으로 속도 하향 정책(안전속도 5030)을 추진 中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 기본 50km/h, △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하는 정책

※ 단, 소통 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 운영 可



- 전국 시행(4월)에 맞춰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실제 주행속도 하향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 추진

- ▶ **(전국적 홍보 실시)** 국토부·행안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시행 前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참여 확산
- ▶ **(속도관리시스템)** 5030 정책에 의한 광역 속도관리망을 전산화하여 관리효율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속도정보 제공
- ▶ **(효과분석)** 전국시행 이후 국내 도입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들의 공감과 수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종합적 효과분석 실시

③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확보

- 우리나라는 교차로에서 상시 우회전이 허용되나 적신호 시 우회전 중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불명확하여 개선 추진

- ▶ **(법령 개정)** 차량등화별로 직진/좌회전/우회전으로 나누어 진행방법을 규정하고,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시
- ▶ **(표지 설치)** 법령 개정 전까지 일시정지 표지를 우선 설치, 일시정지를 유도하여 일시정지 활성화

-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잠시 멈춤” 교통문화 확산

[교통약자 보호 및 사고감소를 위한交通安全시설 개선]

① 국민에게 공감받는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 누구나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종점을 표시하도록 하여 어린이交通安全 확보
-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가 주정차 금지 지역('21.10월)이 됨에 따라 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Drop zone)을 도입
-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30km/h로 운영하되, 도로여건별·시간대별 탄력적 속도규제* 도입

* (예시) 일반도로 : 심야시간등 50km/h / 등하교시간등 30km/h, 이면도로 : 20km/h

②交通安全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 법규성 강화

-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交通安全시설 관련 규정의 법규성을 강화, 설치·관리의 전국적 통일성 도모 필요
- 시행규칙·훈령·매뉴얼 등에 흩어져 있는 관련 규정을 별도 규칙(행안부령 신설)으로 통합하여 설치·관리 기준 표준화

※ 국토부는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부령)을 정해 도로안전시설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 中

③ 첨단 ICT를 활용한交通安全시설 개선

- 交通安全 분야 첨단 ICT를 접목한 다양한 시설·장치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현재는 안전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법정交通安全시설만 허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交通安全시설은 국제표준에 따라 법적 효과성과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되,
- 법적 효력은 없지만 운전자·보행자의 주의 환기를 위한 보조 시설의 가이드라인을 제정, 산업 발전 및交通安全 향상 도모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신규 장비 개발]

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설치권한) 무인단속장비의 설치·관리 주체를 도로관리청 등으로 확대하여 고속도로, 국도 등 필요한 지점에 신속히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 (관리기준) 경찰규격서 및 업무 매뉴얼에서만 규정하고 있는 무인단속장비 설치·관리 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개정

② 이륜차 단속을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 추진

- (규격제정)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무인단속 장비의 단속항목별 성능기준 및 평가기준 등 표준규격 마련
 - ※ 도로교통공단 '21년 기본연구과제로 성능실험 등 연구추진 중
- (시범운영)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곳 등을 대상으로 장비의 성능검증 및 예방효과 분석을 위한 시범설치·운영 추진

③ AI 기반 무인 교통단속용 신규장비 및 운영·지원 플랫폼 개발

- (장비개발) AI학습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법규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시스템 개발
 - ※ 끼어들기, 꼬리물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위반항목별 현장·센터장비 개발 및 표준규격 제정
- (운영 플랫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효과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한 운영 플랫폼 개선
 - ※ 교통사고 및 단속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설치지점 도출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이설·폐기 진행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 개선 및 첨단인프라 구축]

① 자율주행차 운행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자율주행 Lv.3단계 대응 면허체계, 사고조사 등 안전운행 지원을 위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 마련

② Lv.3 자율주행 대비 첨단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AI기반 신호제어) AI 기반의 스마트 신호제어를 위한 현장 장치 및 관제센터 기술 개발
- (교통안전시설 정보제공) IoT 기반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설 운영관리 기술 개발

③ Lv.4 자율주행 대비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추진

- Lv.4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하여 통합관제시스템, 교통안전 인프라 기술 개발 등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R&D 사업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자율주행차 R&D사업 3년차 주관연구기관 협약 체결	'21. 1월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연구 착수	'21. 1월	
	보호구역 내 탄력적 속도규제 시범운영 계획 수립	'21. 3월	
	자율주행차 R&D사업 3년차 착수보고회 실시	'21. 3월	
2/4분기	안전속도 5030 6년차 종합계획 수립	'21. 4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	'21. 4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1년차 착수보고회 실시	'21. 5월	
3/4분기	무인단속장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21. 8월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21. 9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침 제정	'21. 9월	

4/4분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구역 도입	'21. 10월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규칙(부령) 제정안 마련	'21. 11월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행자우선도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21. 11월	
	비법정시설의 가이드 라인 마련	'21. 12월	
	안전속도 5030 전국시행에 따른 효과분석 실시	'21. 12월	
	자율주행차 R&D사업 최종 성과평가	'21. 12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1년차 연차점검 실시	'21. 12월	
	이륜차 무인교통단속장비 표준규격 제정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쉼 국민

□ 기대효과

- △ 국민안전을 위한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구축 △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국민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 －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심각도*’를 현격히 감소
 - * 사상자별로 상해 피해와 손실 정도를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된 인명피해 심각도를 차량등록 대수로 나눈 수치
- '18년 기준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가 2.9명(평균 1.1)으로 OECD 28개국 중 27위였으나, 올해는 1.8명을 목표로 하여 보행자가 최우선 보호받는 교통환경 구축
-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한 첨단인프라 구축·제도 개선으로 교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 법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 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 (60%)	0.167	0.158	0.137	0.124	지난 3년간 매년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 평균 9.13%보다 상향된 9.49%를 감소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지난 3년간 심각도 감소율은 '17년 대비 '18년 8.74%, '18년 대비 '19년 5.38%, '19년 대비 '20년 13.29% 감소로 평균 9.5%의 감소율을 보이며, 설정한 것으로 도전적이고 의욕적인 목표치임	(당해년도 월평균 교통사고 심각도 지수*12) * 교통사고 심각도지수 $= [(273 \times \text{사망자수}) + (32 \times \text{중상자수}) + (2 \times \text{경상}) + (1 \times \text{부상})] / \text{차량등록대수}$ * 사망·중상·경상·부상자 수는 前 3년의 경우 매년 1.1 ~ 12.31 기간에 발생한 것을 적용하고, 당해연도는 1.1 ~ 10.31 기간에 발생한 것을 적용 * '20년 심각도는 교통사고 사상자수 잠정통계 기반임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 (40%)	2.9	2.5	2.1	1.8	지난 3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 수는 '17년 대비 '18년 12.1%, '18년 대비 '19년 13.8%, '19년 대비 '20년 16% 감소하여 평균 13.9%의 감소율을 보임 지난 3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 수 평균 추세치 13.9% 감소보다 상향된 14.3% 감소를 목표로 제시하여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중 사망자 수 ÷ (해당연도 인구 ÷ 100,000)	경찰청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1) 주요 내용

- **<사이버공간 안전 확보>** 급변하는 사이버범죄 양상*에 대응하여
 - △ 협업치안 확대 △ 사이버위협대응 시스템 구축** 및 국제공조 강화
 - * 다크웹·가상화폐 등을 악용한 신종 국제 사이버범죄 급증
 - ** 인텔리전스 시스템,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 사이버위협정보 종합분석 시스템 등
- － △ 민·관·학 협업 거버넌스 확대, △ 전문화교육·시스템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 △ 유로폴 실무약정 등 사이버 국제공조 대응체계 강화
- **<사이버수사 활동 강화>** 사이버 사기·성폭력·도박 등 급증하는 주요 범죄 대상 특별·집중단속 등 적극적인 기획수사로 검거실적 지속 제고
 - －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 불법 유해정보 차단 △ 범죄수익 추적·환수 △ 해외서버 압수 등 피해자 보호 및 추가피해 확산 방지활동 강화
- **<인터폴 국제공조 활성화>** △ 공조 및 정보수집분야 확대 △ 국외 도피사범 추적·송환 △ 경찰주재관 증원·전문화 등 대응력 제고
- **<외국인범죄 예방>** 대테러·방첩 등 선제적 외사정보 활동으로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체류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치안활동 전개
 - ※ 외사 안보정보관 신설, 대테러 국제협력 외연 확대 등으로 위해요인 사전 발견·차단
- **<해외 치안협력 강화>**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재외국민 치안불안을 해소하고 해외 치안안전망 확보
 - － △ 경찰지휘부 교류 △ 치안협의체 활성화 △ 치안한류 사업(치안협력사업·경찰전문가 파견·초청연수) △ 정부 치안외교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국제·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사이버범죄 검거율
관리과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지수 / 사이버 첩보활용 지수 / 사이버국제공조 활성화 지수
	사이버범죄 검거 및 피해 보호조치 등 수사활동 강화	사이버범죄 검거 증가율 / 피해 보호조치 증가율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인터폴 조직 및 D/B 활용도 / 국외 도피사범 송환실적 / 해외파견자 증원 및 교육·업무노하우 공유 등 활동 실적
	선제적·예방적 외사경찰 활동으로 사회안전 확보	외사정보 활용도 /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 대테러·방첩 활동 실적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교류지수 / 치안인프라 전수지수 / 홍보지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사이버범죄 검거율	75.0	73.4	67.5	73.0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18년 이후 지속 감소세이며, 전 3년도 실적 평균값(72.0)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64.5)을 고려, '21년 목표치는 검거율 반등을 독려하기 위해 평균값보다 높은 73.0으로 설정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사회 전방위적으로 ‘언택트 사회(비대면·비접촉)’가 가속화되면서 사회·경제의 중심축이 온라인으로 이동, 사이버범죄가 크게 증가

※ 사이버범죄는 '19년 180,499건에서 '20년 234,098건으로 증가(29.7%↑)

- － 이에 반해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 △범죄수법의 지능화·음성화 (다크웹·가상화폐·클라우드 등으로 추적 회피)로 수사여건은 지속 악화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 사례】

- ▶ **(사이버성범죄·마약 유통)** 다크넷 내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아동음란물 및 마약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세탁, 추적 회피
- ▶ **(개인정보탈취 및 판매)** 해킹, 랜섬웨어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해외 다크넷 및 온라인 게시판에서 매매

- 급변하는 사이버환경 및 급증하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독자적 대응만으로는 한계, 대·내외 협력 확대가 필수적
 - － 민·관·학 협업치안 확대로 예방 및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외국 법집행기관·IT기업과의 공조망 강화로 적극적 수사·검거 지원

(4) 참고자료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cyberbureau.police.go.kr)
- 방송통신위원회,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 한국인터넷진흥원(www.kisa.or.kr) /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13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 추진배경

- <사이버범죄의 급증>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이 ‘비대면(Untact)’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 사이버범죄가 급증

최근 3년간 사이버범죄 발생 통계			
구 분	'18년	'19년	'20년
발생건수(건)	149,604	180,499	234,098
작년대비(건)	17,870(13.6% ↑)	30,895(20.6% ↑)	53,599(29.7% ↑)

- ICT기술의 발달 및 다크웹, 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신종 사이버범죄의 증가로 검거여건은 더욱 악화
- 사이버범죄의 급증 및 사이버환경의 급변에 따라 단순한 사후적 대응(발생 후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전 예측과 분석에 기반한 선제적인 예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필요
- <사이버 국제공조의 필요성> 해외 소재 클라우드 업체를 이용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다시 여러 나라를 우회하여 추적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이버범죄는 점점 초국경화 양상을 띄고 있음
- 해외 디지털증거의 신속한 확보는 범죄혐의 입증의 핵심으로, 현장 수사관이 국제공조의 부담없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국제공조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이 필수

사이버범죄의 초국경화 사례

- ▶(사이버성범죄·마약 유통) 다크넷 내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아동음란물 및 마약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세탁, 추적을 회피함
- ▶(개인정보탈취 및 판매) 해킹, 랜섬웨어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이를 해외 다크넷 및 온라인 게시판에서 매매하는 경우가 만연

- <국민적 관심의 증대> 딥페이크*, 사이버성폭력, 허위조작정보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발생, 민·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치안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함

*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AI)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사이버 협업치안 확대]

○ <국민참여> 국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관·학 협력 사이버 예방활동 강화

- <범죄이슈 공동대응 > KISA 등 유관기관, 주요 포털, 오픈마켓 등과 협업, 사이버범죄 예방대책 마련 및 공동 홍보 추진
- <연구협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경찰대학* 등 연구단체와 협업하여 즉시 사용이 가능한 기술 개발 추진
 - * 치안데이터 사이언스 Lab과 각종 수사 데이터 공유 등 사이버위협정보 분석기술 개발
- <사이버캡 서비스 연계> 사이버캡(앱)의 ‘사이버사기 피해신고이력 조회 기능’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민간 IT기업의 플랫폼과 연계
 - * 최근 3개월간 3회 이상 피해신고된 사기의심 전화(계좌)번호를 직접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수여> 사이버치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민·관·학이 서로 협력하여 협력치안 추진 동력 확보

○ <맞춤형 예방·홍보> 온라인 참여 및 디지털 소외계층 비대면 예방·홍보 실시

- <사이버범죄예방의 날> 사이버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4.2. 전후로 기념행사, 공모전 등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전개
- <누리캡스> 인터넷상 성착취물·마약 등 불법·유해정보 신고활동 및 경찰의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에 국민이 직접 참여
- <찾아가는 예방교육> 기관·단체 등 예방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노인(취약계층) 및 기업(이메일무역사기)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확대
- <온라인 동영상 제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이버범죄 예방강사*의 온라인 전용 예방교육 동영상 제작 및 활용
 - * 경찰관 신분으로 사이버수사 경력과 강의역량을 갖춘 강사를 전국적으로 101명 선발·운영중

○ <정보공유> 사이버위협·범죄 등 동향에 관한 적극적 정보공유

- <사이버위협분석 보고서 발간(대국민용)> '21년 예상되는 사이버 위협의 유형 및 대응방안에 대한 예방정보 공유
- <더 사이버(The Cyber) 발간> 첨단화·조직화된 신종 사이버범죄 동향 및 수사기법 등 연구 관련 정보를 현장에 적시 제공

[현장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 <전문인력 확충> 수사·디지털포렌식 등 민간의 우수인재를 경력채용

- <민간 경력채용> 수사·디지털증거분석 등 민간 우수인재 경력채용
※ '00년부터 '20년까지 경력경쟁채용 총 697명 선발
- <수사 인력증원>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사이버수사인력 증원, 업무부담 해소
※ '20년 기준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 전년 대비 29.7%↑(180,499→234,098건)

○ <전문화 교육> 현장교육 및 전문화 교육 등을 통해서 맞춤형 현장역량 강화

- <맞춤형 현장 교육> 현장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온·오프라인 교육 동시실시, 단계별·수준별 교육을 통해 사이버수사관 자질 향상
※ 1단계(기본, 신임필수)→2단계(심화, 선택)→3단계(전문기, 위탁) 단계별 맞춤 교육
- <지휘자 교육> 변화된 사법체계에 따른 책임수사를 위해 수사연수원 「사이버 수사팀장과정」·「사이버수사지휘과정(21년 신설)」 등 활용, 수사지휘역량 강화
- <전문화 교육> 최신·첨단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악성코드 분석·다크웹 등 최신 사이버 트렌드에 대한 전문화 교육 실시
- <맞춤형 석사과정 운영> 사이버경력·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석사과정 운영, 공인된 사이버치안 전문가 양성
※ 국내 우수 정보(보호)대학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 경찰에 최적화된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으로 업무 연계성 극대화

○ <시스템구축 및 장비 확충> 사이버위협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장비 지원

- <첨단 시스템구축>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시스템**, 사이버위협정보 종합분석 시스템 등 고도화 및 신규 구축
* 경찰 내·외부 시스템 11종을 연계하여 산재된 사이버범죄 단서 간 연관성에 대한 통합분석을 지원하는 시스템
** 다크웹 내 불법정보를 게시한 ID·URL 등 22개 수사단서에 대한 연관분석 기법 지속적으로 개발, 다크웹 불법 이용자 추적에 활용하는 시스템
- <고성능 수사장비 보급> 고난도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디지털증거 복제·분석 장비 및 최신 분석 소프트웨어를 보급, 원활한 수사활동 지원
※ 대용량자료 분석용 워크스테이션, 복제장비, 분석 소프트웨어(인케이스) 등 보급
- <국가첨단치안센터> 사이버수사 역량을 결집한 다기능 복합시설 건립 추진, 특화형 시설 구축 및 부서신설과 정원증가 고려, 향후 증축이 용이하도록 설계

[사이버 국제공조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강화]

- <유로폴 실무약정> 실무약정 및 세부약정서의 신속한 체결을 통해 국제공조망 대폭 확장, 원활한 수사정보 확보를 통해 국내사건 수사에 탄력 부여
 - EU 27개국 외 국가의 법집행기관이 유로폴과 공식적 수사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하는 약정(Working Arrangement)
 - 특히 사이버범죄, 마약밀매 등 ‘중대범죄’에 대한 긴밀한 공조수사를 목표로 함
- <ISCR 내실화> 세계적 국제회의 개최로 사이버 치안 선도국가에 걸맞은 글로벌 위상 확립 및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의 場 마련
 - <역량강화> 랜섬웨어·가상통화·다크넷 등 현장활용도를 높인 전문적인 콘텐츠를 대폭 마련, 수사관·분석관의 사이버수사역량 개발 증진
 - <신속공조> ISCR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조대상국과 실무급 양자회담 집중 병행개최, 사이버 국제공조사건에 대한 신속처리 도모
- <법집행기관 직접공조 강화> 직접공조가 활발한 미국을 비롯 사이버범죄 수사에 중요한 거점인 유럽 및 동남아 국가의 수사기관과의 공조망 강화
 - <美 FBI·HSI> 정례회의, 위협정보 및 사건분석 공유, 테마별 워크숍 공동 개최 등으로 FBI 사이버주재관(Cyber ALAT) 및 HSI 한국지부 활용성 제고
 - <유럽> 유로폴 실무약정 체결 등을 통해 국제공조망을 유럽으로 확장, 수사정보의 신속한 확보를 통해 국내사건 수사 적극 지원
 - <동남아> 사이버사기·도박 등의 주요 행위지인 동남아 지역 경찰 대상 교관 파견을 통해 현지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공조 협력을 유도
- <글로벌 IT 기업 공조 책임지원> 해외기업 보유정보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쏘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글로벌 IT 기업 국제공조를 집중처리 지원
 - <구글·애플> 범죄에 활용된 기기(Device) 정보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기업별 실무협의회 개최, 국내 발생 범죄에 대한 폭넓은 협조를 확보
 - <페이스북> 경찰청 - 페이스북 간 신속대응 체계 구축 및 페이스북 플랫폼을 사용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적극적 공조 활동 추진
 - <신규기업> 증가하는 가상화폐 범죄이용에 대응하여 협력대상 가상화폐 거래소 확대

- <사이버국제공조 시스템> 현장에서는 쉽고 편리하게 사용, 본청에서는 급증한 국제공조 요청을 신속 처리·분석할 수 있는 포털시스템 구축

- <현장 사용편의 도모> 수사관은 포털을 통해 해외 경찰·기업 대상 사이버 국제공조를 손쉽게 요청하고 자기 사건의 진행경과를 실시간 확인 가능
- <지원 및 분석강화> 본청은 현장수사관을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원, 국제공조내역을 빅데이터 분석하여 해외發 사이버범죄 사전차단에 적극 활용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1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표준 강의안 제작	'21. 2~3월	
	다크웹 연구 기술 결과물 검토 협의(한국전자통신연구원, 1년차)	'21. 2~3월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	'21. 2~3월	
	맞춤형 석사과정(디지털포렌식학과) 10기 계획 수립	'21. 2~3월	
	해외 법집행기관과 실무협의회 개최, 사이버범죄 공조 논의	'21. 3월	
2/4분기	21년 사이버위협분석보고서 발간	'21. 4월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2) 온라인 행사 개최	'21. 4월	
	맞춤형 석사과정(디지털포렌식학과) 10기 입찰 및 계약	'21. 4~6월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 1단계(기본 과정) 교육 진행	'21. 4~6월	
	현장수사 지원을 위한 고성능 수사장비 보급	'21. 4~6월	
	누리캅스 테마별 집중신고 기간 추진	'21. 5~10월	
	'더 사이버' 발간	'21. 6월	
	유로폴 실무약정 체결	'21. 6월	
3/4분기	글로벌 IT기업과 실무협의회 개최, 공조협력범위 확대 논의	'21. 6월	
	맞춤형 석사과정(디지털포렌식학과) 10기 선발 및 운영	'21. 8월	
	사이버국제공조시스템 개발	'21. 8월	
4/4분기	ISCR 2021 개최	'21. 10월	
	대한민국 사이버치안대상 개최	'21. 10월	
	글로벌 IT기업과 공조절차 간소화 등 정비를 위한 논의	'21. 10월	
	다크웹 불법정보 추적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개시(21년)	'21. 11월	
	다크웹 연구 기술 결과물 검토 협의(한국전자통신연구원, 2년차)	'21. 11월	
	하반기 누리캅스 격려 시상식 및 간담회 개최	'21. 12월	
	사이버위협 인텔리전스 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개시(21년)	'21. 12월	
연중	맞춤형 온라인 교육과정 2단계(심화), 3단계(전문가) 교육 진행	'21. 1~12월	
	사이버수사 전문화 교육(위탁) 및 지휘과정교육	'21. 1~12월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21. 1~12월	
	'21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강의 콘텐츠 제작	'21. 1~12월	
	통합분석체계 관련 경찰대·빅데이터담당관실 등 협업 연구	'21. 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 국민과 공공·민간기관
- 이해관계자 : 사이버치안 거버넌스 관계에 있는 국내 유관기관, 민간기업, 전문가, 학계, 해외 법집행기관, 글로벌 IT 기업 등

□ 기대효과

- 대국민 사이버범죄 예방·홍보활동 및 적극적인 사이버 첩보수집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국민 안전의 확보
- 사이버 국제공조 종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해외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현장 수사관 지원 확대 및 국민적 요구 해결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0	'21
1-2-정보화① 사이버수사(1233)			
① 사이버수사(1233)	일반회계	149	185
■ 사이버안전수사활동(311)		(45)	(62)
■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104)	(12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출처
	'18	'19	'20	'21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지수 (40%)	414, 340 점	524, 847 점	211, 107 점	242, 773 점	전년도 활동 지수대비 15% 상승한 242,773점을 목표치로 설정	비대면(온라인) 교육 및 기업체·군장병 가산점 적용한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지수	경찰청 관리 통계
사이버 첩보활용 지수 (30%)	19.1 %	21.8 %	24.9 %	25.0 %	최근 3년 평균 22.0% 대비 10% 이상 상승한 25.0%를 목표치로 설정	B등급 이상 첩보 건수/ 전체 첩보건수	사이버첩보 관리시스템 통계 자료
사이버국제공조 활성화 지수 (30%)	-	-	329 %	340 %	과거 실적 및 추세와 '20년도 실적인 329%를 감안하여 '21년에는 약 10% 상승한 340%를 '21년도 목표치로 설정	(국제공조요청건수, 1월~10월) / (사이버수사관 인원) × 100 ※ 사이버수사관 인원은 전년도 12. 31. 정원 기준	경찰청 관리 통계

<붙임> 성과지표 설명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지수】

<지표설정 사유>

- (지표 목표) 다양한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사후 집중단속·검거활동과 병행하여 사전 예방교육도 중요하므로 예방교육 지표 설정
 - (지표 정의)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활용, 코로나 19로 비대면 교육이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경찰청 통계 취합)을 포함한 지수 설정
 - (설정 근거) ①코로나19로 온라인을 이용한 초·중·고등학교 예방교육 필요성 증가하여 경찰청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교육(경찰청 온라인 교육포털 접속)인원과 교육 효과가 높은 대면교육 인원 합산하여 설정 ②인터넷 거래를 주로 이용 무역업체 대상 범죄 및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서 인터넷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군장병에 가중치 2배를 부여한 기준점수를 설정
- * 사회적 이슈 및 교육 신청이 많은 사이버범죄 유형 5종(사이버폭력·사이버 명예훼손·게임 사기·개인정보보호·디지털성범죄) 제작 활용

<수치설정 근거>

- (그간 추세치) '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 대비 60% 감소 {524,847점('19년) ⇨ 211,107점('20년)} 하였고 '21년 역시 코로나19 및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이전('19년) 일상 환경과 같은 추세치를 반영한 수치설정이 어려워 코로나19와 같은 전년도로 기준으로 15% 상향 실적 설정함
 - (수치 산정) 예방교육을 받는 교육대상군을 ▲‘기업체·군장병’ ▲‘초·중·고 학생 및 그 이외 기타’ 2개 군으로 분류, 이 중 기업체·군장병에 가중치 2배의 노력점수를 부여한 기준점수를 설정하여 목표치의 도전성·적극성 제고를 위해 **기준점수('20년 점수) 대비 15% 상승치인 242,773점을 목표치로 설정**
- ※ (측정 산식) <기업체·군장병(인원)×2+학생등 그외(인원)>×목표 점수(15%↑) = 242,773점

< '20년 교육대상별 교육 현황 >

구분	학생	교사	학부모	기업	공무원	노인	군장병	기타	합계
교육인원	184,728	5,411	1,517	2,858	1,841	216	8,339	3,123	208,033

【사이버첩보 활용도 지수】

<지표설정 사유>

- (지표 정의) 사이버공간 위협하는 다양한 불법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첩보로 활용하기 위해 사이버첩보 관리 및 인텔리전스 시스템* 운영, 사이버첩보의 중요한 단서는 인텔리전스 시스템에서 사이버범죄 연관분석을 위한 중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유가치한 첩보의 수집이 중요하므로 사이버첩보 관리시스템에 접수된 전체 첩보 중 실제 수사나 정책 반영 등에 활용 가능한 유가치 첩보(B등급 이상)의 비율 산정

* 사이버 범죄단서(IP,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가 존재하는 경찰청 내·외부 시스템 12종(누리캡스 등)을 연계한 연관분석·프로파일링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 현재 17개 시·도경찰청(경찰서 제외) 사이버부서 경찰관 대상으로 매분기 사이버첩보 수집 중

- (설정 근거) 최근 사이버범죄는 탐지가 어렵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첩보수집의 중요성 대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지표 설정

<수치설정 근거>

- (그간 추세치) '20년 사이버첩보시스템에 접수된 첩보 7,646건 분석 결과, 전체 접수 건수 대비 B등급 이상 첩보의 활용도 지수는 24.9%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추세('18년 19.1% ⇒ '19년 21.8% ⇒ '20년 24.9%)
- (수치 산정) 사이버첩보 수집은 사이버 위협 요소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 등을 요하여 양질의 첩보 수집이 일반범죄에 비해 어렵고 최근 3년간 활용도 지수가 지속 상승하여 임계치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근 3년 평균 사이버첩보 활용도 지수(22.0%)를 기준점수로 하여 기준점수 대비 10% 이상 상회하는 25.0%를 목표치로 설정

【사이버국제공조 활성화 지수】

<지표설정사유>

- (지표 정의) 사이버범죄수사에 필수적인 국제공조업무의 활성화 여부를 측정하는 지표
- (설정 배경) 최근 사이버범죄는 사법당국의 수사 및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서 모의·실행되는 관계로 국제공조의 중요성 대두, 이를 반영하기 위한 지표 선정
- (지표 목표) 본청 집중지원, 현장순회교육 등을 통해 시도경찰청·일선서 사이버 수사관들이 국제공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책임 있는 국제공조 지원으로 일선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일선 사이버 수사관들의 국제공조 요청을 활성화

<'21년 목표치 산출 근거>

- **(현황)** '20. 2월부터 실시된 본청의 사이버국제공조 집중처리로, '사이버 국제공조 요청건수'가 '19년 10월 740건에서 '20년 10월 5,952건(국가공조 702건, 기업 5,25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선 수사관들의 국제공조수사에 대한 인식 제고, 공조 다각화, 중점사건 공조 추진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사이버국제공조 지속확대)** 사이버수사국은 책임수사 지원을 위해 현장 수사관들을 위해 해외 경찰기관 뿐 아니라 해외 IT기업을 대상으로 한 국제공조 전담서비스를 '20년 2월부터 제공중이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사이버국제공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함
 - **(목표치 산출)** 해외 경찰기관대상 공조만 존재했던 '19년에는 산술적으로 전체 사이버수사관 1인당 중 연간 약 46%(1,598명 기준)가 국제공조를 실시하였으나, '20년에는 329%(1,814명 기준)을 달성
 - 이에 현장 수사관을 지속 독려하고 국제공조 교육, 번역지원 및 중요사건 집중관리를 통해 '21년에는 사이버국제공조 활성화 비율을 전년대비 약 10%p 증가한 3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치 선정
 - 사이버수사관 인원수가 '20년 1,814명에서 '21년 2,153명으로 20% 증가하였으나, 실제 국제공조처리인원은 그대로임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약 1,400건의 국제공조를 추가로 실시하겠다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수치임
- ※ 국제공조건수만으로는 현장에서의 활성화 정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으므로, 사이버수사관 인원수를 지표산식에 반영함이 바람직

<측정산식>

- **('20년 수치):** (국제공조요청건수, 1월~10월) / (사이버수사관 인원) × 100
= (5,952 / 1,814) × 100 = 329%
- **('21년 목표치):** (국제공조요청건수, 1월~10월) / (사이버수사관 인원) × 100
= **340% 추진**

* 국제공조요청건수 = 해외경찰기관대상 연간국제공조건수 + 해외기업대상 연간국제공조건수

※ 사이버수사관 인원은 전년도 12. 31. 정원 기준

구 분 <1~10월기준>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A) 해외경찰기관대상 연간국제공조건수	295	358	670	740	702	A
(B) 해외기업대상 연간국제공조건수					5,250	B
(C) 사이버수사관 정원 (전년도 12.31.기준)	1,147	1,364	1,565	1,598	1,814	2,153
사이버국제공조 활성화지수 <익년도 성과지표 = {(A+B)/C}*100>	25.71%	26.24%	42.81%	46.30%	329%	C

2021 목표치

340% 추진

※ 위 통계는 매년 1.1.부터 성과평가 기간 전인 10. 31.까지의 국제공조 요청 건수임

14 사이버범죄 검거 및 피해 보호조치 등 수사활동 강화

□ 추진배경

- 모바일 시대 도래 및 온-오프라인 생활공간의 결합으로 사이버 영역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실생활과 사이버환경이 밀접하게 연결되며 사이버범죄 발생도 급증하는 추세임
 - － 최근 5년간 사이버범죄는 인터넷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등 중심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는 추세임
 - ※ 사이버범죄는 '19년 180,499건 발생, '18년 149,604건 대비 20.7% 증가, '20년 234,098건으로 전년('19년 180,499건) 대비 29.7% 증가
 - －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사회(비대면·비접촉·무인화)'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범죄 폭증
 - ※ '20년은 전년 대비 사이버범죄 29.7% 증가(180,499건 → 234,098건) / 전체범죄 1.5% 감소(161만건 → 159만건) ⇒ 사이버범죄 비중 증가(11.2% → 14.7%)
 - － 이에 반해 △조직·인력의 한계 △일상의 사이버화와 맞물려 업무범위의 지속 확장 △다크웹·가상통화·클라우드 등 범죄 수법이 진화(지능화·기술화·음성화)되는 등 수사여건은 악화됨
 - － 전체 사이버수사관의 역량을 총동원한 적극적인 기획수사(특별·집중 단속)를 통한 검거활동 추진 필요
- 또한, 최근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권리보호가 강조됨에 따라, 사이버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추가 피해 방지활동 등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사이버치안 상황을 고려한 시의성 있는 집중단속 추진으로 사이버수사 역량 극대화, 주요 사이버범죄 근절 도모

< '20년 사이버수사 특별·집중 단속 현황 >

단속명	기간	실적
[사이버 성폭력]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	'20. 2. 10. ~12. 31.	2,807건 / 3,575명 검거 (구속 245명), 범죄수익 11억7천만원 환수
[사이버 도박]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19. 11. 1. ~ '20. 12. 31.	5,661건 / 7,440명 검거 (구속 258명), 범죄수익 158억 350만원 환수
[사이버 사기]		
4대 사이버 사기 특별단속	'20. 2. 3. ~12. 31.	124,234건 / 37,073명 (구속 980명)
[기타 중요 사이버범죄]		
문체부와 저작권 침해 사이트 및 웹하드 단속	'20. 6. 1. ~10. 27.	불법 게임서버 운영자 12명, 헤비업로더 11명 검거
[사이버 테러]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특별단속	'20. 6. 1. ~10. 31.	1,961건 / 442명 검거 (구속 6명)

- 사이버테러수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테러범죄(디도스, 랜섬웨어, 다크웹 등) 연구·교육 강화 및 모의훈련 실시 등 추진

- **<연구·교육>** '사이버테러수사연구회*(본청 학습모임)'를 전국으로 확대 (화상회의 플랫폼 활용)하고, 연구회 연구결과 등을 책자로 제작·배포

* '19. 5월 본청 사이버범죄수사과(테러수사대)에 범죄동향·추적기법 등 공유를 위해 결성 후 매월 발표회 개최(총 24회), 2년 연속('19~'20) '우수 현장학습모임'으로 선정됨

- **<모의훈련>**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대상으로 디도스, 기밀탈취 등 사이버 공격이 이루어진 상황을 가정해 초동대응 방법을 반복 훈련(반기별 1회)

※ 훈련 실시 전에 각 시·도경찰청은 관내의 중요 정보통신기반시설(국가기관, 민간 단체 등)과의 긴급연락망을 정비하여 유사시 대비태세 확립

- **<전문인력>** △테러수사관 인력풀 관리·충원 △테러수사팀 평가체계 수립 △전문교육 수료자 수사팀 배치 등 적극 추진
※ 사이버 역량과 수사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 양성, 향후 국제공조·법률 전문가 등이 포함된 종합적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의 기반 마련

○ 사이버경제범죄 총력대응을 위해서 조직적·다중피해 사기 수사 전담팀 정비 및 특별단속 등 적극 추진

- **<전담조직 정비>** 각 시·도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신설, 경찰서 단위에서 해결이 어려운 조직적·다중피해 사기 수사 전담
— 17개 시·도경찰청에 23개팀 설치(서울·경기南 등 5개청은 2개팀, 12개청은 1개팀)
— 쇼핑몰사기 등 대규모 피해사건, 다중피해 메신저 피싱, 악성코드 이용한 몸캠 피싱, 이메일 무역사기 등 담당 / 경찰서는 물품거래사기 등 민생 밀착형 범죄에 집중하여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 중심의 업무체계 구축
- **<특별단속>** 조직적 사이버경제범죄부터 일상의 반복적·고질적 물품거래 사기까지 포괄하여 2. 1. 부터 특별단속 추진 중
※ 개선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20. 12. 23 대국민 서비스), 개정 사이버사기 병합지침(’21. 1. 1 시행) 적극 활용, 동일 피의자에 의한 다중피해 사건은 책임수사관서에서 신속 병합수사

○ ‘딥페이크’ 등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디지털 성범죄 척결 위해 엄정한 수사와 함께 삭제·차단 등 피해자 보호도 빈틈없이 추진

- **<최신 동향>** ‘딥페이크’ 및 ‘알페스(RPS)’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등 불안심리 고조
* Real Person Slash, 실존인물을 등장시켜 동성애 장면을 묘사하는 소설 등 지칭
- **<신설·강화 법률>** 신설되거나 처벌이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 법률을 엄격히 적용
※ △(불법촬영물 관련) 불법촬영물 및 불법유포물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성폭력처벌법 §14④, 3년 ↓ 3천만원 ↓ / ’20. 5. 19.부터 시행)
△(합성 성영상물 관련) 허위영상물 등 합성·반포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성폭력처벌법 §14의2, 5년 ↓ 5천만원 ↓ / ’20. 6. 25.부터 시행)

△(아동성착취물 관련)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청소년성보호법 §11 ⑤, 1년↓, 2천만원↓ ⇒ 1년↑ / '20. 6. 2.부터 시행)

* 같은 조항의 처벌규정 강화와 함께 처벌 대상에 '시청'이 신설됨

△(범죄수익 환수) 경찰에 기소 전 추정보전 신청권 신설(마약거래방지법 §53 ① / '20. 9. 10.부터 시행),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 범죄수익 입증 책임 완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10의4/'20. 6. 25.부터 시행)

- 범인 검거에서 나아가 불법콘텐츠 차단, 범죄수익금 추적·환수, 해외서버 압수 등을 통한 2차 피해 예방 및 재범 차단 활동 병행

- <공조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의 공조 범위(피싱·파밍, 악성코드 유포, 개인정보 불법수집 사이트 등) 확대 및 기능 개선('20년 1월~)

- *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을 활용하여 범죄에 이용된 음란물 사이트, 서버 접속 차단 및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

- <범죄수익>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및 국세청 통보 활성화
- <국제공조> 국제공조 활성화로 범죄사이트 서버 등 압수, 운영자 및 실소유주 검거를 통해 범죄조직 와해

- 사이버테러수사연구회 운영, 최신동향과 수사·추적기법을 발표·공유하여 고도화되는 사이버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

- <보안 메신저 추적기법> 추적이 어렵다고 알려진 해외 보안 메신저 추적기법 개발·전파('20. 4.) ⇨ 디지털 성범죄 단속역량 제고, 성과 거양

- <몰카 탐지기> 세계 최초, 무선통신 감도(신호세기)를 활용한 「무선 IP카메라 탐지기」 개발('19. 8. 30. 발표) ⇨ '19년 중앙우수 공무원 제안심사 금상(1위) 수상

- <이메일 추적기법> '수신확인 기능을 활용한 이메일 추적기법' 개발('19. 9. 27. 발표) ⇨ '19년 경찰청 수사기법 우수사례 발표대회 입상(4위)

- 사이버범죄전문가·시민단체·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의 시각에서 공감받는 적극적인 사이버범죄 수사활동 전개

- **<자문단>** 「사이버성폭력 수사 자문단」, 「사이버테러범죄 전문가 그룹」 등 전문가 그룹 운영,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경찰에 ‘기소 전 추정 보전신청권’ 부여 법률 개정(’20. 6. 9.) 및 ‘위장수사 법제화’(2. 17. 여가위 전체회의 통과)
- **<공동 대응>** 여가부·방심위 등과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공동대응 체계를 고도화, 피해자 보호 위한 삭제·차단 지원을 통해 피해확산 방지
- **<합동 단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 추진, 디지털 성범죄 엄정 대응 분위기 조성
-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온라인 암표 매매, 음원 사재기, 불법 저작물 유통 등 근절을 위한 간담회 및 대응체계 구축
- **<사이버경제범죄>** 금융감독원과 사이버경제범죄 예방·수사 상 협업을 위한 간담회 개최(지급정지 등 제도 도입 관련 논의 등 실시)
- **<사이버테러범죄>** 보안업체 등의 외부 전문가와 우수 역량을 갖춘 내부 인력으로 「사이버테러범죄 전문가그룹」 구성, 첩보수집·기술자문 등으로 사이버테러에 공동 대응체계 마련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 개최	'21. 1월	
	시·도경찰청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 신설	'21. 1월	
	사이버사기 등 사건 시·도경찰청 이관 지침 마련	'21. 2월	
	불법촬영물 영상분석실 구축	'21. 2월	
	사이버사기 특별단속 계획	'21. 2~6월	
	사이버테러범죄 전문가 그룹 위촉식 및 상반기 간담회 실시	'21. 3월	
	상반기 사이버테러 초동대응 모의훈련 실시	'21. 3월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 및 유통사범 집중단속	'21. 3~10월	
2/4분기	21년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21. 4월	
	사이버테러수사연구집 발간	'21. 4월	
	정보통신망침해형범죄 특별단속 실시	'21. 4월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 개최	'21. 4~6월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계획	'21. 4~10월	

3/4분기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 개최	'21. 7~9월	
	사이버테러범죄 전문가 그룹 하반기 간담회 실시	'21. 8월	
	하반기 사이버사기 특별단속	'21. 8~11월	
	하반기 사이버테러 초동대응 모의훈련 실시	'21. 9월	
4/4분기	사이버테러수사연구집 발간	'21. 10월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 개최	'21. 10~12월	
	정보통신망침해형범죄 특별단속 평가 및 포상	'21. 11월	
연중	▶ 코로나19 관련 엄정 수사 및 지속 모니터링 삭제·차단 ▶ 사이버테러수사연구회 개최, 최신 사이버수사 동향·기법 발표·공유(전국 확대 실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및 정보, 공공·민간기관
- 이해관계집단 : 관계부처(여가부, 방통위, 방심위 등) 및 민간기업(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등), 학계, 시민단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 기대효과

- 사이버범죄에 총력 대응함으로써, 사이버범죄 검거 증대
- 불법 유해정보 차단 및 범죄수익 추적 등을 통해 건전한 사이버공간 조성 및 2차 피해 확산 방지
- 수사관 역량 강화를 통해 사이버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 만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1-3-정보화① 사이버수사(1233)				
① 사이버수사(1233)		일반회계	149	185
■ 사이버안전수사활동(311)			(45)	(62)
■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104)	(12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사이버범죄 검거 증가율 (70%)	4.3%	18.2%	19.1%	15%	하단 참조	$\{('21\text{년 사이버범죄 검거건수} \div '21\text{년 적정 검거건수}^*) - 1\} \times 100$	사이버범죄 검거통계(KICS 시스템 자료)
피해 보호조치 증가율 (30%)	신규	35.8%	56.4%	47%	하단 참조	$\{('21\text{년 피해 보호조치(삭제·차단) 요청건수} \div '21\text{년 적정 요청건수}^*) - 1\} \times 100$	피해 보호조치 통계(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 자료)

* 사이버범죄 검거건수 및 피해 보호조치 요청건수 급증 추세를 고려하여, 적정건수는 「최근 5년 간 실적값 중 최고·최저 실적연도를 제외한 3년 평균값」으로 산출·활용(다만, 피해보호조치는 '18~20년 간 3년 실적값 뿐이므로 「3년 평균값」으로 산정)

□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사이버범죄 검거 증가율】

○ (지표설정 사유)

-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해서 사이버수사관의 기본 핵심업무인 사이버범죄 검거 활동에 대한 목표치 달성 여부로 성과 평가하고자 함
- 사이버수사국 내에서 예방과 홍보는 사이버수사기획과 소임이고, 사이버범죄 수사과는 검거와 관련된 사이버범죄 특별·집중 단속 및 사이버수사에 필요한 인력·시스템·교육·장비 등 지원·예산을 맡고 있으므로 사이버범죄수사과의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검거 성과를 산출하였는지, 얼마나 더 많은 검거 성과를 산출하였는지를 평가해야 할 것임
- 사이버범죄 발생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급증하는 발생 대비 검거 비율을 의미하는 '검거율'은 더 이상 사이버수사관의 성과 측정 도구라기보다 수사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사건 접수를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발생 급증)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19년 180,499건으로 전년('18년 149,604건) 대비 20.7% 증가, '20년 234,098건으로 전년('19년 180,499건) 대비 29.7% 증가<KICS 통계>

※ (검거 급증) 사이버범죄 검거건수는 '19년 132,559건으로 전년('18년 112,133건) 대비

18.2% 증가, '20년 157,909건으로 전년('19년 132,559) 대비 19.1% 증가<KICS 통계>

※ (검거율 하락) 약 30% 정도에 달하는 사이버범죄 발생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범죄 검거율은 '20년 67.5%로 '19년 73.4% 대비 5.9% 하락에 불과하므로, 시·도경찰청의 고난도 기술적·조직적 범죄 전담, 일선서의 민생침해형 범죄 적극 대응방침 및 관련 지원을 통해 급증하는 사이버범죄 발생건수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기사) '20.3월 「여고생 텔레그램 성범죄 표적 됐는데... 경찰, 신고접수 반려<세계일보>」 등

- 사이버수사관 인원 대비 검거 비율을 의미하는 '수사관 1인당 검거율'도 사이버 수사관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부하 상태로 인해 위 '검거율'과 마찬가지로 사이버수사관의 사기 저하 및 무리한 사건 반려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사이버수사관의 성과 측정 도구로 기능하기는 곤란함

※ (1인당 연간 처리건수) 경찰서 사이버수사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18년 257건에서 '19년 328.4건으로, '20년에는 406.5건으로 급증하였고, 사이버팀 적정업무량 분석 연구 결과(104.2건)에 대비하여 산출된 수치도 '18년 2.5배에서 '19년 3.2배, '20년 3.9배로 급증하여 해마다 업무 가중이 대폭 심화되는 추세 <KICS, 사이버수사인력 정원 통계>

- 위와 관련, '20년부터 시·도경찰청에 대한 평가도 각종 검거율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검거활동(검거건수)을 주로 평가하도록 평가지표 수정하였음

○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 성과관리 운영지침 상 '목표치 수준의 적극성*' 항목을 충족하는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함과 아울러 현재 업무 과부하를 고려하고, '21년 시·도경찰청 성과평가방식과 연동함으로써 명확한 성과 달성도 측정 및 합리적 목표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출함

*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작년 20년 자체평가 정책과제 본평가 계획)

구분	3년간 실적치		2년간 실적치		전년도 실적치
	상승세	그 외	상승세	하향세	
상	추세치 이상	평균치 이상	상승세 이상	가장 높은 실적 이상	전년 대비 10% 이상
중	추세치 수준	평균치 수준	상승세 수준	가장 높은 실적 수준	전년대비 10% 수준
하	추세치 이하	평균치 이하	상승세 이하	가장 높은 실적 이하	전년 대비 10% 이하

※ 추세치 : 통계기간 대비 평균 증가율('16~'17 : 5%↑, '17~'18 : 7%↑ ⇒ '19 추세치 : 6%)

※ 임계치 도달, 갑작스런 증감 등 예외적인 경우 소명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여 점수부여

- '21년 목표치 설정 : 적극성 '상' 등급을 충족하도록 추세치(현재 13.9%) 이상의 증가율 15%를 '사이버범죄 검거 증가율'의 실현 가능한 도전적 목표치로 설정함. 다만, 사이버범죄 검거건수가 “갑작스런 증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급격한 상승세('17~'18 : 4.3%↑, '18~'19: 18.2%↑, '19~'20:

19.1% ↑ ⇒ '21 추세치 : 13.9%)인 점을 고려하여 '20년 검거건수 대신 '21년 적정 검거건수(최근 5년간 검거건수 실적값 中 최고·최저 실적연도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값, 124,150건) 대비 목표치를 산출할 예정임(목표치인 증가율 15%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1년 적정 검거건수 124,150건 대비 '21년 검거건수가 142,773건이 되어야 함)

【피해 보호조치 증가율】

○ (지표설정 사유)

- 사이버범죄는 그 특성 상, 범죄행위로 인해 생성된 불법컨텐츠 등에 대한 피해보호조치를 수행하지 않으면 추가 피해자를 계속 양산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 만족도 역시 하향될 수밖에 없음
- 특히, 사이버성폭력, 메신저 피싱 및 스미싱 사건의 경우 피해자 검거 활동도 중요하나 검거와 병행하여 불법컨텐츠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차단조치 병행이 필수적이므로 본 지표가 필요함
- 피해보호조치는 사이버범죄수사와 운영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되며, 해당 시스템으로 아동성착취물, 일반음란물, 불법촬영물, 피싱·파밍, 악성코드 유포에 대한 불법컨텐츠 삭제·차단 요청을 수사관들로부터 접수받아 처리 중이며, '20년 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조 범위를 확대하여 피싱·파밍, 악성코드도 추가로 처리되고 있고, 이들 모두는 국민 체감 만족도 향상과 직결됨
- 일선 수사관들이 검거 뿐만 아니라 피해자보호 및 추가피해 예방조치에도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피해 보호조치에 대한 적극 독려 및 성과 평가 필요

○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 해당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은 과거 경찰청-방심위 수사공조시스템을 2차례 고도화한 것으로, '18년 상반기부터 적극 사용되기 시작하여 이전 실적이 없고, '20년 1월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조 범위를 확대(피싱·스미싱, 악성코드 유포 추가)한 점을 고려하여, '20년부터 신규지표로 설정하고 '21년 목표치를 산출하였음
- 성과관리 운영지침 상 '목표치 수준의 적극성' 항목을 충족하는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함과 아울러, '21년 시·도경찰청 성과평가와 연동하여 명확한 성과 달성도 및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코자, 사이버 불법정보대응 공조시스템(경찰청-방심위-KISA)을 통해서 명확히 산출되는 '피해 보호조치(삭제·차단) 요청건수'를 이용하여 평가함

- '18년 피해 보호조치 건수는 1,190건, '19년은 1,616건, '20년은 2,528건이므로,
- '21년 목표치 설정 : 적극성 '상' 등급을 충족하도록 추세치(현재 46.1%) 이상의 증가율 47%를 '피해 보호조치 증가율'의 실현 가능한 도전적 목표치로 설정함. 다만, 피해 보호조치 요청건수가 “갑작스런 증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급격한 상승세('18~'19 : 35.8% ↑, '19~'20 : 56.4% ↑ ⇒ '21 추세치 : 46.1%)인 점을 고려하여 '20년 요청건수 대신 '21년 적정 요청건수(최근 3년간 요청건수 평균값, 1,778건) 대비 목표치를 산출할 예정임(목표치인 증가율 4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1년 적정 요청건수 1,778건 대비 '21년 요청건수가 2,614건이 되어야 함)

15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 추진배경

- 국제공조 강화에 대한 국민요구 반영 및 인터폴 비전* 실현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인터폴 전담부서를 확대(계→과)

*‘Connecting Police for a Safer World, 경찰 간 연계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든다’

- 인터폴 전담조직 확대에 따른 역할 강화 필요, 국제공조 인프라 확대 및 국제공조수사 활성화를 통한 대한민국 경찰 위상 제고
- 또한 경찰청 주도로 인터폴 국제공조 인프라를 문체부 등 국내 유관부처 정책과도 연계, 국가이익 보호 및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 인터폴 및 194개 회원국과 화상회의 등 언택트 방식의 교류를 강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송환 추진
 - 코로나19에 여파에 따른 각 국가의 입국규제(174개국/2.17.기준) 등에 따라, '21년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에 난항 예상
 - 전체 도피사범 중 사기범죄가 전체의 46.2%(865/1,870)를 차지, 주요 도피국(중국·필리핀 등 아시아 7개국)과 집중적인 송환 교섭 필요
 - 한편 국외도피사범 중 인터폴 공조가 되어있지 않은 대상자를 확인,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한 검거·송환 활성화 기반 마련
- 우리 국민·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와 함께 재외국민 사건·사고도 빠르게 증가, 해외에서도 국내 수준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필요
 - ※ 영사조력법 시행('21. 1. 16.)으로 경찰주재관 활동 법적근거 마련
 - 늘어나는 해외 치안 수요에 대응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해외 파견경찰 인력을 확대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전문성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인터폴 공조분야 확대 등 업무 다각화, 국민안전 확보 기여]

- 국제공조범위 확대·강화를 위한 인터폴 데이터 활용도 제고
 - － 인터폴 사무총국과 협의하여 마약 인터폴 D/B* 신규 도입을 추진
 - * △ 형사정보시스템 △ 도난분실여권 △ 아동성착취물 △ 도난문화재 등 D/B 4종 사용 중
 - － 기소중지 사건 송치 前 인터폴 공조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KICS 공조절차를 개선하여, 적색수배 등 공조수사 활용도 제고
- 국제범죄정보를 수집하여 ‘인터폴 리포트’ 제작, 국제공조역량 강화
 - － 인터폴의 △최신이슈 △우수 공조사례 △신종 범죄수법 등 국제범죄 최신동향을 분석한 ‘인터폴리포트’ 제작, 경찰 내·외부에 활용
 - ※ 분기별(3, 6, 9, 12월) 말에 폴넷 게시판(경찰청 내부게시판)을 통해 배포
- 문체부 협업 저작권 분야 편당사업* 추진,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 － 인터폴 사무총국과 MOU 체결, 한류문화 콘텐츠(드라마·웹툰)의 해외 불법유통에 대한 인터폴 회원국 합동단속 실시('21년 문체부 예산 7억)

<“I-SOP”(Interpol Stop Online Piracy) 프로젝트>

1. 일 시 : '21년~'25년 <5년 간> / '21년 상반기 MOU 체결 예정
2. 목 표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각종 디지털저작권 침해범죄 근절
3. 참여국가 : 한국,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4. 주요내용
 - ① 국제공조 : △상시 공조체계 구축 및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수사 협조 채널 확보 △中日 등 주요 국가 공조채널 구축 △ 증거 공유 및 범죄수익금 몰수 등
 - ② 단속활동 : △ 디지털 저작권침해 합동단속 및 검거 △ 인터폴 사무총국 내 디지털 저작권침해 T/F팀 구성 △ 민간·학계 등과 협업하여 새로운 단속기법 개발 등

-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개선 등을 통한 수사주체로서 경찰역량 강화
 - － 개정 형소법 취지(상호협력관계)에 부합하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개선 및 관련 법률안 개정의견 제출 등 국제공조절차 체계화

[인터폴 등과 공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도피사범 송환 추진]

- 국제 치안협력 주도를 통한 공조수사 및 도피사범 송환 활성화
 - 인터폴 펀딩('21년 15.32억원)을 통해 '경제범죄 합동단속' 및 '온라인 아동성착취 근절' 분야 공조수사에 주도적 역할 수행
 - 아세안* + 3국(韓·中·日)과 국외도피사범 송환 활성화를 추진, 코로나19로 지난 해 감소한 송환인원 확대를 위한 전략 모색
-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국외도피사범 송환 현황 >

연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인원	297	300	304	401	271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도피사범 송환 지속 및 신규 도피사범 발굴
 - 코로나19에 여파로 도피사범 송환을 위한 호송관 파견 등이 난항, 해당국과의 정기적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미입국 송환*을 추진
- * 호송관이 해당국에 입국하지 않고 기내에서 신병을 인계받는 방식
- 코로나19 종료 후를 대비, 출국하였으나 인터폴 공조되지 않은 수배자에 대하여 인터폴 적색수배 신청, 소재발견 및 검거 가능성 제고
- ※ '20년 인터폴 공조되지 않은 수배자 중 인터폴 적색수배 가능자 2,528명 파악(476명 중 253명 적색수배 완료), '21년에 2,052명 적색수배 조치 예정
- 인터폴 및 아세안 국가와 공조, 사기 도피사범 집중 송환
 - '19~'20년 사기 도피사범은 총 1,512명으로, 전체 도피사범의 43%를 차지하고 대부분 중국·필리핀 등 아시아 7개국에 집중(85%)되어있는 점을 감안, 7개국과 화상회의 등 공조역량 집중
 - 사기 적색수배자 현황을 재정비하여, 해당국 경찰기관 및 경찰 주재관과 공유하여 집중 검거·송환하고, 시·도경찰청 '인터폴 국제공조팀(4개청 17명)을 활용, 도피사범 소재 집중 추적 실시

[해외파견자 증원 및 전문화를 통한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 공관별 재외국민보호 수요와 파견의 효과성(치안협력)·긴급성(국제범죄 차단, 도피사범 송환) 등을 종합 고려한 경찰주재관 증원 추진
 -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21. 1. 16.)에 따라 사건사고 분야 영사업무의 중요성 대폭 증가
 - － 전문가로서 각국 경찰과의 공조에 유리하고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한 경찰주재관 증원

< 재외국민보호 관련 통계 >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해외 출국자	1,485만명	1,608만명	1,931만명	2,238만명	2,650만명	2,870만명	2,871만명
재외동포(격년조사)	701만명	-	718만명	-	743만명	-	749만명
재외국민 사건사고	9,100명	10,664명	14,076명	14,493명	18,410명	20,100명	22,732명

※ ’20년 통계는 주무부처(해외출국자 법무부, 재외국민 사건사고 외교부) 확정 전

< 해외 파견 경찰관 현황 >

계	경찰주재관	치안전문가	UN	공관경호단	인터폴협력관	코리안데스크
106명	63	14	5	10	7	7

- 인터폴·코리안데스크·UN PKO·치안전문가·공관경호단 등 해외 파견 직위 운영을 통해 재외국민 안전지원시스템 구축
- 파견 분야·인력의 확대와 병행하여 해외파견 경찰관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교육 실시, 국제공조 및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 － (경찰주재관 양성과정) 연간 교육인원 확대 및 내실화 추진
 - * 경찰인재개발원 주관, 내·외부강사를 활용하여 연 2회 교육(각 15명) 실시
 - － (역량 강화) 경찰주재관 직무교육(파견 前) 및 소집교육(파견 中)*을 실시하고, 화상회의(연 2회)를 통해 국제공조 노하우 공유
 - * 경찰청 주관, 관련 과·계장을 강사로 섭외하여 현안 업무 등 교육(20명 내외)
- 변화하는 국내·외 국제정세를 공유하기 위해 주요 정책 및 현안 관련 ‘굿모닝 뉴스’를 제작·발송하는 등 정보 공유 활성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상반기 경찰주재관 직무교육 실시	'21. 1월	
	정기 경찰주재관 화상회의	'21. 1월	
	경찰주재관 증원 추진을 위한 관계 부처 업무 협의	'21. 2월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개선 마련	'21. 2월	
	상반기 쉼 시·도경찰청 국제공조 담당자 교육(화상회의)	'21. 2월	
	제1차 인터폴 리포트 발간	'21. 3월	
	사기범죄 적색수배자 현황 재정비 및 주요국 공조	'21. 3월	
	주요 도피국과 도피사범 관련 1차 화상회의	'21. 3월	
2/4분기	제64차 UN 마약위원회 참석	'21. 4월	
	1분기 인터폴 국제공조팀 추적 점검회의	'21. 4월	
	주요 도피국과 도피사범 관련 2차 화상회의	'21. 4월	
	인터폴 펀딩사업(경제범죄 분야) 1차 합동단속 실적 분석	'21. 5월	
	인터폴 국제공조수사 매뉴얼 개정	'21. 5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경찰청 신속대응팀 인력풀 구축	'21. 5월	
	KICS 내 국외도피사범 공조절차 개선	'21. 6월	
	경찰주재관 인력풀 정비	'21. 6월	
3/4분기	문체부 협업, 인터폴 사무총국과 저작권 분야 펀딩사업 MOU체결	'21. 6월	
	경찰주재관 양성과정 교육	'21. 7월	
	정기 경찰주재관 화상회의	'21. 7월	
	인터폴 국제공조팀 추적 점검회의	'21. 8월	
	하반기 쉼 시·도경찰청 국제공조 담당자 교육(화상회의)	'21. 8월	
	하반기 경찰주재관 직무교육 실시	'21. 9월	
4/4분기	아세안+3국 대상 국외도피사범 송환 활성화 제안	'21. 9월	
	경찰주재관 활동사항 및 장비점검	'21. 10월	
	경찰주재관 양성과정 교육	'21. 10월	
	주재관 성과평가 실시	'21. 11월	
	인터폴 사무총국과 마약 D/B 도입 협의	'21. 11월	
	4분기 인터폴 국제공조팀 추적 점검회의	'21. 12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경찰청 신속대응팀 훈련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내 거부 내·외국인 및 재외국민
- 이해관계집단 : 외교부, 법무부, 문체부, 국토부, 인사혁신처, 국제기구, 외국 정부 등

□ 기대효과

- 인터폴이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각국의 치안D/B를 국내 정책 수립시 적극 활용, 급변하는 국제 치안환경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코로나19 여건을 반영한 고려한 전략적인 송환 전략 수립·시행, 형사처벌 및 관련 수사 재개·피해지원 등 사법정의 구현 노력
- 경찰주재관·국제기구 등 글로벌 치안협력을 담당하는 해외파견자 증원 및 전문교육 강화로 국제 공조 및 재외국민보호 역량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외사경찰활동(Ⅲ-1-일반재정①)				
① 외사경찰활동(3132)		일반회계	208	196
■ 외사경찰활동(311)			208	196
국제교류협력활동 활성화(Ⅰ-1-일반재정②)				
① 국제교류협력활동(3133)		일반회계	39.57	49.86
■ 해외치안협력강화(311)			36.64	40.0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인터폴 조직 및 D/B 활용도 (30%)	신규			106.7	3년간 실적 평균치(97)에서 10% 증가한 목표치(106.7) 설정	하단 참조	인터폴 전용망 문서, 온나라 공문 등
국외도피사범 송환실적(30%)	304	401	271	326	최근 3년 평균치(325.3) 이상 목표치 설정	하단 참조	국외도피사범 송환DB
해외파견자 증원 및 교육업무노하우 공유 등 활동 실적(40%)	49.1	57.5	76.2	95.3	3년간 실적 추세치(24.8%)를 상회하는 적극적 목표치(25% 증가) 설정	하단 참조	온나라 공문 등

【측정 산식】

(1) 인터폴 조직 및 사무총국 및 DB 등 활용 실적

	A등급	B등급	C등급
지표 설정	- 인터폴 프로젝트 펀딩 주관 - 국내외 유관기관 간 MOU 체결 - 인터폴 집행위원 선거활동 - 인터폴 사무총국 DB 확대 - 인터폴 총회 참석 등	- 인터폴 교육프로그램 참여 - 인터폴 회의 참석 - 인터폴 DB 타부처 연계·활용 - 인터폴 동향보고서 발간 등	- 인터폴 국제공조수사(수배·사실확인) 요청·회신 - 인터폴 회의 타부처·유관기능 통보 - 인터폴 DB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 내 연계·활용 - 인터폴 범죄분석 리포트 타부처·유관기능 배포 등
점수	각 3점	각 2점	각 1점

(2) 국외도피사범 송환실적

- ▶ 인터폴 적색수배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자로 간주되므로, 송환 대상자가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경우 가중치 20%를 부여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기준>

장기 2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중

-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 사범
- 조직폭력, 전화금융사기 등 조직범죄 관련 사범
- 다액(5억원 이상) 경제사범
- 사회적 파장 및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사관서에서 특별히 적색수배를 요청한 기타 중요사범

	국외도피사범(인터폴 적색수배자)	국외도피사범(기타 사범)
지표 설정	송환된 피의자 중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된 피의자	송환된 피의자 중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
점수	각 1.2점	각 1점

(3) 해외파견자 증원 및 교육·업무노하우 공유 등 활동 실적

= ① 해외파견 인력 증원 지수(50%) + ② 교육·정보공유 등 활동 지수(50%)

① 해외파견 인력 증원 지수

- ▶ 지표 설정: 경찰주재관, UN, 치안전문가 등 해외파견 경찰관의 인력 증원·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표로서 증원·확대 난이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 ▶ 측정 산식: (경찰주재관 인원 × 1) + (직무파견 인원 × 0.5) + (기타 인원 × 0.3)

② 교육·정보공유 등 활동 지수

- ▶ 지표 설정: 경찰주재관 등 해외파견자 전문화를 위한 노력도 지표로서 활동의 종류에 따른 난이도·중요도를 차등화하여 가중치 부여
- ▶ 측정 산식
 - 교육: (주재관 교육횟수 × 5) + (직무파견 교육횟수 × 3) + (기타 교육횟수 × 1)
 - 정보 공유: (굿모닝 뉴스, 화상회의 등 각종 정보공유 활동 횟수) × 0.5

16 선제적·예방적外事경찰 활동을 통한 사회안전 확보

□ 추진배경

- <체류외국인·불체자 증가> 국내 체류외국인(206만명)이 총 인구의 4%를 차지,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평균 7%)하는 추세

- '20년에는 코로나19로 체류외국인이 일시적 감소했음에도, 불체자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외국인범죄도 전년과 유사하게 높은 수준 유지

< 체류외국인·불체자·외국인피의자 추이('20.12월 기준)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감('19년 대비)
체류외국인	2,180,498명	2,367,607명	2,524,656명	2,036,075명	-19.4%
불법체류자	251,041명	355,126명	390,281명	392,196명	+0.5%
외국인피의자	36,069명	34,832명	39,249명	39,140명	-0.3%

- <다문화사회 갈등요인 표출> 코로나19 이후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차별·혐오가 사회문제로 부각, 우리나라도 잠재적 위험 상존

※ 체류외국인 중 29.2%가 “코로나19 이후 차별·혐오가 심해졌다”고 답변(인권위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2020)

- 특정지역(외국인 밀집지역)에 모여서 생활하는 체류외국인들이 사회적 차별과 범죄피해로 인해 사회불만 세력·범죄화되지 않도록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및 치안문제 해결 필요
 - 또한, 언어·문화적 차이로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이주여성 등 체류외국인이 국내 법 테두리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다문화 치안활동) 필요
- <주한 공관 안전확보 필요성 증대> ‘리퍼트’ 前 미국 대사 피습('15.3월), 미국 대사관저 월담('19.11월) 등 공관 및 외교사절에 대한 위협 시도가 꾸준히 발생, 자칫 외교적 마찰로도 이어질 우려
 - 원활한 사건처리 및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경찰과 주한 외국공관 간 유기적 협력관계 지속 유지가 필요
 - ※ 주요국 대사관(대사)은 공관 경비강화 및 신변보호 등 요청사항에 대한 韓 경찰의 지원에 감사를 표명하면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부탁

- <테러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정부 불신을 틈타 SNS 등을 이용한 테러 선전·선동 확산 추세
 - 테러예방을 위해서는 해외 테러동향 및 테러위험인물* 정보**가 중요, 해외 주요국도 국가 간 테러정보 교류에 주력하는 분위기
 - * FTF(Foreign Terrorist Fighters): '19년말 기준 약 2만6천명 규모로 추산됨
 - ** 국제 테러단체 가입여부, 테러 관련 처벌 전과 및 수사이력 등
 - 해외 대테러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주요 테러정보를 선제적으로 입수하는 한편, 선진 대테러 시스템 벤치마킹 필요
 - 또한, 체한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국내 테러위험인물(테러단체 활동 전력, 극단주의 추종, 자금모금 등)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
 - ※ 외사 경찰관은 외국인 커뮤니티와 상시 교류, 고가치 첩보 입수 가능
- <방첩정보 중요성 증대> 경찰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에 명시된 방첩기관 6개* 중 하나로 방첩정보 수집 등 업무를 수행
 - * 경찰청·국가정보원·법무부·관세청·해양경찰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
 - ※ '20년 방첩포털 개설(11월)·방첩정보공유센터(12월) 개소 등 경찰의 방첩업무 증대
 - 세계 각국은 '자국 이익 우선주의'에 따라 소방위적 정보활동 중이며, 주변 강대국(美·日·中·러)의 對韓 정보활동도 강화* 추세
 - * 주한 외국공관 소속 백색요원뿐만 아니라, 외신기자·주재원 등으로 신분을 숨긴 흑색요원도 활동 중이며 자국민·내국인을 이용해서도 첩보 수집
 - 국가기밀·민감정보 유출 등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큰 위협인 만큼, 선제적으로 '외국 등의 정보활동'을 찾아 견제·차단 필요
 - ※ 외국의 정보요원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로, 이들을 찾거나 역으로 이용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 접촉 빈도가 많은 외사요원의 방첩의식 함양이 중요
- <해외 치안사례 조사수요 증가> 국민들이 세계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기대하는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찰활동이 필요
 - 특히, '비대면(Untact) 사회'·'스마트 치안' 등 변화에 따른 해외 경찰 치안시책 자료 수집 등 국민중심의 선제적 정보활동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선제적 외사정보 활동 추진

- <공공안녕 위협정보 수집> 현안에 대해 주한 외국공관, 외국인 커뮤니티, 해외 주재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보를 수집·분석
 - ※ 국내 치안정책·주요 현안에 대한 홍보 및 제언 청취, 체류외국인 범죄예방과 수사 협조, 정보교류 역할 등을 수행
- － (동향정보) 특정지역에 모여있는 체류외국인들이 사회적 차별과 범죄피해로 사회불만 세력·범죄화되지 않도록 위험요인 선제적 발굴
- － (범죄정보) 외국인 조직범죄·국제사기범죄·도박·마약 등 범죄첩보 수집·분석 및 수사기능 통보, 외국인범죄 사전 차단에 기여
- <외사 안보정보 수집> 안보정보 전담인력 운용을 통해 대테러·방첩 등 안보정보 수집, 유관기관과 공유·협업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기여
 - － (대테러 정보)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외국인 테러 전투원 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입수, 입국 차단 및 강제퇴거 조치
 - － (방첩정보) 외교관·주재원 등의 신분으로 위장한 스파이 활동, 공관원 비위·방첩 첩보를 지속 수집해 국가안전 보호기능 수행
- <공관 협력 강화> 既 구축된 주한 외국공관과 협조체계를 통해
 - △ 외교사절 안전활동 △ 주요인사 방한 △ 법집행기관 간 협력 등 지원
 - ※ 외사협력관 6명, 주한 외국공관(113개)과 타이베이 대표부(1개) 담당
- <해외 치안시책 수집·분석> 외신·경찰주재관 및 일선 외사요원 등을 활용하여 해외 치안시책 등 수집·분석, 유관기능과 공유
 - － (우수 치안시책 소개) 주요국 경찰이 시행 중인 스마트 치안 등 우수시책을 적시에 소개, 국내 치안정책 마련·시행 뒷받침
 - － (경찰 개혁과제 지원) 경찰개혁·정책과제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관련 법제도·정책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자료 제공
 - ※ 경찰개혁·수사구조개혁·자치경찰추진 TF 등 관련기능과 사전 논의, 목표 기한 內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기능 간 협업 강화
 - － (코로나19 방역 지원) 해외 백신 공급·유통·보존·접종 등 단계별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우수 대응사례 도입 제언

- ② 체류외국인의 국내 법질서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문화 치안활동 전개
- <외사안전구역 관리> 외국인 밀집지역 법질서 유지를 위해 외사치안 수요(체류외국인·외국인 피의자수 등)를 고려해 외사안전구역(28개소) 지정·운영
 - － 외사안전협력관이 외국인 관련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외사치안협력위원회 등 민·관 참여기구를 통해 치안문제 논의·해결
 - <범죄예방 교육> △ 결혼이주여성 △ 외국인근로자 등 체류외국인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범죄예방 교육 실시, 안정적 정착 지원
 - － (유관기관 협업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 타부처 교육과정을 활용한 체류외국인 범죄예방 교육 실시
 - － (언택트 활동 정착화) 코로나19 관련, 범죄예방교실을 언택트 방식으로 전환, 분기별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쏠 경찰관서 공유
 - ※ SNS 퀴즈·라디오 방송·화상회의 이용, 비대면 범죄예방 교육 및 외사정책 홍보
 -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다문화가정 등의 범죄피해를 조기에 발견·대응하기 위한 범죄피해 신고상담 창구 지속 확대
 - － 유학생이 많은 대학교 등 도움센터 지정을 지속 확대하고, 일제정비로 연간 활동내역 점검 및 신규 위촉·해촉 등 관리
 - ※ 도움센터(총 37개) : 다문화센터(175), 공공기관(57), 학교(56), NGO(54), 종교단체(12) 등
 -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 확대> '20년 시범운영* 결과 분석·보완,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경찰서에 우선 확대(100여개) 추진
 - * '20.7~12월(6개월) 6개 경찰서 시범운영, 범죄피해 이주여성 16건 보호·지원
 - － 협의체 확대구축 관서를 선정해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현장 간담회 실시 및 우수사례 포상·공유로 협의체 운영 내실화
 - <통역 전문성 강화> 통역수요가 높은 36개 언어에 대한 경찰·민간 통역요원 운용,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시 적절한 통역서비스 제공
 - － 외부 전문기관(한국외대 등)과 MOU를 체결하여 민간 통역요원 선발 및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 개선방안 논의
 - － '20년 수사통역 전문화 교육을 보완하여 심화과정 인원을 확대(전국100→200명)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지침서 개편 추진

③ 대테러·방첩 정보활동 인프라 구축

- <외사 안보정보관 신설> 대테러·방첩 정보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사 안보정보관’을 신설하여 시·도경찰청별로 운용 예정
 - 이를 위해, ① 우수한 현장 인력 ‘선발’ ② 전문가 양성 ‘교육’ ③ 수집 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연중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 주기적으로 SRI를 하달*하고 첩보 수집·분석·조치까지 종합 관리
- * (테러) ① 테러활동 선전·선동 ② 테러단체 가입의사 표시 ③ 테러단체에 자금지원 등 / (방첩) ① 외국 정보요원(연계자 포함) 의심자 ② 전략물자 유출 등
- <대테러 국제협력 확대> 대테러 협력 대상국을 중요성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체계적으로 대테러 국제협력 외연 확대

1단계(완료)	2단계	3단계
미국·러시아·호주 등	UN·EU·터키·동남아	기타 국가

- 미·러 등 1단계 국가와의 협력은 既 활성화(MOU 체결 등)되어 있는 만큼, 2단계로 UN·EU·터키·동남아와 협력 추진

- (UN) 국제 테러정세 모니터링 • (EU) 테러 피해 및 대처 경험 풍부
- (터키) 대테러 요충지 • (동남아) 이슬람 국가 다수 및 한국과 인접

- 해외 테러D/B 조회 권한을 확대하고 국내 D/B 분석기법* 개발

- (美 D/B) FBI 산하 테러리스트감시센터(TSC) D/B 조회 가능
- (러 D/B) 연방보안부(舊 KGB) D/B 조회 가능 ⇨ 현재 ‘일반 정보’ 버전에만 접속 가능, ‘기밀 정보’ 권한 요청 중(‘21년초 상향 예상)

* 단순 검색 기능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테러위험인물 간 연관성 추출’ 기법 등

- <방첩 인프라 구축> 범정부차원의 방첩정보 공유를 위한 「방첩정보 포털」·「방첩정보공유센터」 활용 체제를 마련하고, 업무지침* 개정

- (방첩정보포털) 방첩 첩보를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 (방첩정보공유센터) 국내 6개 방첩기관 파견자들이 합동근무하며 방첩정보 공유 ⇨ 경찰청에서는 경감급 1명 파견

* 환경 변화에 맞춰 「경찰기관의 외사방첩업무 처리지침(‘13.12월)」 개정 예정

- 시·도경찰청 외사 인력 중 방첩전담 인력을 지정, 외국인·외국 기관 교류 협력 시 특이사항 관찰 등 방첩업무 수행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도경찰청별 '외사 안보정보관' 선발 및 교육 계획 수립	'21. 1월	
	전국 시·도경찰청 외사정보 부서 화상회의	'21. 2월	
	국내 대테러 정보 D/B 업데이트	'21. 2월	
	항공보안 및 정보공유에 관한 ARF 워크숍 참석	'21. 2월	
	외사 안전협력관 권역별 순회교육	'21. 3월	
	테러·방첩·공항만 전문화 위탁교육 계획 수립	'21. 3월	
2/4분기	베스트 외사경찰 선발계획 수립	'21. 4월	
	국제공항·항만 보안 활동 현장방문 및 간담회	'21. 4월	
	범죄피해 이주여성 보호지원 협의체 계획 수립, 시행	'21. 5월	
	외사 안보정보관 운용성과 분석 및 현장 컨설팅 진행	'21. 5월	
	인터폴 Project PACIFIC 대테러 실무 화상회의 참석	'21. 6월	
3/4분기	민간인 통역요원 선발계획 수립, 시행	'21. 7월	
	해외 대테러 전문가(언더커버 전문가, 대테러 프로파일러 등)와 실무회의	'21. 8월	
	외국인 도움센터 재정비	'21. 9월	
	테러위험인물 입국차단 현황 및 분석	'21. 9월	
	韓 경찰청 - 우즈베키스탄 내무부 간 대테러 협력 강화	'21. 9월	
	민간 통역요원 전문화교육 실시	'21. 9월	
4/4분기	국내외 테러정보 분석 보고서 작성	'21. 10월	
	외국인 범죄예방 가이드 리플릿 제작	'21. 11월	
	'21년도 외사보안 활동 평가 및 '22년도 중점 업무 방향 설정	'21. 12월	
	「2021 해외 우수 치안시책」 책자 발간 및 전국 경찰에 배포	'21. 12월	
연중	① 국내 체류외국인 소식(수시) ② 주한 외국공관 소식(수시) ③ 해외 치안 시책 관련 「주요 외사정보」 작성·배포(주 1회) ④ 다문화 치안활동(범죄예방 교육, 도움센터 상담 등)(수시) ⑤ 외사보안 업무 관련 SRI 하달(수시) ⑥ 외사 안보정보관 첩보 평가 및 별보 작성(수시) ⑦ 방첩정보공유센터 정보 공유·협력(수시)	수시 및 주1회	
	▲ 국가방첩전략회의 ▲ 방첩유관기관협의체 ▲ 테러정보공유협의회	연내 실시	他기관과 일정 조율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내국인 및 해외 우리국민, 국내 체류외국인(국제결혼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자녀) 등
- 이해관계집단 : 법무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각국 주한공관, 외국인 관련 시민단체, 외국 경찰 등

□ 기대효과

- 국내 중점 추진 치안정책 및 긴급현안 관련 해외사례를 적시에 수집·분석·공유, 국내 현실에 적합한 시책마련에 기여
- 다문화가정 등 체류외국인을 위한 눈높이 치안활동으로 한국 사회 조기정착 지원 및 내·외국인 상생 공동체 구현
- 대테러 전문인력 양성 및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테러 위해요인을 사전에 발견·차단, 사회안전 확보
- 방첩활동을 병행하며 체류외국인 및 주한 외국공관과 밀접하게 교류, 외국인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치안부담을 해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외사경찰활동(Ⅲ-1-일반재정①)				
①	외사경찰활동(3132)	일반회계	208 (208)	196 (196)
	■ 외사경찰활동(311)		208	196
국제교류협력활동 활성화(I-1-일반재정②)				
①	국제교류협력활동(3133)	일반회계	40 (48)	50 (72)
	■ 해외치안협력강화(311)		40	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외사정보 활용도 (40%)	-	1,540	1,719	1,925	외사정보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생산한 정보보고서와 활용된 정보보고서를 기준으로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를 병행, 합산하여 성과지표 반영 2년간 실적치 상승세(11.6% 증가)를 상회하는 적극적 목표치(12% 증가) 설정	- 양적평가(건당 1점) + 질적평가(평가 주체별 1~10점) ※ 상계 기준 하단 참조	① 외사정보 보고서 목록 ② 활용된 사례 목록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30%)	0.32	0.33	0.36	0.39	외사경찰의 대표적 다문화치안 활동에 해당하는 범죄예방교실, 운전면허교실, 도움센터 상담 등을 유형화하고, 각 활동의 난이도별 가중치를 산정, 연간 상승률을 성과 지표로 반영 다문화치안활동 활성화를 위해 3년 평균증가율(6.1%)을 상회하는 적극적인 목표치(8% 증가) 설정 ※ 소집교육과 대외활동 등으로 평가 받는 지표 특수성을 감안,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정부 지침) 조정에 따라, 활동 전면 중단 필요시 해당기간은 실적 산출기간에서 제외	- 월별실적* 합계 / 실적 산출 월수 × 100 * ∑ 활동별 점수 (가중치 × 수혜자 수) / 체류 외국인수 ※ 활동별 가중치는 하단 참조	외사포털시스템을 통해 각 시도경찰청·경찰서 월별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을 취합
대테러·방첩 활동 실적 (30%)	신규			720	대테러·방첩 활동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외사 보안사업 개척점수'와 대테러·방첩·공항만 업무 전문화 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교육점수'를 성과지표로 설정 신규 지표 측정산식으로, '20년 모의성과를 계산하면 약 654점이며, '21년 목표치는 도전적으로 '20년 모의성과 대비 10% 이상 높은 720점으로 설정	하단 참조	외사기획정보과에서 ① 외사 보안사업 목록 ② 교육 계획서 작성

【측정산식】

(1) 외사정보 활용도 : 양적평가(건당 1점) + 질적평가(평가 주체별 1~10점)

- ▶ 양적평가: 외사기획정보과에서 생산한 보고서(외사국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기준) 건당 1점 부여
- ▶ 질적평가: 외사정보 보고서가 활용된 경우, 활용한 주체에 따라 추가로 1~10점* 부여
* BH·경찰청장·타부처 10점 / 국장·시도경찰청장 5점 / 타기능 실무자 1점

(2)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 : 월별실적* 합계 / 실적산출 월수 × 100

* ∑(활동별 가중치 × 수혜자 수) / 체류외국인 수

※ 활동별 가중치

활동	운전면허교육	범죄예방활동	도움센터 상담	자율방범대·치안봉사단
가중치	0.3	0.2	0.2	0.3

(3) 대테러·방첩 활동 실적 : ‘외사 보안사업 개척점수(건당 10~40점)’ + ‘교육 점수(건당 1~3점)’

▶ 외사 보안사업 개척점수: 난이도별 건당 A급 40점, B급 20점, C급 10점 부여

등 급	분류 기준	평균 진행기간
A급	- 국가안보 및 국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사보안사업 - 타 방첩기관 공조 또는 해외연계 활동이 필요한 외사보안사업	1년 6개월
B급	국내 여러 지역에 걸쳐 활동이 이루어지는 외사보안사업	1년
C급	관할 지역에서 주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외사보안사업	6월

▶ 교육점수: 교육 시 건당 ‘해외 연수·국제회의’ 3점, ‘전문 교육’ 2점, ‘현장 교육’ 1점 부여

구 분	세부 유형
해외 연수 · 국제회의	△ 해외 기관(및 국제기구) 방문·초청 연수 △ 국제회의* △ 모의 · 합동 훈련 등
전문교육	△ 전문기관 위탁교육 △ 경찰교육기관 교육과정 △ 각종 세미나 참여 등
현장교육	△ 현장방문 교육 △ 워크숍 △ 자체 직무교육 등

* 단, 국제회의 중 교육목적 없이 교류활동에 집중한 ‘행사성’ 회의는 제외

17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 추진배경

-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로 해외 한국인 보호를 위한 외국경찰기관과의 치안협력 확대 필요성 증대

< 연도별 외국방문 한국인 현황 >

연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인원 (만명)	980	1,280	1,301	1,406	1,515	1,637	1,958	2,265	2,676	2,894	2,890	427
전년 대비	-	30.6%	1.6%	8.1%	7.8%	8.1%	19.6%	15.7%	18.1%	8.1%	-0.1%	-85.2%

※ 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은 '09년 이후 지난 10년간 1,910만 명 증가 (202% ↑)

- 이에 치안총수회담·치안협약체 운영·MOU 체결·초청행사 등 외국 경찰기관과의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노력 필요
- 경찰청은 '15년부터 외국경찰을 대상으로 한국의 치안시스템을 전수하는 치안한류 사업(치안협력사업·전문가파견·초청연수)을 추진
- 치안한류 사업은 한국경찰의 국제위상 제고, 국내 치안장비 수출 지원,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보호 등에 기여

※ 112 신고출동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 랩, DNA 분석 장비, 범죄예방 차량번호 인식 CCTV, 한국형 순찰차·오토바이 등 다양한 경찰장비들이 '치안한류 사업'과 연계해 해외 진출

< 주요 치안한류 사업 추진 현황 >

- ① 경찰전문가 파견: '19년까지 33개국 156회 428명 파견, 5,171명 교육
- ② 초청연수 사업: '19년 80개국 132개 과정 2,448명 대상 교육
- ③ 치안인프라 구축사업: '14년 이후 베트남, 필리핀 등 총 11개국 12개 사업 진행, 총액 556억원 규모
- ④ 비대면 연수 : '20년 최초 도입, 8개국 277명 외국 경찰관 교육

- 치안한류 사업의 가시적 성과로 정부 외교활동에 치안협력강화, 국제범죄대응협력, 경찰기관 간 MOU체결 등 치안의제 다수 포함

< 연도별 정부 치안외교 현황 >

연 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합 계	6	5	4	20	2
정상회담	5	1	3	9	1
총리회담	0	0	0	5	0
정부공동위	1	4	1	6	1

※ '15년 치안한류사업 성공적 추진으로 '19년 큰 폭으로 증가, '20년 코로나 19로 감소하였으나 향후 코로나19 상황 개선 후 증가세 회복 예상

- 정부 외교 정책(신남방·신북방 등)과 정상급 외교활동(한·아세안 정상회의 등)에서 치안협력 사항이 의제로 논의, 후속 사업추진·관리 중
- 국제기구·다자간 치안협의체 등과 신규 치안협력 분야를 확대하고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국제 교류협력 체계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국제교류]

- 경찰청·차장 등 우리청 지휘부가 재외국민 보호 등 협력이 필요한 주요 협력국가 지휘부와 직접 만나 실질적 대책 마련
 - ※ 「2019 서울국제경찰청장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한국경찰이 주도하는 국제 치안총수협의체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치안강국 대한민국'을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홍보 (28개국 103명 참석, 격년 개최)
- '21년에도 △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개최 △ 한일중·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 및 UN 경찰청장회의 참석 등 지휘부 교류 추진

< 최근 경찰청·차장급 회담 현황 >

연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방문	1개국	3개국	7개국	5개국	9개국	4개국	1개국
방한	3개국	20개국	13개국	16개국	30개국	28개국	1개국

- 이미 MOU가 체결된 29개국 경찰청 및 법집행기관 외 남미·동유럽 등 그간 한국 경찰과 교류가 적었던 주요 국가 경찰기관과의 MOU 확대 체결 추진
- 문안확정 국가*, 체결 적극 요청국가** 및 개정체결 국가(러시아·호주·요르단) 등 13개국과 코로나19 개선 후 즉시 대면체결 추진

* (문안확정) 피지·르완다·칠레·말레이·방글라 ** (체결적극요청) 미얀마·아르헨·앙골라·오만·남아공

< 대륙별 MOU 체결 추진 현황 >

구 분	계	아시아	중동	유럽	미주	태평양	아프리카
체결 추진국	24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이란, 바레인, 오만, 튀니지, 이라크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아르헨 티나, 칠레	피지	우간다, 앙골라, 르완다, 세네갈, 남아공, 에티오피아
		7	5	3	2	1	6

- 재외국민보호 등을 위한 전략 초청사업(해외한인·외국경찰 초청사업) 및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는 4개국 치안협의체 활성화 추진
- －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현지에서 한국인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한인, 외국경찰, 중국·베트남 공안을 초청하는 전략초청사업 추진

베트남公安초청 한국어 연수과정	· '21.6~8월 제5회 베트남公安 초청 한국어 연수과정 추진 · '15년 국제경찰청장 협력회의(10.19~22) 및 경찰청장 베트남 방문(11.9) 시 자국경찰관 대상 한국어 교육을 공식 요청
중국公安초청 한국어 연수과정	· '21.8~10월 제4회 중국公安 초청 한국어 연수과정 추진 · '16.2월 경찰청장 중국 방문 시 중국公安부와 '공안초청 한국어 연수과정' 개설에 합의
외국경찰 초청연수	· '21.9월 제13회 외국경찰 초청연수 추진 · '09년부터 15명 내외의 외국경찰(한국인 업무 담당) 초청해 한국문화 및 한국경찰 시스템을 소개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해외한인경찰 초청행사	· '21.7월 제15회 해외한인경찰 초청행사 추진 · '06년부터 해외 한인 경찰관 15명 내외를 초청해 명예경찰 위촉식·국제경찰세미나 등 개최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가 다발하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경찰과 다자·양자 치안협의체를 구축해 치안 협력방안 논의

한중일 경찰협력회의	· '21.12월 제5차 한중일 경찰협력회의 한국 개최 추진 · '15.11월 한중일 정상회담 시, '3국 치안협의체' 구성안이 공동 선언문에 채택, 매년 각국이 돌아가며 개최하기로 합의 · '15.12월 '제1차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중국(청도) 개최
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	· '21.11월 제12차 한-베 경찰협력회의 개최 추진(한국 개최) · '15년 양국은 '09.9월 이래 개최해 온 인터폴 회의(과장급)를 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국장급 이상)로 격상기로 합의 · '16.11월 베트남에서 '제1차 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 개최
한-필리핀 경찰협력회의	· '21.10월 제4차 한-필 경찰협력회의 개최 추진(한국 개최) · '17.2월 경찰청 차장 필리핀 방문 시 양국 정례회의 개최 합의

※ '17.2월 경찰청 차장 태국 경찰청 방문 시 한-태국 치안협의체 구축 합의

-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경찰 대표단을 위해 통역·기관방문 주선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치안협력 네트워크를 강화('19년 41개국 방한)

구분	국제기구	중·남미	북미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	총계
국가	2	3	2	16	5	1	7	5	41
비율	4.9%	7.3%	4.9%	39.0%	12.2%	2.5%	17.0%	12.2%	100%

※ 코로나19 관련 정부 차원에서 상황 안정시까지 국외 출장을 최소화하고, 집단행사 연기 또는 축소를 권고하는 등 해당 기간은 실적 산출기간에서 제외 필요

-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행안부)
-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행안부)
- 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중수본)
- ④ 신종 코로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협조 안내(한국국제협력단, KOICA)
- ⑤ 신종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침 통보(경찰청)

[정부 치안외교 지원]

- 정부의 주요 외교정책에 부합하는 MOU 체결 및 치안한류사업 추진 이후의 사업성과 관리 및 정부 치안외교활동 적극 지원
 - 한·미 정례협의체를 통해 동남아 마약범죄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치안 ODA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기관 간 협력 추진
 - 최근 국제 비전통 안보 분야의 주요 의제인 사이버 안보·초국가 범죄 대응 관련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
- 경찰의 날 주간에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치안 교류 확대 및 협력방안 논의 추진
 - ※ 일시 : '21. 10. 20.(수) ~ 23.(토) / 장소 : 서울 시내 5성급 호텔 中 선정 (미정)
 - '21년 회의는 세계 30여개국 경찰을 초청, 코로나19 상황에서 치안 활동 및 첨단기술 활용한 치안 등 글로벌 치안이슈를 주제로 논의
 - 치안총수급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회의결과 및 후속조치 관리
-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 경찰의 유엔평화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공약을 발굴·추진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개요>

- ▶ 목적: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회원국 지지 확보, 신규 공약 발굴 및 이행 점검
- ▶ 일시·장소: '21. 12. 7.(화)~8.(수)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 등
- ▶ 규모: 평화유지 공여국 외교·국방장관, 국제기구 대표, 학계·언론 등 1,300여명 참가

- 유엔 측 수요를 바탕으로 경찰분야 기여공약을 발굴하고,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추진단 등 관계부처와 세부 사항 협의 진행

<경찰청 유엔 평화활동 참여 확대 내용>

- ▶ 파견인력 증원: UN 임무단에 경찰관 파견 확대, UN 본부에 사이버 전문가 파견
- ▶ 유엔 교육과정 공동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찰관들을 위한 UN 경찰 기본 교육과정을 UN 사무국과 공동 개최
- ▶ 치안 ODA 사업 발굴·추진: UN 평화활동 지역에서 사이버·과수·젠더기반폭력·범죄 정보 관리 분야 경찰역량 개발을 위한 ODA 사업을 발굴, 추진

[치안한류]

- 치안한류 사업분야·방식 다각화 및 요르단 경찰청(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 발굴 등 치안한류 확대·고도화 추진
- (사업분야·방식 다각화) 과수·사이버 등 기존 사업분야 외 교통, 마약수사 등 경찰 전 기능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대면 연수를 적극 활용, 협력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치안한류 확산
- (신규 사업발굴) 요르단 경찰청 '치안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및 아시아·아프리카 국가 대상 신규 치안 협력사업 발굴 추진

< 요르단 사업 개요 >

- ① 기간·금액: '21년~'25년, 총 75억원(625만불)
- ② 내용: GeoPros 기반 빅데이터분석시스템 구축 / 센터건축 / 역량강화교육

- (국제기구 공동사업) 유럽경찰이 강점을 가진 사이버범죄·마약·조직범죄·난민문제 등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및 UNDP 공동 프로젝트 사업 발굴(서울 정책센터*) 등 국제기구 협력사업 추진

· '알렉산드르 주예브' 유엔 차관은 2019 국제 경찰청장 회의에서 한국경찰의 선진 치안시스템 견학이 인상적이었고, 경찰 지휘부간 다양한 치안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지속 추진되길 희망

※ 한-아세안 수사역량강화 사업, 인터폴 글로벌 아카데미의 내실있는 운영 등 추진

* 서울정책센터: 세계 170개국에 사무소 운용, 한국센터는 2011년 개소(고려대)

○ KOTRA와의 MOU 등을 바탕으로 치안한류 세계화를 추진하여
국내 기업 해외 진출 및 수출 활성화에 기여

- ※ '20.9월 경찰청-KOTRA MOU 체결, 전 세계 127개 코트라 무역관을 활용해 치안
장비 수출지원을 추진하고, 경찰청 주관 국제 치안산업박람회 활성화에 기여
- ※ UAE(방검방패·영상분석시스템), 남아공(경찰통신·화상회의), 몽골(대테러 특수장비),
필리핀(빅데이터 활용 치안시스템) 등에서 큰 관심을 보이며 구매를 희망하므로
치안장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 예정

< 치안한류사업 관련 치안장비 수출 사례 >

연번	대상국	유형	수출품목	수출규모	비고
1	UAE(아부다비)	수출	지문분말, 감식용 붓	900만원	완료
2	필리핀	원조	순찰차(130대), 현장감식 키트 (120세트), 경찰오토바이(142대)	45.4억	완료
3	베트남	원조	지문·족흔적 분석시스템, 과학수사· 디지털포렌식 장비, 시뮬레이션 사격장	71.7억	진행
4	과테말라	원조	경찰교육원(건축), 과학수사장비	28억	완료
5	온두라스	원조	범죄예방 CCTV 250대, 관제시설	42억	완료
6	엘살바도르	원조	번호인식CCTV 66대, 관제시설 범죄예방 CCTV 102대, 관제시설	71.9억	진행
7	앙골라	유상 원조	한국형 112신고출동 시스템	500억원	완료
8	인도네시아	원조	디지털포렌식, 과학수사장비	9.3억	진행
9	요르단	원조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9.5억	진행
합 계				777.89억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치안한류 세계화 추진방안 수립	'21. 1월	
	'22년 ODA사업 신규발굴을 위한 설명회 개최	'21. 2월	
	'21년 치안한류사업 종합 추진계획 수립	'21. 3월	
2/4분기	공동석사학위과정 수료 및 과정종료	'21. 4월	
	UNDP젠더기반폭력 경찰대응 교육자료 공동제작	'21. 5월	
	베트남 ODA 사업, 착수조사(비대면) 및 RD 체결	'21. 6월	
	중미3국 치안협력사업 과학수사 분야 온라인 연수 시행	'21. 5~6월	
3/4분기	엘살바도르 범죄예방 및 여성범죄수사 분야 온라인 연수 수행	'21. 7월	
	인도네시아 ODA 사업, 비대면 연수	'21. 7월	
	필리핀 ODA 사업, 비대면 연수	'21. 7월	
	PKO정책협의회 참여	'21. 9월	
4/4분기	제3회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 개최	'21. 10월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 교육과정 운영	'21. 11월	
	제6회 한-베트남 경찰협력회의 개최	'21. 12월	
	요르단 ODA 사업 관련 경찰청-KOICA 계약 체결	'21. 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재외국민, 해외 방문 한국 관광객
- 이해관계집단 : 재외공관, 외국경찰기관, 법무부, 외교부 등

□ 기대효과

- 각국의 치안정책 결정권을 가진 고위급 경찰과의 적극적 치안 외교 활동을 통해 폭넓고 실질적인 재외국민보호 정책 마련
-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재외국민 및 한국 관광객 범죄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재외국민 치안불안 해소, 해외 치안안전망 확보
- 재외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고위급 치안협의체를 운영, 재외국민보호·정보교류 등 다각적 치안협력 시스템 구축
- 외국 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국제성 범죄 공동 대응 기반 확대 및 재외국민 보호역량 강화
- 유엔·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치안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 치안 협력 네트워크 다변화 및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주요 치안 협력국가 및 개도국에 한국형 치안시스템을 전수, 치안협력 인프라 구축 및 한국 경찰의 국제적 위상 제고
- 외국 경찰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치안 협력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다양한 인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9	'20	'21
국제교류협력활동 활성화(I-1-일반재정②)				
① 국제교류협력활동(3133)	일반회계	44.43 (44.43)	47.88 (47.88)	71.80 (71.80)
■ 해외치안협력강화(311)		38.02	39.57	49.86
■ 국제치안활동강화(312)		6.41	8.31	21.9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국제교류지수 (40%)	23.95	29.6	5.8	19.78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치안인프라 전수지수 (40%)	34	42	14	30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홍보지수 (20%)	신규	5.3	7.0	7.7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①국제교류협력 지수】

<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

- 국제교류협력은 외국경찰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상호교류MOU 체결 등 다양한 치안협력을 통해 외국 방문 한국 관광객 또는 재외국민 등 한국인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의 초석 역할 수행
- 정부는 신남·북방정책, 재외국민보호 정책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21년은 상반기 코로나 19 등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해 국제 교류협력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고, 국내는 자치경찰제 시행 등 권력기관 개혁이 집중 추진,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치안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치안한류 확산, 방한 외국경찰 대표단 증가 등으로 '19년 국제교류는 전년 대비 16.3%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년에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으로 국제교류가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문제 발생 ⇒ 비대면 방식으로 적극적인 국제교류 및 정부외교 지원 추진
 -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행안부)
 -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행안부)
 - 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중수본)
 - ④ 신종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침 통보(경찰청)

구분	18년	19년	20년
치안협력 MOU 협조·체결	14	27	8
청·차장급 교류	54	49	1
국·과장급 이하 교류	91	104	28

- 여러 국내외 상황과 최근 국제교류 추세를 감안해 '21년 목표치는 3년 실적 평균치 이상인 19.78로 도전적 목표치 설정

< 측정산식 >

①국제교류{(MOU협조·체결)×0.3 + 청·차장급 교류×0.2 + 국·과장급 이하 교류×0.1} + ②정부치안외교지원{정부부처·국제기구협력×0.25 + 국내외 의제발굴·사업지원×0.15}

<국제교류지수 세부 점수표>

구분	①국제교류			②정부치안 외교지원	
	MOU	교류			
내용	MOU 협조·체결	청·차장급 교류	국·과장급 이하 교류	정부부처 ·국제기구 협력	국내외 의제발굴 ·사업지원
가중치	0.3	0.2	0.1	0.25	0.15

- 국제교류협력을 위한 △치안협력 MOU 협조·체결(신규·개정), △청·차장급 교류, △국·과장급 이하 교류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원 등에 차이가 있어 각 하위 지표별 가중치 부여 필요

구분	투입 인력·시간
① 치안협력 MOU 협조·체결(0.3)	투입시간 : 6개월~1년 소요 / 투입인원 : 계 전체
② 청·차장급 교류(0.2)	투입시간 : 3~4개월 소요 / 투입인원 : 계 전체
③ 국·과장급 이하 교류(0.1)	투입시간 : 1~2개월 소요 / 투입인원 : 1~3명

< 자료수집 방법 > : 국제교류협력 관련 온나라 및 수결 공문, 정책보고서, 공식메일 등 증빙자료

【②치안인프라 전수 지수】

< '21 목표치 산출근거 >

- 치안한류는 외국경찰에게 한국경찰의 치안기법 및 시스템을 전수하여,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재외국민 범죄예방 및 신속한 사건사고 처리 등 현지 외국 경찰과의 실질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외적으로 '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한국의 치안기법 및 치안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치안전문가 파견을 요청하거나 방한을 희망하는 국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치안전문가 파견 국가	5	18	21	14	16	비대면연수
국내 초청연수 인원	159	197	272	423	351	-

-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비대면 연수를 새로운 협력방안으로 도입, 8개국 277명 대상 온라인콘텐츠 및 실시간 강의를 실시해 치안한류사업의 성장세를 유지
- '21년은 '20년에 처음 도입한 비대면 연수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코로나19 개선이 기대되는 하반기에 대면 연수를 재개, 안정적인 치안한류사업의 성장을 예상
- 또한, 경찰대학·중앙경찰학교 등 부속기관의 사업 참여 및 교통, 마약수사 등 사업분야의 다각화를 통한 치안한류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21년 목표치는 3년 실적 평균치 이상인 30으로 도전적 목표치 설정**

※ 코로나19 관련 정부 차원에서 상황 안정시까지 국외 출장을 최소화하고, 집단행사 연기 또는 축소를 권고하는 등 해당 기간은 실적 산출기간에서 제외 필요

-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행안부)
-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행안부)
- ③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여행 최소화 권고 안내(중수부)
- ④ 신종 코로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 협조 안내(한국국제협력단, KOICA)
- ⑤ 신종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업무 지침 통보(경찰청)

< 측정산식 >

$$\sum (① 치안인프라 전수 사업별 파견·교육기간* \times ② 교육인원**)$$

- 치안한류사업의 하위 지표인 치안전문가 파견은 치안한류사업의 목적과 추구하는 가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분야로서 △파견 교육기간 △파견 교육인원에 따라 투입되는 시간과 인원 등에 차이가 있어 각각 가중치 부여 필요

구분		투입 인력·시간
파견기간	15일 미만	투입시간 : 15일 미만 / 투입인원 : 담당1 / 파견단
	3개월 미만	투입시간 : 15~1개월 / 투입인원 : 담당2 / 파견단
	3개월 이상	투입시간 : 1개월~2개월 / 투입인원 : 담당2 / 파견단
교육인원	25명 미만	투입시간 : 1개월 미만 / 투입인원 : 담당1 / 파견단
	50명 미만	투입시간 : 1개월~2개월 / 투입인원 : 담당2 / 파견단
	50명 이상	투입시간 : 2개월 이상 / 투입인원 : 담당2 / 파견단

<*파견 기간별 가중치 배점>

파견기간	15일 미만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점수	1	2	5

<**교육 인원별 가중치 배점>

교육인원	25명 미만	50명 미만	50명 이상
점수	1	2	5

※ 교육인원 모집은 경찰주재관·공관을 통한 파견 대상국 치안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고 상대국의 여건에 따라 변수가 많아 다수 인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육인원 규모에 따라 가중치 차등 배정

< 자료수집 방법 > : 치안인프라 전수 파견 관련 온나라 및 수결 공문, 정책보고서 등 증빙자료

【③홍보 지수】

<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

-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MOU 체결, 치안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치안외교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외국 경찰기관과의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재외국민보호 및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 이런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사업성과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를 어떻게 홍보하는지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지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활동 필요

< 최근 3년간 홍보 현황 >

구분	'18년	'19년	'20년
국외 홍보	-	5	4
국내 홍보	12	6	10
내부 홍보	3	5	8

< 측정 산식 >

① 국외 홍보건수 * 0.4 + ② 국내 홍보건수 * 0.3 + ③ 내부 홍보건수 * 0.3

< 최근 3년간 홍보지수 추세치 >

구분	'18년	'19년	'20년
홍보지수	4.5	5.3	7.0

- '21년 홍보지수 목표치는 전년도 홍보지수(측정산식에 반영해 결과 산출) 7.0 대비 10% 증가한 7.7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 자료수집 방법 > : 언론(미디어) 보도 및 책자 발간 등 자료

기 본 방 향

- ◇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 책임수사’로 전환하고 수사의 전문성과 품질을 향상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경찰상 구현
 - 시·도경찰청 중심 책임수사체제 및 엄격한 내·외부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사시스템 전반의 혁신으로 객관성·공정성 제고
 -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도입·수사경찰 교육 개편 등 수사전문가를 양성하고 과학수사 증거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수사품질 상향 균질화
- ◇ 경찰활동 전반에 걸쳐 인권·준법의식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 이룩
 - 대화와 소통, 법과 원칙에 입각한 집회시위 관리 등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을 체질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
 - 고질적인 부패·비리 근절부터 생활 주변의 불법·무질서 척결까지 각종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준법문화를 정착하고 사회질서 확립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2	4	4	20	59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 공정한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기관 신뢰도 / 국가인권위 권고수용률
성과목표 1.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부패인식지수
	☞ 반부패·공공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인원 / 공직선거 5대 선거범죄 검거율 / 국민권익위 이첩 사건 신속처리율
	☞ 마약류·조직폭력·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마약류 사범 검거성과 / 조폭 검거성과 / 국제범죄사범 검거성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㉔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 검거율 /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 합계
	㉕ 기초치안 확보 및 유흥시설 등 합동단속으로 생활질서 확립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지수
성과목표 2.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인권침해 권고율
	㉔ 인권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스템 구현	인권영향평가 반영률 / 한국형 동료개입 프로그램 전문강사 활용률
	㉕ 인권 보호와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준법관리 역량강화 / 행정지도 건수 / 대화경찰 역량 강화 / 대화경찰 운영실적
	㉖ 평화적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 및 상황분야 정보관 역량 강화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법과 원칙에 따른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률 / 현장 대응역량 강화율
	㉗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관련 제도 개선	인권보호 제도 개선 / 인권·윤리의식 제고 위한 교육·홍보활동
	㉘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집회시위 현장 대응 시민 만족도 /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 기준 확립 / 경찰관기동대 창설 달성도
성과목표 3.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수사·형사 분야 치안고객만족도
	㉔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기반 마련	예산·인프라 확보 노력도 / 책임수사 과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KICS) 반영도 / 전문 수사인력 확보 / 전문 수사인력 양성
	㉕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수사권개혁 관련, 연계법령 정비 노력 / 제·개정 법령 및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 제고 / 수사제도 개선·수사권개혁 지속 추진
	㉖ 국민중심 책임수사 완성을 위한 심사체계 구축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위한 심사체계 구축 노력도 /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등 업무기반 마련 /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제 구축 이행도 / 수사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㉗ 미래환경을 대비한 경찰책임수사 지원 강화	범죄분석 지원지수 / 법과학 분석률 /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 /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㉘ 디지털증거분석 역량 강화로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 확보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 디지털포렌식 도구·시스템 개발 및 활용도 /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 연구 실적
	㉙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견인하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	대국민 교류 지수 / 현장지원 지수 / 과학수사 활동 지수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안전체감도
	㉓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2021년 대테러·작전 인프라 구축 달성도 / 대테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 대테러 교육 성취도 /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㉔ 안보수사 역량·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및 예방적 안보상황 관리	안보수사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 안보취약요소 개선 활동
	㉕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중요 안보사범 검거 지수 / 첨단안보 대응활동 지수 / 디지털포렌식 활성화 지수
	㉖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 보호를 위한 안보정보 분석 능력 강화	안보수사정보 활용도 / 안보정세분석 전문성 강화
	㉗ 경호역량 강화를 통해 빈틈없는 경호업무 수행	경호경찰 전문화 교육 및 설문조사 / 경호 경찰 인프라 구축 / 경호업무 관계기관 협업

(1) 주요 내용

- **<부패·부조리 엄단>** △ 고질적 부패행위 △ 사기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 △ 마약·조직폭력 등 사회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 근절에 수사력 집중
 - － 생활질서 위반사범(성매매·불법게임장 등)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사회를 교란하는 일상 속 무질서에도 엄정 대응
 - **<민주·인권경찰 구현>** 경찰권 남용·절차 미준수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전제시스템 설계로 인권존중을 조직문화로 정착
 - － 수사단계별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한국형 대화경찰제’ 운영 내실화로 평화적인 준법 시위문화 정착
 - ※ (수사상 인권보장) 변호인 조력권 보장·영상녹화·진술녹음·심야조사 제한 등 (집회시위 인권보장) 인권영향평가 도입·대화경찰 전문성 강화 등
 - **<수사 전문성·공정성 제고>** 「국민중심 책임수사」 패러다임 아래, 수사관 자격관리 및 엄격한 내·외부 심사체계를 통해 수사품질 향상
 - － DNA·지문·심리 등 감식역량을 제고하고 공인인정(KOLAS·ISO 등) 분야를 확대하여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수사증거 신뢰성 제고
 - **<안보·테러 대응역량 강화>**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대테러 인프라를 확충하고 안보·테러 정보활동으로 빈틈없는 안보태세 강화
 - － 대테러 △ 전담조직(특공대·대테러기동대·테러대응센터 등) △ 최신장비(전파차단기·드론탐지기 등) △ 정보활동(국제협력·D/B 고도화) 활성화
- ⇒ **수사 품질 및 안보 역량을 높이고 조직 전반에 인권중심 행정을 실현하여 공정사회 구현 및 경찰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제고**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공정한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기관 신뢰도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20				
기관 신뢰도	2.2	2.3	2.3	2.2	2.4	2.5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2.2 ~ 2.3점을 반복하고 있는데, 해당 조사는 4점 만점으로서 0.1점 차이도 의미가 있음 ※ 경찰 최고치 : 2.4점('13년'20년) '25년 목표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5점으로 설정하여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지속 제고	'기관별 신뢰 정도 - 경찰'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96	96	94	100	100*	95	매년 20~30건의 권고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며, 이는 '15년 이전 수용률(85%)보다 크게 상향된 수치임. 다만, 징계·형사고발 권고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대한 권고를 수용하되 최대 1건 정도의 여지를 둘 수 있는 95%를 '25년 목표치로 산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경찰 수용건수 ÷ 전체 권고건수 × 100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건수 통계

* '검토 중' 건수 제외(인권위 '20년 최종통계는 '21. 6~7월 산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가수사본부 출범 및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21. 1. 1.) 이후 경찰수사의 책임성·완결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경찰권 확대에 따라 권한 남용 등 인권침해 우려도 상존

< 경찰수사 관련 환경변화 >

-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종결에 대한 책무 부여,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수사완결성 확보 필요성 증대
- ▶ (법원·인권위 등) 직권남용·인권침해 등 현저한 수사권 남용·일탈뿐 아니라 적법절차 준수여부도 엄격히 심사하여 유·무죄 판단 및 권고 등 판단

- △ 3중 심사체계* 활성화 △ 사건기록 관리체계 구축** △ 사건배당 시스템 개선 △ 피해자 중심 수사체계 구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수사심사관(경찰서) → 책임수사지도관(시·도경찰청) → 경찰수사 시민위원회』로, 수사부서와 독립된 위치에서 ‘제3자의 관점’으로 심사역량 발휘

** 기존 내사·미제사건 외 △ 불송치 △ 수사중지 기록을 보관, 기존 대비 업무량 800% 증가 예상 → ‘사건기록 보관실’ 설치 및 인력증원 추진

- 재·보궐선거(4.7) 및 '22년 대선을 앞두고 諸단체들의 이익 실현 욕구가 분출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 선제적 정보활동으로 단체간 마찰 등 상황을 방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여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4) 참고자료

- 경찰청 보도자료, ‘국민과의 약속’(’21. 1. 4. 경찰청 홈페이지)
- 한국행정연구원, 「2020년 사회통합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www.humanrights.go.kr)

(1) 주요 내용

- **<부패·불공정행위 근절>** 고질적 부패행위, 생활적폐* 등 불공정 행위 연중 상시단속 전개, 시기별로 주요사범 특별단속 추진
 - * 토착, 채용, 학사·유치원비리, 공공갑질, 재개발, 사무장병원, 보조금, 안전비리
 - － △2021년 재·보선 △제20대 대선 △제8회 지방선거 등 연이은 공직선거 선거범죄 엄정 단속, 정치적 중립 철저히 준수로 공명선거 구현
 - ※ (선거사범 단속체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운영(1단계 / D-121) → 선거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단속체제 구축(2단계 / D-62) → 쏙 기능 총력 대응(3단계 / D-20)
- **<마약·조직폭력·외국인범죄 근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및 피해자 보호 활동 강화로 체감치안 제고
- **<경제범죄 검거·수사역량 강화>**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사범 중심으로 종합 근절대책 수립 등 수사역량 집중
 - * △전화금융사기 △취업·전세 사기 △보험사기 등에 대해 특별단속 추진
 - － 확대된 범죄수익추적 인프라(전담팀 78명→149명)를 활용, △필수대상 사건 제도 도입 △매뉴얼 발간 △현장교육 등 피해회복 활성화
- **<생활질서 확립>** 풍속사범 단속에 이어 △범죄 수익금 전액 환수 △과세자료 통보 △알선자·장소제공자 등 철저한 수사로 재영업 차단
 - －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지자체와 유흥시설* 등 대상으로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 시간 위반 등 방역지침 위반 합동단속 강화
 -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부패인식지수(CPI)
관리과제	반부패·공공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인원 / 공직선거 5대 선거범죄 검거율 / 국민권익위 이첩 사건 신속처리율
	마약류, 조직폭력, 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마약류 사범 검거성과 / 조폭 검거성과 / 국제범죄사범 검거성과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 검거율 /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 합계
	기초치안 확보로 생활 속 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유흥시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합동단속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지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부패인식지수 (CPI*)	57	59	61	63	부패인식지수는 '18년 이후 지속 올라 '20년은 180개국 중 33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전 3년도 실적 평균값(59)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63)을 고려, '21년 목표치는 역대 최고 치인 63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부패 관련 인식조사 결과와 전문가 평가 결과를 집계	국제투명성기구 (Transparency International) 주관 발표 ※ e-나라지표

*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180개국 대상 국제평가지수(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대폭 변화(△경찰 수사주체성 확립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 △공수처 신설 등)함에 따라 국가
반부패 대응 시스템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
- －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경찰 반부패 대응 체계화,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추진

- 과거 오프라인에서 실행·매개되던 범죄들이 비대면·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온라인 상으로 이동되면서 단속 여건 악화
 - － 인터넷(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과 성매매 중개가 증가하고, 조폭범죄 또한 사이버도박·보이스피싱과 같은 비대면 양상으로 변화
 - ※ (인터넷 마약사범) '18년 1,516명 → '19년 2,109명 → '20년 2,608명
 - (다크웹·가상통화 이용) '18년 85명 → '19년 82명 → '20년 748명
 - － 접근경로 변화에 맞추어 첩보수집을 강화하고, △온라인 성매매 상시단속 △성매매광고 차단시스템(ACS*) 운영 등 근원적 차단 노력
 - * Auto Call System : 성매매전단지나 사이트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자동발송 시스템에 등록, 3초마다 자동 발송시켜 성구매자와 통화를 봉쇄하는 시스템
 - －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행위(그루밍) 등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 및 조기 검거를 위해 잠입수사(위장수사) 활용
 - ※ 청소년성보호법상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21. 3월)
- 반부패 유관부처(권익위·검찰·공수처 등) 간 경합으로 불협화음 발생 우려
 - － 기관 간 소통창구를 구성, 현안과제 관련 적극적 협업하고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
 - ※ 중앙선관위(선거사범), 기재부·국토부(부동산 불법행위), 보건복지부(불법 의료의약 사범) 등 소관업무 유관부처와 적극적인 협업 필요

(4) 참고자료

- 경찰 범죄통계(<http://www.police.go.kr>)
- 공수처법 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및 수사권 조정 관계 법령
- 공직선거법 해설서(2020년 발간), 반부패 대응 관련 언론보도 등

18 반부패·공공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 추진배경

-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국민의 생활기반을 위협하고 공정한 기회·경쟁을 침해하는 고질적 부패행위 지속
 - － 민관유착·인사채용비리 등 사회불신을 조장하는 불법과 국민에게 상실감·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관행·부조리 근절 시급
- 수사권 조정을 통해 달라진 경찰의 위상에 걸맞게, 중요 지능범죄인 반부패·공공 분야 수사역량·책임성 강화 필요
 - － 권익위, 검찰, 공수처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상호견제로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 집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부패·불공정행위 근절> 민관유착 등 고질적 부패뿐만 아니라,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8대 생활적폐* 등 불공정행위까지 연중 상시단속 전개, 시기별 특별단속 추진
 - * 토착, 채용, 학사·유치원비리, 공공감질, 재개발, 사무장병원, 보조금, 안전비리
- <공명선거 구현> 2021년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제20대 대선('22. 3월), 제8회 지선('22. 6월) 관련 선거범죄 엄정 단속, 정치적 중립 철저히 준수해 공정성 확보
 - ※ (선거사범 단속체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운영(1단계 / D-121) → 선거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단속체제 구축(2단계 / D-62) → 쏠 기능 총력 대응(3단계 / D-20)
- <특별법 분야 단속> 국정과제와 연계, 주요 특별법 분야 단속 추진
 - － 부동산 투기, 코로나19 방역, 백신 관련 불법행위 등 지속 단속

- <수사 전문성 강화> 수사권 조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반부패·공공범죄 분야 수사매뉴얼·영상교육자료 제작·배포
 - － 부동산, 의료의약 분야 등 특별법 분야 전문수사관 육성
- <유관기관 협업> 국가 형사 체계의 변화에 따라 검찰·공수처, 권익위 등 반부패 분야 유관부처와의 협업·업무조정
 - － 중앙선관위(선거사범), 기재부·국토부(부동산 불법행위), 보건복지부(불법 의료의약 사범) 등 현안 과제 관련 협업 강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전 국민, 경찰관

□ 기대효과

- 부동산 투기 등 사회 전반에 잔존한 부패·불공정행위 단속으로 중추적 사정기관 역할 수행,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
- 2021년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를 비롯, 제20대 대통령 선거('22. 3월), 제8회 지방선거('22. 6월) 관련 선거범죄 엄정 대응으로, 깨끗한 선거 분위기 조성·공명선거 구현
-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와 수사권 조정에 따라 높아진 경찰 위상에 걸맞게 반부패·공공범죄 분야 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고 유관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강화,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상 구현
- 코로나19 신속대응팀 운영 등 방역 지원활동 및 방역 방해행위·백신 관련 불법행위 엄정 단속 등을 통해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믿음직한 경찰상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없음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범 단속 1단계 단속체제 가동	'21.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불법행위 단속 계획 수립·하달	'21. 2월	
	「동물대상범죄 벌칙 해설」 제작·발간	'21. 3월	
	「202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범 단속 2·3단계 단속체제 가동	'21. 3월	
	부동산 투기사범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단속(상반기 기획수사)	'21. 3월	
	경찰청-유관부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 간담회 개최	'21. 3월	
2/4분기	경찰청-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21. 4월	
	「반부패수사 종합계획」 수립 및 하달	'21. 3월	
	사이버교육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제작·게시	'21. 5월	
	사이버교육 「동물대상범죄 수사」 제작·게시	'21. 5월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21. 6월	
3/4분기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사건 관리 계획 수립·하달	'21. 7월	
	부정부패 사범 수사매뉴얼 제작·배포	'21. 8월	
	2021년 하반기 반부패 분야 기획수사 계획 수립·추진	'21. 8월	
	부동산 투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사범 단속 평가 및 포상	'21. 9월	
	「202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범 단속 평가 및 포상	'21. 9월	
	불법 의료기관 개설 관련 「건강보험공단 교육」 개최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 예정)	'21. 9월	
4/4분기	경찰청-한국석유관리원 합동 경찰공무원 워크숍 개최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 예정)	'21. 11월	
	문화재청 주관 「문화재 전담수사관 연수과정」 운영	'21. 11월	
	수사 분야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실시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 예정)	'21. 12월	
	「제20대 대통령선거」 1단계 단속체제 가동	'21. 12월	
	해외 도난문화재 관련 국제회의 참석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실시 여부를 결정 예정)	'21. 12월	
	연말 지능범죄 수사 분야 포상 실시	'21. 12월	
	각 테마별 단속 결과 등 현황 분석 및 개선점 검토	'21. 12월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인원 (50%)	643	494	659	660	지난해에는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전년도 대비 약 33.4%의 실적 증가를 달성하였음 올해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하는 공수처 설치, 검찰의 수사분야 집중화(부패범죄 포함)로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부정부패 분야 대표 지표임을 고려 3년 평균실적(598명)을 상회하는 660명 검거라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21. 1월~12월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인원	경찰청 관리 통계 (시·도경찰청 보고 및 시스템 관리)
공직선거 5대 선거범죄 검거율 (30%)	58.2	27.3	33.7	39.8	공명선거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금품선거, 거짓말선거, 선거 폭력, 단체동원, 공무원등선거관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명선거, 선거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매년 실시되는 선거 규모가 상이한 점을 고려, 지표 산식을 '전체 공직 선거사범 검거인원 대비 5대 선거사범 검거인원'으로 설정, 전체 선거사범 중 5대 선거사범의 비율을 평가 기준으로 산정 특히, 재보궐 선거는 관심도가 낮아 5대 범죄 검거율이 다른 주요 공직 선거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9년 재보궐실적과(27.3) 3년간 평균실적(39.7)을 상회하는 39.8%라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공직선거 5대 선거사범 기소송치인원 / 공직선거 전체 기소송치인원	경찰청 관리 통계 (시·도경찰청 보고 및 시스템 관리)
국민권익위 이첩 사건 신속처리율 (20%)	47.2	45.1	56.3	58.0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내 반부패 청렴 업무 총괄 부처이자, 연간 800여건의 부패·공익신고·청탁금지법 분야 사건 등을 경찰에 이첩·송부하고 있음 부패방지권익위법 上 권익위 이첩 사건을 이첩받은 기관은 2달 이내 조사결과를 통보해야 함에도(필요시 연장 가능), 불필요하게 수사가 길어 지거나,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음 권익위 이첩 송부사건은 향후 증기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권익위 이첩·송부 사건 관리 강화를 위해 3년간 평균 사건처리결과 보고율(49.5)을 상회하는 58.0%라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21. 1월~10월 권익위 이첩 접수 사건 '20. 12월 까지 종결률	경찰청 관리 통계 (시·도경찰청 보고 및 시스템 관리)

19 마약류, 조직폭력, 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 추진배경

- 최근 생활 속으로 마약류가 확산되면서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 유발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강력대응을 통해 불법 마약류 유통을 근절시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
- 치안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최근 흉포화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 및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로 체감치안 제고 필요성 대두

- 체류외국인 및 불법체류자 증가에 따른 국제범죄사범 집중단속 활동
 - 코로나19로 체류 외국인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15년 이후 200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는 지속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 또한 적극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불법체류자 인원) '18년 355,473명 → '19년 390,281명 → '20년 392,196명

** (외국인 피의자현황) '18년 34,832명 → '19년 39,249명 → '20년 39,140명

- 외국인 조직간의 세력다툼 및 타 국적 외국인간의 상호 집단 폭행 범행이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 △'20. 6월 외국인 집단 세력다툼	(검거 63·구속 23) / 경남·김해
△'21. 2월 외국인 집단폭행	(검거 10·구속 9) / 경기南·국수대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출입국사범(불법입출국, 브로커) 검거 인원 또한 증가추세로 국제범죄 적극 단속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근절]

-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생활 속으로 확산되며 사회문제화로 대두
 - 시기별·테마별 단속과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통해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등 강력한 대응 실시

- 최근 접근이 쉽고 비대면 및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 증가 추세

<최근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 검거	8,853	8,887	8,107	10,411	12,209
인터넷 마약류사범	1,120 (12.7%)	1,100 (12.4%)	1,516 (18.7%)	2,109 (20.3%)	2,608 (21.4%)
다크웹·가상통화	80	141	85	82	748

- '20. 8월 서울·경기남부·경남청 중심으로 '다크웹 전문수사팀' 운영으로 성과 거양, 권역별 전문수사팀 확대하여 강력 단속
- 금년 상반기(3월 ~ 5월)에 「생활 속 확산되는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추진하여 마약류 관련 범죄 분위기 사전 차단
- 마약 수사체제 고도화, 국내·외 공조 강화 등 수사역량 제고
 - (수사체제) 마약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크웹 전문수사팀 확대,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 신설,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전담팀 확대 추진
 - (국내·외 공조) 美DEA 공동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 개최, 관세청·식약처·국정원 협업 등 마약류 밀반입·유통 근절을 위한 공조수사 강화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폭력 척결]

- 서민생활 주변에서 각종 치안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 지속 단속, 범죄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여 주민생활 안전 확보
 - ※ 조폭은 존재만으로도 국민 불안을 초래하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신고유도를 통한 단속 및 재범 차단
- 조직폭력배 개별범죄는 물론 사이버도박 등 자금원 차단 및 몰수까지 광범위한 단속으로 조직폭력배 활동 근거지 와해 추진
 - ※ 직접수사부서 책임수사체에 따라 시·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중심의 조직폭력배 단속으로 전문성 및 집중도 제고
- 단속과 더불어 조직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폭력조직원의 활동성·범죄 위험성을 분석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제점검 병행

－ 보복 및 재범여부 등 사후 모니터링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

- '20년 검거한 조직폭력배 전원의 사회복귀여부 및 재범 모니터링
- '21년 관리대상 조직폭력배 선정, 첩보 수집 강화 및 상반기 집중단속 추진
- 폭력조직의 자금원 차단을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범죄수익 몰수

- 전략적 홍보 및 다양한 신고채널·신변보호 제도(국민제보앱·신고명함, 가명조서, 면책제도 등)를 활용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국제범죄사범 집중단속으로 체감치안 제고 및 법질서 확립]

- 외국인 집단폭력·조직성 범죄에 대해 상반기 집중단속(3~6월), 불법 입출국·국제범죄 사범에 대해 하반기 특별단속활동 실시

※ 국정원·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국제범죄 첩보 적극 수집

－ 외사기능과 협업하여, 지역사회 내 국제범죄 관련 여론을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인 단속방안을 수립*

* 외사국 주관 외사치안협력회의 논의과제와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렴한 의제·건의사항을 토대로 단속방침 마련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생활 속 확산되는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21. 3월~5월	마약범죄
	집단폭력 등 '외국인 조직성 범죄' 집중단속	'21. 3월~6월	조직범죄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21. 3월~6월	조직범죄
2/4분기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집중단속	'21. 4월~7월	마약범죄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성과 분석	'21. 6월	마약범죄
	집단폭력 등 '외국인 조직성 범죄' 집중단속 성과분석	'21. 7월	조직범죄
	조직폭력배 특별단속 성과분석	'21. 7월	조직범죄
	국제범죄수사대 현장 컨설팅	상반기	조직범죄
3/4분기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집중단속 성과 분석	'21. 8월	마약범죄
	하반기 마약류사범 집중단속	'21. 8월~10월	마약범죄
	하반기 조직폭력배 일제점검 실시	'21. 8월~9월	조직범죄
	불법 입출국 및 국제조직범죄 특별단속	'21. 8월~9월	조직범죄
4/4분기	조직폭력배 일제점검 결과 및 조폭 동향 분석	'21. 10월	조직범죄
	국제범죄 특별단속 결과 및 외국인 범죄 동향 분석	'21. 10월	조직범죄
	하반기 마약류사범 집중단속 성과 분석	'21. 11월	마약범죄
	마약류, 조직폭력, 국제범죄수사 등 주요 단속분야 성과 평가·포상	'21. 11월~12월	마약조직범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 기대효과

-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조직폭력·외국인 집단폭력·마약류 범죄 강력단속을 통해 체감안전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마약류 사범 검거성과 (40%)	6,416 명	8,418 명	10,047 명	8,377 명	최근 3년 평균치(8,294명) + 1% (83명)를 초과하는 8,377명으로 산정 ⇒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초과하는 적극성 '상'에 해당 ※ '18년까지 마약류 검거인원 감소 추세였으나, '19년 강남클럽 사건, '20년 VIP특별지시 단속에 따른 검거인원 급증한 점을 감안하고, '21년부터 3급지 경찰서는 성과 지표에서 제외함에 따라 현 목표치는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임	범죄통계시스템 검거인원	범죄통계시스템
조폭 검거성과 (30%)	2,694 명	3,037 명	2,817 명	2,878 명	최근 3년 평균치(2,849명) + 1%를 초과하는 2,878명으로 산정 ⇒ 상승하던 검거 인원이 지난해 감소한 상황으로 위 목표치는 평균치를 초과하는 '상'에 해당 ※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감소, 조직폭력배의 소규모·지능화 경향 등 단속여건이 악화된 점을 감안 할 때, 매우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임	조직폭력배 검거인원	검거인원 수기 통계(월보) 취합 ※ 특진, 특별승급 등 포상을 위해 실적을 검증하므로 통계의 진정성이 담보됨
국제범죄 사범 검거성과 (30%)	1,700 명	1,744 명	1,659 명	1,718 명	최근 3년 평균치(1,701명) + 1%를 초과하는 1,718명으로 산정 ⇒ 최근 3년간 평균치를 초과하는 적극성 '상'에 해당 ※ 국수본 체제 개편으로 산업기술 수사와 인터폴 국제공조 인력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인력을 제외한 국제범죄수사 인력의 1인당 검거 인원을 산출하여 목표치 환산, 3년 평균을 상회하는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국제범죄수사계(팀) 검거인원 ※사도경찰청 중심 전문수사체제 운영에 따라 국제범죄수사계 평가	범죄통계시스템 및 검거인원 수기 통계(월보) 취합 ※ 특진, 특별승급 등 포상을 위해 실적을 검증하므로 통계의 진정성이 담보됨

□ 추진배경

- ‘국가수사본부 출범 원년(21년)’을 맞아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여 든든한 이웃경찰상 구현
 - －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침체된 경제 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에 침투한 사기범죄는 국민에게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 야기
 - － 디지털 기술로 고도화된 각종 사기범죄의 위협은 '21년에도 경제적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회복이 어렵고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악질적 범죄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
 - － '08년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최초 등장한 이래 범죄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년 피해액은 7,000억원에 육박
 - － 사회환경 변화, 기술 발전에 따라 신종 범죄수법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범행 특성상 향후에도 범죄피해는 지속 증가 전망
- 최근 경제범죄의 증가로 인해 피해자 보호 및 피해회복의 중요성이 대두, 범죄수익의 신속한 보전을 위한 피해구제 필요
 - － 이를 위해, 불법적인 재산 증식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 운영> 국가수사본부 內 범수사부서 및 홍보·외사 담당 유관부서를 포함시킨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 구축, 종합적 대응 추진(월 2회 회의)

* △ 전화금융사기 △ 취업·전세사기 △ 보험사기 등 범죄

-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 설치> 전화금융사기·메신저피싱 수사지휘 및 범죄분석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경찰청 內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가칭)’ 운영(총 5명)
- <국제공조수사 활성화> 국외에서 범행·도피 중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및 송환 요청’ 등 적극 추진
- <유관기관 협업> 기획수사와 병행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전략적 홍보 실시
 - * 특히 피해가 심각한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연중 2회 홍보 영상 송출
- <전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활성화> 범죄수익 추적 필수대상 사건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시·도경찰청 전담팀 활성화
- <수사역량 강화> 수사현장에서 즉시 활용가능한 매뉴얼 제작·배포 및 수사기법 공유를 위한 수사관 워크숍 추진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全 국민

□ 기대효과

- 증가하는 사기범죄 근절에 경찰의 全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구축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상대 전화금융사기·불법사금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획수사 추진, 민생침해 범죄근절로 서민경제 보호
-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병행으로 범죄이익 조기 박탈 및 실질적인 처벌효과 제고하여 회복적 정의 실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1년 서민 생활 침해범죄 근절 계획 수립·하달	'21. 1월	
	'21년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 계획 수립·하달	'21. 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운영계획 수립·하달	'21. 1월	
	「국민중심 책임수사 구현」을 위한 전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하달	'21. 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현판식 및 개소식 개최	'21. 3월	
	전국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대상 워크숍 개최	'21. 2~3월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종합대책」수립·하달	'21. 2~3월	
	'21년 상반기 사기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21. 3~6월	
2/4분기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 영상 송출	'21. 4~5월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순회 강연	'21. 4~6월	
	전화번호 이용중지 강조지시	'21. 4~6월	
	'20년 범죄수익추적 우수사례집 발간	'21. 5~6월	
3/4분기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실시	'21. 7~8월	
	'21년 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 계획 수립·하달	'21. 7~10월	
	'21년 하반기 사기 수배자 집중검거 기간 운영	'21. 7~10월	
4/4분기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 영상 송출	'21. 10~11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 현황 분석 및 점검	'21. 10~11월	
	「자금추적수사의 디딤돌 매뉴얼」 발간	'21. 10~11월	
	각 테마별 단속 결과 등 현황 분석 및 개선점 검토	'21. 10~11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범죄수사(I-2-재정②)				
① 범죄수사(1231)		일반회계	1,571	1,705
			1,571	1,705
■ 범죄수사역량강화(311)			603	583
■ 현장수사활동(312)			936	1,089
■ 형사사법업무전산화(511)			27	2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30%)	9.2	12.4	10.2	10.7	하단 참조	'21년 주요 기획수사 검거인원 ÷ 전국 수사관 인원	경찰청 관리 통계 (사·도경찰청 보고 및 시스템 관리)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 검거율 (35%)	25.4	23.1	27.4	25.4		'21년 범죄 조직원 검거인원 ÷ 발생건수 × 100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 합계 (단위 : 억 원) (35%)	212.2	702.1	813.4	1,005		'21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 합계	

< '20년 목표치 산출근거 >

○ '21년 성과지표 설정 배경

- '21년 경제범죄수사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사기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대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범죄수익추적으로 회복적 경찰 활동을 장려하고, 일선 수사관들의 범죄수익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총 3개 지표를 설정·관리
- 가중치 부여 : '21년 추진 업무에 따른 각 지표의 중요성, 대표성 등을 감안, 가중치 부여
⇒ '경제범죄 검거 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과제 총 성과 달성도(%)

$$=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달성도(%) \times 0.30)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검거율' 달성도(%) \times 0.35) +$$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 합계' 달성도(%) \times 0.35)$$

○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지표 산출 근거(경찰청 업무계획 II-목표②-1-① 지표화)

- '21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제범죄(전화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기획수사 추진 실적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최근 3년간 연도별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기획수사에 대한 실적을 측정산식에 따라 산출
- 본 지표 선정방법을 따를 때 '18년~'19년간 서민 3불 사기범죄 근절대책 실시 등으로 검거인원은 대폭 증가추세('18년 9.2명 ⇨ '19년 12.4명)에서 '19년~'20년간 감소추세('19년 12.4명 ⇨ '20년 10.2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범죄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여 '21년 성과지표로 선정, 최근 3년 중 평균치 실적(10.6명)을 상회하는 '**10.7명**'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 검거율' 지표 산출 근거(경찰청 업무계획 II-목표②-1-② 지표화)

- 전화금융사기는 다각적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피해금(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등 합산)은 지속 증가('18년 4,040억원 → '20년 7,000억원)
- 다수 점조직이 역할별로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전체규모를 밝혀내기 위한 광역단위의 종합적 수사가 요구되며,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검거활동이 필요
- 특히, 총책·텔레마케터·송금액 등 범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는 조직원 검거율 제고가 실질적인 전화금융사기 검거활동의 전제임
- 아울러 전화금융사기는 피해회복이 어려운 범죄로,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 활동도 중요하고 피해 예방 활동의 성과는 발생건수 감소로 이어지므로, 검거 활동과 피해예방 활동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조직원 검거인원 × 100)을 지표로 선정
- 본 지표 산출방법에 따를 때, '18년~'19년간 실적 감소추세('18년 25.4% ⇨ '19년 23.1%)에서 '20년 서민생활 침해범죄 특별단속 등으로 증가추세('19년 23.1% ⇨ '20년 27.4%)에 있으나, 전화금융사기는 서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큰 서민경제 침해범죄의 대표적 유형이고,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인 점 등을 고려, '21년에도 성과지표로 선정, 최근 3년 중 평균치 실적(25.3%)을 상회하는 '**25.4%**'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 합계' 지표 산출 근거(경찰청 업무계획 II-목표②-1-④ 지표화)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에 근거,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이익 박탈 및 재범방지에 기여하고 있음
- 경찰청은 '19년 1월부터 각 시·도경찰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현장수사부서에 회계장부분석·계좌추적 등 사건분석 지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 지원을 통해 범죄수익 보전에 힘쓰고 있음
- 경제·금융·부패 속성상 범인검거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 보전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현장지원을 통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전문 수사기법을 개발·전파하고 범죄수익 보전 신청에 도움을 주는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의 활동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 합계'를 지표로 선정, 3년간 추세치 실적(1,004억원)을 상회하는 '**1,005억원**' 달성이라는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

기초치안 확보로 생활 속 질서 확립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유흥시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합동단속

□ 추진배경

-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와 함께 유흥시설* 등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코로나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합동단속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국민의 건강권 확보
 -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양적 단속에서 벗어나 추적수사를 통한 성매매 알선자건물주 입건, 범죄수익금 환수(기소 전 몰수보전, 추진보전, 과세자료 통보) 등 근원적 차단 활동으로 불법 영업 의지를 차단하여 생활 속 질서 유지
- 그간 단속 활동만으로는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성매매 수요차단’ 등 성매매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
 - 성매매 광고행위(성매매전단지 배포, 알선사이트 광고) 차단 등 성매매 예방 활동 중점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지자체와 유흥시설 등 합동단속 지속 추진]

- 지자체와 함께 유흥시설 등 대상으로 적극적 합동단속 실시
 - △ 위반업소 재영업 △ 점검을 피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 △ 영업 제한시간 초과 영업 △ 점검을 피해 주간 시간대 영업 △ 다른 장소를 빌려 영업 등 점검 사각지대 발생치 않도록 면밀히 점검
 -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변칙적으로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 영업 집중 단속
 - 계속된 합동점검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나, 범정부 차원 재난 대응을 위한 추진 동력으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확보
 - ※ 코로나19 관련 유흥시설 등 단속 유공자 대상 특별승진(3명)·특별승급(15명) 인사과 협의 완료, 포상휴가(200명) 경무과 협의 완료 등 추진동력 확보

- 시기별, 지역별, 업종별로 수시로 변경되는 거리두기 단계 및 행정명령에 대한 신속한 전달로 합동단속의 실효성 제고

[풍속업소 재영업 의지 차단 등 근원적 불법영업 근절 추진]

- <풍속수사팀 확대운영> 실업주 추적수사, 건물주 입건, 범죄수익금 환수 등 재영업 차단과 사후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 확대

- ▶ 풍속수사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15개청 166명 운영 중, 단계적 확대추진
- ▶ 단속·수사체계를 일원화한 풍속수사팀 확대 운영으로 단속·수사 부서에서의 반복 조사 등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침해 방지 추진

- 풍속수사팀 사이버수사 및 범죄수익금 추적수사 기법 등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강화

※ 풍속단속·수사 역량강화 교육과정 등 확대(경찰인재개발원, 연 12회 180명)

- <근원적 차단> 단속 후 추적수사를 통한 △범죄 수익금 전액 환수 △과세자료 국세청에 통보 △알선자·장소제공자 수사 강화

- ▶ (범죄수익금 환수) 범죄 수익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등 범죄수익 전액 추적·환수
- ▶ (재영업 행위 차단) 단속 후 성매매 알선자·실업주·장소 제공자 등 철저한 추적 수사로 전원 입건, 재영업 행위 차단

[성매매 예방 활동 및 단속 강화로 근원적 차단 추진]

- <성매매광고 차단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강화> 성매매알선자와 구매자 간 통화를 차단하고 신속한 이용정지로 성매매예방

- * ACS(Auto Call System) : 성매매전단지나 알선사이트 광고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를 자동발송 시스템에 등록, 동 번호로 3초마다 계속 전화하여 성구매자의 통화를 차단하는 시스템
- ▶ 성매매 광고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 게시물 삭제 및 차단(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

- <단속 강화> 온라인 이용 성매매 등 접근경로 변화에 맞춰 온라인 성매매 연중 상시 단속, 성매매집결지 폐쇄 등 지속 추진
- 관계기능·부처(여가부, 지자체 등) 합동단속으로 실효성 제고

< 중점 추진 사항 >

온라인 성매매	① 성매매알선사이트 연계 오피스텔·성매매업소 단속, 채팅앱 성매매 단속
	② 성매매알선사이트 운영진 추적수사 및 사이트 폐쇄
	③ 성매매광고차단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성매매알선 광고 차단
오프라인 성매매	① 지역협의체(여가부·지자체·교육부 등) 합동 성매매집결지 등 점검·단속
	② 코로나19 유흥시설 합동점검 시 성매매·무허가 영업 등 단속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 개선 추진]

- <신·변종업소 대응> 리얼돌 체험방, 키스방 등 신·변종업소에 대해 관계기관(법무부·여가부·산업부·식약처 등)과 협력,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 국조실(사회복지정책관) 주관,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20.11.18, '21.1.27.) 등 협력하여 처벌 근거 마련 중

- <매뉴얼 작성·배포> 근원적 차단활동(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건물주 입건, 과세자료 통보 등), 불법 풍속업소 및 신·변종업소 단속 매뉴얼(최근 사례 및 법률 개정내용 포함) 작성·배포

[유관기관 합동, 연중 다양한 테마별 집중단속 추진]

- 온라인 성매매알선 사이트(오피스텔 업소) 및 신·변종 성매매업소 집중 단속기간 운영, 사이트 단속 후 방심위에 폐쇄요청
- 유관부처(교육지원청·지자체)합동, 매학기 개학 전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유해업소(키스방, 성인용품점 등) 지도·단속기간 운영
- 출입국관리소 합동, 외국인 여성 고용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 성인 PC방 불법영업(환전, 개·변조 등) 집중단속
- 게임물관리위원회 합동, 불법게임장 집중단속 실시

[풍속업무 지도단속 유착 근절 강화]

- 시·도경찰청 풍속수사팀 중심 단속으로 관할 경찰관서 유착 미리 차단
- 풍속담당자 ‘적격심사위원회*’ 운영, 자격 여부 엄격 심사**(연중)
 - * 위원장 : 경찰서장, 위원: 청문·생안·여청·수사·정보과장 등
 - ** 인사발령 직후 경찰청·시도경찰청 주관 운영실태 점검
- 적격자 선발을 위한 동료 평가 및 관서장 추천 등 검증 절차 강화, 부적절 사유(금전·성비위 등 징계 이력) 등 확인
- 시·도경찰청 주관 ‘특별관리업소*’ 관리 및 유흥업소 신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로 단속 봐주기 등 유착 미리 사전 차단(연중)
 - * 특별관리업소 지정 후 시·도경찰청에서 단속 또는 他 경찰서와 교차 단속 실시
-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전국 풍속담당자 청렴교육 강화*
 - * 코로나19 상황 등 감안 경찰사이버교육포털 내 청렴교육 이수 및 시·도경찰청별 청렴교육 별도 시행(年 1회 이상)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코로나19 관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유흥시설 단속	'21.1.4.~1.17.	지자체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 집중단속 ·인사발령 직후 풍속담당자 적격성 심사 이행실태 점검	'21.1.25.~2.14.	지자체
	·신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20.12월 기준 1,177개소 추정) ·풍속 담당 역량강화 교육과정에 근원적 차단활동 교육	'21.3.2.~3.26.	행정안전부 교육부
2/4분기	·온라인 등 성매매사범 집중단속 ·풍속 담당 역량강화 교육과정에 근원적 차단활동 교육	'21. 4~5월	여가부
	·불법게임장 집중단속 ·근원적 차단활동, 신변종업소 단속기법 등 지침 작성 일선배포	'21. 6월	문체부 계관위
3/4분기	·신변종 성매매업소 집중단속 ·인사발령 직후 풍속담당자 적격성 심사 이행실태 점검	'21. 7월	여가부
	개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단속	'21. 8~9월	행정안전부 교육부
4/4분기	불법게임장 집중단속	'21. 10~11월	문체부 계관위
	외국인고용 성매매업소 단속	'21. 12월	법무부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 풍속영업자, 과기부·여가부·교육부·문화부·법무부 (출입국사무소)·식약처·지자체·세무서·소방 등 관련부처,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사,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시민단체 등

□ 기대효과

- 단속 위주에서 성매매 광고 차단 등 성매매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하여 성매매 근절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성매매 알선자, 실업주 추적수사, 범죄수익금 환수, 성매매업소 건물주 입건 등 근원적 성매매 차단 활동으로 사회 질서 유지
- 코로나19 확산방지, 국민의 불안감 해소 및 건강권 보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311)				
①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311)		일반회계	6.0	5.8
■ 풍속업소 단속장비 구매			2.2	2.2
■ 민관합동단속경비			1.8	1.5
■ 풍속담당요원 특근매식비			0.8	0.9
■ 성매매수요차단시스템 통신료 등			1.1	1.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지수	27.0	29.5	27.5	28.8	최근 3년 평균 실적(28점)의 3% 상향 점수(28.84)를 목표로 설정(소 수점 둘째자리에서 내림)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점수 ÷ 생활질서기능 인원수	KICS 통계(단속건수) 및 월간보고(인력)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구분	관련법률	단속 배점	근원적 차단활동(가점)																						
성매매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13, §14, §15)	건당 3점	① 구속(인원 당 20점) ② 성매매·게임장 건물주 입건(인원 당 5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만 인정) ③ 압수(성매매·게임장, 게임기·현금 각각 적용) <table><tr><td>게임기</td><td>5~20↓</td><td>20대↑</td><td>50대↑</td><td>100대↑</td></tr><tr><td>현금</td><td>×</td><td>2~5백↓</td><td>5백만↑</td><td>천만원↑</td></tr><tr><td>점수</td><td>2</td><td>5</td><td>7</td><td>10</td></tr></table>	게임기	5~20↓	20대↑	50대↑	100대↑	현금	×	2~5백↓	5백만↑	천만원↑	점수	2	5	7	10							
	게임기	5~20↓		20대↑	50대↑	100대↑																			
현금	×	2~5백↓		5백만↑	천만원↑																				
점수	2	5		7	10																				
- 성매매처벌법 - 교육환경보호법	건당 1점																								
불법 게임장	- 사행행위규제법 - 게임산업법	검거 건당 0.5점																							
코로나 19관련	- 감염병예방법 - 식품위생법	건당 3점																							
기타	성매매, 유해업소 건물주통지문 발송	정상배달 시 0.2점	④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결정금액 기준) <table><tr><td>신청후 기각</td><td>1천만원 미만</td><td>1~5천만원 미만</td><td>5천만원 이상</td></tr><tr><td>3점</td><td>7점</td><td>10점</td><td>15점</td></tr></table> ⑤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 <table><tr><td>1점</td><td>- 명의위장업소(풍속시스템) - 5,000만 원 이상 통보(온나라공문)</td></tr><tr><td>5점</td><td>- 100억원 이상 통보</td></tr></table> ⑥ 검거인원(동일 사건, 질서기능 송치 인원내 한함) <table><tr><td>인원</td><td>10명↑</td><td>20명↑</td><td>50명↑</td><td>100명↑</td></tr><tr><td>점수</td><td>3</td><td>10</td><td>15</td><td>20</td></tr></table>	신청후 기각	1천만원 미만	1~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3점	7점	10점	15점	1점	- 명의위장업소(풍속시스템) - 5,000만 원 이상 통보(온나라공문)	5점	- 100억원 이상 통보	인원	10명↑	20명↑	50명↑	100명↑	점수	3	10	15	20
	신청후 기각	1천만원 미만		1~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3점	7점		10점	15점																				
	1점	- 명의위장업소(풍속시스템) - 5,000만 원 이상 통보(온나라공문)																							
	5점	- 100억원 이상 통보																							
	인원	10명↑		20명↑	50명↑	100명↑																			
	점수	3		10	15	20																			
	감염병예방법 위반 지자체 공문 통보	건당 0.5점																							
- 풍속영업규제법 - 음악산업법	검거 건당 0.5점																								
- 성매매광고 입력(경찰서)	건당 0.05점 (상한 5점)																								
- 번호 이용정지(사·도경찰청)	건당 0.1점 (상한 50점)																								
- 성매매처벌법·아청법 동일 건 앞치만 5명 이상 기소 - 성매매처벌법 §20 (사이트운영자 3명 이상 검거) - 성매매처벌법 §22 (범죄단체)	검거 건당 20점																								
- 대형업소 단속 (성매매 100평↑, 게임장 200대↑)																									

(1) 주요 내용

- **<인권 중심의 경찰활동 구현>** 경찰활동 전반에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인권규범을 제도화하고, 실효적 내부통제·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 인권영향평가* 운영 활성화로 인권 중심의 경찰정책을 견인하고, 현장 중심의 중·장기 인권교육 설계로 ‘국민체감 경찰개혁’ 원년 뒷받침
- * 경찰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이나 주요 정책·계획 추진 시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국민 인권보호와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
-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정보경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현장에 연착륙하도록 정보활동 현장점검·교육 등 준법역량 강화 추진
 - － 한국형 대화경찰제 내실화를 통해 집회의 자유와 인권·안전·소통이 선순환하는 집회문화를 조성, 국민 체감도 제고
-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법과 원칙에 따라 준법 집회시위를 적극 보장하고, 사전 정보활동 역량 강화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
 - － △ 합동 정보분석회의 △ 현장 法집행 지원 △ 상황분야 정보관 교육 등을 통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안전을 사전 확보
- **<수사상 인권보호 강화>** 수사권 개혁 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법령 등을 정비·보완하여 인권친화적 경찰상 확립
 - － 인권보장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 현장경찰관 대상 △상담·조사절차 마련 △사례추적 △매뉴얼·교육자료 제공 등 교육·홍보활동 강화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집회시위 참가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법집행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를 쏙 경비경찰이 부단히 내재화·체득화하여 집회현장 법질서를 확립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인권침해 권고율
관리과제	인권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스템 구현	인권영향평가 반영률 / 한국형 동료개입 프로그램 전문강사 활용률
	'인권 보호'와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준법관리 역량강화 / 행정지도건수 / 대화경찰 역량강화 / 대화경찰 운영실적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평화적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 및 상황분야 정보관 역량 강화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법과 원칙에 따른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률 / 현장 대응역량 강화율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관련 제도 개선	인권보호 제도 개선 / 인권·윤리의식 제고 위한 교육·홍보활동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집회시위 현장 대응 시민 만족도 /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 기준 확립 / 경찰관기동대 창설 달성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인권침해 권고율	9.7	9.9	9.0	8.7	인권침해 권고율은 하향을 유도해야 하는 지표로, 전 3년도 실적 평균 값(9.5)과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8.8)을 감안하여 평균값 및 예측치보다 낮은 8.7을 목표치로 설정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 경찰 권고건수÷전체 권고건수)×100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건수 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경찰이 1차적 수사권자로 설정되는 등 전반적 개혁 이후 수사윤리
준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권한 확대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도 제기

- 현장에서 명확하게 적용가능한 수사윤리 준수기준을 제공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수사윤리위반 전수조사 및 영향평가 검토**

* △정책집 발간(수사윤리 위반사례와 관련 규정) △수사윤리 특화 교육자료 제작 △통합포털 카드뉴스 게시

** 경찰청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 시 기존 경찰청 행정규칙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외부용역)하여 개선 권고한 바 있음('19.9.)

- 경찰의 권한 남용과 절차 미준수 등에 대하여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통제·감시시스템 등 인권 중심 경찰 활동 필요

△인권영향평가 외부자문 인력풀 구성, 시민청원 인권영향평가 등 외부 시각 적극 반영
△인권영향평가제 법률적 토대 마련 및 지침·매뉴얼 제작 △평가절차 구체화·세분화 등

- 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되고 집합 인원 등 정부 방역수칙이 완화될 경우, 지난해 주춤했던 각종 집회·시위가 대폭 증가 예상

< 최근 5년간 집회시위 관련 현황 >

구 분	집회 개최(건수)			금지 통고(건수)		
	소계	신고	미신고	집회신고	금지통고	비율
'16년	45,836	45,755	81	83,427	96	0.12
'17년	43,161	43,017	144	68,913	74	0.10
'18년	68,315	68,262	53	81,358	12	0.01
'19년	95,266	95,255	11	129,637	9	0.01
'20년	77,453	77,426	27	138,636	4,380	3.16

- 의경 감축·폐지로 부족한 경비인력을 보완할 방안을 강구하고,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의 감염병예방 등 안전보호 조치도 중요

※ △트레일러형 안전펜스·다목적 방송조명차 등 안전 차단장비 확충
△경찰부대원용 방역키트 제작·보급

(4)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www.humanrights.go.kr)

□ 추진배경

- 경찰 조직 체계의 변혁에 따라 권한 남용과 절차 미준수 등에 대한 실효적 모니터링과 견제시스템 설계 필요
- 치안행정 전반에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인권규범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찰조직을 재설계하고 이를 제도화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업무 특성상 인권침해 위험성이 높은 경찰도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 제3기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맞추기 위해 3년 계획(2021~2023)으로 수립하고, 그 후는 NAP 반영을 위해 시행 1년 후에 맞춰 5년 계획으로 수립

- 경찰의 활동을 인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해 기능별로 세부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 관리

○ 인권영향평가제 운영 활성화 계획 추진

- 평가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으로 경찰활동 전반에 대한 인권침해를 내부통제·감시하는 경찰의 대표적 인권정책으로 승화 추진

△제도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민간 자문 확대, 시민청원 인권영향평가 등 외부 시각 적극 반영 △인권영향평가제 지침·매뉴얼 제작 △평가절차 구체화 세분화 등

- 새롭게 변화된 경찰 조직에 맞춰 평가 대상 및 기관을 확대하고, 시민의 요구와 시각에 맞는 실효성 있는 평가로 경찰 인권 수준 견인

○ 경찰청 인권위원회 역할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사안을 전담하는 시민에 의한 경찰 통제·감시기구로 역할 강화
- 인권영향평가의 자문을 통한 인권가치 반영,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제언, 인권침해 조사 참여 및 개선책 제시 등의 실질적 역할 수행
-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와 협의체 구축, 정기적 연석회의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운영 내실화로 일관된 경찰의 인권기구로 자리 매김
- 경찰청 인권위원회 활동사항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경찰의 인권 중심 개혁 추진사항을 널리 홍보

○ 경찰 동료개입 프로그램 개발·도입

- 경찰관의 인권침해 등 불법·부당행위에 동료 경찰관이 능동적으로 개입하여 제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도입

- ▶ 경찰은 직무상 다양한 갈등과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개개인이 모든 순간 최선의 선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이에 대해 사후적으로 현장판단의 적정성과 과오를 따지는 현 시스템은 미봉책에 불과
- ▶ 각종 갈등과 위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관리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통제는 같은 시점, 같은 현장에서 같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동료 경찰관의 개입이라 할 수 있음
- ▶ 동료 경찰관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을 부여하여 경찰관 개인의 위법 행동을 예방하고, 인권·윤리적 직무수행을 이끄는 인권·윤리적 기반 경찰활동의 조직 문화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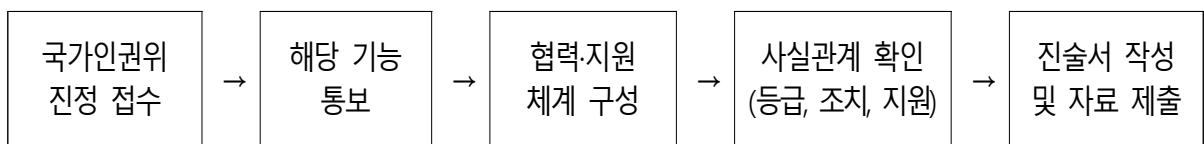
- 경찰의 계급조직 특유의 위계질서에 따른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개입의 심리적 저항을 완화하고, 정당한 개입을 장려하는 조직의 변화를 이끌어 낼 문화 혁신 프로그램으로 추진

○ 경찰 인권교육 강화

- 경찰 인권교육을 중장기(5개년, '18~'22년) 계획으로 고도화 추진
 - ※ 경찰 '인권역량 증진'을 비전으로 인권교육의 내용·운영·확산이 유기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기본계획(NAP, 5개년)과 상호연동하여 발전 방안 구축
- 그간의 인권교육 운영을 분석, 현장 중심의 인권교육 중장기 고도화 계획 설계·추진으로 '국민체감 경찰개혁' 원년 운영 뒷받침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협력·지원시스템 구축

- 국가인권위의 진정 접수 시 초기부터 조직 차원의 인권적 사안 검토 및 법률 지원, 현장경찰관의 당당한 직무집행을 지원



- 수요자인 현장 경찰관이 조직 차원의 보호체계로 인식하고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체계성·전문성을 갖춘 제도로 육성

○ 시민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시행

- (인권영화제) 시민·경찰을 대상으로 인권을 주제로 영화 소재를 공모하여 당선작을 영화로 제작, 인권을 매개로 시민·경찰이 교감하는 소통의 場 마련
- (인권아카데미) 인권 관련 다양한 주제와 콘텐츠를 연결, 시민과 경찰이 함께 인권을 배우고 토론하는 '인권아카데미' 운영(분기 1회)
 - ※ '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식지 등 활용하여 비대면 아카데미로 진행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찰청 인권영향평가 운영 활성화 계획 시행	'21. 3월	
	경찰 인권교육 기본 계획 수립 시행	'21. 3월	
	인권아카데미(1차)	'21. 3월	
2/4분기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협력·지원 시스템 운영 현장 점검 및 컨설팅	'21. 4월	
	동료·개입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21. 5월	
	인권아카데미(2차)	'21. 6월	
3/4분기	경찰동료개입 프로그램 시범 운영(중앙경찰학교, 인재개발원, 일부 경찰관서)	'21. 9월	
	인권아카데미(3차)	'21. 9월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협의체 구성	'21. 9월	
4/4분기	인권아카데미(4차)	'21. 11월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행	'21. 12월	
	인권경찰 비전 선포 행사 개최	'21. 12월	
	제10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인권 관련 시민단체, 경찰

□ 기대효과

- 새로운 경찰 조직 체제에서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조직적·제도적 정비로 인권보장 강화
- 인권영향평가 운영 활성화로 인권 중심의 경찰행정을 견인하고, 경찰의 주체적 인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통제제도로 활용
- 경찰동료개입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찰 불법·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인권·윤리적 직무수행을 이끄는 인권기반 경찰활동 실현
- 현장 중심의 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설계·추진으로 인권교육의 체계적·효과적 실천 기틀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20	'21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프로그램목표 IV-4, 일반재정)				
① 감사·인권보호활동(7133) ■ 인권·피해자보호활동(312)	일반회계		40.52	42.88
			23.69	26.4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인권영향평가 반영률 (50%)	신규			60%	인권영향평가를 통한 실질적 인권 중심의 경찰 행정 건인을 위해 기존 인권영향평가 실시율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소관 기능의 반영률을 지표로 선정 권고·의견표명 및 제언에 대한 해당 기능의 반영률을 제고하여 제도 운영 취지에 맞게 인권 중심의 경찰행정으로의 실질적 개선 효과 제고 인권영향평가 반영률은 '18년도 31%, '19년도 42%, '20년도 50%로 점차 상향되고 있어, '21년도 목표치는 권고·의견표명 및 제언 건수의 60% 반영을 목표로 설정	인권영향평가 의뢰부서 반영 건수 ÷ 권고·의견표명 및 제언 건수 × 100(%)	인권영향평가제 시행 관련, 의뢰 건수 등 통계자료 활용
한국형 동료개입 프로그램 전문강사 활용률 (50%)	신규			80%	불법·부당한 경찰관 행사를 억제 하는 실효적 제도로 개발된 경찰 동료개입 프로그램이 현장과 연계된 교육과정 개발·도입을 통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전문강사의 배출 및 현장 활용을 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현장 경찰관의 인권적 직무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이행력 고취 한국형 동료개입 프로그램 전문 강사 활용률은 개발된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 가장 중요한 강사 양성을 통해 배출된 전문강사 중 80% 현장 투입을 목표로 설정	현장 투입 강사 수 ÷ 한국형 동료개입 프로그램 전문 양성 강사 수 × 100(%)	한국형 동료개입프로그램 개발의 단계적 이행 관련 자료 활용

23 인권 보호와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 추진배경

- 국정운영 방향 및 국정과제·경찰청 주요업무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 ‘인권 보호’와 ‘준법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정보업무 체계 개선

- ▶ **【국정과제 13번】**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 ▶ **【실천과제】** 경찰개혁(민주·민생·인권 강화)
- ▶ **【주요업무계획】** △정보경찰 개혁 △체계적·입체적 준법지원으로 준법 정보활동 현장 정착 △한국형 대화경찰제 운영 내실화·활성화

-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보경찰 개혁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함께 경찰 핵심 개혁과제로 부각
- － 이에, 경찰개혁위 권고안 발표(’18.4월) 후 부단히 노력 중인 정보경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준법 정보활동 모니터링·교육 등 ‘준법역량 강화’ 추진

• 자치경찰제를 비롯하여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경찰 개혁, 국정원 대공 수사권 이관 등 경찰개혁의 오랜 여정도 마침내 뜻깊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중략) 정보활동에 대한 일말의 우려 또한 깨끗이 지워나가야 합니다. 정보경찰이 공공위험에 대한 사전 경보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쇄신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_ (’21. 1. 1. 경찰청장 신년사)

- 정보업무 전반에 ‘인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가 투영되도록, 신원조사 정확도 제고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 － 한국형 대화경찰제 내실화를 통해 ‘집회의 자유’와 ‘인권·안전·소통’이 선순환하는 집회문화를 조성, 국민 체감도 제고

※ ’18년 도입기 → ’19년 발전기 → ’20년 성숙기 → ’21년은 ‘정착기’ 토대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정보경찰 개혁> 정보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치관계 시형사처벌 등 개혁법안('20. 12. 9. 국회 통과)에 따라, 국민안전·위험예방과 무관한 정치·민간 영역 정보수집을 차단하도록 법제화

▶ (경찰법·경직법) 치안정보→'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대체
<1. 1. 시행> / 임무규정에 수반한 권한조항 신설<3. 23. 시행 예정>, 구체적 범위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大令) 입법예고 중
▶ (경공법) 정치관계 금지 신설, 위반 시 처벌(5년이하 징역·자격정지)<1. 1. 시행>

- 法 개정 내용에 맞춰 업무 내용이 드러나도록 부서 명칭*도 변경('21. 1. 1. 시행)하여 비밀스러운 이미지를 탈피하였음

*정보국 → 공공안녕정보국 / 정보1·2·3·4과 → 정보관리·분석·상황·협력과

- 대통령령 제정(3. 23.) 등 하위법령도 신속히 정비, '국민안전'·'위험 예방'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도화에 박차

- <준법역량 강화> 정보관리과 준법지원계('18. 7월 신설)를 중심으로, 정보활동의 적법성 상시 확인·감독 등 통제장치 강화

- 정보경찰 개혁에 부합하는 준법 정보활동의 정착을 위해 「정보경찰 활동규칙」 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 현장 정보관 경력 및 지역별 정보환경 등 시·도경찰청 수요 등을 종합 고려, 맞춤형 준법교육 실시

※ △정보교육 실무협의체 구성 △교육기관 워크숍 △시·도경찰청 교육 시강사 지원 등을 통해 분야별 교육을 내실화하고, 쏠 과정에서 인권교육 의무화

- △공공안녕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참고자료집 △정보활동 관련 법령집 등을 제작·배포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한 입체적 법률 지원도 강화

- <대화경찰> '18.10월 도입 이후 집회현장의 소통창구이자 갈등 완충지대로 역할을 하며,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
- 언론 등에서도 '감시자에서 조력자로의 발상 전환'이라고 호평하는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성과로 부각되고 있음

• 집회현장 대화경찰 투입 후 위법시위 54.5% 감소(헤럴드, '20. 12월)
 • 형광 조끼 대화경찰 "형님~"하니, 성난 시위대가 고분고분(한국, '19. 11월)

- 다만, 제도 도입 4년 차인만큼 장·단점 분석 및 보완을 통해 운영을 내실화하고 활동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 기능간 역할 재정립 △ 조직·장비·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 확충 △ 평가·인센티브 등 현장활동 지원을 강화
- ※ '공개성'의 핵심인 대화경찰 표식(복제) 디자인·재질 등 개선 추진
- △ 현장사례 DB 化 △ 인력풀 관리 강화 △ 교육대상 확대 및 교육체계 균질화(현장강사 육성) 등 역량 강화방안도 마련
- <신원조사>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충성심·신뢰성을 조사하는 업무(보안업무규정 제36조)
- 신원조사 오류율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켰으며, △ 조사관 맞춤형 전문화 교육 △ 신원조사 업무 매뉴얼 제작 등 개선 노력 지속
- * '17년 0.31% → '18년 0.1% → '19년 0.12% → '20년 0.06%로 획기적 감소
- 신원조사 기록 쏙 과정을 現 종이문서 기반에서 온라인·디지털로 처리하는 클라우드 기반 비대면 시스템으로 구축 추진 ('21년 ~ '23년, 총 사업비 96억원)

국민편의 증대	예산 절감 & 편익 효과	오류 최소화
• 인터넷을 통해 쉽게 신원 조사 의뢰 가능 • 구비서류 제출과 결과 회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신속한 인사 행정에 기여	• 연간 운영비 21억 절감 • 편익 기대효과 산정시 향후 5년간 440억원 절감	• AI 기술을 활용해 문자 자동 판독·입력 기능 구현 • 자료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수기 입력시 일어나는 휴먼 오류('19년 574건) 최소화

- 금년 1단계 사업은 △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 현행 시스템 문제점 개선 △ 인프라 구축 등 개발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준법역량 강화) 공공안녕 위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참고자료집 배부	'21. 2월	
	(준법역량 강화) 준법정보활동 정착을 위한 점검계획 수립	'21. 2월	
	(정보교육) '21년 정보교육계획 수립	'21. 3월	
	(준법역량 강화) 정보활동 관련 법령집 제작 및 보급	'21. 3월	
	(대화경찰) 대화경찰 제도 보완·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1. 3월	
	(대화경찰) 대화경찰 운영 가이드북 발간	'21. 3월	
2/4분기	(정보전산) 신원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21. 4월	
	(신원조사) 신원조사 신임자 기초 교육	'21. 4월	
	(준법역량 강화) 전국 신임정보관·정보관리자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21. 4~6월	코로나19로 변동 가능
	(준법역량 강화) 점검계획 이행(시·도경찰청 현장 점검)-1	'21. 4~6월	코로나19로 변동 가능
	(대화경찰) 상설 대화경찰 시범운영	'21. 4~8월	
3/4분기	(준법역량 강화) 점검계획 이행(시·도경찰청 현장 점검)-2	'21. 7월	코로나19로 변동 가능
	(준법역량 강화) '정보경찰 활동규칙' 개정	'21. 7월	
	(대화경찰) 종합계획 시행(현장사례 DB화 등)	'21. 9월	
	(신원조사) '신원조사 업무 매뉴얼' 제작	'21. 9월	
4/4분기	(신원조사) 전국 신원조사 담당자 워크숍	'21. 10월	코로나19로 변동 가능
	(준법역량 강화) 전국 시·도경찰청 준법담당자 워크숍	'21. 11월	
	(대화경찰) 종합계획 시행(복제보급 등)	'21. 11월	
	(정보전산) 신원조사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 포털 시범운영	'21. 12월	
	(준법역량 강화) '22년 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분석	'21. 12월	
	(대화경찰) '21년 운영 성과 분석, '22년 운영방향 설정	'21. 12월	
연중	(준법역량 강화) 기능별 직무교육 및 시·도경찰청 교육 지원 강화 (신원조사) 전 시·도경찰청 순회 간담회·컨설팅 (대화경찰) 안정적·체계적 제도 추진 및 역량 강화 (정보전산) 신원업무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접수 포털 구축 등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 하고, 집회시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국민 인권 신장

□ 기대효과

- <정보경찰 개혁 안착> 정보활동의 구체적 범위·처리기준과 사실확인의 절차·한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제정 추진 등 정보경찰 개혁을 제도화하여 경찰 비대화 우려를 해소
- <준법역량 및 통제시스템 강화> 정보경찰에 대한 내·외부의 촘촘한 통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
- <대화경찰 정착> 현장의 소통창구이자 갈등의 완충지대로서, 집회 시위 자유와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
- <신원조사 업무 전산화> 신원조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시스템의 온라인·디지털化로 경찰행정의 신뢰도 및 국민편익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준법 정보활동 노력도 (50%)	준법관리 역량강화 (30%)	신규			53.5	하단 참조	(준법관리계 점검·교육 × 70%) + (시·도경찰청 자체교육 × 30%)	· 경찰청 주관 순회교육 등 결과 · 현장 점검· 행정 지도 근거자료
	행정지도 건수 (20%)	신규		27회	30회		행정지도 건수	
대화경찰 역량 강화 및 활성화 (50%)	대화경찰 역량 강화 (25%)	신설	308.1	402.3	442.6	하단 참조 ① 대화경찰 역량 강화의 경우, 작년 지표 대비 10% 상향한 442.6 달성을 목표 ② 다수(100명 이상)가 참석하여 시민·他 단체 등과 마찰 우려가 높은 집회에서의 대화경찰 배치율을 성과지표로 설정. 전년 실적은 56.4%로, 10% 상향한 62% 달성을 목표	(대화경찰 교육 인원수 × 70%) + (대화경찰 교육 수료대상 업무 적용도<설문조사> 결과평균 × 30%)	· 경찰 인재개발원 등 대화경찰 교육 결과 · 교육 수료자 대상 설문조사 · 경찰 견문관 리시스템 (대화경찰 운영, 전체 집회시위 건수) 등
	대화경찰 운영실적 (25%)	신규		56.4	62		대화경찰 운영 건수 / 100명 이상 집회시위 건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세부 설명자료】

① 준법 정보활동 노력도 <50%>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보경찰활동규칙을 제정('19. 1월),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였고, 경찰청 정보국 內 '준법지원계'를 신설('18. 7월)하여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는 등 통제장치를 강화함
이에, 정보관 대상 '준법활동 점검·교육', 준법지원계 '행정지도 건수', '사실조사 후 징계요구·수사의뢰 건수' 등 '정보경찰활동규칙 이해도 제고' 및 '준법 정보활동 정착'을 위한 준법 정보활동 노력도를 수치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측정 산식

- 준법활동 점검·교육(30%) : (준법관리계 점검·교육×70%) + (시·도경찰청 자체교육×30%)
- 정보자료 행정지도(20%) : 행정지도 건수

○ 목표값 산출 근거

- <준법활동 점검·교육(신설 지표)> ① 정보경찰 관련 규칙·법률의 지속적인 제·개정으로 준법관리계 중심의 현장 점검 및 교육 필요, '20년 현장점검·교육(간담회, 시도경찰청·경찰서 점검 등) 55회 실시, 올해는 10% 증가한 61회 실시를 목표치로 설정

② 준법정보활동의 현장 정착을 위해 시·도경찰청 단위 자체 준법교육 이행횟수를 지표에 포함, 올해 목표치를 36회(시·도경찰청별 2회)로 설정

⇒ 올해 목표치를 위 측정산식에 대입할 경우, **53.5**

$$\ast (\text{현장점검·교육}<61> \times 70\%) + (\text{시·도경찰청 자체교육}<36> \times 30\%) = 53.5$$

- <행정지도 건수(신설 지표)> : 준법지원계는 준법정보활동 정착을 위해 현장 정보활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여 법령·정보경찰 활동규칙 관련된 행정지도 실시,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단계별 행정지도(① 용어수정 → ② 당사자 교양 → ③ 당사자 주의 → ④ 소집교육), △관리자 주의 △감찰조사·수사의뢰

⇒ '20년 준법관리계 행정지도 건수는 27회, 올해는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30회를 목표치로 설정

② 대화경찰 역량 강화 및 활성화 <50%>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의 소통창구이자 갈등의 완충지대로서, 집회시위 자유와 인권보장을 강화하고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함
따라서, 전문교육(인권, 대화·갈등과정, 조정기법)을 내실화하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률 등 활동 실적을 관리함으로써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자 함

○ 측정산식

- 대화경찰 역량 강화(25%)

(대화경찰 교육 인원수 × 70%) + (대화경찰 교육 수료대상 업무적용도<설문조사> 결과 평균값 × 30%) = '442.6' 달성 목표

* 교육 인원수는 70%, 업무적용도 설문조사 평균값은 30% 배점

- 대화경찰 운영실적(25%)

(대화경찰 운영 건수 / 100명 이상 참석한 집회시위 건수) = '62%' 달성 목표

○ 목표값 산출 근거

- <대화경찰 역량 강화> ① '19년 최초로 실시한, 대화경찰 대상 인재개발원 기본교육 과정 및 외부 전문화 과정 '20년 수료 인원은 534명으로 '21년 목표치는 작년보다 10%가량 증가한 '592명'으로 설정

② 대화경찰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교육에 대한 업무적용도(만족도)를 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지난 2년간 대화경찰 교육의 업무적용도는 평균 93.1점(19년 91.2, 20년 95.1)으로, '21년 목표치는 평균 점수 대비 1점가량 상승한 '94점'으로 설정

⇒ 위 올해 목표치를 측정산식에 대입할 경우, 442.6

※ (대화경찰 교육 인원수<592> × 70%) + (교육 수료대상 '설문조사' 결과 평균<94> × 30%) = 442.6

- <대화경찰 운영실적> 집회·시위 중 일반 시민, 他 단체 등과 마찰 우려가 있는 100명 이상 규모의 집회에 대화경찰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음. '20년 전국 100명 이상 집회·시위에 대화경찰 배치율*은 56.4%로, '21년 목표치는 작년보다 10% 증가한 62%로 설정

* '20년 100명 이상 집회·시위 총 25,614건 중 대화경찰 14,461건 배치(배치율 56.4%)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법과 원칙에 따른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 추진배경 및 목적

- 올해 코로나19 확산勢가 감소되고 집합 인원 등 방역수칙이 완화되면 지난해 주춤했던 각종 집회·시위가 대폭 증가 예상
 - ※ '20년 집회 개최는 77,453건('19년 95,266건 대비 18.6% ↓), 인원은 1,729,354명('19년 5,170,221명 대비 66.5% ↓) ⇨ 방역수칙 제한으로 건수·인원 모두 큰 폭 감소
- － 특히, 재·보궐선거(4.7) 및 '22년 大選을 앞두고 諸단체들의 이익실현 욕구가 분출, 공공안녕 위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른 집회·시위문화 정착 필요
- 선제적 정보활동을 통해 △준법 집회·시위 보장 △단체間 마찰 예방 △국민불편 최소화 등 문제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 － △유관기능 대책회의 △정보관 역량강화 △대국민 평가 등을 통한 피드백 등 정책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방역지침 변화 등에 따른 탄력적이고 선제적 정보활동을 통해 준법 집회·시위를 적극 보장하고, 현장 대응역량 강화 및 대화경찰 운용 활성화하여 국민불편 최소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法집행 도모

- <법과 원칙에 따른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준법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정보활동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
 - － (정보분석회의 개최) 정보상황과장을 위원장으로 대규모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공공안녕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침 수립

- (적극적 대내외 정보공유) 집회·시위 등 관련, 적시에 유관 기능 및 유관 부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 강화
- (현장 法집행 지원) 경비·수사·법무 등 관련 기능 협업, 집회·시위 대응과정에서 필요한 법적검토 및 소송 등 지원
- (대화경찰 운용 활성화) 집회·시위 현장에서 갈등완화·위험 예방 등 소통창구이자 중재자로서, 전문성 제고 및 역할 강화
- <현장 대응역량 강화> 상황분야 정보수집·분석 등 업무역량 제고 등으로 현장 대응역량 강화
 - (정보분석 역량 강화) 현안별 순회교육, 분야별 워크숍 및 간담회 등 수시 소통으로 상황정보 수집·분석 역량 강화
 - (전문성 강화) 집시법 최신 판례 공유, 주요 집회 결과 분석, 관련 지침(매뉴얼) 교육 등으로 기본소양 및 전문성 향상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연 중	상황정보 관계기관 및 기능 간 정보 전파·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	수시
	법집행 과정상 논란 발생 시 유관기능 협조하여 법률검토 후 법집행 지원	수시
	대규모 집회·시위 前 본청·시도경찰청 등 합동 정보분석회의 개최	수시
1/4분기	전문 정보관 육성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21. 2월
	분야별 주요 현안 관련 현장점검	'21. 3~4월
2/4분기	분야별 담당 정보관 교육·현장간담회	'21. 5~6월
	경비 기능과 협조, 집회·시위문화 대국민 여론조사	'21. 5~10월
3/4분기	현안별 순회 교육·간담회	'21. 7~9월
	대화경찰 매뉴얼 제작 협조	'21. 7~9월
	외부 전문가 등 초빙, 전문화 교육 실시	'21. 8월
4/4분기	분야별 현장 간담회, 신속대응팀 교육	'21. 10월
	집회·시위 문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분석	'21. 10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정보의 수요자인 경찰 각 기능 및 유관 기관

□ 기대효과

- 대규모 집회·시위 과정에서 우려되는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 법과 원칙에 따른 집회·시위 문화 정착으로 국민 불편 최소화
- 정보관 역량 향상을 통해 공공안녕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 선제적 대응·조치함으로써 국민 안전 및 사회 안정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법과원칙에 따른 집회·시위문화 정착률 (65%)	45.16	48.42	56.20	62.10	'목표치 적극성 上'을 위해 전년도 실적치보다 10% 이상 상승한 62.10을 목표치로 설정	경찰 활동 실적(60%) [세부산식 하단 참조] +국민 평가(40%)	집회시위 통계자료 및 현황 합동분석회의·법률지원 검토 보고서, 대국민 여론조사 등 결과활용
상황분야 정보관 역량 강화율 (35%)	신규	80	95	100	전년도 실적치보다 10% 상승한 100을 목표치로 설정	(시·도경찰청 보고서 총 획득점수/각 시·도경찰청 정보관 현원)을 통한 등급별 달성 점수×50% + (년 교육인원/ 목표인원)×50%	상황분야 정보관 연간 교육계획 및 교육 결과보고서 등 활용

<산출 근거>

1.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법과 원칙에 따른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률(65%)

- (1) 공공안녕의 유지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정보경찰의 활동을 수치화하여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불법으로 변질 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보관의 위험 예방 활동이 필요한 대규모 집회(1천명 이상/ 코로나 지속時 300명)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①경찰 활동 실적 (60%<대화경찰활동 실적 30% · 합동분석회의 실적 20% · 법률지원 실적 10%>) + ② 집회시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40%)를 통해 지표설계

<산출 산식>

구분	산식
경찰 활동실적 (60%)	①준법 집회·시위 촉진 대화경찰 활동 실적(30%) *산식 : (준법 집회·시위 촉진 대화경찰 활동실적 / 전체 집회·시위)×100×0.3 ②평화적 집회시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집회·시위 정보합동분석회의 개최 실적(20%) *산식 : (합동분석회의 개최 건수 / 대규모 집회·시위)×1,000×0.2 ③평화적 집회시위 촉진을 위한 대규모 집회·시위 법률지원 실적(10%) *산식 : (법률지원 건수 / 대규모 집회·시위)×1,000×0.1
국민 평가 (40%)	집회·시위 경험,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집회·시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40%) *산식: 대국민 집회시위 여론조사 결과 전체 긍정 답변율(%)×0.4

(2)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치인 56.20보다 10% 상승한 61.82를 상회하는 62.10(전년도 대비 약 10.5% 향상)을 목표치로 설정(목표치의 적극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上' 등급)

- 코로나19 확산勢 주춤 등으로 방역지침 완화되면, 올해 4월 재보선 및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해 주춤했던 집회·시위 개최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집회·시위 환경을 감안할 때 매우 도전적인 수치임

< 최근 3년간 통계 수치 >

년도	대국민 대면 여론조사 (40%)	경찰 활동 실적(60%)			합계
		법률지원 실적(10%)	합동분석회의 실적(20%)	대화경찰 (30%)	
'20년	13.96	13.03	13.52	10.69	56.20
'19년	16.56	12.98	8.88	5	48.42
'18년	20	6.66	8.50	5	45.16

2. 현장 대응역량 강화율(35%)

(1) 정보관 상황정보 분석 역량 강화

- ① 올해 집회·시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집회·시위 상황관리를 위해서는 정보관 상황정보 분석 역량 강화가 필수적

※ 등급 체계 : 각 시·도경찰청 소속 정보관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일정기준(종합·분석 보고서 활용정도 등)에 맞춰 평가 ⇨ 각 시·도경찰청에서 획득한 전체 점수를 각 시·도경찰청 소속 정보관 인원수로 나누어, 각 청별 평균점수를 산출

⇨ 전체 시·도경찰청 (18개) 中 평균점수를 9.5점 이상 획득한 청이 40%(8개) 이상이면 S등급(100점), 35%(7개)인 경우 A등급(90점), 25%(5개)인 경우 B등급(80점), 25% 미만(4개 이하)인 경우 C등급(70점)으로 평가

② <'21년 목표> S등급 달성(전체 시·도경찰청 중 8개 이상<40%↑>, 평균 9.5점 이상 획득)

점수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산식	[평균점수(시·도경찰청 보고서 총 획득점수/각 청 정보관 현원)] > 9.5점 ↑			
기준	8개 이상 청	7개 이상 청	5개 이상 청	4개 이하 청

(2) 상황정보관 전문교육 이행률

- ① 연중 계획된 교육 일정에 맞춰, 각 사회·경제·공공분야별 전문화된 교육 진행
- ② 상황분야 관련 법률 교육·경찰교육원 상황정보 실무과정, 통일교육원 등 내·외부 기관과 연계 교육 추진, ‘집시법 강의·외근 정보활동 기술·안보현장 견학’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진행
- ③ <'21년 목표> 전체 상황정보관 2,804명의 10%를 상회하는 281명을 목표치로 설정

25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관련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수사권 개혁으로 경찰이 1차적 수사권자로 설정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중립성·독립성·전문성 요구
- 수사절차 상 각종 인권침해를 감시·예방하는 국가수사본부장 보좌기관으로서 수사인권담당관(수사인권보호계·수사윤리계) 신설
- 수사절차 상 ‘인권보호’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므로,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도·정책의 미비점을 찾아 보완·개선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인권친화적 경찰상 정립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수사절차 전반 인권보장 관련 각종 제도·정책 정비]

- 수사권 개혁법 시행에 따른 수사절차 상 인권보장을 위한 규칙·지침 제·개정

- ▶ (가칭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제정) 수사과정 상 인권보호 내용을 총망라한 독자적 규정을 행안부령으로 마련 (경찰인권위 권고)
- ▶ (가칭 「경찰 수사윤리 강령」 제정)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나 자세 등 수사윤리를 정의하고 구체화하는 강령 제정
- ▶ (행정규칙 개정)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훈령)」, 「호송경찰관출장소 근무규칙(훈령)」 등 소관 행정규칙 현행화
- ▶ (수사실무지침 정비) 심야조사 금지·장시간 조사 제한 등 수사권개혁법령에 반영된 사항에 대한 수사실무지침을 정비하고 관리

- 국가인권위 등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수사절차 상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책 마련

- ▶ (국가인권위 등 권고 수용 노력) 권고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하는 한편 제도 개선에 반영 노력
- ▶ (유치인 권리 보장 강화) 유치인 보호를 위한 ‘머리보호장비’ 도입 추진 등
- ▶ (사회적 약자 권리보장 강화) 외국인 피의자를 위한 권리고지 내용 번역 확대 및 KICS 시스템 개선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보장 방안 개선
- ▶ (피체포자 권리 보장 강화) 수갑 사용시 최소침해·비례의 원칙 적용한 단계적 절차 규정 마련 및 피체포자 인격권 보호 위한 수갑가리개 확대보급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등 관련 인프라 구축·추진]

- 국민인권 보호를 구현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 조성

- ▶ (유치장 환경 개선사업) △쇠창살 개선, △유치관리스테이션 설치, △밀폐형 화장실 설치 등 유치장 환경개선 추진 (’13년~’20년 39개서 완료 / ’21년 5개서 추진 예정)
- ▶ (영상녹화·진술녹음 확대 운영) △영상녹화 △진술녹음 확대 운영 등 조사대상자 인권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 ▶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수사절차 상 인권보호 제도 총괄·지도·교육하는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추진

[인권·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환류 체계 구축]

- 인권·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상담·조사절차 마련 △사례축적 △매뉴얼·교육자료 제작 및 제공하는 등 교육·환류 강화

- ▶ (인권침해·윤리위반 상담·조사 절차 구축) △‘수사인권조사관’ 신설 추진 △사적접촉금지·신고제도(감사 운영 중) 협력 체계 마련
- ▶ (사례·자료 축적) △수사경찰의 인권·윤리의식에 대한 인식 조사 △외부 전문가·현장 수사관 의견 수렴 △상담·조사를 통한 사례 수집
- ▶ (매뉴얼·교육자료 제작) 인권침해·수사윤리 관련 규정 및 위반사례를 집대성하여 교육자료 발간 추진
- ▶ (교육자료 공유·환류) 교육자료 정기적으로 현장 직원 공유, 교육기관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한편, 사이버 교육 콘텐츠 제작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사인권담당관실 업무 추진계획 수립	'21. 3월	
	국가수사본부 타 부서 및 유관기관 부서간 업무 협의	'21. 3월	
	심야조사 허가 절차 마련 등「수사실무지침」정비	'21. 3월	
2/4분기	「수갑 등 사용지침」개정안 마련 등 개정 절차	'21. 4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개정안 마련 등 절차 진행	'21. 5월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경찰 수사 윤리 강령」 제정안 마련	'21. 6월	
3/4분기	인권수사 매뉴얼 개정	'21. 7월	
	수사인권보호관 도입 추진 계획 수립	'21. 9월	
	현장 수사관 수사윤리·인권 의식 조사	'21. 9월	
4/4분기	「경찰 인권보호 수사규칙」, 「경찰 수사 윤리 강령」 제정	'21. 11월	
	인권침해 등 사례, 윤리 규정 총망라 교육자료 발간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이해관계집단 :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경찰공무원
- 수혜자 :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각종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그 목표이므로, 그 수혜자 역시 모든 일반 국민임

□ 기대효과

- 現 법령·제도 중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규정을 발굴하여 미비점 보완하고,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인권보장 방안을 적극 발굴하여 이를 제도화함으로써, 인권보장 체계 확립
- 수사윤리 분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수사경찰의 윤리·인권 의식 개선 및 변화 유도, 관련 의무위반 예방 효과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등 관련 인프라 구축·추진(I-1-일반재정②)				
①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등 인프라 구축		일반회계	24.8 (전체단위 사업비)	27.2 (전체단위 사업비)
■ 유치장 환경개선 사업(7131-312)			15	15
■ 영상녹화·진술녹음 확대 사업(1231-311)			9.8	12.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인권보호 제도 개선 (60%)	신설			40	하단 참조	하단 참조	공문, 보고서 등 추진 관련 근거자료
인권·윤리의식 제고 위한 교육·홍보활동 (40%)	신설			15	하단 참조	하단 참조	공문, 보고서 등 추진 관련 근거자료

① 인권보호 제도 개선 (60%)

- (개요) 수사권 개혁법 시행 후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수사과정 상 각종 인권보호 제도 중 인권침해 소지 有 및 현행화가 필요한 법령·행정규칙·지침 등을 정비·보완함으로써, 인권친화적 수사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지표로 선정

- (측정산식) [유형별 등급×등급별 점수] (점수 : 건당)

등급	A	B	C
유형	수사인권 관련 법령 제·개정	수사인권 관련 행정규칙 및 지침 정비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개선
점수	10	5	3

<점수분포표>

종합 점수	40점 이상	35점 이상	30점 이상	25점 이상	25점 미만
점수	100	90	85	80	70

- (목표치 및 산출근거) 수사절차 상 인권보호 제도 개선·정비에 대한 노력을 도전적·적극적으로 실행 하기 위해 '21년 목표치를 40점으로 높게 설정

② 인권·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 (40%)

- (개요) 각종 인권보장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현장 수사관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고, 동시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제도적 미비점 도출·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지표로 선정
- (측정산식) 교육 및 홍보활동 건당 점수 부여 후, 종합 점수로 측정

▶ 교육점수: 교육활동 건당 3점 / 교육자료 배포 1점 부여

구 분	세부 유형
3점 교육활동 (영상·현장교육 불문)	△ 세미나(또는 웨비나) △ 간담회 △ 워크숍 개최 △ 영상회의 시스템 활용한 각종 교육 및 인권침해 사례 전파
1점 교육자료	△ 자료집 △ 매뉴얼·지침 △ 강조 공문·업무연락 등 배포

▶ 홍보점수: 인권시책 언론홍보 건당 5점 / 통합포털 카드뉴스 홍보물 게시, 기타 홍보자료 배부 등 건당 1점

<점수분포표>

종합 점수	15점 이상	13점 이상	11점 이상	9점 이상	9점 미만
점수	40	38	36	34	30

- (목표치 및 산출근거) 신설지표임을 감안, 교육 및 홍보활동 종합하여 '21년 목표치를 15점으로 산정

26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 추진배경

- 집회시위 참가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선진문화를 정착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법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소경비경찰이 부단히 내재화·체득화하여 집회현장 법질서를 확립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법집행 기준 확립>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하며 전국적으로 균질하고 일관된 법집행 위해 기본방침을 확립하고 직무지침을 정비

- ▶ (경비지휘부 워크숍) 청장주재 전국 경비지휘부 참여(화상회의), '21년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주요 대응사례 소개
- ▶ (방역적 집회관리 방침) 코로나19 시대 집회 대응의 뉴노멀로 '방역적 집회관리 기조' 견지, 「집시법」·「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 집회는 사전제지·차단 및 해산
- ▶ (살수차 운영지침) △현행 지침→경찰청훈령으로 개정 △살수방법과 절차를 구체화 △살수차 사용 시 안전조치 사항 △사용·관리 상 투명성 강화 등 규정

- <법과 원칙의 내재화> 지휘관부터 부대원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고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지식 함양 위한 자료 제작

- ▶ (2021 경비경찰 길라잡이) △집시법 등 관련법령과 판례 △1인시위·차량시위 등 유형별 조치요령 △해산절차의 근거와 세부내용 △채증·소음관리 등 자료 종합
- ▶ (경비경찰 포켓가이드북) 집회 현장 △유형별 대응요령 △해산절차 △상황별 방송문안 등 현장에서 필수적인 내용 중심으로 간편히 소지할 수 있는 소책자 제작
- ▶ (한눈에 보는 집회시위 판례집) 집시법 개정사항, 집회현장과 관련된 중요 최신 판례를 바인더식(수시로 내용 추가가 용이)으로 제작, '21년 최신 판례를 추가

- <법집행 지원 장비보급> 코로나19·의경감축 등 現 상황에서 현장 안전보장과 법집행력 제고 위한 필요 장비를 개발·보급

- ▶ (경찰부대원용 방역키트 제작·보급) 마스크·페이스섀드·리텍스장갑·손소독제 등을 보관·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개인가방 보급, 방역물품을 빠짐없이 소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 ▶ (안전차단장비 확충) 의경 폐지에 따른 부족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트레일러형 안전펜스(안전펜스 이동·설치 가능) △다목적 방송조명차(차후면에 안전펜스 장착) 도입
- ▶ (신체보호장비 개선) 무겁고 노후된 △방패('06년 도입) △방석모('07년 도입)를 안전성은 유지하면서 경량화하고 인체공학적으로 개선 추진

- <선거 안전관리> 4.7. 재·보궐선거 대비 △경비대책 수립
△선거경비상황실 운영 △선관위와 긴밀 협업 등 안전관리 철저
- <의경폐지·경찰관대체> 국정과제로 '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 중,
'23. 6월까지 의경 완전 폐지하고 경찰관기동대 창설('21년은 10중)

※ 국정과제 14-5 : 의무경찰 단계적 폐지와 경찰인력 증원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1년 전국경비경찰 워크숍	'21. 2월	
	경찰부대 상반기인사 교체기 집중점검	'21. 2월	
	상반기 경찰부대 집중교육	'21. 3월	
	4.7. 재·보궐 선거 경비 대책 수립	'21. 3월	
2/4분기	4.7. 재·보궐 선거 경비상황실 개소 및 운영	'21. 4월	
	의무경찰 등 신고 상담카드 제작 배부	'21. 5월	
	의무경찰 지휘요원 가이드북 개정	'21. 6월	
3/4분기	경찰부대 하반기인사 교체기 집중점검	'21. 7월	
	경비경찰 정책자문단 회의	'21. 8월	
	경찰관기동대 창설 (10개 중대)	'21. 9월	
4/4분기	하반기 경찰부대 집중교육	'21. 10월	
	경비경찰 포켓 가이드북 제작	'21. 11월	
	집회시위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21. 11월	
	'21년 집회시위 판례집 발간	'21. 12월	
	'21년 집회시위 분석평가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 기대효과

-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과 함께 인권·안전의 확보
- 불법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된 법집행으로 법치경비 실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경비경찰역량강화(Ⅱ-1-일반재정①)				
① 경비경찰역량강화(2131)		일반회계		
■ 경비경찰활동(311)			418.2	469.6
■ 의경운영및관리(312)			1,018.3	663.0
■ 의경대체지원(314)			637.3	564.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집회시위 현장 대응 시민 만족도 (40%)	신규			긍정 답변율 70%	하단 참조	여론조사 긍정 답변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 기준 확립 (40%)	신규			30점	하단 참조	훈령·지침 개정 건당 15점 매뉴얼 제작 및 전국단위 배포 건당 10점	
경찰관기동대 창설 달성도 (20%)	신규			10개 부대 창설	하단 참조	창설 목표 달성 시 20점 부여 (미창설 1개부대마다 -4점 감점)	각 시·도경찰청별 경찰관기동대 창설 세부시행계획
① 집회시위 현장 대응 시민 만족도(40%) - (개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에 선제적·적극적 대응하는 경찰의 노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지표로 활용, 정책 미비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측정산식)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 ▶ 조사 방식 : 전국 성인남녀 2,500명 대상(집회참가자 제외)으로 전문 여론조사업체에서 대면조사 (코로나19 상황으로 조사방식 변경 가능)
- ▶ 조사 내용 : △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노력도 △ 집회시위현장 불법행위 대응도

- (목표치 및 산출근거) 긍정 답변이 70% 이상일 경우 목표 달성

②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 기준 확립(40%)

- (개요) 훈령·지침 제·개정, 각종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현장에서 부대원들이 당당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측정산식) ▶ 훈령·지침 제·개정 : 건당 15점 ▶ 매뉴얼 제작 및 전국단위 배포 : 건당 10점
- (목표치 및 산출근거) 30점 이상일 경우 목표 달성

③ 경찰관기동대 창설 달성도(20%)

- (개요) 경찰관기동대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 인력충원(의경감축<국방부와 매년 협의> / 대체경찰관 충원<행안부·기재부와 정원 협의 후 국회 통과>) △ 시설개선(폐지 의경부대 리모델링*), △ 장비·피복보급(신체보호복 등 피복류 및 경찰관기동대 비품 등) 등 많은 노력이 수반됨
- * <의경부대 리모델링 절차> ①리모델링 예산 확보(전년도 12월에 국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 → ②각 시·도 경찰청 주관 현장 점검 및 리모델링 소요예산 산출 → ③경찰관기동대 리모델링 계획 수립 및 예산배정 → ④설계 및 조달청 공사업체 계약 → ⑤공사 진행 → ⑥공사완료 및 경찰관기동대 창설
- (측정산식) 창설 목표 달성 시 20점 부여 (미창설 1개부대마다 4점 감점)
- (목표치 및 산출근거) '21년 목표인 10개 부대 창설 달성 시 목표 달성

(1) 주요 내용

-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 △수사 및 지휘역량 고도화 △시·도경찰청 중요사건 직접수사 확대 △수사종결 역량 확보 등 핵심과제에 역량 집중
- **<수사권 개혁 추진>** △연계법령 정비 △대내·외 소통 등 후속 조치와 더불어 수사-기소 완전분리 등 수사권 개혁 지속 추진
- **<수사심사 체계 구축>** △3중 심사체계* 확립 △사건기록 관리 체계 개선 등으로 경찰수사의 쏠 과정·결과에서 완결성 확보
 - * △(수사단계)수사심사관 △(수사종결)책임수사지도관 △(외부)경찰수사 시민위원회
- **<미래환경 대비 책임수사 지원>** △데이터 분석·활용 △과학수사 신뢰성·증거능력 제고 △첨단장비·신기법 도입 등 법과학 기법 고도화
 - DNA·지문·심리분석 등 공인인정(KOLAS*·ISO** 등) 대상분야를 확대하여 대외적 인증 및 업무절차의 표준화·품질 관리 도모
 -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국제기준에 적합한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
 -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제품의 품질·환경시스템 규격
-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 강화>** 분석관 전문성 강화, 최신 분석기법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을 통한 디지털포렌식 신뢰성 제고
- **<과학수사 역량 강화>** 첨단 기법·장비 확충과 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과학수사에 대한 신뢰도·만족도 제고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수사·형사 분야 치안고객만족도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기반 마련	예산·인프라 확보 노력도 / 책임수사 과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반영도 / 전문 수사인력 확보 / 전문 수사인력 양성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수사권개혁 관련, 연계법령 정비 노력 / 제·개정 법령 및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 / 수사제도 개선·수사권개혁 지속 추진
	국민중심 책임수사 완성을 위한 심사체계 구축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위한 심사체계 구축 노력도 /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등 업무기반 마련 /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제 구축 이행도 / 수사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미래환경을 대비한 경찰책임수사 지원 강화	범죄분석 지원지수 / 법과학 분석률 /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 /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증거분석 역량 강화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 디지털 포렌식 도구·시스템 개발 및 활용도 /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 연구 실적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견인하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	대국민 교류 지수 / 현장지원 지수 / 과학수사 활동 지수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수사·형사 분야 치안고객 만족도	62.4	65.1	67.4	70.0	수사·형사 분야 치안고객만족도는 '18년 이후 지속 상승세이며, 전 3년도 실적 평균값(65.0)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70.0)을 고려, '21년 목표치는 '20년보다 2.6%p 상승한 70.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치안고객만족도 수사·형사 분야 조사결과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대국민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21. 1. 1.) 이후 국가수사 총량 유지·강화를 위한 경찰 책임수사체제 구축 관련 대내·외 기대와 관심 증대
 - － 특히, △국가수사본부 중심 수사지휘체계 확립 △중요사건 대응 역량 확보 △종결사건의 수사완결성 확보에 대한 요구 다수
 - － 체계적인 인사·조직 기반을 마련하고 변화된 업무환경에 맞는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중심 수사활동 기반 조성 필요

- IT기술 발달에 따른 범죄양상 변화로 디지털포렌식 수요가 증가하고 과학수사 관련 국내·외 협업치안 기반 강화의 필요성 대두

▶ **(범죄양상 변화)** 디지털증거가 범죄의 핵심 증거로 부각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신종 범죄 증가(텔레그램 활용 마약 판매, 딥페이크 활용 사기 등)

▶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32,281건('16년) → 36,060건('17년) → 45,103건('18년) → 56,440건('19년) → 63,935('20년)

- △첨단장비 도입(휴대용 DNA분석기 등) △증거물 감식감정실 환경개선
△법곤충분석실 구축 △국제CSI컨퍼런스 개최 등 전문역량 제고
- 사회 각계에서 수사구조개혁 후 국민체감 효과 제시를 요구하고,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검찰과의 이견 증가
 - △경찰청-대검찰청 간 실무협의 수시 개최 △경찰-해경-검찰 「수사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추진 및 대내·외 홍보 지속
- 증거채취 및 신원 확인율 등 효율성뿐만 아니라 증명 가능성·신뢰성 등 ‘법정(法庭)’ 기준*을 고려한 과학수사가 요구됨
 - * 판례는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전문성 △이론적 근거 △검증 가능성 △결과의 객관성 △표준화된 절차와 자격 준수 여부 등을 고려
- 경찰·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 구축 확대,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전문자격 취득 지원(CFEL, CFI) 등 증거처리 절차의 무결성 확보 노력

(4) 참고자료

- 경찰청,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 / 「2021 수사실무 지침」
- 수사구조개혁(www.susa.go.kr)
-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홈페이지(www.kcsi.go.kr)

27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 시행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변화된 형사사법체계 본격 가동

- 개정 경찰법 시행('21. 1. 1.)으로 경찰수사의 컨트롤타워로 전국적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 국수본 산하 2관·4국·1담당관 체제



▶(제도) △(지휘) 경찰수사 총괄·조정 △(인사) 수사부서 총경급 전보추천 및 국수본 경정 이하 전보 △(조직) 수사부서 경정이하 정원조정 △(감찰) 수사경찰 1차 감찰권

-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공감’·‘공정’·‘인권’ 가치 아래 수사 ‘책임성’·‘전문성’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 발표(1. 4.)

□ 국가수사본부 기본 운영 방향

- <비전> 인권과 현장을 최우선으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
※ '21. 2. 26. 제1대 국가수사본부장 취임 시 국가수사본부 운영의 기본방향 제시
- <4+1 추진전략> ‘인권 최우선’, ‘전문성·공정성’, ‘피해자 보호’, ‘범죄 척결’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책임수사 기반 구축과제 신속추진

① 인권을 최우선하는 수사환경 정립

⇒ △ 수사과정상 인권보호 장치 마련, △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등

② 전문성·공정성에 기반한 수사경찰 육성

⇒ △ 체계적인 인사관리, △ 지휘·보고 체계확립, △ 수사종결 역량 확보 등

③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을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 △ 회복적 경찰활동 전개, △ 예방적·선제적 경찰활동 등

④ 범죄척결로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

⇒ △ 범죄에 강한 수사활동 전개, △ 첨단 수사기법 지속 연구·개발 등

⊕ 인력·예산 여건 개선 및 수사경찰 기강 확립

⇒ △ 책임수사를 뒷받침하는 수사 인프라 구축, △ 수사 공정성·청렴성 확보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체계적인 수사경찰 인사관리로 수사전문성 및 지휘역량 제고]

- <인사관리> 자질 있는 수사관을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경력을 관리하고 역량에 맞는 역할을 부여하는 수사경찰 특화 인사제도 마련

- ▶ (수사관 자격관리제 도입) '계급'이 아닌 '역량'과 '경력' 중심의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통해 예비수사관이 책임감 있는 수사지휘자로 양성될 수 있도록 「수사관 자격관리제」 추진
 - ※ 역량·경력에 따라 예비수사관 → 일반수사관 → 전임수사관 → 책임수사관으로 발전 / '20. 12월 제1회 책임수사관 선발(접수 총 2,192명 중 시험 및 심사를 거쳐 91명 선발)
- ▶ (과·팀장 자격제) 경정 이하 과장(팀장)은 '최근 10년간 총 수사경력 6년(팀장 5년) 이상 또는 최종별 3년(팀장 2년)' 이상 충족자 배치
- ▶ (수사부서장 자격제) 시도경찰청·경찰서 수사부서를 통솔하는 수사부서장 보직(경찰청·시도경찰청 경무관·총경)에 '총 수사경력 10년 이상' 충족자 배치

- <전문가 양성>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를 수사부서에 지속 선발하고 수사교육 내실화를 위해 인사제도와의 연계 운영

- ▶ (전문인력 채용 확대) △ 변호사 △ 회계사 △ 사이버분야 △ 의료사고 등 총 10개 수사분야에서 경력있는 전문가 채용 확대 ('20년 172명 → '21년 245명)
- ▶ (전문수사관 지속 선발) '20년도 전문수사관 664명 선발, 전년대비 68명 증가
 - ※ 그간 총 90개 분야에서 4,529건 (4,157명) 인증 (전문수사관 마스터 127건 포함)
- ▶ (수사경찰 교육과정 개편) △지휘역량 강화교육 확대 △수사경찰 인사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내실화 추진 △증가하는 교육수요 대응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추진

- <지휘역량 강화> 수사부서 과·팀장의 지휘역량 확보

- ▶ (수사지휘 역량평가 시스템) 객관적 수사결과 지표를 통해 과·팀장의 역량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지휘역량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23년 완료)
- ▶ (관서장·부서장의 수사지휘 강화)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중요사건은 경찰서장 등이 중요서류를 직접 결재하도록 규범화*
 - * 시·도경찰청별 산재한 수사서류 위임전결 규정을 종합 개선, 「수사지휘 및 수사서류의 위임전결에 관한 규칙」 통합 제정 추진
- ▶ (범죄유형별 수사지휘 표준화) 사건 유형에 따라 관리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초동조치' → '사건처리' → '사후관리' 단계 順으로 표준화
- ▶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범죄인지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 △송치 의견 등은 서면으로 수사지휘 원칙

- <공인탐정제도 도입 검토> 사실조사 활동은 사생활침해, 개인 정보 유출의 우려가 높아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방안 검토

- ▶ (공인탐정 입법) 21대 국회에서 이명수·윤재옥 의원이 관련 법안 제출 (현재 행안위 소위 계류 中)
- ▶ (공인탐정제도 홍보) 언론의 기획보도 및 SNS 홍보 등을 통해 공인 탐정제도의 도입 필요성, 일자리 창출 효과 등에 대해 지속 홍보*
- * '20년 설문조사 결과 77.2% 공인탐정제도 도입 찬성 (국민 2,000명 대상 무작위 조사)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 중심의 수사 및 지휘·보고 체계 확립]

- <보고·지휘 체계> 국가수사본부 및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수사 ‘보고 → 검토 → 지휘’가 일사불란하게 작동하는 체계 구축

중요사건 구분		보고 시기(경찰서→시·도경찰청)			내용
		접수보고	진행보고	결과보고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	-	-	-
경찰서 수사	집중지휘	✓	✓	✓	시·도경찰청 집중지휘팀 운영 등
	경찰서 책임수사	✓	-	✓	접수·종결 시 보고원칙

※ 내사사건도 수사사건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관리·지휘하고, 중요사건은 시·도경찰청 이관 / 시·도경찰청 → 본청 수사기능 보고도 같은 절차를 따름

-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확대> 직접수사 인력 증원(224명 증원)과 이관 사건 확대(경찰서→시·도경찰청), 전문분야별 중심청 운영 등 역량 강화

※ 경찰서는 일반적인 민생침해 범죄에 집중,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주력

죄종	시·도경찰청 직접수사 세부 기준
수사	▶ (보이스피싱) 피해금액(1,000~3,000만원), 이용계좌(3개) 기준 ▶ (정치자금법 위반) 수수금액 1천만원 이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 (기타) △ 유사수신·다단계 △ 보험사기 △ 보조금 부정수급 △ 대포물건 등
형사	▶ (마약류·조폭사건) 마약류 유통·밀반입 사건 / 조직적 갈취·폭력 등 조직활동 ▶ (기타) △ 2개서 이상 발생 연쇄 강력사건, △ 의료사고, △ 안전·폭발물 사건 등
사이버	▶ (해킹) 주요 정부기관·공기업·민간업체에 대한 해킹·디도스·악성프로그램 사건 ▶ (피싱) 경찰청 집중수사 지휘가 있는 피싱·파밍·스미싱·몸캠·피싱 및 쇼핑몰사기 사건
여청수사	▶ (중요 성폭력) 13세미만, 장애인 사건 등 중요 성폭력 사건 ▶ (기타) 중요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장기) 수사
교통	▶ (중요 대형교통사고) 3급지 관할에서 사상자 20인 이상 발생사건 등

- <수사부서장 통솔범위 조정> 경찰서 직접수사부서 과·팀장의 통솔범위를 실질적으로 수사지휘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조정

- ▶ (수사·형사과 분과) 관서별·부서별 적정 통솔범위(30~50명)를 고려하여 現 2과 (수사·형사과) → 2~5과 체제 전환(직제 확보)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추진*
 - * ㄱ (수사과) 경제·지능과(2과 / 40~69명 이상 관서), 경제1·2과, 지능과(3과 / 70명 이상)
 - ㄴ (형사과) 형사과·강력과(2과 / 60명 이상 관서)
- ▶ (소팀제 활성화) 경제팀 459개팀(평균 7.9명) → 658개팀(5.7명)으로 소팀제 전환('19. 1월), 향후 5.7명→4명 내외의 책임수사관 중심체제로 소팀제 정착 추진

[경찰 종결사건에 대한 완결성 확보]

- <수사종결 역량 확보> △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내부) △ 경찰 수사 시민위원회(외부) 등 심사체계 구축, 종결사건의 완결성 제고
 - ※ 국가수사본부 內 수사 심사·정책을 전담하는 수사심사정책담당관 신설('21. 1월)
- 내사사건도 수사사건과 동일하게 보고·지휘토록 관리하고, 중요사건은 시·도경찰청에 이관하여 직접 처리

- ▶ (내부 심사체계) 독립적인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 수사심사관(경찰서·시도경찰청) △ 책임수사지도관(시도경찰청) 운영을 통한 중첩적 심사 체계 구축
- ▶ (외부 심사체계) 「경찰수사 시민위원회」를 전면 도입하여 수사결과나 과정에 대해 시민의 참여 폭을 확대(대전·강원청 시범운영 중)

- <단계별 제도적 장치> ‘접수·진행—강제수사—종결’ 수사 단계별 인권과 수사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국가수사본부 內 수사 인권·윤리를 전담하는 수사인권담당관 신설('21. 1월)

- ▶ (사건접수) △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사건배당 표준화, 중요사건은 접수단계부터 수사부서장 집중관리 △ 수사민원 상담센터 △ 수사관련 사적접촉 금지제도 운영 등
- ▶ (수사진행) △ 제척·기피·회피 제도 △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 도입 △ 변호인 조력권 실질화, △ 심야조사 원칙적 금지 및 조사 시 수갑 사용금지 등
- ▶ (강제수사) △ 영장심사 제도 △ 영장신청단계 격상(과장) △ 유치장 환경개선 및 유치인 접견교통권 보장 △ 압수·수색 시 이견제시 보장 등
- ▶ (종결) △ 수사심사제도 △ 수사심의신청 제도 △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 수사공보 제도 개선 △ 과·팀장 지휘역량 평가 △ 송치전 자료·의견 제출기회 보장 등

[책임수사를 뒷받침하는 수사 인프라 조성]

-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인권침해 발생소지가 있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수사부서 조사환경 개선 등 사업 확대
 - ▶ (경찰서 수사부서 환경개선) △조사·사무 환경 분리 △피의자·피해자 동선 분리를 위한 통합수사당직실·호송차고 설치 등 조사환경 개선 사업 추진('15년~)
 - * '15~'20년 94개서 개선 완료(개선 76개서, 18개서), '21년 35개서 추진 예정(235억원)
 - ▶ (시·도경찰청 수사동<별관동> 구축) '수사부서 조사환경 개선' 기준을 시·도경찰청에도 적용, 쏘 수사 기능을 통합한 '수사동' 구축 추진 중(2개청 완료, 9개청 진행중(151억원))
 - ▶ (경찰서 유치장 환경 개선사업) △쇠창살 개선 △유치관리스테이션 설치 △밀폐형 화장실 설치 등 유치장 환경개선 추진('13년~'20년 45개서(신축 6 포함) / '21년 5개서 추진예정)
- <수사 예산> △신규·증액 사업 지속 발굴 △검거보상금·참고인여비 집행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수사 뒷받침
 - ▶ (신규·증액 사업) △수사서류 보관실 개선사업 △대선·지선 선거사범 수사 △사건수사비 현실화 등 현장수사관들을 위한 신규·증액 반영 추진
 - ▶ (검거보상금)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개정('20. 12월)을 통해 기준금액 현실화(3~30만원 → 30~100만원), 집행 활성화 도모('21년 13억원)
 - ▶ (참고인여비) △예산 15억 증액('21년 31억, 전년 대비 95.2%↑), △참고인여비 FAQ 하달 등
- <수사권 개혁에 따른 KICS 개편> 형사소송법 등 수사권 개혁 법령사항 등을 KICS에 반영하기 위해 시스템 개편 사업 진행
 - ▶ (개요) 변경된 형사사법 업무절차를 시스템으로 구현, 형사사법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대국민 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여 '수사권개혁'의 성공적인 안착 뒷받침
 - ※ <예산> '20년 예비비 60.36억원 (※사업기간 : '20. 12.~'21. 12.)
 - ▶ (주요 추진내용) △사법경찰관 결정시스템 구축 △사건관계인 추가 세분화 △보완 수사, 재수사 등 신규서식 검찰유통 △민원통지 개선 △책임수사과제 반영 등
- <차세대 KICS 구축 사업> 경·검·해경·법무부 공동, 최신 IT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반 미래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
 - ▶ (근거)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부입법 추진 중*
 - * '20. 8. 18. 제정안 입법예고 / '21. 1. 26. 국무회의 통과 / 1. 29. 국회 제출
 - ▶ (주요 추진내용) △형사절차의 완전전자화(전자문서 작성·보관·열람·폐기) △모바일 KICS △원격화상조사 △음성인식 조서작성 등
 - ※ <예산> 397.5억원 (※사업기간 : '21. 5.~'24. 12.)
- <범죄통계시스템 고도화 ISP> 노후 시스템 개선 및 최신 범죄 경향을 반영하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ISP 실시(예산 2억원)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찰청·시도경찰청 수사부서장(경무관·총경) 자격제 실시	'21. 1월	
	중요사건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 및 지휘 체계 구축 계획 수립	'21. 2월	
	수사예산 집행지침 수립	'21. 2월	
	「수사부서 조사환경 및 유치장 환경 개선 계획」 수립	'21. 3월	
	'21년 상반기 수사경찰 인사결과 및 과·팀장 자격제 준수현황 분석	'21. 3월	
2/4분기	수사경찰 인사·교육 관련 역량강화계획 수립	'21. 4월	
	「범죄유형별 수사지휘 표준절차」 제작	'21. 5월	
	「수사지휘 및 수사서류의 위임전결에 관한 지침」 통합 제정	'21. 5월	
	'21년 제1차 수사경과 해제계획 실시	'21. 6월	
	「차세대 KICS 구축사업」 계획 수립	'21. 6월	
3/4분기	범죄통계시스템 고도화 ISP 사업	'21. 7월	
	'21년 하반기 경력경쟁채용 계획 수립	'21. 7월	
	제9회 형사법 능력평가 실시	'21. 7월	
	범죄통계 책자 발간	'21. 9월	
	'21년 하반기 수사경찰 인사결과 및 과·팀장 자격제 준수현황 분석	'21. 9월	
4/4분기	'21년 수사예산 집행 현황 점검 계획 수립	'21. 11월	
	'21년 전문수사관 선발	'21. 11월	
	'21년 제2차 수사경과 해제계획 실시	'21. 12월	
	수사권 개혁에 따른 KICS 개편 사업	'2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수사를 직접 접하는 사건관계인(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및 안전한 사회와 공정한 수사경찰을 기대하는 일반 국민
- 경찰 인원의 약 25%를 차지(약 3만 2,000명)하는 경찰청·시도 경찰청·경찰서 수사경찰

□ 기대효과

- 국민중심 수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수사경찰의 직무만족도 제고
- 경찰수사의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신속·정확하게 밝혀내는 책임있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위상 확립
-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1. 1. 1.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법 기관간 간 변화된 업무 환경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반영
- 신종·최첨단 범죄 등 현대범죄 특성에 맞는 통계원표 개선, 이에 따른 항목·수법 추가 및 분석기능 강화 등 「범죄통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과학적 수사정책 수립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범죄수사(Ⅰ-2-재정②)				
① 범죄수사(1231)	일반회계	1,627	1,705	
■ 범죄수사역량강화(311)		603	583	
■ 현장수사활동(312)		936	1,089	
■ 형사사법업무전산화(511)		88	2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수사 기반	예산·인프라 확보 노력도 (25%)	신규	신규	신규	90	①수사예산 확보 노력도(50%) ②국민 수사기여 활동 관련 예산 집행 노력도(25%) ③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노력도(25%) ※ 전년도 실적,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예산확보수준, 관련 예산 집행률, 관련 사업 진척도 <지표1>	관련 공문 / 보고서 / 디브리핑회계시스템 등
	책임수사 과제 등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KICS) 반영도 (25%)	-	-	82.6	85.0%	형소법 개정 등 수사권 개혁에 따른 국민중심 책임수사 과제 기능 등 개선 반영률을 목표치로 설정 ※ 기능요청 급증으로 반영률 하락이 예상되는 지표로, 전년 실적 대비 상승하는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시스템 반영 건수 / 책임수사 과제 등 전체 기능개선 요청건수 × 100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
수사 전문성	전문 수사 인력 확보(명) (25%)	-	-	-	90	①과·팀장 자격제 준수율(30%) ②자격관리제도 중 전임수사관 선발인원(30%) ③수사분야 경력경쟁채용 확대(40%) ※ 전년도 실적,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수사분야 경채자, 과팀장 자격제 이수율, 전임수사관 인원 <지표3>	수사분야 경채자, 과팀장 자격제 현황, 전임수사관 선발 명단(공문)
	전문 수사인력 양성(명) (25%)	2,166	3,215	3,138	3,123	교육과정 수료인원은 3년간 평균치보다 10% 높게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60%) 및 전문수사관 인증 인원은 추세치 고려하여 설정(40%)	수사연수원 전문 심화과정 수료 인원, 전문수사관 인증인원 <지표4>	'21년 경찰수사연수원 교육훈련 결과 통보(공문) 전문수사관 인증명단 (공문 및 KICS)

< 지표 1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예산·인프라 확보 노력도 >

- **설정배경** : “현장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 현장수사활동 지원 예산 확보 노력도 △ 국민 수사 기여활동 관련 예산 집행 노력도 △ 수사부서 조사환경 조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측정산식** : ①수사예산 확보 노력도(50%) + ②국민 수사기여 활동 관련 예산 집행 노력도(25%) + ③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노력도(25%)
- **'21년 목표산출** : 새롭게 발굴한 지표로 최근 실적치가 없는 상황으로, 모든 세부 지표 목표치를 '상' 수준 초과하는 것으로 설정한 점을 감안하여 합계 점수 90점 달성 시 만점으로 하는 적극적 목표치를 설정

① 수사예산 확보 노력도 (50%)

(개요) 현장 수사활동 지원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예산 증액에 대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 노력도 및 반영 성과를 지표로 선정

(산출방법) 예산 확보 및 성과를 점수표에 맞춰 산출 후 점수분포표에 맞춰 점수 부여
 ※ 현재 수사운영지원담당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단위사업인 ‘범죄수사’를 기준으로 산출
[항목별 배점표]

구분	예산 확보 노력도	신규 사업 반영 ※ 정부안 기준		기존 사업 증·감액 ※ 정부안 기준		
기준	국회·기재부 방문 설명 ※ 과장 이상	5억 이상	5억 미만	5% 이상 증액	5% 미만 증액	전년동 또는 감액
점수 ※ 방문횟수·사업당	1	5	3	2.5	1	0

<점수분포표>

구 분	50점	45점	35점	30점	25점
종합 결과 (항목별 배점 총합)	40점 이상인 경우	38점 이상 ~ 40점 미만	36점 이상 ~ 38점 미만	34점 이상 ~ 36점 미만	32 미만

※ 위 점수표로 계산 시 '18년은 40점, '19년 38점, '20년은 41.5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 3년 평균치인 39.83 이상인 '40점'을 만점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

구분		'18년	'19년	'20년
합계		40	38	41.5
예산 확보 노력도(1회당 1점)		11*1=11	12*1=12	6*1=6
신규사업 반영	5억 이상(사업당 5점)	3*5=15	1*5=5	2*5=10
	5억 미만(사업당 3점)	3*3=9	2*3=6	2*3=6
기존 사업 증·감액	5% 이상 증액(사업당 2.5점)	2*2.5=5	6*2.5=15	7*2.5=17.5
	5% 미만증액(사업당 1점)	0	0	2*1=2

② 국민 수사 기여 활동 관련 예산 집행 노력도 (25%)

(개요)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한 만큼, 수사활동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예산인 '검거보상금·참고인여비' 집행률을 지표로 선정·관리
(산출방법) (검거보상금 집행액 / 배정액)×0.5 + (참고인여비 집행액 / 배정액)×0.5

<점수분포표>

구 분	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집행률	90% 이상	89% 이상 ~ 90% 미만	88% 이상 ~ 89% 미만	87% 이상 ~ 88% 미만	87% 미만

※ 최근 3년간 실적치가 '18년 88.4%, '19년 86.2, '20년 91.9%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 3년 평균치(88.8%) 이상인 '90%'를 만점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

③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노력도 (25%)

(개요) 변화된 형사사법구조에 맞춰 경찰수사의 완결성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향상과 함께 인권친화적 수사환경 조성 필요, 수사부서 조사환경 완료를 지표로 선정·관리
(산출방법) '21년 12월말, 기준 수사부서 조사환경 완료(완료 예정) 경찰서 수

<점수분포표>

점수	25	22.5	20	17.5	15
사업완료 관서	30개 이상	28개서 이상 ~ 30개서 미만	26개서 이상 ~ 28개서 미만	24개서 이상 ~ 26개서 미만	24개서 미만

※ 최근 3년간 '수사부서 조사환경 완료 관서 수'가 '18년 14개서, '19년 19개서, '20년 22개서로 상승 추세인 점을 감안, 추세치(4개서) 이상인 30개서를 만점으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지표 2 국민중심 책임수사 과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반영도(>%)>

○ 설정배경 : '21. 1. 1.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각종 개정사항을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에 반영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 진행중('21년 60.4억원)으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관련 제도 및 각종 기능개선 요구사항이 형사사법정보 시스템(KICS)에 구현되어 표준화된 업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스템 반영 정도를 정량화하여 평가

○ 측정산식 : (책임수사 과제 시스템 반영 건수 / 책임수사 과제 등 전체 기능개선 요청건수) × 100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 방법

- (요청건수) 기능별 전산개발의뢰 사항 중 단순한 기능개선 사항 등은 제외*하고 책임수사와 관련된 과제 시행에 따라 업무절차가 변경되어 KICS 구현이 필요한 사항

* 단순 기능개선, 법령·지침에 반하는 내용, 기술상 구현 불가능한 내용은 제외

<현재까지 접수된 '21년 책임수사 관련 주요 전산개발 의뢰과제>

1	수사경찰 인사관리 개편	6	사건관리과 신설 등 경찰 수사관리체계 구축
2	수사지휘역량 종합평가시스템 구축	7	변호인 조력권 보장
3	사건배당시스템 도입	8	자금추적·회계분석 역량 강화
4	영장심사관 확대	9	추적시스템 고도화(전화금융사기)
5	수사심사관 신설	10	통신비밀보호법 개정(통지)

- (산출건수) 자체평가 보고서 등록일 기준(10월말 예상),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테스트·시범운영 등이 진행중(50% 이상)에 있는 과제 건수(12월 추가점검 시 최종 확인)

○ '21년 목표산출 : 책임수사 추진과제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고도화 이후 각 기능별 기능개선요구사항 반영을 목표로 추진, 수사권 개혁 법률 개정에 따른 개발 요청 급증이 예상되어 일상적인 업무 수행으로는 반영률 감소가 예상되나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21년 목표치는 '20년도 반영률을 상회하는 85.0%로 설정*

* '20년도 관련 개발 반영률 82.6% = 총 요구건수 23건 중 19건 반영

<지표 3 전문수사인력 확보>

○ 설정배경 : 수사 분야에서 경력있는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여 전문성과 활력을 불어넣고, 과·팀장 자격제 시행 등을 통해 수사부서 관리자인 과·팀장의 수사지휘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통한 수사실무자의 수사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제 준수현황을 종합하여 지표로 산정

○ 측정산식 : 과·팀장 자격제 준수율(30%) + 자격관리제도 중 전임수사관 선발인원(30%) + 수사 분야 경력경쟁채용 확대(40%)

구분	30점	28.5점	27점	25.5점	24점	22.5점	21점
① 과·팀장 자격제 준수율	95%이상 준수	93% 이상 95% 미만	91% 이상 93% 미만	89% 이상 91% 미만	87% 이상 89% 미만	85% 이상 87% 미만	85% 미만
② 자격관리제도 중 전임수사관 인원	10,000명 이상	9천명 이상 1만명 이하	8천명 이상 9천명 이하	7천명 이상 8천명 이하	6천명 이상 7천명 이하	5천명 이상 6만명 이하	5천명 이하
구분	40점	38점	36점	34점	32점	30점	28점
③ 수사분야 경력경쟁채용 확대	전년대비 10%이상 확대	8% 이상 10% 미만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2% 이상 4% 미만	0% 이상 2% 미만	감소

- '21년 목표산출 : ① 과팀장 자격제 준수율은 등락을 반복하는 지표('19년-上 94.3% 下 94.6% '20년-上 93.6% 下 94.1%)로 도전적인 목표인 95% 준수를 목표로 설정
- ② '21년 「자격관리제」 본격 추진으로 처음 도입되는 전임수사관 선발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의 50% 조기선발을 위해 적극적인 목표 설정
- ③ 수사분야 경력경쟁채용 확대는 그간 선발인원이 정채된 분야로 적극적인 목표치인 10% 확대를 목표로 설정함

< 지표 4 전문수사인력 양성 >

- 설정배경 : 수사교육의 내실화 및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이러한 전문 수사교육을 바탕으로 전문수사관(마스터)으로 양성
- 측정산식 : 수사연수원 전문·심화 교육수료 인원(60%) + 전문수사관 인증 인원(40%)
- '21년 목표 산출 : '21년 목표는 평균치 보다 10% 높게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산식별 가중치 등을 적용한 인원은 3,107명임
- ※ 측정산식에 따른 최근 3년간의 평균치는 2,839명으로 도전적인 목표설정을 위해 평균치 보다 10% 상승한 3,123명을 목표치로 설정하였음

28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 추진배경

- 수사권 개혁에 따른 제·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 절차에 큰 변화가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안착 등 제반 조치 필요
 - ※ '21. 1. 1.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 / 제정 대통령령·부령 시행
- 국민에게 수사권 개혁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절차에 대한 법률 시행 후 효용 분석 및 국민 인식 향상 등 노력 필요
-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수사권 개혁의 향후 방향 및 기반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제·개정 법령과 관련된 연계법령 정비 등 후속 법제 정비]

- 형소법 개정으로 경·검이 대등·협력관계로 전환되었으나 형사사법과 관련된 연계법령은 아직 완전히 정비되지 않고 있어
 - －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가 통일성 있게 작동하도록 연계 법령 제·개정 등 정비 추진(단순정비 51개, 제도개편 76개)
 - ※ 향후 추가 개정이 필요한 법령 등은 적극 발굴하여 개정 추진 예정
 - － △ 법령 주관 부처와의 협의 △ 개정 필요 법령 검토 및 의견 제시

[② 경찰 책임수사체계 안정 및 수사주체성 확립 노력 전개]

- 현장 수사관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개정 법령에 따른 변화된 수사절차의 현장 안착 기반 마련
 - － 현장 수사관이 수사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 마련·배포
 - － 수사과정의 질의·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상담기구 운영

- 국가 형사사법체계 안정을 위한 기관 협의체 마련 및 협력 추진
 - － ‘경찰-해경-검찰’ 등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수사기관협의회」 운영 및 경찰청-대검찰청 간 실무 세부절차 신속 협의 실시

[③ 수사권 개혁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소통 활동 전개]

- <대내> △현장 설명회·간담회 개최 △수사구조개혁 플랫폼 활성화 △세미나·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상호 소통 강화로 일선 공감 확보
 - ※ 전국 수사관 간의 상호 교류·현안 논의가 가능한 다양한 소통 채널 운영
- <대외> 제·개정 법령 및 변화된 수사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 확산 제고 →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도모
 - ※ △언론기고·출연 △대국민 홍보자료 배포(경찰 관련 정책·행사에 반영)

[④ 국민 신뢰 증진을 위한 수사제도 개선·수사권 개혁 지속 추진]

- <대내> 수사절차에 참여하는 국민의 인권 보호·편익 증진을 위한 수사 제도 및 절차상 문제점 발굴·분석 및 대책 마련
 - － △이의제기·민원 △현장 수사관 건의사항 등에 대한 개선책 마련
- <대외> 수사-기소 완전 분리 등 수사권 개혁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추진 기반 마련
 - － 검찰 수사권 폐지·별도 수사기관 설립 등 관련 논의에 대응
 - － 국회·정부·언론의 수사권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도 제고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단순정비 법령(14개) 개정 추진 및 후속조치	'21. 2~3월	①
	수사구조개혁 플랫폼(제·개정 법령 Q&A) 활성화	'21. 1~3월	③
	현장 수사실무 상담·지원체계 운영	'21. 1~3월	②
2/4분기	제도개편 법령(76개) 자체 수정안 작성 및 관계부처 협의 추진	'21. 4~6월	①
	개정 수사실무지침 관련 교수요원·현장수사관 대상 특강 실시	'21. 4월	③
	경찰-해경-검찰 간 「수사기관협의회」 규칙 제정 및 운영	'21. 6월	②
	검찰개혁 관련 논의사항 검토 및 개혁과제 연구	'21. 5~6월	④

3/4분기	제도개편 법령 정비 추진(1차)	'21. 9월	①
	수사권개혁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배포 및 대응	'21. 7~9월	④
	검찰의 불합리한 요청 관련 현장 의견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21. 4~9월	③
4/4분기	제도개편 법령 정비 추진(2차)	'21. 11월	①
	연계법령 개정 등 추진사항 평가 및 후속조치	'21. 12월	①
	검찰의 불합리한 요청 관련 현장 의견 취합 및 개선방안 마련	'21. 10~11월	③
	경찰-해경-검찰간 「수사기관협의회」 운영	'21. 12월	②
연중	경찰-검찰간 수사절차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	연중	③
	추가 논의 대응 보고서 작성 / 해외 사례 연구·검토	연중	④
	국회·정부·언론·시민단체 등 대상으로 소통 활동 지속 전개	연중	④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의 주체성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경찰 위상을 제고하고 수사관에게 자긍심 부여
- <국민>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서비스를 제공받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수사구조 확립을 통한 국민 인권 침해 방지
- <검찰> 독점적인 권한을 분산하여 공소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

□ 기대효과

-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로 적정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를 정착, 형사사법시스템 선진에 기여
 - －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적정절차모형’에 해당하는 구조로 경찰은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검찰은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향상되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 향상 기대
-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보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 및 편익 증대
 - － 검찰 지배적 수사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호 견제와 협력하면서 국민지향 형사사법서비스를 펼쳐가는 문화 형성
 - － 수사과정에서 번잡한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이중 조사가 사라짐으로써 국민편익 향상

- 경찰과 검찰이 상호 감시와 견제로 검사의 부당한 간섭에 따른 ‘제식구 감싸기’, ‘사건 가로채기’ 등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어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 정의 실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수사권개혁 관련, 연계법령 정비 노력 (40%)	12.4	14	16	18	하단 참조	{{법령개정 검토보고서 작성×5} +(국회·학계·언론 등 배포·대응×3)}×0.1	공문, 검토보고서 등
제·개정 법령 및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 제고 노력 (30%)	-	-	7.25	8.0	"	(현장 간담회 등 참여, 언론 등 홍보 활동, 전문가 면담·학술세미나 등 횟수×0.1	공문, 검토보고서 및 언론홍보자료 스크랩 등
수사제도 개선·수사권개혁 지속 추진 (30%)	-	-	-	8.0	"	{{검토보고서 작성·배포 횟수} +(QnA 상담×0.1 +지침 개정) +(관련 기관 협의 개최 횟수)}×0.1	공문, 검토보고서 등

<지표 1> 수사권개혁 관련 연계법령 정비 노력

○ 지표 설정의 적절성 (기존지표 목표치 상향조정)

-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시행('21.1.1.)되었으나 일원화된 형사사법 체계 구축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연계법령에 대한 제·개정 정비가 과제로 남아있음
- 각종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불균형한 경·검 관계가 반영된 수사절차 규정’을 발굴·개정하는 작업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수사권 조정 취지를 구현하는 최우선 과제임
- 법령 개정 지연으로 수사 현장에서 혼선·착오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에게 큰 피해 우려, 면밀한 검토 및 적극적인 개정 활동 필요

○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및 측정산식 : [①+②] × 0.1

(기존지표 목표치 상향) △20년도 목표치: 16점 △21년도 목표치: 18점(▲2.0), 지난 3년 평균 14.1의 20% 향상치(추세치 13%)인 16.96에 비해 1점 이상 향상된 도전적 목표치 설정

- 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후속·연계 법제 정비 관련 검토보고서 작성·주무부처 의견조회 및 업무협약 개최 (목표치 120점 : 1회 5점)
- ② 국회·언론·학회 등에 관련 검토보고서 배포 및 대응 (목표치 60점 : 1회 3점)

<지표 2> 제·개정 법령 및 변화된 수사절차 이해도 제고를 위한 대내·외 소통 노력

○ 지표 설정의 적절성

- 수사권 개혁 경과 및 효용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인식 제고로 제도 개선 효과 향상
- 하위·연계 법령의 제·개정을 지속 추진해야 하는 상황으로 국회·언론 등의 관심 필요
- 개정 형사소송법의 해석·적용이 이루어지는 법조계 및 관련 학회의 이해도 제고 필요
- 국민과 언론·학계·법조계 등 외부 대상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내용과 의미, 수사구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다양한 소통 노력 전개, 이에 대한 성과 측정

○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및 측정산식 [①+②+③] × 0.1

(기존지표 목표치 상향) 20년 목표치 7.25점, 21년 목표치 8.0점 (▲0.75, 전년대비 10% ↑)

- ① 현장 경찰 설명회(대내강연)·간담회 개최 및 지원(목표치 20점 : 개최 2점, 지원·참여 1점)
※ 전년도 사이버교육 이수율 등 단순 이행 지표는 과감히 삭제, 능동적 활동 측정 지표 마련
- ② 언론(라디오, TV, LIVE 매체 등) 출연 및 SNS 등 활용 콘텐츠 게시(목표치 30점 : 1회 1점)
- ③ 전문가(언론·법조인·학자) 면담, 유관기관 예방, 외부강연, 학술세미나 등 발제·참석 (목표치 20점 : 면담 1회 1점, 유관기관 예방·대외 강연·세미나 등 1회 2점)

<지표 3> 수사제도 개선·수사권 개혁 지속 추진 노력

○ 지표 설정의 적절성

- 제·개정 법령에 따른 기존 수사절차의 큰 변화로 단계별 처리절차에서 현장 혼선, 기관 간 의견 대립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통한 신속한 안정화 필요
- 기존 절차·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법령 제·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수사권 개혁 지속 추진에 따른 기반 마련 필요

○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및 측정산식 [①+②+③] × 0.1

- ① 수사제도 개선 관련 보고서, 수사권 개혁 관련 국회·정부 대응보고서 작성·배포 (목표치 30점 : 제도개선 관련 1회 1점, 수사권개혁 관련 1회 2점)
- ② 제·개정 법령 시행 관련 기관 간 실무협의(경·검) 및 공식 협의회(경·검·해경 등) 개최 (목표치 30점 : 실무협의 개최 1회 2점, 공식협의회 개최 1회 5점)
- ③ 현장 수사실무 상담지원체계 운영 및 수사실무지침 현행화 (목표치 20점 : 현장 QnA 상담 1회당 0.05점, 지침 개정 및 추가지침 하달 1점)
※ 상반기 중 관련 업무를 타부서에 일부 이관 예정, 이를 감안한 목표치 설정

29 국민중심 책임수사 완성을 위한 심사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개정 형소법 시행('21. 1. 1.)에 따라 경찰은 모든 수사 과정과 결과에 국민 눈높이를 충족하는 ‘국민중심 책임수사’ 구현 필요
- － 이를 위해 3중 심사체계*를 비롯, 탄탄한 인적·조직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발전적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3중 심사체계]

- ▶ (① 수사심사관)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를 포함한 쏘 수사부서 대상 △영장신청 △불송치 결정 등 ‘수사단계’에서 사건심사·분석
- ▶ (② 책임수사지도관) 종결사건 정기(수시)점검 등 ‘수사종결’ 후 사건심사
- ▶ (③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심의신청·미제사건 등에 대한 ‘외부’ 심사(확대시행 예정)

- － 발굴된 신규과제들을 기반으로 인권·현장 중심 심사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견인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촘촘하고 면밀한 사건심사를 위한 3중 심사체계 완성]

< 주요 심사·점검 체계 >



- 강제수사 절차(수사심사관)와 수사 전반에 대한 심의·점검 기능 강화(수사심사관, 시·도경찰청 책임수사지도관), 과오·부실수사 방지

- ▶ **(인력)** 총 784명, △시·도경찰청 147명(수사심사관 46명 + 책임수사지도관 101명), △경찰서 637명(수사심사관)
- ※ '20년 배치인원 565명(책임수사지도관 73명, 수사·영장심사관 492명) 대비 219명 증원
- ▶ **(기구)** 12개 시·도경찰청에 수사심사담당관실(課) 설치 / 149개 1급지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실(課) 설치
- ※ 심사관실 미설치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는 '수사과' 소속으로 운영

- 시민·전문가로부터 수사과정·결과를 심사받는 '경찰수사 심의 위원회'를 도입, 경찰수사에 대한 객관적 심사를 확대

- ▶ **(위원구성)** 법률·수사 전문가에 한정된 외부위원 구성을 해당 분야에서 5~10년 이상의 식견을 갖춘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다원화
- ※ <구성> 20~40명의 법률·수사 전문가 +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
- ▶ **(심의대상)** △수사심의 신청 사건 △불송치·내사·미제 등 종결 사건 △시·도 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중요사건 등
- ▶ **(심의효력)** 시·도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함
- ▶ **(추진일정)** 대전·강원청 시범운영 중, 시범운영 결과 분석 및 확대시행(3월 中)

-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부여된 수사경찰의 비위 등에 대한 1차적 감찰권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사감찰 기능 신설 추진

- ▶ **(구성)** △국수본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 △시·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수사과)
- ▶ **(인원)** △국수본 수사심사정책담당관실(수사심사계) △시·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실(수사심의계·책임수사지도관)의 일부 인원을 '수사감찰관'으로 지정
- ▶ **(선발)** 「경찰감찰규칙」을 준수하여, 수사감찰 적격심사를 통해 인성·청렴성 등을 두루 갖춘 경찰관 선발

- 수사감찰 제도 정착을 위해 엄격한 적격심사를 거쳐 선발된 수사감찰관 대상으로 감찰 전문교육도 병행 추진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등 업무기반 마련]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21. 1. 1.)에 따라 그간 경찰에서 보관하던 내사·미제사건 외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기록을 추가로 보관

-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사건병합 등 형사절차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법령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와 소양을 갖춘 전담인력 양성

※ '21년 상반기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에서 쏘 기록관리 전담 요원 대상 교육 실시 예정

- 수배자 검거 수사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활용되므로 체계적인 업무기반을 통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경찰청에 '사건기록관'을 설치하고, 경찰서에 '사건기록 보관실' 설치 추진 中

- ▶ **(지침 수립)** 내사·미제사건뿐만 아니라 △불송치 △수사중지 사건기록 보관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한 경찰 사건기록 통합 관리지침 수립
- ▶ **(시스템 구축)**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및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와 연계, 경찰 사건 기록물 관리시스템(가칭) 구축 예정
- ▶ **(법령)**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찰사건보존규칙(가칭) 제정 및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규칙 개정 실시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제 구축]

-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지침 마련 및 방식 개선

- ▶ **(세부 통지지침 마련)** 형사소송법·수사준칙·경찰수사규칙 등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및 신규 통지절차*에 대한 세부 통지지침 마련
* △불입건 결정 △수사결과 통지 △수사중지사건 이의처리결과 통지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 등
- ▶ **(공무원 등 수사개시통보 지침 정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수사 개시통보 대상자들에 대한 통보 관련 규정 및 방식 등을 규정한 지침 정비
- ▶ **(통지 관련 종합 안내문 제작)**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받을 수 있는 통지와 관련된 내용이 종합된 안내문을 제작·배포
- ▶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방식 개선)** 수사목적으로 금융정보 확인 시 금융기관에서 계좌 명의인에게 제공사실을 통보하는 방식을 기존 등기우편에서 SNS 알림 및 휴대전화 문자전송으로 변경 추진 중 (연간 약 1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기대)

- 이의신청권 보장을 위한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등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KICS 사건 진행·종결이 차단되도록 시스템 개선

* 다른 사건진행상황 통지와 달리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중요성이 특히 높음

- 경찰서에서 고소·고발 등 민원 접수 시, 변호사도 함께 참여하여 형사·민사·행정 등 종합적·전문적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수사 쉼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수사관 자격관리제* 등과 연계하여 사건 유형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수사관 자격별로 사건을 배당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 <수사관 자격관리제> ①예비수사관(수사부서 전입 전)→②일반수사관(수사경력 3년 미만)→③전임수사관(경력 3년 이상)→④책임수사관(경력 7년 이상, 시험·심사로 선발)

- － 아울러, 사건배당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건배당 통합지침 개정 및 무작위 배당 프로그램 KICS 도입 추진

▶(사건배당 통합지침 일선 정착) 사건배당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既 도입된 무작위 배당 지침 개선 등 일선 정착방안을 추진

※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역량있는 수사관에게 난이도 있는 사건을 배당할 수 있도록 사건 재배당 시 자체 위원회 심의 등 지침 마련 검토

▶(무작위 배당 프로그램 KICS 탑재) 既 도입된 무작위 배당 프로그램을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KICS에 탑재하여 편의성을 높이는 등 시스템 개선

- 내사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개선방안 마련

▶(내사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수사사건과 동일한 보고·지휘 절차 확립
△중요 내사사건은 시·도경찰청 중심 수사 △내사사건에도 3중 심사체계 적용

▶(수사실무지침 개선) 형소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고 내사·수사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실무지침을 개선·하달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법 연구 및 개발]

- 급변하는 범죄환경에 대응하는 수사기법 연구·지원 강화

▶(수사자료 분석) 금융·회계자료 및 통신자료 등 방대한 양의 수사자료를 분석하고 시각화 할 수 있는 분석프로그램 활용 활성화, 교육자료 제작

▶(수사기법 경진대회) 현장 수사관들의 수사기법 등을 전국 수사관에게 발표 및 공유하고 심사위원 심사를 통해 우수 기법을 선발하는 대회 추진

▶(별정통신사와의 협조 시스템 개선) QR코드를 통한 통신자료 등 회신시스템을 마련하여 회신속도를 높이고, 야간·휴일에도 자료 회신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현재 별정통신사에게 통신망을 대여해주고 있는 주요 통신 3사(KT, SKT, LGU+) 중 KT, LGU+와는 연내 개선 예정이며 SKT와는 '22년 이후 추진 예정

▶(출입국 규제 등 매뉴얼 제작) 형소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출입국 규제 조치 및 통신수사 절차 등 수사기법 관련 매뉴얼 제작

▶(수사자료 분석포털 제작) 수사자료 분석프로그램 사용자 간 의견 교환, 사례 공유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안성이 마련된 별도 포털을 제작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1 경찰수사 심사체계 고도화 계획	'21. 2월	
	경찰 사건기록 관리지침 수립	'21. 2~3월	
	경찰 사건 기록물 관리 시스템 구축	'21. 3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세부 통지지침 마련	'21. 3월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확대운영 계획	'21. 3월	
2/4분기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규칙 개정	'21. 4월	
	내사사건에 대한 관리 개선방안 마련	'21. 5~6월	
	별정통신사와의 협조시스템 개선	'21. 5~6월	
	경찰사건보존규칙(가칭) 제정, 기록관리 전담 요원 대상 교육 실시	'21. 5~6월	
3/4분기	기록관리 전담 요원 대상 교육 실시	'21. 8~9월	
	국가수사본부, 수사분야 감찰기본계획 수립(하달)	'21. 9월	
	사건배당 시스템 개선	'21. 9월	
	수사감찰 제도 정착을 위한 감찰 전문교육 실시	'21. 10월	
4/4분기	기록관리 전담 요원 대상 교육 실시	'21.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수사를 직접 접하는 사건관계인(피해자, 피의자, 참고인) 및 안전한 사회를 기대하는 일반 국민
- 경찰 수사서류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 경찰인원의 약 25%를 차지하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경찰

□ 기대효과

- 국민중심 책임수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심사체계 등 기반을 마련,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수사경찰의 직무만족도 제고
- 지침 수립, 법령개정 등을 통해 내실있는 경찰 사건기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록물 업무 수행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자문료(1231-311-210-01)				
①	수사이의심사위원회(1231-311-210-01)	일반회계	3.45	3.45
경찰서 사건기록 보관실 구축(023-1200-1231-312)				
②	수사서류 보관실 개선	일반회계		91
	■ 수사서류 보관실 개선(210-02)		-	3.7
	■ 수사서류 보관실 개선(420-03)		-	41
	■ 수사서류 보관실 개선(420-04)		-	0.6
	■ 수사서류 보관실 개선(420-05)		-	0.1
	■ 수사서류 보관실 개선(430-01)		-	4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위한 심사체계 구축 노력도 (25%)	신규			70	① 법령·지침 등 제도 마련(25%) ② 불송치 결정사건 심사점검(25%) ③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25%) ④ '심사관' 전문교육 실시(25%)	법령 제·개정, 사건심사 건수, 심의위원회 발족 및 개최횟수, 교육이수율 등 <지표1 참고>	시행 공문, 보고서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등 업무기반 마련 (25%)	신규			70	① 유관기관 협의 등 노력도(25%) ② 법령 정비 및 지침 수립·시행(25%) ③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관리(25%) ④ 기록관리 전문교육 실시(25%)	협의 건수, 법령·지침 정비 및 수립, 관련 사업 진척도, 교육 이수율 <지표2 참고>	관련 공문/보고서/ 기록관리시스템 등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 구축 이행도 (25%)	신규			70	① 사건 진행상황 통지율(50) ② 사건 진행상황 통지 강화를 위한 노력도(20) ③ 수사민원상담센터 상담 건수(30)	사건 진행상황 통지율, 통지 관련 지침 등 시행 건수, 수사민원 상담 건수 <지표3 참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추출, 시행 공문, 수기취합
수사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25%)	신규			70	① 수사과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40) ② 수사기법 연구·지원 강화 등 노력도(40) ③ 별정통신사와의 협조시스템 개선(20)	수사 공정성 및 수사기법 관련 지침 등 시행 건수, 별정통신사와의 협조시스템 개선 여부 <지표4 참고>	시행 공문

< 지표 ① :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위한 심사체계 구축 노력도 >

- **(지표 선정)** 심사체계 구축은 핵심지표로, 신설된 제도인 만큼 관련 법령 제 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내부 심사 점검하며, 나아가 심의위원회 운영 등 외부통제 창구를 마련, 또한 전문 심사관 양성을 위해 교육도 진행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표로 설정함
- **(‘21년 목표산출)** 신규 지표로 선정하여 전년도 자료가 없는 상황이나 해당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합계 70점 이상 달성 시 만점으로 설정
- **(측정산식)** ① 법령·지침 등 제도 마련(25%) ② 불송치 결정사건에 대한 심사·점검(25%) ③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25%) ④ 심사관 전문교육 실시(25%)
- **(측정방식)** 해당 세부 기준에 따라 점수 차등화(각 항목당 25점 상한)

구분	① 법령·지침 등 제도 마련		② 불송치 결정사건 심사·점검				③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		④ 심사관 전문교육			
기준	- 법령 제·개정 - 관련 지침 수립		- 전제 불송치 사건 대비 사건심사·점검 건수				- 심의위원회 발족 - 심의위원회 개최수		- 전체 심사관 대비 교육이수자			
점수 (100점)	법령 제·개정	지침 수립	70% ~	64~69%	58~63%	~53%	위원회 발족	위원회 개최	57% ~	51~56%	45~50%	~44%
	(건당) 20점	(건당) 2점	25	20	15	10	20	(회당) 1점	25	20	15	10

- ※ (① 법령 제·개정 등) 법령 제·개정과 내부지침 수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점수 차등 배분
- ※ (② 불송치 결정사건 심사·점검) '20년 수사심사관 제도 시범운영 결과 심사 비율이 45%에 그쳤으나, '21년부터 본격적인 '경찰수사 심사체계' 구축 추진을 위해 목표치를 70%로 적극 설정
- ※ (③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국정과제 연계지표로 선정된 만큼, 조속한 위원회 발족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구분하여 점수 배분
- ※ (④ 심사관 교육) 年 최대 4,000명 상당만 교육할 수 있는 수사연수원 여건 등을 고려, 전체 심사관(683명) 중 정원으로 반영된 인원(393명)이라도 교육하기 위해 만점을 57%(393/683명) 설정

< 지표 ② :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등 업무기반 마련 >

- **설정배경** :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등 업무기반 마련을 위해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 등 노력도 △경찰 사건기록 관련 법령 정비 및 지침 수립·시행 노력도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관리 △관리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 이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측정산식** : ①유관기관 협의 등 노력도(25%) + ②법령 정비 및 지침 수립·시행 노력도(25%) + ③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관리(25%) + ④교육 이수율(25%)
- **‘21년 목표산출** : 새롭게 발굴한 지표로 최근 실적치가 없는 상황으로, 모든 세부 지표 목표치를 '상' 수준 초과하는 것으로 설정한 점을 감안하여 합계 점수 80점 달성 시 만점으로 하는 적극적 목표치를 설정

① 유관기관 협의 등 노력도 (50%)

(개요)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기록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만큼, 유관기관 협의 등 노력도 및 반영 성과를 지표로 선정

(산출방법) 유관기관 협의 회수에 따라 점수 차등 배분

<점수분포표>

구 분	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종합 결과 (항목별 배점 총합)	10회 이상	8회 이상 ~ 10회 미만	5회 이상 ~ 8회 미만	3회 이상 ~ 5회 미만	3회 미만

② 법령 정비 및 지침 수립·시행 노력도 (25%)

(개요) 체계적인 업무기반 설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이 필수적인 만큼, 경찰 사건기록 관리와 관련된 법령 정비 및 지침 수립·시행 노력도를 지표로 선정·관리

(산출방법) 법령 정비 건당 20점, 지침 수립·시행 건당 10점

※ 법령 제·개정과 내부지침 수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점수 차등 배분

<점수분포표>

구 분	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종합 결과 (항목별 배점 총합)	90점 이상	70점 이상 ~ 90점 미만	50점 이상 ~ 70점 미만	30점 이상 ~ 50점 미만	30점 미만

③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25%)

(개요) 변화된 기록물 관리체계에 맞춰 경찰 사건기록 관리의 효율성 및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산 관리 시스템이 필요, 경찰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관리를 지표로 선정·관리

(산출방법)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40점, 사용 매뉴얼 제작 30점, 현장의견 반영 건당 5점

<점수분포표>

점수	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종합 결과 (항목별 배점 총합)	90점 이상	70점 이상 ~ 90점 미만	50점 이상 ~ 70점 미만	30점 이상 ~ 50점 미만	30점 미만

※ 경찰 사건기록 관리업무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신설되어 현재 업무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만큼, 신속한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구축, 사후관리(매뉴얼 제작, 현장의견 반영)로 구분하여 점수 배분

④ 기록관리 전문교육 실시 (25%)

(개요) 변화된 기록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기록물 담당 인력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 기록물 관리 교육 이수율을 지표로 선정

구 분	25점	22.5점	20점	17.5점	15점
이수율	40% 이상	35% 이상 ~ 40% 미만	30% 이상 ~ 35% 미만	25% 이상 ~ 30% 미만	25% 미만

※ 현 기록물 담당 인력 총 275명(시·도경찰청 18명, 경찰서 257명) 중 최소 교육 필요 인원인 확보정원 99명(36%)에 대해 우선 평가

<지표 ③ :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제 구축 이행도 >

- 설정 배경 : 고소인 등 피해자 중심 수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사체제를 구축하는 노력도를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회복적 정의 실현
- 측정산식 : 사건 진행상황 통지율(50) + 사건 진행상황 통지 강화를 위한 노력도(20) + 수사민원 상담 건수(30)

- 사건 진행상황 통지율(50점) :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수사 개시, 진행중, 종결 시 통지율을 목표치로 설정 ※ 통지율 = 통지건수/사건처리건수 x 100 (KICS 시스템 산출)

최근 3년 평균 통지율* 대비	~ -5%p 미만	- 5%p 이상 ~ 0%p 미만	0%p 이상 ~ 5%p 미만	5%p 이상 ~
배 점	20점	30점	40점	50점

* 최근 3년 평균 통지율은 KICS에서 산출 결과를 회신받는 대로 즉시 제공 예정

- 사건 진행상황 통지 강화를 위한 노력도(20점) : 사건 진행상황 통지 강화를 위한 실무지침 마련, 시스템 개선 등 개선책 마련* 건수에 따라 노력도 측정

* 개선책 마련은 관련 개선책 시행 공문으로 측정

개선책 마련	0건	1건	2건	3건	4건 이상
배 점	0점	5점	10점	15점	20점

<통지 강화 관련 개선책 예시>

- ▶ 사건 진행상황 세부 통지지침 마련
- ▶ 불송치 결정 시 고소인등에 대한 통지 의무화(KICS 개선)
- ▶ 공무원 등 수사개시통보 관련 지침 정비
- ▶ 통지 관련 종합안내문 제작

- 수사민원 상담 건수(30점) : 고소·고발 등 민원을 접수하는 피해자등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수를 작년 서비스 제공 건수 추정치*와 비교하여 목표치 설정

* 작년 제공건수는 공문이 아닌 업무연락 방식으로 취합하여 추정치에 해당하여 총 195,317건

'20년 제공 건수 추정치 대비	~ -5% 미만	- 5% 이상 ~ 0% 미만	0% 이상 ~ 5% 미만	5% 이상 ~
배 점	0점	10점	20점	30점

- '21년 목표산출 : '21년 신설된 과에서 신규 설정한 지표인 점을 고려, 각 노력도의 중요도 등을 고려한 목표치의 70점 이상 달성 시 만점(25%)

<점수분포표>

점수	25%	22.5%	20%	17.5%	15%
노력도	70점 이상	67점 이상 ~ 70점 미만	64점 이상 ~ 67점 미만	61점 이상 ~ 64점 미만	61점 미만

<지표 ④ : 수사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

- 설정 배경 : 수사권 개혁으로 최우선 과제가 된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사기법을 전문화·고도화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수사경찰 구현
- 측정산식 : 수사과정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40) + 수사기법 연구·지원 강화 노력도(40) + 별정통신사와의 협조시스템 개선 진척도(20)

-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40점) :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 마련, 시스템 개선 등 개선책 마련* 건수에 따라 노력도 측정 * 개선책 마련은 관련 시행 공문으로 측정

개선책 마련	0건	1건	2건	3건	4건 이상
배 점	0%	10%	20%	30%	40%

<수사 공정성 확보 관련 개선책 예시>

- ▶ 사건배당 지침 개선 등 일선 정착
- ▶ 무작위 배당 프로그램 KICS 탑재
- ▶ 내사사건에 대한 관리강화
- ▶ 형소법 개정에 따른 수사실무지침 개선
- ▶ 수사관 자격별 사건배당 기준 마련

- 수사기법 연구·지원 강화 노력도(40점) : 수사기법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는 자료 제작, 행사 계획 등 개선책* 마련 건수에 따라 노력도 측정

* 개선책 마련은 관련 개선책 시행 공문으로 측정

개선책 마련	0건	1건	2건	3건	4건 이상
배 점	0%	10%	20%	30%	40%

<수사기법 연구·지원 개선책 예시>

- ▶ 수사자료 분석시스템 교육자료 제작
- ▶ 수사기법 경진대회 추진
- ▶ 출입국 규제조치 관련 매뉴얼 정비
- ▶ 수사자료 분석포털 제작
- ▶ 통신수사 길라잡이(매뉴얼) 정비

- 별정통신사와의 협조시스템 개선(20점) : '20년부터 추진해온 별정통신사와의 협조시스템 개선사업에 따라 주요 통신사(KT, SKT, LGU+) 망 구축에 따라 배점

주요 통신사 망 구축 개수	0개	1개	2개 이상
배 점	0%	10%	20%

- '21년 목표산출 : '21년 신설된 과에서 신규 설정한 지표인 점을 고려, 각 노력도의 중요도 등을 고려한 목표치의 70점 이상 달성 시 만점(25%)

<점수분포표>

점수	25%	22.5%	20%	17.5%	15%
노력도	70점 이상	67점 이상 ~ 70점 미만	64점 이상 ~ 67점 미만	61점 이상 ~ 64점 미만	61점 미만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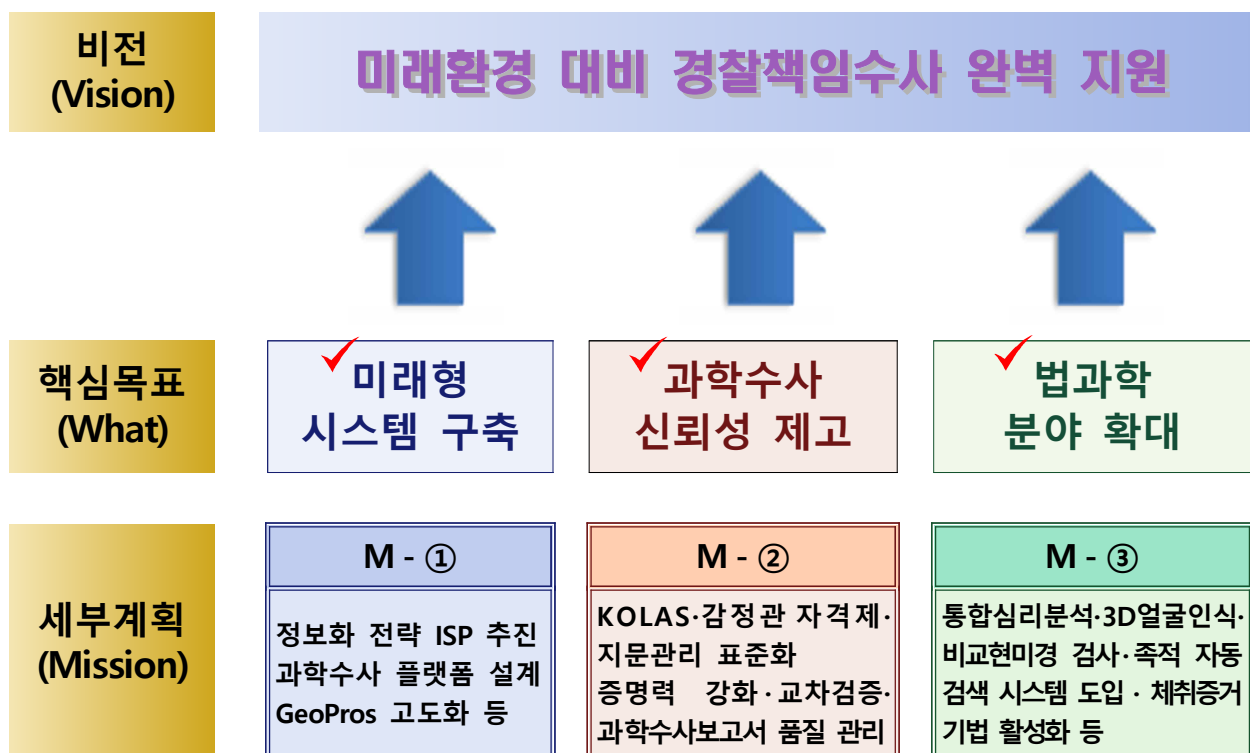
- 사건 조기 진압 및 예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정확한 범죄 분석 및 예측을 통한 과학 치안 관련 수요가 점차 증대
- 수사지원뿐만 아니라 치안 쏠 기능의 문제해결자로서 과학수사 역할을 확장하고, 범죄트렌드 변화에 따른 선제적

기법 고도화 필요

- 증거채취 및 신원 확인율 등 효율성뿐만 아니라 증명 가능성·신뢰성 등 ‘법정(法庭)’ 기준*을 고려한 과학수사로 책임수사 지원 강화

* 판례는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전문성 △이론적 근거 △검증 가능성 △결과의 객관성 △표준화된 절차와 자격 준수 여부 등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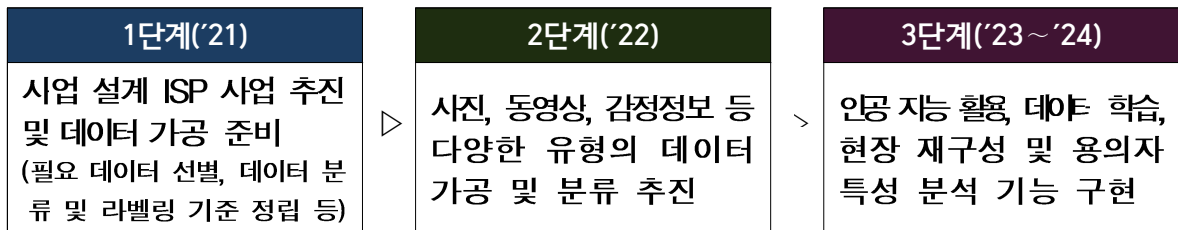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D.N.A(Data, Network, AI) 기반 미래형 과학수사시스템 구축]

- <정보화 ISP 추진> 과학수사 활동 결과를 수집·관리하는 수준에서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단계로 도약,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

※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목표 및 전략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정보화 전략과 비전을 정의하고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도출과 로드맵을 수립하는 활동



- ISP 결과를 통해 현장 재구성, 범죠통형 및 용의자 특성 등 추정이 가능한 지능형 시스템 설계

지능형 과학수사 플랫폼(案)

- (범죠통장분석) 현장사진, 현장기록, 증거물 위치 등 현장감식 데이터를 토대로 디지털 현장 재구성 및 범죠통장 분석
 - * 예) 화재현장사진, 증거물 위치 등을 토대로 발화부 및 화인 등 분석, 디지털 혈흔 형태분석으로 범행 당시 가·피해자 위치, 예상 행동, 범행도구 등 추정
- (범죠통형분석) 텍스트, 이미지, 영상 정보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감식자료를 토대로 수사 결과, 프로파일링 자료와 연계하여 용의자 유형 분석 및 유사사건 추출

- <GeoPros 수사분석 기능 고도화> 기존 지리적 프로파일링 이론에 축적된 범죠통 관련 데이터와 주변 환경 데이터를 접목·학습시켜 현장 수사환경에 최적화된 분석틀 제공 목표

지리적 프로파일링 분석기능 고도화(案)

- 이동경로(도주로) 분석 : 사건발생지 정보와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시간, 유동인구 등을 종합하여 이동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로 추천
- 우선수사 대상지 분석 : △범죠통 요소(죄종, 발생시간·장소 등 사건정보) △인적 요소(면담정보, 연고지, 전과 등 피의자 관련정보) △환경 요소(도시·농촌/상업지·주택지 여부, 기타 환경 정보 등)를 입력, 조건에 맞는 고위험지역 제시

[② 과학수사 신뢰성 제고를 통한 증거능력 향상]

- <자격의 표준화> 감정결과에 대한 공신력 및 법정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 및 자격에 대한 대외적 인증 및 표준화 필요
 - (KOLAS 인정 확대) 현재 지문감정 분야만 취득·운영 중인 KOLAS를 영상분석 등 멀티미디어 분석 분야 순차적 확대 추진
 - (감정관 자격제) 최근 지문감정관·영상분석관 등 법정 증언 사례가 증가, 표준화된 교육과 시험을 통한 ‘감정관 자격제도’ 도입
 - (지문관리 표준화) 지문감정의 원천자료인 지문관리체계 국제인증 (기록경영시스템(ISO 30301) '20.11.)에 이어 국제표준체계 정착화
 - <결과의 객관성> 감정 결과의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감정 결과에 대한 중복 검증 필요
 - (증명력 강화)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의 법정 증거 채택을 목표로 뇌파검사, 진술 분석 등 2가지 이상의 기법 병행
 - ※ 살인·강도·성폭력 등 강력범죄 폴리그래프 검사에 우선 적용 후 순차 확대
 - (교차 검증) 지문감정(3단계*) 및 영상분석(사·도경찰청 간) 등 교차 검증 실시, 감정 결과의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
 - * (지문감정) 1차 감정관 → 2차 팀장 → 3차 기술책임자
 - <과학수사보고서 품질관리> 양질의 과학수사 데이터 수집을 위해 피의자 정보(KICS)·DNA 식별코드(DIMS) 정보 등과 연계하여 과학수사 증거물의 사건 해결 기여율을 자동으로 파악, 계량화 추진
 - 평가자료를 전산화하여 과학수사관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이를 바탕으로 우수직원 선제적 발굴·포상, 업무 활성화 추진
- ┌ (현행) (현장감식)신원확인→수사관 통보→범인검거→사건기록 복사→실적 평가
 └ (개선) (현장감식)신원확인→수사관 통보→시스템 연계(기능개선)에 의한 자동 실적 산출
- 입력된 데이터는 광역과학수사팀별 업무역량 진단 및 사건분석·여죄수사·용의자 추적 등 종합적인 수사자료로 활용

[③ 첨단장비·신기법 도입·개발을 통한 법과학 분야 확대]

(통합심리분석 도입) 다양한 심리학적 원리들을 적용하여 폴리그래프검사, 뇌파분석, 행동분석, 진술분석 등 진술의 진위 여부 및 임상학적 심리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뇌파 분석 등 다양한 검사 기법·장비를 활용한 통합심리분석 체계 구축으로 심리 분석 분야 확대 및 검사 결과 신뢰성 제고

(3D얼굴인식시스템 고도화) CCTV, 블랙박스 등 영상기기 증가로 범죄현장에서 찍힌 용의자 얼굴을 구축 수범범죄자* DB와 매칭·검색하는 시스템

* 수범범죄자(9종) : 강도, 절도, 사기, 위·변조, 약취·유인, 공갈, 방화, 강간, 장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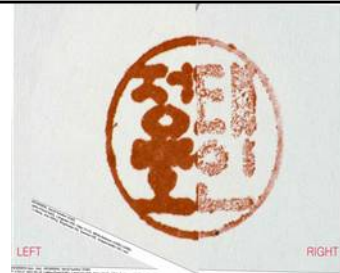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 얼굴인식 의뢰가 증가*하여 마스크에 의한 입·턱 부위 부분 가림 인식 범위 확대(정면 및 좌우 30° 이내까지 가능) 개발

* '19년 19건 → '20년 68건(258% ↑)

(비교현미경<Leica FS C Macroscope>)

감정물과 대조군을 개별 확대·촬영 후 비교분석하던 기존 방식에서 다목적 비교 브리지를 사용, 감정물과 대조군을 동시 비교분석 가능



감정물 1:1 확대·비교 가능으로 감정 소요시간 단축, 장비 숙련도 향상 시 문서감식영역 확대(이물분석·툴마크) 등 분석 효율성 제고

(족적 자동검색 시스템) 기존 신발 문양패턴 수동 입력 방식에서 족적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동일 신발을 검색하는 시스템



'20.12월 1대(본청) 구매, 현재 시스템과 병행운영, 성능 비교 후 확대 시행 여부 결정 및 R&D 등 자체 기술 개발 자료로 활용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 정보화 전략 계획(ISP)	'21. 1월	①
	교차검증 강화를 위한 지문감정 검증체계개선 계획	'21. 2월	②
	현장감식 활동 성과 관리 운영 계획	'21. 2월	②
	범죄분석 활동 강화 계획	'21. 3월	②
	'21년 채취증거팀 업무역량 강화 계획	'21. 3월	③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획득을 위한 연구 용역 계획	'21. 3월	②
	문서 감정 장비 구매 계획	'21. 3월	③
2/4분기	3D얼굴인식시스템 고도화 사업 계획	'21. 4월	③
	GeoPros 고도화 계획	'21. 4월	①
	SCAS 기능개선 계획	'21. 4월	①
	법무부 성범죄자 재범 예방을 위한 데이터 협업 분석 계획	'21. 5월	①
	지문자료 고도화 사업(3차) 계획	'21. 5월	②
	감정관 자격제도 계획 수립	'21. 6월	②
	범죄분석 시스템 의뢰 기능 오픈	'21. 6월	①
3/4분기	통합심리분석 계획	'21. 7월	②③
	수사자료표 지문채취용 라이브스캐너 구매 보급	'21. 7월	③
	수중과학수사 안전장비 규격서 및 구매 계획	'21. 8월	③
	BEST과학수사팀 선발 계획	'21. 9월	②
	범죄분석 전문화 교육 계획	'21. 9월	②
4/4분기	TOP 범죄분석관 선발	'21. 10월	②
	'21년 신규 전입 채취증거 핸들러 집체교육 계획	'21. 10월	③
	범죄분석 연구지 발간	'21. 10월	②
	지문감정 KOLAS 내부심사 계획 수립 및 실시	'21. 10월	②
	지문관리체계 기록경영시스템(ISO 30301) 사후심사 실시	'21. 11월	②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과학수사 관련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초 국민
- 이해관계 집단 : 관련 자료들을 보유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과수 등

□ 기대효과

- 변화된 사법환경에 맞추어 고도화된 과학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현장증거 채취, 수사분석지원, 범인검거를 통해 수사 신뢰성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첨단과학수사(I -3-일반재정②)				
① 첨단과학수사(1232)		일반회계	352 (352)	327 (327)
■ 과학수사역량강화(311)			336	312
■ 과학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16	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범죄분석 지원지수 (25%)	57.2	94.6	127	166	3년 실적 추세치를 반영하면 28% 상승한 163이 목표이나, '21년 목표치는 추세보다 10% 높은 166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Sigma(\text{출동건수}) \times (\text{건별활동점수}) + \text{노력점수}$	범죄분석 공식 공문, 의사결정 판단 자료
법과학 분석률 (25%)	61.6	63	64.6	66	최근 3년간 평균 상승치는 연간 1.3%p임을 감안, '21년 목표치는 평균 상승치보다 10% 높은 1.4%p 상승한 66%로 도전적으로 설정	$(\text{지문 영상 3D얼굴 인식 분석건수}) / (\text{지문 영상 3D 얼굴인식 접수건수}) \times 100$	AFIS 시스템(지문), SCAS 시스템(영상분석), 3D얼굴인식시스템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 (25%)	1,011, 673	1,587, 413	2,105, 646	2,707, 860	최근 3년 추세치를 반영하면 26% 상승이 목표이나, '21년은 평균 추세치보다 10% 높은 28.6%p 상승을 목표로 도전적으로 설정	SCAS, GeoPros, 접속건수 합산	SCAS 시스템, GeoPros 시스템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25%)	142.5	148.6	165.2	175.8	3년 추세치는 5.8% 이나 증거채취 강화를 위해 '21년 목표는 추세치보다 10% 높은 6.4% 상승한 175.8%로 더욱 도전적으로 설정	현장감식 채증물 등록건수/현장임 장건수	SCAS 통계관리 시스템

<지표 1 범죄분석 지원지수 >

○ 설정배경 : 심리행동 증거, 지문·DNA 등 법과학 증거물과 지리정보 등 통합적 범죄 분석에 대한 수사지원 효과 및 전문성 강화노력 평가

○ 측정산식 : 기본활동 점수 + 활동 가점

1) 기본활동 점수

시·도경찰청 3개청 이상 지원·출동	시·도경찰청 2개청 이상 지원·출동	시·도경찰청 단독 지원·출동
1점	0.7점	0.5점

※ 범죄분석관이 단독 혹은 타 시·도경찰청 범죄분석요원과 합동으로 분석활동·지원한 경우, 범죄분석보고, 피의자면담 등 활동 관련 보고서, 분석 보고서, 관련 공문 등으로 산출

2) 활동 노력점수

① 범죄분석, 지리적 프로파일링 등을 통해 ‘사건해결 기여’ 등(1점)

② 기소, 영장청구, 판결 등에 증거로써 활용(1점)

③ 학회·연구회 구두 발표 및 교육(0.5점), 논문 작성 등(1점)

○ '21년 목표산출 : 최근 3년 실적('18년 57.2, '19년 94.6, '20년 127) 추세치를 감안하면 28% 상승한 163이 목표이나, '21년 목표치는 추세보다 10% 높은 166으로 도전적으로 설정

<지표 2 법과학 분석률 >

○ 설정배경 : 지문·영상분석·3D얼굴인식 등 범인 검거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법과학 분석업무를 정량화하여 평가

○ 측정산식 : 지문·영상·3D얼굴인식 분석건수 ÷ 지문·영상·3D 얼굴인식 접수건수 × 100

○ '21년 목표산출 : 최근 3년간 평균 상승치는 연간 1.3%임을 감안, '21년 목표치는 평균 상승치보다 10% 높은 1.4%를 상승한 66%로 도전적으로 설정함

<지표 3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 >

○ 설정배경 :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한 스마트 치안 구현,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목표로 고도화 된 과학수사 시스템(SCAS, GeoPros)의 유용성·실제 활용성 평가를 위해 현장 경찰관들의 이용건수를 지표로 산정

○ 측정산식 : SCAS 접속건수 + GeoPros 접속건수

○ '21년 목표산출 : 최근 3년 추세치를 반영하면 26% 상승이 목표이나, '21년은 평균 추세치보다 10% 높은 28.6%p 상승을 목표로 도전적으로 설정

< 지표 4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

- 설정배경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배제 등 증거 위주 수사가 더욱 중요시 됨에 따라 범죄현장 유효증거물 채취율을 향상시켜 변화된 사법환경에 선제적 대응
- 측정산식 : 현장에서 채취한 채증물 SCAS등록 건수 / 현장감식건수
- '21년 목표 산출 : 175.8%
 - 3년 추세치는 5.8% 이나 증거채취 강화를 위해 '21년 목표는 추세치 보다 10% 높은 6.4% 상승한 175.8%로 더욱 도전적으로 설정

31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디지털 증거분석 역량 강화

□ 추진배경

- 디지털증거가 모든 범죄수사의 핵심증거로 부각되면서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 및 관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 디지털 증거분석 현황 : 32,281건('16년) → 36,060건('17년) → 45,103건('18년) → 56,440건('19년) → 63,935('20년)
- 공판중심주의 강화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날로 엄격화, 디지털포렌식 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 강화 필요
- △ 디지털포렌식 인력의 전문성 강화 △ 첨단 디지털포렌식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구·시스템 개발 △ 최신 분석기술·기법 확보를 통한 디지털포렌식 역량 강화 및 신뢰성 제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디지털포렌식 품질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 경찰수사연수원 디지털포렌식 기초·전문과정 및 전문화 위탁 교육 운영을 통한 분석관 전문성 및 분석역량 강화
 - － 분야별 워크숍 운영 및 분석관 수시 교육·지원체제 구축
- 전문분석관 인증 및 자격증 취득을 통한 전문성 공인
 - － 디지털 증거분석 분야에 대한 전문분석관 인증 제도 및 디지털 포렌식 전문자격증 취득·갱신 지원 사업 운영
- 디지털포렌식센터 국제공인인정(KOLAS) 유지를 통한 전문성 확보
 - ※ ISO 17025 교육(법정교육), 정기 사후관리, 분석 숙련도 시험 및 정기 내부심사 실시

[첨단 디지털포렌식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구시스템 개발 및 활용도 제고]

- 디지털포렌식 도구 신규 개발 및 장비 도입
 - － 현장에서 암호화된 한글파일의 비밀번호를 해독할 수 있는 「한글 문서 암호해독 도구」, 다크넷 접속, 안티포렌식 프로그램 사용 등을 탐지할 수 있는 「현장용 통합 탐지도구」 등 개발
 - － 최신 스마트폰 잠금해제 장비, 분석 프로그램 등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을 통한 분석역량 강화
- 기존 디지털포렌식 도구·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 － 대국민용 스파이앱 탐지 프로그램인 「폴-안티스파이」 및 현장 수사 활용도가 높은 「폴-해시」, 「셀파인드」 등 디지털포렌식 도구 고도화
 - － 경찰 디지털증거를 통합적으로 관리·분석하는 「디지털증거 통합관리 시스템」, 악성코드를 탐지하는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등 고도화
- 디지털포렌식 도구·시스템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실시
 - ※ 설문조사, 카드뉴스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실시

[디지털포렌식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분석기술·기법 연구 활성화]

- 최신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 연구를 통한 전문성 제고
 - － 전국 분석관이 참여하는 디지털포렌식 현장학습모임 운영, 연구발표회 정기 개최(월 1회) 등을 통한 분석기법 연구 활성화
 - － 우수 연구보고서 생산·공유를 장려하기 위한 ‘연구보고서 평가회’ 개최, 디지털포렌식 자문단 등 내·외부위원이 참여하여 연구보고서를 상·중·하로 평가하고 우수 보고서 선정 및 포상 실시
- 디지털포렌식 학술대회 개최(하계·동계)
 - － 경찰청 사이버수사국-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실무와 학계 연계를 통한 디지털포렌식 전문역량 강화
-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연구자료 공유
 - － 연구보고서·분석기법 등 주요 연구자료 게시, 신규 분석기법 및 국내·외 최신 디지털포렌식 정보 등 공유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현장경찰관을 위한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매뉴얼 발간	'21. 1월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매 계획 수립	'21. 2월	
	치안 소프트웨어 개발 공모전 계획 수립	'21. 3월	
	디지털포렌식 전문자격증 취득·갱신 지원 계획 수립	'21. 3월	
	「모바일기기 암호해독 장비」 도입	'21. 3월	
2/4분기	「디지털 증거 통합 플랫폼」 시범운영 실시	'21. 4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증거 관리 플랫폼」 시범운영 실시	'21. 5월	
	「차세대 분석관용 폴해시 PC」 신규 개발 및 홍보	'21. 5월	
	모바일기기 획득 도구 라이선스 사업 실시	'21. 6월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계획 수립	'21. 6월	
	KOLAS 인정 유지를 위한 정기 사후관리 실시	'21. 6월	
3/4분기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	'21. 7월	
	「EnCase용 클라우드 분석 도구」 고도화 및 홍보	'21. 7월	
	KOLAS 인정 유지를 위한 ISO 17025 교육 실시	'21. 8월	
	「현장용 위치정보 간편조회 앱(ISEA)」 고도화 및 홍보	'21. 9월	
	「현장용 디지털 증거수집도구(CIP)」 고도화 및 홍보	'21. 9월	
	「통신 및 금융 시각화 도구」 통합 개발 및 홍보	'21. 9월	
	KOLAS 인정 유지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숙련도 시험 실시	'21. 9월	
4/4분기	모바일 데이터 아티팩트 분석기법 연구	'21. 10월	
	「PC메신저 분석 프로그램」 고도화 및 홍보	'21. 10월	
	악성코드·메신저 분석 워크숍 개최	'21. 10월	
	연구보고서 평가회 개최	'21. 10월	
	KOLAS 인정 유지를 위한 정기 내부심사 실시	'21. 11월	
	「셀-파인드(CELL-FIND)」 고도화 및 홍보	'21. 11월	
	영상 포렌식 워크숍 개최	'21. 12월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동계 학술대회 개최	'21. 12월	
	「디지털증거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홍보	'21. 12월	
연중	「폴-안티스파이」 고도화 및 홍보	상시	
	디지털포렌식 현장학습모임 운영	상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디지털포렌식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찰관 및 국민
- 이해관계집단 : 대검 과학수사부(디지털수사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기대효과

- 분석관 전문성 제고를 통한 디지털포렌식 품질 향상
- 디지털포렌식 도구시스템 개발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사 효율성 향상
- 지속적인 분석기법 연구를 통한 디지털포렌식 기술역량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1-3-정보화① 사이버수사(1233)				
① 사이버수사(1233)		일반회계	147	184.4
■ 사이버안전수사활동(311)			44	61.8
■ 사이버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103	122.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40%)	신규			415	하단 참고	하단 참고	공문, 보고서 등 과제 추진 관련 근거자료
디지털포렌식 도구·시스템 개발 및 활용도 (30%)	신규		30.9	34	하단 참고	하단 참고	공문, 보고서 시스템 DB 등 과제 추진 관련 근거자료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 연구 실적 (30%)	13	18.4	26.7	38.5	하단 참고	하단 참고	공문, 보고서 등 과제 추진 관련 근거자료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고도의 전문분야인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디지털 증거분석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교육 노력을 지표로 선정

○ <목표치 산출근거>

- (과거 실적) 전년도 실적 파악 결과, '20 년 377점 달성
 ※ 경찰수사연수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실적 248점 (248명), 워크숍 등 본청 주관 교육 실적 129점 (258명)
- (목표치) 415점 /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목표 설정

○ <측정산식>

- 수사연수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실적(수료 인원 × 1)
 + 워크숍 등 본청 주관 교육 실적(수료 인원 × 0.5)

항 목	수사연수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실적	워크숍 등 본청 주관 교육 실적
점 수	1	0.5

[디지털포렌식 도구·시스템 개발 및 활용도]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현장경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관의 분석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포렌식 도구·시스템 개발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활용도 제고를 지표로 선정

○ <목표치 산출근거>

- (과거 실적) 전년도 실적파악 결과, '20 년 30.9점 달성
 ※ 신규 도구·시스템 개발 및 장비도입 9점 (9건), 도구·시스템 고도화 4.8점 (6건),
 주요 디지털포렌식 도구 활용도* 3.1점, 디지털포렌식 도구 홍보** 14점 (14건)

* 주요 디지털포렌식 도구 4종 실행횟수 ['20. 10월말 기준, 폴해시(38,041건) + 콜인포(10,071건) + 셸파인드(41,154건) +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1,846건) / '20. 1월 기준, 범수사부서 인원(29,494명)]

** 설문조사, 카드뉴스 등 디지털포렌식 도구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건수

- (목표치) 34점 /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목표 설정

○ <측정산식>

- (신규 도구·시스템 개발 및 장비도입 건수 × 1) + (도구·시스템 고도화 건수 × 0.8) + (주요 디지털포렌식 도구 활용도 × 1) + (디지털포렌식 도구 홍보 실적 건수 × 1)

※ 주요 디지털포렌식 도구 활용도 : [주요 디지털포렌식 도구 4종(폴해시, 콜인포, 셀파인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실행횟수의 합('21. 10월말 기준) / 범수사부서 인원('21. 2월 기준)]

항 목	신규 도구·시스템 개발 및 장비도입	도구·시스템 고도화	주요 디지털포렌식 도구 활용도	디지털포렌식 도구 홍보 실적
점 수	1	0.8	1	1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 연구 실적]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IoT 등 최신 디지털기기 등장 및 안티포렌식 기술 진화로 디지털포렌식 업무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신규 분석기법 개발 등 연구 노력을 지표로 선정

※ 분청 모바일기기 분석불가 현황 : 75건('17년) → 129건('18년) → 145건('19년) → 303건('20년)

○ <목표치 산출근거>

- (과거 실적 및 추세) 과거 실적 파악 결과, '18년 13점, '19년 18.4점, '20년 26.7점 달성하여 3년 추세치는 43.3%임

※ '20년까지 연구보고서 평가회를 개최하지 않아, 이전 연구보고서는 전부 중간값인 중(1점)으로 평가함

- (목표치) 38.5점 / 추세치 이상인 44%가 증가한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목표 설정

○ <측정산식>

- (연구보고서 등 분석기법 연구 건수<상 × 1.2 / 중 × 1 / 하 × 0.8>) + (세미나·학술대회 등 개최 건수 × 0.5) + (디지털포렌식 지식 공유 건수 × 0.1)

※ '연구보고서 등 분석기법 연구 건수'는 디지털포렌식 자문단 등 내·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연구보고서 평가회'를 통해 연구보고서의 수준을 상·중·하로 평가

항 목	연구보고서 등 분석기법 연구			세미나·학술대회 등 개최	디지털포렌식 지식 공유
점 수	상 1.2	중 1	하 0.8	0.5	0.1

32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견인하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

□ 추진배경

- 형사사법체계의 분권화·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로 경찰 책임수사 시대 개막, 경찰 수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과학수사를 통한 객관적 증거 획득과 증거처리 절차의 무결성 확보가 매우 긴급
 -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범죄양상의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첨단 과학수사 인프라 확충 및 국내·외 협업치안 기반 강화 필요
- * IT기술 발달로 텔레그램 활용 마약판매, 딥페이크 활용 사기 등 신종 범죄 증가 및 범죄피해의 사회적 파급 효과 확대
- 고위험 직무환경에 놓인 현장 과학수사관의 심신 건강·안전 확보로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과학수사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기틀 마련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견인하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추진과제-㉔ , 현장활력 증진을 위한 소통과 지원 강화]

○ 건강·안전 증진사업 확충으로 직무만족도 고취

- 살인·방화 등 과학수사관이 임장하는 사건 현장과 증거물 감식 감정을 위한 실험실 환경은 건강과 안전에 유해한 위협요인*들이 상존

* 김성환, “경찰과학수사요원의 감염성질환 연구 (2009)” 등

- 과학수사 직무환경의 특수성을 고려, 생·화학적 및 물리적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특수건강검진·예방접종 확대

※ '20년 최초 2.2억원 예산 확보, '21년 예산은 1.5억원 증액된 3.7억원

- 현장 과학수사관 의견수렴을 통해 건강검진·예방접종 항목 내실화
- 향후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환경과 현장 과학수사관의 질병 間 상관관계 연구, 안전장비 확충 등 건강증진 대책 마련에 활용

○ 과학수사관 심리역량 강화를 통한 현장 활력 제고

- 충격적 사건에 잦은 노출로 인해 현장 과학수사관의 약 2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고위험군*, 실효적 대응책 필요

* 노선미 외 1명, “경찰 과학수사요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생 영향요인(2017)”

- 단기간에 발현되는 PTSD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외상성사건 노출로 인해 정상적 정서반응이 어려운 심리적 냉담도 매우 위험
- 장기적 관점에서 예방적 심리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속 시행

과정명	주요 내용
심리역량 강화 워크숍	마음동행센터 전문 강사 초빙하여 자체 워크숍 개최(9월)
공감힐링과정	인재개발원 공감힐링과정을 과학수사관 대상으로 개최(10월)
마음돌봄과정	시·도경찰청 과수계장 및 광역과수팀장 대상으로 팀원들의 심리상담, 코칭을 위한 동료지킴이 등 마음돌봄교육과정(1일) 실시(연중)

※ 마음동행센터 활용, 현장 과학수사관 대상 심리건강검진 활성화 병행

○ 분야별 인력 확충과 환경 개선을 통한 현장 지원 강화

- 화재감식(15명), 영상분석(12명), 범죄분석(7명) 등 '21년 분야별 전문인력 정원 확보로 시·도경찰청 감식감정 역량 강화

※ 화재, 지문·문서감정, 뇌파분석, 법곤충·법보행분석 등 전문인력 증원 지속 추진

- 쏘 시·도경찰청 검시조사팀 신설 및 검시조사관 경력경쟁채용 실시로 검시업무의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하고 24시간 즉응체제 구축

※ 소요정원 138명 확보, 금년 2회에 걸쳐 간호사 등 자격보유자 경력경쟁채용 실시

- 증거물 감식감정실 표준모델*을 토대로 광역 과학수사팀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증거물 무결성 확보 및 과학수사관 직무 안전성 강화

* 증거물 감식감정실과 사무공간 분리 및 전처리실을 갖추기 위해 총140㎡ 공간 필요(충남대 산학협력단), 금년 4억 5천만원 예산확보로 순차 개선사업 추진

[추진과제-⑤ , 과학수사 전문성 강화와 역량 혁신]

○ 과학수사 분야 연구개발(R&D) 활성화

-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과학수사 新기법·장비 개발과 감식·감정 기법의 다변화를 위해 과학수사 분야 연구개발(R&D) 지속 추진

※ △ 성문분석 △ 혈흔 유류경과시간 분석 △ 생체시료 시각화 △ 기체분자 식별·분석기술 △ 융복합 지능형 DNA 감식기술 개발('21년 신규) 등 5개 과제 R&D 진행 중

- 연구결과가 현장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진·현장 과학수사관 間 간담회 실시 및 연구 성과물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운용 내실화

- 최종 연구성과물은 과학수사 분야의 新 기법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식 실무 도입을 위한 예산·인력 확보 등 후속 조치 내실화

※ 법곤충 활용 사후경과시간 추정 프로그램('20. 12월 완료) → 법곤충감정실 구축 예산(3.9억원) 확보 및 전문인력(2명) 신규채용 추진, 수사연수원 내 감정실 구축 예정

- 과학수사 기법·장비·아이디어 공모전 및 기술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적 R&D 과제 지속 발굴

○ 첨단 인프라 확충을 통한 DNA 감식 역량 강화

- 휴대용 DNA 분석기* 활용으로 중요사건 신속 감정지원, 수사방향 혼선 방지 및 검사결과에 따라 용의선상 조기배제로 인권보호 기여

* 결과회보에 약2주 소요되는 DNA감정을 90분 내 분석 가능, '21년 2대 보급 예정

- 혈흔 탐지 루미놀 新시약** 현장 활용 확대로 DNA증거 발견을 제고

** 현장 과학수사관 개발 시약으로 한·미 특허 등록 완료

○ 국내·외 과학수사 분야 기술 교류 및 협력 강화

- 경찰·국과수 간 업무협의회, 합동 법과학감정실 확대 구축 추진 등 협력 강화

※ 국정과제 14-4 「과학수사 역량 강화」 실천과제로 국과수 미설치 지역인 전북·경기남부·충남·경북지역 경찰·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 구축운영, 추가 구축 추진

- 대형사고·재난에 대비한 재난현장 신원확인팀(DVI)* 정예화를 위해 인터폴 DVI팀 초청 및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등 실시

* 재난현장 신원확인팀(Disaster Victim Identification) : 경찰·국과수 등 전문가로 구성

- 최신 과학수사 기술 교류와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 및 아시아법과학네트워크(AFSN), 국제감식협회(IAI) 등 해외 저명 학회 참가

○ 과학수사 분야별 전문가 양성

- 과학수사관 인적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교육·자격취득 등 체계적 이력 관리 및 1인 1분야 전문수사관 취득 추진으로 전문성 강화

※ ('20) 쏘 과학수사관 1,274명 중 756명(59%) 전문수사관 취득 →('21) 860명(+104명, 66%) 목표

- 화재감식 분야에서 국제적 공신력이 인정되는 CFEI*, CFI** 자격 취득 지원을 통한 경찰의 화재감식 역량 향상

* 화재·폭발조사관(CFEI, Certified Fire and Explosion Investigator): 미국 화재조사관 협회(NAFI) 주관/1982년부터 화재폭발 조사 관련 지식과 기술 인증

** 방화조사관(CFI, Certified Fire Investigator): 국제방화조사관협회(IAAI) 주관/방화조사에 국제 공신력을 갖춘 자격, 국내 13명 자격 보유(경찰 6명, 소방 없음)

[추진과제-① , 국민 참여·교류 확대로 신뢰도 제고]

- 국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국민 관심과 이해도 증진
 - 현직 과학수사관, 민간 전문가, 프로파일러 등 패널 구성하여 양방향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과학수사 토크 콘서트 개최
 - 과학수사 기법·장비·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우수작에 대한 포상과 시범운용을 추진하고, 신규 R&D 과제로 연계 검토
 - 국민의 일상생활 가운데 빈번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예방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과학수사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 '21년 최초 개최 예정, 범죄예방·사고 방지 시사점 및 수사상 착안 사항 제시
- 과학수사에 관심 있는 청소년 대상 과학수사 체험학교 운영
- 대국민 의견 수렴 및 정책 환류를 통한 국민 만족도 제고
 - 과학수사관을 경험한 국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연2회)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및 과학수사 분야 개선 필요사항 발굴
- ※ 신속성·친절성·전문성 등 분야별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등 설문(5월, 10월)
- 과학수사 주요 정책·제도·법령 개선, 중요 미제사건 분석, 대형 화재·안전사고 원인 분석, 아동학대 피해자 진술·행동 분석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위한 민간 자문위원회* 위촉 및 운영
- *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9조(전문가 자문)에 근거, 5개 분과(법·제도, 법의학, 법과학, 법공학, 법심리) 총 110명으로 구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위촉 및 운영	'21. 2월	①
	과학수사관 심리역량 강화 종합계획 수립	'21. 2월	㉠
	증거물 감식감정실 개선 시범사업 대상 선정	'21. 2월	㉡

	현장 과학수사관 특수건강검진·예방접종 계획 수립	'21. 2월	㉞
	검친지문 분리, 법곤충학 R&D 최종평가	'21. 2월	㉟
	경찰청-국과수 업무협의회	'21. 3월	㉟
	과학수사관 경력 분석 및 교육 계획 수립	'21. 3월	㉟
	경찰·국과수 합동 법과학감정실 추가 구축위한 TF 구성	'21. 3월	㉟
	전 시·도경찰청 검시조사팀 신설	'21. 3월	㉞
	R&D 계속 과제별 간담회 개최	'21. 3월	㉟
2/4분기	증거물 감식감정실 개선 시범사업 구축 완료	'21. 4월	㉞
	융복합 지능형 DNA감식 기술개발 신규과제, 연구 착수	'21. 4월	㉟
	과학수사 기법·장비·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1. 4월	㉠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 추진	'21. 5월	㉟
	2021년 현장 과학수사관 경력경쟁채용 계획 수립	'21. 6월	㉞
3/4분기	과학수사 분야 현장기술 수요조사	'21. 7월	㉟
	국제감식협회(IAI) 컨퍼런스 참가	'21. 8월	㉟
	과학수사관 심리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21. 9월	㉞
	과학수사관 대상 공감힐링과정 개최	'21. 9월	㉞
	국제 화재폭발조사관(CFEI) 자격 취득 추진	'21. 9월	㉟
4/4분기	경찰 과학수사 국민 만족도 조사	'21. 10월	㉠
	법곤충분석실 장비 구매	'21. 10월	㉞
	국제 CSI 컨퍼런스 개최	'21. 10월	㉟
	인터폴 DVI 모의훈련 추진	'21. 11월	㉟
	2021년 대한민국 과학수사대상 시상	'21. 11월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과학수사 분야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는 쏻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수사상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DNA-DB 사무를 공동 관할하는 대검찰청 등

□ 기대효과

- 대국민 교류 및 참여 확대를 통해 과학수사에 대한 신뢰도·만족도 제고 및 체감안전도 향상
- 과학수사 분야 R&D 확대 및 국내외 기관과의 기술교류·협업 등 과학수사 전문성 제고로 경찰 책임수사체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
- 맞춤형 건강검진 등 심신건강 증진사업과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 과학수사관 직무만족도 고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첨단과학수사(I-3-일반재정②)				
① 첨단과학수사(1232)		일반회계	352 (352)	327 (327)
■ 과학수사역량강화(311)			336	312
■ 과학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511)			16	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대국민 교류 지수 (30%)	80.6	83.1	85.1	86.6	과거 실적 및 추세, 만족도 조사의 성격상 임계치를 고려하여 '20년 실적치(85.1점) 대비 1.5점 상승한 86.6점을 성과목표로 설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0.5 + 진술청취이행 ×0.5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과학적범죄분석 시스템(SCAS) 통계
현장지원 지수 (30%)	-	18.1	28.2	31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 지속과 예방접종·건강검진이 한정된 과학수사관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점으로 인해 추세치 반영 불가, '20년 실적치 대비 10% 상승한 31점을 성과목표로 설정	현장지원 활동을 정량화하여 점수를 합산 산출	보고서, 계획서 등 결재 공문서 증빙자료
과학수사 활동 지수 (40%)	1.30	1.41	1.43	1.46	과거 실적 및 추세, 17년→18년 실적치는 하락한 지표인 점을 고려하여 '20년도 실적의 상승폭 0.02점에서 50%(0.01점)를 높여 0.03점 상승한 1.46점을 성과목표로 설정	현장임장률×0.5 + 증거채취율×0.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시스템(NFIS), 지문검색시스템(AFIS), 즉윤적감정시스템(FTIS) 범죄통계시스템(CSS) 통계

○ 목표치 산출 및 측정산식 관련 참고자료

구분	과제	평가 항목																																		
① 대국민 교류 지수 (정성)	국민 참여·교류 확대로 신뢰도 제고	▶ 평가산식 : 과학수사업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 0.5 + 피해자 진술청취 이행률 × 0.5 * 현장 과학수사관과 실제 접촉한 국민 대상으로 출동 신속성·친절성·전문성 등 세부분야별 만족도와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를 합산하여 산출 ▶ 산정배경 : 경찰 과학수사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조사, 피해자 진술 청취를 통한 대국민 교류 노력 평가 ▶ 목표치 산출 근거(상승 추세) <table><tr><th>구분</th><th>고객만족도 점수</th><th>피해자 진술청취 이행률</th><th>대국민 교류 지수</th></tr><tr><td>'18년</td><td>75.49</td><td>85.6%</td><td>80.6</td></tr><tr><td>'19년</td><td>77.12</td><td>89.0%</td><td>83.1</td></tr><tr><td>'20년</td><td>79.43</td><td>90.8%</td><td>85.1</td></tr><tr><td>목표</td><td colspan="2">3년간 상승추세 반영 ('18→'19 : +25점, '19→'20 : +2점)</td><td>⇒86.6점</td></tr></table> - 실적치는 3년간 상승세이나 상승폭은 감소 추세(25점→2점)인 점과 만족도 조사의 성격상 임계치를 고려하여 '20년도 실적치에서 1.5점 상승한 86.6점을 목표치로 적극 설정	구분	고객만족도 점수	피해자 진술청취 이행률	대국민 교류 지수	'18년	75.49	85.6%	80.6	'19년	77.12	89.0%	83.1	'20년	79.43	90.8%	85.1	목표	3년간 상승추세 반영 ('18→'19 : +25점, '19→'20 : +2점)		⇒86.6점														
		구분	고객만족도 점수	피해자 진술청취 이행률	대국민 교류 지수																															
'18년	75.49	85.6%	80.6																																	
'19년	77.12	89.0%	83.1																																	
'20년	79.43	90.8%	85.1																																	
목표	3년간 상승추세 반영 ('18→'19 : +25점, '19→'20 : +2점)		⇒86.6점																																	
② 현장지원 지수 (정량)	현장활력 증진을 위한 소통과 지원 강화	▶ 평가산식 : 현장지원 활동을 정량화하여 합산점수 계산을 통해 산출 <table><tr><th>구분</th><th>점수</th></tr><tr><td>추진과제- 일선현장 지원 관련 연간 계획 수립</td><td>2</td></tr><tr><td>추진과제- 심리역량강화 워크숍, 공감힐링과정 실시</td><td>2</td></tr><tr><td>추진과제- 특수건강검진, 예방접종 실시자 수(10명당)</td><td>0.1</td></tr><tr><td>과학수사계장, 광역과학수사팀장 중 마음돌봄과정 이수자 수</td><td>0.1</td></tr></table> ▶ 산정배경 : 정책과제 중 일선현장 지원 활동과 관련된 노력을 위 구분에 따라 건별 점수 합산하여 평가 ▶ 목표치 산출 근거(상승 추세) <table><tr><th>구분</th><th>연간계획 (2점)</th><th>워크숍 등 (2점)</th><th>건강검진 등 (0.1점)</th><th>교육이수 (0.1점)</th><th>총점</th></tr><tr><td>'19년</td><td>2회</td><td>3회</td><td>-</td><td>81명</td><td>18.1</td></tr><tr><td>'20년</td><td>2회</td><td>2회</td><td>1,711</td><td>31명</td><td>28.2</td></tr><tr><td>목표</td><td colspan="4">'전년도 대비 10% 이상 반영</td><td>⇒31점</td></tr></table> - '20년부터 특수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성과를 추가로 배점 반영 하였으며, 실적치는 2년간 상승하였으나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 지속과 건강검진·예방접종이 한정된 과학수사관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점으로 인해 추세치 반영 불가 - 전년도 실적치('20년 28.2점) 대비 10%이상 상승한 31점을 목표치로 적극 설정	구분	점수	추진과제- 일선현장 지원 관련 연간 계획 수립	2	추진과제- 심리역량강화 워크숍, 공감힐링과정 실시	2	추진과제- 특수건강검진, 예방접종 실시자 수(10명당)	0.1	과학수사계장, 광역과학수사팀장 중 마음돌봄과정 이수자 수	0.1	구분	연간계획 (2점)	워크숍 등 (2점)	건강검진 등 (0.1점)	교육이수 (0.1점)	총점	'19년	2회	3회	-	81명	18.1	'20년	2회	2회	1,711	31명	28.2	목표	'전년도 대비 10% 이상 반영				⇒31점
		구분	점수																																	
추진과제- 일선현장 지원 관련 연간 계획 수립	2																																			
추진과제- 심리역량강화 워크숍, 공감힐링과정 실시	2																																			
추진과제- 특수건강검진, 예방접종 실시자 수(10명당)	0.1																																			
과학수사계장, 광역과학수사팀장 중 마음돌봄과정 이수자 수	0.1																																			
구분	연간계획 (2점)	워크숍 등 (2점)	건강검진 등 (0.1점)	교육이수 (0.1점)	총점																															
'19년	2회	3회	-	81명	18.1																															
'20년	2회	2회	1,711	31명	28.2																															
목표	'전년도 대비 10% 이상 반영				⇒31점																															

③
과학수사
활동
지수
(정량)

과학수사
전문성
강화와
역량 혁신

▶ **평가산식** : (현장임장률 × 0.5) + (증거채취율 × 0.5)

- 현장임장률 = 현장감식건수 / 중요범죄 발생건수*

* 현장감식이 필요한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 침입절도, 변사, 화재

- 증거채취율 = (DNA감정+지문감정+족적감정 의뢰건수) / 현장감식건수

▶ **산정배경** : 중요범죄 발생건수 대비 현장임장률과 현장임장 1건당 증거물 감정의뢰건수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과학수사 활동 역량을 평가하기 위함

▶ **목표치 산출 근거(상승 추세)**

구분	현장임장률	증거채취율	과학수사 활동지수
'18년	0.95	1.66	1.30
'19년	0.98	1.84	1.41
'20년	1.05	1.80	1.43
목표	3년간 상승추세 반영 (18→19: +0.1점 19→20: +0.02점)		⇒1.46점

- 실적치는 3년간 상승세이나 상승폭은 급격한 감소 추세(0.11점→0.02점)인 점과 '17년(1.31)→'18년 실적(1.30)은 하락한 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20년도 실적의 상승폭인 0.02점에서 50%(0.01점)를 높여 0.03점 상승한 1.46점을 목표치로 적극 설정

(1) 주요 내용

-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대테러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활동, 전문성 강화로 테러 위협 원천 차단
 - ※ △충남·전남특공대 창설 △해안경계 과학화 △테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대테러 모의훈련(FTX) 실시 등 종합대책 추진
- **<안보수사 역량 강화>** 최종 안보수사 기관으로서 인프라 구축과 탈북민 보호체계 고도화·예방적 안보상황 관리로 안보 취약요소 개선
-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경제·사회 등 ‘포괄적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경제안보·공공안보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
- **<안보정보 분석능력 강화>** 대테러·기술유출 방지 등 다양한 첩보를 수집,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익 보호 도모
- **<경호역량 강화>** △경호특화부대 신설 △최신 경호장비 도입 등 인프라 구축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경호대상자와 시민의 안전 확보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안전체감도
관리과제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대테러·작전 인프라 구축 달성도 / 대테러 전문성 확보 교육 / 교육 성취도 /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안보수사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탈북민 신변보호 강화·예방적 안보상황 관리를 통한 국가안보 확립 기여	안보수사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 안보취약요소 개선활동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중요 안보사범 검거지수 / 첨단안보 대응활동지수 / 디지털포렌식 활성화지수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 보호를 위한 안보정보 분석 능력 강화	안보수사정보 활용도 / 안보정세분석 전문성 강화
	경호역량 강화를 통해 빈틈없는 경호업무 수행	경호경찰 전문화 교육 및 설문조사 / 경호경찰 인프라 구축 / 경호업무 관계기관 협업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안전체감도	2.80	2.65	2.84	2.90	국민 안전체감도는 '19년 하락 후 반등하였고, 전 3년도 실적 평균값(2.76) 및 과거 추세선을 바탕으로 예측한 값(2.80)을 고려, '21년 목표치는 추가 상승을 독려하고자 '20년보다 상승한 2.9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행정안전부 주관 대국민 설문조사 (일반국민 안전체감도)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의식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세계적으로 극단주의에 정도된 자생적 테러 및 극우테러가 지속 발생, 팬데믹 상황으로 불만이 누적된 내부 위험요인 경계 필요
 - － 국내에서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암호화폐·3D프린터·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테러 위협도 지속

- ▶ '20년 드레스덴 홍기 난동(10.4.), 니스 성당 테러(10.29.), 비엔나 총기난사(11.2.) '21.2월 무장단체 총격으로 주 콩고 이탈리아 대사 사망 등
 - ▶ '20년 알카에다 연계단체에 자금 지원한 중앙아시이인 6명 실행선고(징역1년~2년6월)
 - ▶ 최근 5년간 국내 원전지역(비행금지구역) 드론 출몰 26건 발생
 - － 법령·제도 정비, 조직 개편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요 취약시설 합동 점검, 외국공관 위해도 등급 분류를 통한 체계적 관리 추진
-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경찰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21.1.) 후 '안보수사의 최종 책임수사기관'으로서 역량 강화 필요
 - － 대공수사권 이관 유예기간(~'24년) 동안 경찰 안보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정원과 '안보수사 협의체' 추진
 - － 전국 안보경찰이 수집한 첩보와 기관간 공유 정보를 종합 분석, 정제된 정보를 일선에 공유하여 안보수사 능력 향상 도모

(4) 참고자료

- 안보수사국, 「경찰 안보수사 역량 강화 3개년 계획」
- 대통령경호처(www.pss.go.kr)
-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www.nctc.go.kr)

33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 추진배경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불안과 치안공백을 틈타 분쟁지역 내 ISIS·알카에다가 세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SNS·암호화폐·3D 프린터·드론 등 신기술 활용 테러 위협도 지속
 - ※ 최근 5년간 국내 원전지역(비행금지구역) 드론 출몰 26건 발생
- 극단주의에 경도된 자생적 테러 및 극우테러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팬데믹 상황으로 불만이 누적된 내부 위험요인 경계 필요
 - ※ '20년 드레스덴 홍기 난동(10.4.), 니스 성당 테러(10.29.), 비엔나 총기난사(11.2.) '21.2월 무장단체 총격으로 주 콩고 이탈리아 대사 사망 등
- 국내에서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무슬림에 의한 주한 佛 대사관 협박전단 부착사건도 발생
 - ※ '20년 알카에다 연계단체에 자금 지원한 중앙아시아인 6명 실형선고(징역1년~2년6월)
- 테러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제도 정비, 조직 개편 등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

《 참고 》 총리님 말씀 주요내용('21.1.29. 국가테러대책위원회)

- 국내외 상황을 종합할 때 엄중한 테러 위기 관리가 필요한 시점
-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명
- 선제적 예방 활동을 통해 테러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테러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조기에 극복할 수 있는 태세도 갖춰야 한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대테러·작전 인프라 구축]

- <특공대 창설> 테러사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특공대 창설 지속 추진, '21.7월 충남·전남에 특공대 창설로 총 15개대 운영
 - ※ 경기북부('17), 경기남부·경남('19), 세종·전북·경북('20) 등 최근 4년간 6개대 신설

- <해안경계 과학화> 의경 폐지계획에 따라 TOD 설치 및 관제 시스템 구축 등 장비·시설의 과학화로 효율적 해안경계 임무 수행

※ 국정과제 14-⑤ : 의무경찰 단계적 폐지와 경찰인력 증원

- <드론테러 대응장비 도입> 드론테러 대비 전과차단기를 확대 보급하고, 신규장비 도입 추진 등 개선사항 발굴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활동]

- <테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외국 공관 등 테러취약시설 대상 등급분류별 종합 안전대책 수립
 - － 대테러 즉응 태세 확립이 필요한 주요국 대사관·공항 등에 거점을 설치하여 특공대 전진배치, 상시 안전활동 실시
- <대테러훈련 실시> 테러 유형별로 실질적인 가상 시나리오를 구성, 상황조치 모의훈련(FTX)을 통한 상황대응능력 및 통합지휘능력 향상
 - － 대테러 합동작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경·군 대테러 부대와 다양한 테러 상황을 가정한 국가 대테러부대 연합훈련 실시

[대테러 전문성 확보]

- <경찰서 현장요원 교육> 쏠 경찰관 대테러 요원화를 위하여, 대테러 안전활동 기초지식, 초동조치 능력 등 함양
- <특공대 전문화교육> 특공대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 초빙, 최신 대테러 전술기법 습득 및 반복 숙달훈련 강화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찰 대테러장비 구매 기본계획 수립	'21. 1월	
	대테러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21. 2월	
	특공대 창설 기본계획 수립	'21. 3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화생방테러 공동대응 협의체	'21. 4월	
	112타격대 폐지 계획 수립	'21. 5월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	'21. 6월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개최	'21. 6월	
3/4분기	작전·대테러 특화 기동대 운영규칙(안) 제정	'21. 7월	
	경찰 대테러활동 규칙 개정	'21. 8월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	'21. 9월	
	해안경계 과학화 2단계 사업	'21. 9월	
4/4분기	관계기관 합동훈련(국가 대테러부대 연합훈련) 실시	'21. 10월	
	충남·전남특공대 창설	'21. 10월	
	전파차단기 등 드론테러 대응장비 도입	'21. 12월	
	「대테러연구집」발간	'21. 12월	
연중	외국공관저 포함 테러취약시설 대상 관련기능 및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시설관계자

□ 기대효과

- 현장 중심 적극적인 테러예방활동 및 테러대응역량 강화로 예방 중심의 대테러체계 구축
- 적극적 예방활동으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치·경제적 국가위기상황을 사전에 방지
- 테러위협 불식, 안전감 강화를 통해 기업·외국인 투자자 등 경제주체들이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기반 조성
- 철저한 국가 안보태세 유지로 안정적인 국정운영 뒷받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 -1-일반재정②)			
① 대테러상황관리(3134) ■ 대테러상황관리(311)	일반회계	224.9	237.3
② 경비경찰역량강화(2131) ■ 의경대체지원(2131-314)	일반회계	287	10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2021년 대테러·작전 인프라 구축 달성도 (40%)	신규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대테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성취도 (50%)	신규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20%)	신규			하단 참조	하단 참조	하단 참조	

① 2021년 대테러·작전 인프라 구축 달성도(40%)

- (개요) 경찰특공대 및 해안경계 부대 창설을 위해서는 인력충원, 시설개선, 장비·피복보급 등에 행안부·기재부 협의 등 많은 노력이 수반됨
- (측정산식) 경찰특공대 창설(20%) + 해안경계 과학화(20%)
- (목표치 및 산출근거)
 - ① 경찰특공대 창설 : 10월 창설
 ※ 10월 창설시(90%), 1개월 지연시 5%씩 감점, 1개월 단축시 5%씩 가점
 - ② 해안경계 과학화 : 9월 2단계 사업완료
 ※ 9월 2단계 사업완료시(90%), 1개월 지연시 5%씩 감점, 1개월 단축시 5%씩 가점

② 대테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성취도(40%)

- (개요) 테러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테러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대테러 교육의 효과와 테러리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관련 설문 결과를 지표로 활용
- (측정산식)
 - ① 경찰서 현장요원 교육(20%)
 - ② 교육 대상자 인식개선도 조사(20%)

- ▶ 조사 방식 : 경찰서 현장요원 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 ▶ 조사 내용 : △대테러 교육의 효과 △테러리즘 인식개선도
- (목표치 및 산출근거)
 - ① 경찰서 현장요원 교육 : 쉰 경찰서가 현장요원 대상 대테러교육을 年 2회 이상 실시한 경우 목표 달성 / 현장요원 대상 대테러교육을 年 2회 이상 실시한 경찰서 비율(%)×100(집체교육 및 사이버교육 포함)
 - ② 교육 대상자 인식개선도 조사 : 긍정 답변이 70% 이상일 경우 목표 달성

③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설문조사(20%)

- (개요)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및 국민의 테러리즘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관련 설문 결과를 지표로 활용, 정책 미비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측정산식) 대국민 설문조사
 - ▶ 조사 방식 : 최근 3년간 특공대가 신규로 창설된 시·도경찰청 관할 지자체에서 생활하는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문 여론조사업체에서 설문조사(세부방안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 ▶ 조사 내용 : △대테러 인프라 구축 노력 및 홍보 △테러리즘에 대한 관심도
- (목표치 및 산출근거) 긍정 답변이 70% 이상일 경우 목표 달성

□ 추진배경

- 現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경찰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시행('21.1.1)
 - ※ 다만, 수사권 폐지는 3년 유예(부칙)를 두어 '24.1.1.부터 시행
- 대공수사권 이관시, 경찰은 최종 안보수사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안보수사 역량 강화가 절실
 - ※ 경찰 안보수사 역량 강화 3개년 계획 수립 및 추진('20.10.28)
- 조직·인력 재편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보수사 역량 강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 안보공백 우려 불식 필요 다대
-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언론 등 일각에서 탈북민 신변 보호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더 높은 수준의 개선을 요구
- 신변보호체계를 계속 효율화하고, 신변보호관의 역량도 한 단계 더 높여,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 탈북민 보호·지원 활동 내실화 도모
- 전단 살포 등 주요 안보상황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높아짐에 따라 평소 ‘예방적 경찰 활동’ 관점에서의 충분한 대비가 필요
 -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21.3.30. 시행)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최종 안보수사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대공수사권 이관 대비, 안보수사 전담조직 신설
 - 기존 경찰청 보안국을 국가수사본부 내 안보수사국으로 확대 개편, 대공수사 외 테러 및 방산·산업기술 유출 수사 등 다변화 하는 안보위협에 전문적으로 대응

- 국내·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안보수사 역량 강화 뒷받침
 - 대공수사권 폐지 유예기간(3년) 중, 국정원의 보유사건 이관 및 수사 노하우 전수 등을 위한 ‘안보수사 협의체’ 신설 추진
 - 주요국 안보수사기관*과의 정기적 실무회의 개최 및 MOU 체결 등 정보협력을 통해 다변화하는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
- * 美 FBI·HSI·주한미군 정보참모부 △중·일·러 경찰주재관 등
- 업무영역 확장에 따른 인력 충원 및 교육 과정 개편
 - 새롭게 수행하는 다양한 안보 영역* 수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 경력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 영입 추진
 - *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외국인 간첩 수사 등
 - 또한, 수사관별 업무·경력·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 및 업무영역 확장에 따른 다양한 안보 분야의 전문교육 과정 신설
- ‘책임 안보수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업무 병행
 - 수사 기법 개발·해외 자료 조사 등을 통한 안보수사 역량강화 지원

[탈북민 안정적 보호를 위한 다각적 정책·제도를 마련, 적극 추진]

- 탈북민 신변보호체계의 효율성·실효성 고도화
 - 통일부와 협의, 인권친화적이고 실효성 있는 신변보호를 위해 일률적 보호기간(5년) 개선 등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추진
 - ※ 제22조의2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③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 현장점검 활성화, 신변보호제도의 일선 적용시행의 미비점 지속 보완
 - ※ 「신변보호제도 종합개선 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신변보호 매뉴얼 등 세부 이행 과제 추진상 애로점 등 일선 의견 수렴 ⇨ 미비점 발굴, 지속 보완
 - 정기적 신변위해도 평가·조정(상·하반기 1회)과 신변보호 연장심의(분기별 1회) 등을 통해 신변보호체계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 **탈북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활동 내실화**

－ 범죄예방교육 내용을 양질화, 범죄로부터 탈북민 보호

※ △범죄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범죄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최신화 △특정 범죄 성행 시 SNS·카드뉴스 등 신속히 발송, 범죄예방효과 즉시성 제고 등

－ 유관기관 협업 강화, 범죄피해 등 정착 불안 탈북민 대상 심층적 보호·지원을 위해 통일부·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공조 강화

※ 정착 불안 탈북민 대상 통합적·다층적 지원 및 보호를 위해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가칭) ‘탈북민 안전지원센터’ 신설·운영 추진

－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 탈북민 보호·지원 우수사례를 선정·공유 (분기 1회), 신변보호관 사기진작 및 우수시책 확산 지속 노력

[면밀한 안보현장 분석·대응 방안 마련]

○ △접경지역 △공·항만 △도서·해안 등 안보가 취약할 수 있는 현장 근무자를 위한 사전 계획 수립으로 ‘예방적 경찰 활동’ 실현

※ 전단 등 살포, 해상 쌀 보내기, 경찰책임취약지 분석, 남북교류행사 등

○ 실무 현장 점검도 병행하여 개선점 발굴, 안보상황 완벽 대비 및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재정비

< 주요 안보상황 >

- ◆ 간첩·간첩선·의아선박·거동수상자 출현 및 탈북·밀입국자 등 발견
 - ◆ 적성물품 발견·습득, 폭발물·무기류, 전단 등 발견 등
-

－ 상황 발생 시 합동정보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 보완점을 발굴하고, 안보취약요소는 작전부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협력 강화

○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안보상황 발생 가능성 사전 탐지 시 방지·차단 등 수행하여 국가안보 기여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 일정	비고
1/4분기	안보수사국 주요업무 계획 수립	'21. 1월	
	안보수사경찰 역량평가 및 인력재편	'21. 1월	
	전국 안보수사경찰 워크숍(화상회의)	'21. 2월	
	안보수사협의체 회의 개최	'21. 2월	
	해외 안보수사기관 교류·협력	'21. 3월	
	전국 안보상황 업무담당자 워크숍(화상회의)	'21. 3월	
	남북교류행사 근접보안팀 재정비	'21. 3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연장심의	'21. 3월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계획 수립·배포	'21. 3월	
	안보수사경찰 전문교육 종합계획 수립	'21. 3월	
	안보수사 예산 종합 집행지침 수립	'21. 3월	
	전국 신변보호관서 현장점검(상반기)	'21. 3~4월	코로나19 고려
2/4분기	상반기 공항만 등 안보취약요소 현장점검	'21. 4월	
	남북교류 행사 관련지 현장 점검	'21. 5월	
	신변보호관 경찰특공대 위탁교육(1·2차)	'21. 5월	코로나19 고려
	북한이탈주민 범죄예방 표준 강의안 개정·배포	'21. 5월	
	최우수 안보경찰 선발(상반기)	'21. 5월	
	보안경과제 개선 방안 계획 수립	'21. 5월	
	상반기 유관기관 합동 경찰책임취약지 점검·분석	'21. 6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연장심의	'21. 6월	
	북한이탈주민 신변위해도 평가(상반기)	'21. 6월	
	해외 안보수사기관 교류·협력	'21. 6월	
	안보수사 분야별 전문가 경채 계획 수립	'21. 6월	
3/4분기	전국 신변보호관서 현장점검(하반기)	'21. 7월	코로나19 고려
	평화사랑 공모전 개최 계획·수립	'21. 7~9월	
	거주불명 탈북민 소재확인	'21. 8월	
	하반기 공항만 등 안보취약요소 현장 점검	'21. 9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연장심의	'21. 9월	
	해외 안보수사기관 교류·협력	'21. 9월	
4/4분기	하반기 유관기관 합동 경찰책임취약지 점검·분석	'21. 10월	
	평화사랑 공모전 시상식 개최	'21. 10~11월	
	최우수 안보경찰 선발(하반기)	'21. 11월	
	전국 취약지역 점검 및 판단서 작성	'21. 12월	
	해외 안보수사기관 교류·협력	'21. 12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연장심의	'21. 12월	
	북한이탈주민 신변위해도 평가(하반기)	'21. 12월	
연중	통일부와 협업,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추진	연중	
	(안보상황 발생시) 조치 및 합동정보조사	연중	
	탈북민 안전지원센터 추진위원회 참여(유관기관 회의)	월 1회	'21년 하반기 내 시범운영 목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및 북한이탈주민, 안보수사 경찰 등
- 이해관계 집단 : 국가정보원·통일부 등 안보수사 업무 유관기관

□ 기대효과

- 안보수사 역량 강화로 인한 안보공백 우려 불식 및 국민신뢰 확보
- 빈틈없는 탈북민 보호를 통해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 견인
- 예방적 경찰 활동을 통한 안보취약요소 개선으로 국가안보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안보수사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50%)	신규			46	하단 참조	하단 참조	공문 보고서 등 추진 관련 근거자료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40%)	40	43	46	36	하단 참조	하단 참조	보안업무관리시스템 통계자료 등
안보취약요소 개선 활동 (10%)	신규			10	하단 참조	하단 참조	분석·판단보고서, 결과보고 및 공문 등

* 작년 실적 대비 목표치 감소로 보이나 안보수사국 출범에 따른 과 내 1개 계(界) 신설로 성과지표 비율 변경(50%→40%)된 것일 뿐,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10% 상향 설정

○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① 안보수사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50%)

-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 조직을 재설계하고 안보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전년 지표와 달리, 등급별 과제에 따른 업무노력도를 가장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신규지표로 재구성
- 신규지표로서 목표치를 산출할 과거 비교 자료가 없으며 단기간에 성과가 도출되기 힘든 과제가 많으나, 안보수사 역량강화가 안보수사국의 핵심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구간별 점수 합산 90% 이상을 목표치로 도전적으로 설정

②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40%)=탈북민 범죄예방교육(20%)+신변보호활동 성실이행도(10%)+탈북민 보호 우수사례(10%)

- ①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 전년 실적(1,627건) 10% 상향 달성(1,790건을) 목표로 설정
 -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범죄예방교육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 '20. 12. 10부터 상황 안정시까지 해당 기간은 실적산출 기간에서 제외 (例: {각 기준치 - (4.9건* × 실적산출 제외기간**)} / *일 목표건수 (1,790/365), **'20. 12. 10 ~ 코로나19 상황 안정일)

- － ② **신변보호활동 성실이행도** : 신변보호활동 입력 누락 지연율 목표치를 전년 기준과 동일하게 1.0%이하 달성을 목표로 설정
- － ③ **탈북민 보호 우수사례** : <칭찬플랫폼 우수사례> 선발 건수를 전년 목표치(10건) 보다 10% 상향 달성(11건)을 목표로 설정

③ 안보취약요소 개선 활동(10%)

- － 전년도 안보취약요소 개선 활동은 안보 취약요소(공·항만, 기반시설 등) 점검을 통해 각 개선점을 발굴하였으나 전체적인 안보 대응 체계 정비 및 실제 예방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청 차원의 개선 노력도 포함

○ 측정산식: [안보수사 역량 강화 인프라 구축(50%) +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40%) + 안보취약요소 개선 활동(10%)]

① 안보수사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50%)

- － 성과관리 계획상의 과제별 중요도와 난이도별 점수를 평가, 각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 측정
- － 과제별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함으로써 객관적 노력도를 평가

<측정산식>

[(각 과제별 횟수 × 각 과제별 점수)의 합이 50점 이상이면 100% 달성]

<과제중요도·난이도별 가점표>

등 급	관리과제	세부과제별 점수					
A	대공수사권 이관 대비 조직 재편	계획 수립	법령 정비				부서 신설
			법령	부령	훈령	지침	
	1	2	1.5	1	0.5	3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 협력 추진	실무자급 교류	국장급 교류			MOU 체결	
0.2		1			3		
B	업무영역 확장에 따른 인력 충원	50명 이하	100명 이하			100명 이상	
		1	2			3	
	안보수사 교육 과정 개편	내부과정 신설	외부과정 신설			해외위탁 신설	
		0.5	1			3	
C	안보수사경찰 역량평가·인력재편	계획 수립·결과 분석				인사 반영	
		0.5				2	
	해외 안보기관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간이)	보고서 작성(종합)			책자 발간	
		0.5	1			1.5	

- 50점을 100%로 기준, 구간별 점수 합산 90% 이상(45점 ↑) 달성 목표로 도전적 설정

구분	100% 이상 (50점 ↑)	90% 이상 (45점 ↑)	80% 이상 (40점 ↑)	70% 이상 (35점 ↑)	60% 이상 (30점 ↑)
점수	50	46	42	38	34

②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40%)=탈북민 범죄예방교육(20%)+신변보호활동 성실이행도 (10%)+탈북민 보호 우수사례(10%)

1) 탈북민 범죄예방교육(20%)

<측정산식>

[범죄예방교육 횡수별 점수 분포표에 따른 득점(보안업무관리시스템상 통계 활용)]

<점수분포표>

횡수	12월 기준	~1,952건 (~120%)	~1,790건 (~110%)	~1,627건 (~100%)	~1,464건 (~90%)	~1,302건 (~80%)
	10월 기준	1,627건	1,492건	1,356건	1,220건	1,085건
점수		20	18	16	14	12

※ 최종 목표치(1,790건)의 달성 기간 기준이 '21.1월~12월'임을 고려, 정책과제 평가 시기에 따라 목표치는 월별로 분할·계산하여 산정

2) 탈북민 신변보호 활동(10%)

<측정산식>

['신변보호 활동 성실 이행도'를 보안업무관리시스템상 '기간 내 근무사항 입력비율*'로 객관화]

* (신변보호활동 입력지연·누락 건수 / 보호 탈북민 수) × 10,000

<점수분포표>

신변보호활동 성실 이행도	S등급 (1.0% 이하)	A등급 (1.0%초과 1.5%이하)	B등급 (1.5%초과 2.0%이하)	C등급 (2.0%초과)
점수	10	8	6	4

3) 탈북민 보호 우수사례(10%)

<측정산식>

[칭찬플랫폼 우수사례 선발 횡수별 점수 분포표에 따른 득점]

<점수분포표>

횡수	12건 이상 (120%이상)	11건 (110%)	10건 (100%)	9건 (90%)	8건 이하 (80%)
점수	10	8	6	4	2

③ 안보취약요소 개선 활동(10%)

<측정산식>

[(각 과제별 건수 × 각 과제별 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100% 달성]

<과제중요도·난이도별 가점표>

등 급	A	B	C
유 형 (건당)	안보상황 사전 탐지 및 차단(제지·설득)	개선 필요점 발굴 및 관계기관 통보	안보상황 대응체계 계획 수립
점 수	2	1.5	1

35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 추진배경

- 기존 보안국이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개편('21. 1.) 됨에 따라, '對北' 위주 업무영역이 '안보수사' 중심으로 재편
 - － 간첩 등 국보법 위반사범 위주 개념에서 경제·사회 등 '포괄적 안보'로 확장, 산업기술 유출과 같은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 필요
 - ※ 기존 외사국 소관의 '산업기술유출수사', '테러·방첩수사' 업무 이관('21. 1.)
- 국정원법 개정예에 따라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완전 폐지 예정으로, 경찰이 '안보수사의 최종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자리매김
 - － 대공수사권 이관 유예기간(~'24년) 동안 경찰 안보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국가 안보수사 총 역량이 유지되도록 추진
 - ※ “국가안보엔 잠시도 공백도 있어선 안된다. 안보수사 역량을 기르고 조직 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3년 후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달라.”('20. 12. 30. 정세균 국무총리)
- 나날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사이버 안보위협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활동 및 선제적 예방활동 필요
- 안보위해세력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은밀화·지능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증거에 대한 법원의 증거능력 판단도 엄격화되는 상황에서 안보위해사범 수사에서의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지속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안보사범 검거로 빈틈없는 국가안보 수호]

- 안보수사 조직 정비와 수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경찰 안보수사 역량강화 3개년 계획' 등 수립·시행, 전문 수사조직으로 자리매김
- 안보수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간첩 등 정보사범을 비롯한 경제안보·공공안보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 후 사법처리 추진

< 안보수사 분야별 해당 죄명 >

분야별 구분		해당 죄명
전통안보(정보사범)		△ 국가보안법 △ 형법(내란·외환죄) △ 군사기밀보호법 △ 군형법 등
공공안보	기존	△ 대외무역법(전략물자 불법수출) △ 정보통신망법(악성프로그램) △ 마약류관리법(북한산 마약) △ 남북교류협력법(미승인 북한 방문) 등
	확대	△ 테러방지법(테러단체 구성·지원) △ 외국환거래법 △ 출입국관리법 등
경제안보(확대)		△ 방위사업법(방산물자·국방과학기술) △ 산업기술보호법 △ 부정 경쟁방지법(비밀유지) 등

- △ 변호인 참여 실질화 △ 압수물 관리 강화 △ 경찰사건심사 시민위원회 등 수사 과정의 모든 인권 보호 제도 또한 엄격히 준수

[사이버 안보위협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첨단안보수사 대응역량 강화]

- 첨단안보 분야 수사대상 죄종을 확대, 정통망법 위반 범죄는 물론 정보통신 분야 산업기술·방산범죄 등 수사팀이 다양한 사건을 직접 경험하며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
- 전문 IT업체 아웃소싱을 통해 실제 해킹사례 중심의 침해사고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첨단수사 기법(다크웹, 가상화폐 추적) 습득을 위한 민간 위탁교육 추진을 통해 전문수사 역량 제고
- 침해사고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데다 피해 확산이 빠른 만큼, △ 피해자 계정 보호조치(네이버·카카오 협업) △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KISA 협업) 등을 통해 침해사고 피해 예방활동 활성화

[디지털 포렌식 전문성 강화로 성공적인 안보수사 지원]

- 안보수사 분야 디지털 포렌식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 「현장지원팀」·「증거분석보고서 심의회」 운용 등 디지털 증거 확보 관련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현장 포렌식 지원활동 강화
 - － 안보수사·사이버 기능에서 활용하는 각종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성능 개선 및 국가보안연구소(NSR)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공조
 - － 최신 북한발 사이버공격 분석 및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신규 포렌식 영역에 대한 선제적 기술연구 수행

-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 업무의 전문성 강화
 - － 전국 분석관의 포렌식 역량 균질화를 위해 분석도구 활용교육, 순회교육, 수시 사례교육(화상회의) 등 입체적 직무교육 진행
 - － 북한 및 안보위해세력의 디지털 증거 은닉·사이버테러 등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민간 위탁교육 추진
 - － 디지털 증거수집·분석 관련 대외 전문성·신뢰성 담보를 위해 다양한 포렌식 전문자격증 신규 취득 및 갱신까지 지원
 - － 다양한 유형의 안보위해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 침해사고 등 대응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종합적 대응훈련 실시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안보 분야별 전문수사부서 지정·운영	'21. 2월	
	경찰청-국정원 '안보수사협의체' 구성	'21. 2월	
	'20년 사이버위협(해킹메일) 분석보고서 배포	'21. 2월	
	시·도경찰청 첨단안보수사계 수사 중심 조직 재편	'21. 2월	
	안보수사 역량평가 계획 수립	'21. 3월	
	해킹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리플릿 제작	'21. 3월	
	포렌식 모의훈련 종합계획 수립	'21. 3월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기술 교류 협의	'21. 3월	
2/4분기	상반기 중요 안보사건 현장점검	'21. 4월	
	첨단안보사건 관련 첩보 집중수집기간 운영	'21. 4월	
	안보수사 관련 포렌식 자격증 관리 강화계획 수립	'21. 4월	
	제1차 포렌식 모의훈련	'21. 5월	
	상반기 침해사고 대응훈련	'21. 6월	
3/4분기	안보사건 평가회의 개최	'21. 7월	
	지역별 사이버안보 정보공유 협의체 구성계획 수립	'21. 7월	
	포렌식 민간위탁 전문교육	'21. 9월	
	제2차 포렌식 모의훈련	'21. 9월	
4/4분기	하반기 중요 안보사건 현장점검	'21. 10월	
	안보수사 포렌식 민간위탁 전문교육	'21. 10월	
	하반기 침해사고 대응훈련	'21. 10월	
	제3차 포렌식 모의훈련	'21. 11월	
	시·도경찰청 안보수사부서 성과평가 워크숍 개최	'21. 11월	
	전국 안보수사대장 워크숍 개최	'21. 12월	
연중	안보수사 관련 국정원, 안보지원사 등 유관기관 상시 협조체계 구축	상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 이해관계 집단 :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 기대효과

- 안보위해사범 검거로 빈틈없는 국가안보 수호
- 첨단안보 분야로 업무영역 확장, 단계별·수준별 전문교육 및 실무훈련 강화 등을 통해 특화된 첨단안보수사 체계 구축
- 안보수사 분야 디지털 포렌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증거물의 동일성·무결성 입증을 통해 대국민 신뢰도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중요 안보사범 검거 지수 (50%)	585	684	616	692	하단 참조	하단 참조	검거보고서, 의견서, 수사결과보고 등 검거실적 DB
첨단안보 대응활동 지수 (25%)	신규	687.3	686.3	755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안보정보 공유망 및 사도경찰청 결과보고 등
디지털 포렌식 활성화지수 (25%)	57.6	74.8	114.3	125.8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안보정보 공유망 및 사도경찰청 결과보고 등

【'21년 목표치 산출 근거 및 세부 설명자료】

① 중요 안보사범 검거 지수(업무계획 4-1 인권 보장에 기반한 안보수사 전개)

- (산식) 안보수사 영역 확대에 따라, 신규 업무를 반영하여 산식 변경
- (① 정보사범 검거 X 2점) + (② 그 외 사범 검거 X 1점)

- ① 정보사범: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형법·군형법 제2편 제1·2장(내란 반란 등)
 - ② 정보사범 외
 - 경제안보사범: 산업기술보호법, 방산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상 업무상배임, 방위사업법, 국방과학기술혁신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 공공안보사범: 테러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출입국관리법, 총포화약법, 화학물질관리법, 대외무역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마약류관리법, 북한이탈주민법, 군사기밀법, 외국환거래법, 관세법, 정통망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21년 목표치 산출 근거)** ‘18~‘20년 업무 성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18년 585점, ‘19년 684점, ‘20년 618점 산출, 최근 3년간 등락 반복
 - 「‘21년 경찰청 자체평가 관리과제 설정 기준」에 의거, 목표치의 적극성 ‘상’ 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21년 목표치를 692로 설정**
 - ※ △3년 평균치 628.3 대비 10%이상 높은 적극적인 목표 설정

② 침단안보 대응활동 지수(업무계획 3-1 안보수사 전문성 제고 등 역량 강화)

- **(산식)** ‘침단안보수사계’로 조직 재편됨에 따라 기존 ‘침해사고 대응활동 지수’(舊 보안 사이버과 지표)를 **‘침단안보 대응활동 지수’로 지표명 변경**
 - (침단안보 내사 착수 건수 X 2점) + (침단안보 첩보 제출 건수<‘일보’ 이상 평가> X 0.5점) + (피해자 계정 보호조치 건수 X 0.1점)
 - ※ 검거 외에도 신속한 피해 예방·보호활동이 중요한 해킹 등 침단안보 사건의 특성을 고려, ‘피해자 계정 보호조치’ 항목 신규 추가
- **(‘21년 목표치 산출 근거)** 최근 2년간(‘19년 신설지표) 업무성과 반영 시 △‘20년 686.3점 △‘19년 687.3점 산출, 전년 대비 미미하게 하향(↓0.1%)
 - 「‘21년 경찰청 자체평가 관리과제 설정 기준」에 의거, 목표치의 적극성 ‘상’ 인정 기준을 적용하여 ‘21년 목표치를 755로 설정
 - ※ △2년간 실적 중 가장 높은 실적 687.3 보다 높게 △전년도 실적치 대비 10% 이상 (754.9 ↑)으로 목표 설정 시 적극성 ‘상’ 인정

③ 디지털 포렌식 활성화 지수(업무계획 3-1 안보수사 전문성 제고 등 역량 강화)

- **(산식)** (현장지원횟수 / 디지털포렌식 지원횟수 × 100) × 0.5 ② (선별압수 / 현장지원 횟수 × 100) × 0.3 ③ (포렌식 전문교육 이수 인원) × 0.2 점수의 합산
 -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법원의 판단기준은 더욱 엄격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 △ 디지털 포렌식 현장지원 횟수 △ 선별 압수 건수 △ 디지털 포렌식 역량 강화를 위한 포렌식 전문교육 이수 인원을 측정
- **(‘21년 목표치 산출 근거)** 최근 3년간 실적이 급격히 상승하여(103.8%) 임계치에 도달한 실정이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SS등급)한 125.8이라는 도전적 목표치 설정

36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 보호를 위한 안보정보 분석 능력 강화

□ 추진배경

- 최근 안보수사 대상은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에 의한 테러 및 방산·산업기술 유출까지 다양한 안보영역으로 확대
 - － 따라서 첩보 수집분야를 테러·기술유출 등 다양한 안보영역으로 확대하여 변화한 안보환경에 선제적 대응 필요성 대두
- 경찰이 유일한 안보수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국가 안보 총역량 유지’를 위하여 안보정보 수집·분석 역량 강화 필요
 - ※ 수사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서는 안 된다.('20. 7. 29.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 시 대통령)
 - － △ 경찰부서간 안보정보 융합 △ 국내 정보기관간 정보공유 △ 해외 정보기관 교류 확대 등 정보활동의 상호 협력·공조 강화
- 내사첩보 검증을 통해 인권보장 측면에서의 내부통제와 함께 안보 관련 정보의 체계적 분석·지원으로 수사의 효율성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안보첩보 수집영역 확대]

- 그간, 안보 첩보수집 분야는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등 對北 업무로 한정, 업무의 유연성·확장성이 결여
- 테러·국가중요기술 유출 등 국익을 침해하거나 국민생활에 위해를 가하는 다양한 안보* 분야까지 활동범위 확대 도모
 - * 테러·사이버·난민 등 일상생활에서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총칭
- － 다양한 안보영역에 대한 첩보수집을 독려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첩보수집 매뉴얼 제작·배포

영역	첩보수집 분야
기존	△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보사범 △ 공공안보사범(남교법 등) △ 사이버 △ 보안상황 △ 탈북민 △ 북한정세 △ 일반보안
신규	△ 대테러(테러방지법 등) △ 경제안보(대외무역법, 부정경쟁방지법, 외국환거래법 등) △ 기술안보(산업기술보호법 등) △ 사회안보(정통망법, 마약,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 커뮤니티 등 첩보 수집대상 다양화]

- <배경> 滯韓 외국인들은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국적별 커뮤니티를 형성, 활동하나 이를 대상으로 한 안보첩보 수집은 미흡
 - ▶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 △중국: 영등포, 구로, 안산단원 順 △베트남: 화성, 경산, 김해 順 △태국: 화성, 김포, 포천 順 △일본: 용산, 마포 順 △러시아: 부산, 인천 順
 - ▶ (주요 외국인 단체) (사)재한동포총연합회(중국 조선족), 주한러시아인연합(러시아), 재한고려인유학생네트워크(몽골), 재한인도네시아학생연합회(인도네시아) 등
- － 더욱이 북 대남공작도 제3국 우회 잠입 또는 외국인 활용 시도가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비한 첩보수집 활동도 필요
- ⇒ 국내 안보환경상 유관도가 높은 中·日·러 등 주변국의 국내 체류자 대상 첩보수집을 강화하여 빈틈없는 안보첩보 수집체계 구축
- <외국인 커뮤니티별 전담요원 지정> 관내 외사계* 담당과 협업, 커뮤니티 주요 구성원과 유대관계 형성 및 안보첩보 수집
 - * (안보) 외국인 대상 新안보 분야 첩보수집 / (외사) 일반 치안정보 수집
- － 우선 기 채용한 중국어 경채자(20명) 활용하고, 추가 외국어 전문인력 채용계획에 맞춰 담당 조정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駐韓 외국 공관원 대상 첩보 수집활동 강화를 위해 '21년 중국어 4명, 태국어 3명 등 총 15명 / '23년 까지 총 35명 채용 목표

[첩보 분석기능 전문성 강화]

- 現 對北정보에 한정된 안보첩보 분석기능은 해외정보를 포함한 확장된 안보개념에 적절하게 대응하기에 전문인력이 부족
- － 간첩 등 지하화·은밀화하는 안보사범에 대한 수사력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수집되는 안보정보 종합분석 및 전문성 강화 필수

<전문성 강화방안 >

▶ 경찰청(첩보분석팀 증원)

- 향후 수집 건수가 증가할 新안보 및 해외정보까지 분석하기에는 전문성·인력 부족 (인당 日 52건 분석 중, 외사기능 105명 이관에 따라 연간 최소 5,040건* 증가 예상)
 - ※ 현재 안보수사 8년이상 수사관, 북한 관련 학위 소지자가 분석 전담
 - * 외근 인당 월 4건(대공첩보수집규칙) × 105명 × 12월 = 5,040건
- 수사 전문가 및 외국어 능력자 1명 증원, 다양한 안보영역에 대한 분석기능 강화

▶ 시·도경찰청(수사첩보 전담 분석관 배치)

- 시·도경찰청 정원 조정으로 수사첩보 분석에 전종하는 전담 분석관 지정·운영

- 안보경찰 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안보정세를 전문적으로 분석한 안보 ISSUE&BRIEFING(가칭)을 제작·배포, 최신 안보 이슈 전파
- － △ 국외 안보정세 △ 북한정세 △ 탈북민 리포트 △ 주요 안보 사건 소개 등을 목차로 분석서를 배포하고 관련 정보 공유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안보수사외국어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21. 1월	
	안보첩보수집비 업무처리 지침 수립·하달	'21. 3월	
	첩보수집 매뉴얼 제작·배포	'21. 3월	
	국내 안보정보 수집 필요 대상 정비	'21. 3월	
	상반기 시·도경찰청 첩보분석 담당자 워크숍(화상회의)	'21. 3월	
2/4분기	시·도경찰청 안보첩보 관련 순회교육 및 간담회(강원·충청)	'21. 4월	
	해외정보기관 교육파견 협의(주한미군 정보참모부)	'21. 4월	
	경찰 內 안보정보협의체 구축 관련 회의	'21. 5월	
	해외정보기관 MOU체결(주한미군)	'21. 6월	
3/4분기	경찰 內 안보정보협의체 회의	'21. 7월	
	첩보수집비 집행관련 현장점검	'21. 8월	
	시·도경찰청 안보첩보 관련 순회교육 및 간담회(수도권)	'21. 9월	
	안보첩보 수집활동 성과평가 관련 시·도경찰청 의견수렴	'21. 9월	
4/4분기	하반기 시·도경찰청 첩보분석 담당자 워크숍(화상회의)	'21. 10월	
	시·도경찰청 안보첩보 관련 순회교육 및 간담회(호남·영남)	'21. 11월	
	안보수사외국어 경력경쟁채용자 직무교육	'21. 11월	
	경찰 內 안보정보협의체 회의	'21. 12월	
연중	안보정보 관련 국정원, 안보지원사, 정보사 등 상시 협조 체계 구축	상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대한민국 국민
- 이해관계 집단 : 간첩·테러단체·국가중요기술 유출사범 등 안보위해세력

□ 기대효과

- 北 대남공작 및 외국인 간첩, 테러, 경제안보사범 등 국가안전 보장과 국익에 반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첩보수집 역량 강화
- 경찰청 諸 정보기능 및 국내·외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경로로 수집한 안보수사 첩보를 종합적으로 분석, 활용
- 선진국 주요 안보수사기관과의 MOU체결 등 정보교류 확대로 안보정보 수집 루트 다각화 및 선진 정보기관의 노하우 획득
- 안보 내사첩보 검증으로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안보첩보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고도화 작업을 실시하여 안보수사 능력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안보수사정보 활용도 (70%)	없음	없음	212	235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안보수사 정보분석서 목록, 활용된 사례 목록 작성
안보정세분석 전문성 강화 (30%)	신규			36	하단참조	하단 참조	이슈앤브리핑 목록, 분석서 및 공문 등

【'21년 목표치 산출 근거 및 세부 설명자료】

① 안보수사 정보 활용도(업무계획 1-③-2 안보수사국 신설 및 업무 영역 확대)

- 그간 일선 안보요원들이 제출해 온 안보수사 첩보는 가치평가만을 받았을 뿐, 이를 실제 수사현장에 활용하는 사례는 드물어 첩보의 유가치한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
- － 또한 대공수사권 이관 및 안보수사본부 신설이 논의됨에 따라 경찰의 안보수사 능력을 제고하고자 전국에서 수집·제출되는 안보수사 관련 첩보를 전문적으로 검증·분석하여 현장에 제공하는 기능이 신설되어 관련 성과지표를 신규 선정함

○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 (측정산식) 안보수사정보 활용도의 종합평가를 위해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를 합산

- ▶ 양적평가: 안보범죄분석계에서 생산한 안보수사 정보분석(안보수사국장에게 보고한 보고서 기준) 건당 1점 부여
- ▶ 질적평가: 안보수사 정보분석서가 활용된 경우, 그 효용도에 따라 추가로 1~10점* 부여
 - * 북 공작원 신원 입증자료 활용 10점 / 대상자 혐의사실 추가자료 활용 5점 / 기존 혐의 사실 보강자료 활용 3점 / 공공 안보사범 관련 수사정보 활용 1점

- (측정산식) 안보수사정보 활용도의 종합평가를 위해 '양적평가'와 '질적평가'를 합산

- (양적평가) 전년도에 신설된 지표로 전년 실적인 59점 대비 11% 이상 증가한 65점을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

- (질적평가) 전년도에 신설된 지표로 전년 실적인 153점 대비 11% 이상 증가한 170점을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

② 안보정세분석 전문성 강화(업무계획 Ⅲ-④-3 첩보수집 분야대상·원천 다변화)

- 안보경찰에 필요한 최신 안보이슈를 전문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지표 신설
- 테러·국가중요기술 유출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테러 단체 동향, 최신 해외 안보 이슈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며, 또한 북 선전매체는 엄격한 검열을 거친 북한의 대외적 공식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필요

○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 해당지표는 국정원·안보사·해외안보기관 등과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해당 기관의 고급정보를 획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도전적인 지표 설정
- 안보이슈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서(경찰청장 보고)와 주요 안보이슈 발생시 작성하는 수시 분석서(안보수사국장 보고)를 작성한 실적을 인정
- 정세분석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서 생산시 분야별(북한·해외정세) 각 1회 이상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실시

* 해당분야 대학교수 및 전공 석·박사, 관련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및 유관(주무)기관 담당자 등

⇒ 정기·수시 분석 수요를 예상하여 18회의 분석서 생산 및 보고서 분야별(북한·해외정세) 전문가 자문실시 18회 목표

37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빈틈없는 경호업무 수행

□ 추진배경

- ‘친근한·낮은·열린 경호’를 표방하는 現 정부 경호철학과 대통령의 탈권위적 행보로 경호업무 수행에 더 많은 노력 필요
- '21년은 국정운영 5년 차,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로 경제 활력 제고와 민심 회복을 위해 현장방문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

(대통령 21년 신년사 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중략...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습니다.”

- P4G 정상회의(5.30.~31.),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12.7.~8.) 등 굵직한 국가중요행사도 예정, 적극 지원으로 국격향상에 기여

□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

[완벽한 경호임무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경호인력풀 정예화> ¹⁾근접경호 ²⁾MD ³⁾X-ray 분야별로 구성, 정기 인사 시마다 인력풀 현행화 / 서울청 외빈경호대와 합동근무·교육

※ 경호인력풀 : 유동적인 경호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 직원으로 구성된 비상설 인력(경호경력·무도·신체조건·외국어능력 등 고려 선발)

- <경호특화부대 신설> 경찰관기동대 중 경호임무를 수행할 부대를 지정하여 운영, 본청 주관 ‘경호 전문화 교육’으로 전문성 제고

▶(주요임무) 경호 행사장 인적·물적·지리적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활동

※ △X-Ray, MD 등 검색장비 활용 안전검측 △ 취약지 수색 △ 행·환차로 안전유지

▶(편 성 안) 총 24개 부대 : 서울(12), 부산(2 1/3), 대구(1 1/3), 인천(1), 광주(1 1/3)

-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신규 경호 인력풀과 경호업무 전입자 대상으로 △ 교육기관 교육 △ 실습형 교육 △ 사이버콘텐츠 운영

▶(인재개발원 교육) 경호실무과정, 근접경호심화과정, 기동경호심화과정 등
 ▶(실습형 교육) 응급상황대비 현장교육, 실시간 양방향 화상회의 교육 등
 ▶(사이버콘텐츠) 근접수행경호, 경호실무사례, MD·X-ray검색기 운용요령 등
 ※ 22경호대·외빈경호대 등 전문인력 활용하여 사이버콘텐츠 지속 개발

[최신 장비 도입 및 상시 가용성 확보]

- <최신 경호장비 도입> AI 기술을 적용한 X-ray 판독시스템·최신 경호용 무전기 등 첨단 장비도입으로 업무 효율성 증대

▶(AI X-ray 판독기) 축적된 위해물품 영상자료를 통해 신속하면서 효과적으로 물품을 검색하여 위해 의심물품을 모니터에 현출하는 시스템
 ▶(경호용 무전기)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도·감청 차단하면서 안정적 통화권도 확보

- <장비 최적상태 유지> 권총·금속탐지기 등 노후장비는 신형으로 교체, 정기점검으로 가용장비를 파악하고 고장장비는 신속히 수리

※ 권총은 명중률·휴대성이 좋은 신형모델로 교체하여 경호 전담부대에 보급 중

[경호 유관기관 협업 강화]

- <현장중심 경호네트워크> 경호처·주최측과 공동으로 경호행사 前 FTX 및 현장 지도점검 등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

- <경호행사 평가·환류> 전년 경호활동을 평가하고 금년 경호환경을 분석하여 「'21년 경호지침」을 작성, 각급관서 담당부서와 공유

- <중요행사 등 지원> 경호처·외교부 등 각 부처로부터 국제 행사 개최·외빈초청 등 관련 협조요청에 따라 경호지원

※ P4G정상회의(경호처),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외교부), 재·보궐선거 및 대선(선관위) 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호인력풀 및 MD·X-ray 검색요원 재편성	'21. 2월	
	'21년 전국 경호경찰 워크숍	'21. 3월	
	전담경호대 현장점검 및 건의사항 정책반영	'21. 3월	
2/4분기	재·보궐선거 신변보호 실시	'21. 4월	
	「'21년 경호업무 지침」 발간	'21. 5월	
	「P4G 정상회의」 종합치안대책 수립	'21. 5월	
	경호특화부대 운영계획 수립·시행	'21. 6월	
3/4분기	'21년 상반기 경호행사 평가·분석	'21. 7월	
	경호특화부대 역량강화 교육 실시	'21. 8월	
	제20대 대선 관련 경호 예산 확보 추진	'21. 9월	
4/4분기	전국 경호장비 일제점검	'21. 10월	
	전담경호대 경호장비(총기 등) 도입	'21. 11월	
	제20대 대선 대비 경호계획 수립	'21. 12월	
	'21년 경호행사 평가·분석	'21. 12월	
연중	경호행사 종료 후 평가·분석 및 개선지침 하달	연중	
	주요인사 경호 및 신변보호 활동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대통령 등 국내외 주요 인사를 비롯한 모든 국민
※ 국가안보·외교관계에 직결된 사항으로 모든 국민이 수혜자에 해당
- 이해관계 집단 : 경호처·軍·국제행사 주관부처 등 관계기관

□ 기대효과

- 경찰경호 전문성 강화로 경호대상자의 안전확보와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경호 활동을 실시, 빈틈없는 국정운영 뒷받침
- 경호 준비단계에서부터 평가·환류 단계까지 부처간 협업으로 현장 중심의 '경호업무시스템' 구축하고 국가 위기사태 예방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경호역량 강화를 통한 빈틈없는 경호업무 수행성(I -1-일반재정②)				
① 경비경찰활동(2131-311)		일반회계	5.51	19.3

※ 경호 장비구입으로 인해 자산취득비(13.9억) 증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경호 경찰 전문화 교육 및 설문조사 (40%)	신규			76.2점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전문화 교육 계획 및 결과보고서 교육 결과 설문조사 만족도 평가
경호 경찰 인프라 구축 (40%)	신규			26점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지침·조직·장비 확보 관련 계획 및 관련 공문
경호업무 관계기관 협업 (20%)	신규			41%	하단 참조	하단 참조	관계기관회의·현장점검 계획·결과보고 등 관련 공문

① 경호 경찰 전문화 (40%)

- (개요) 경호업무는 경찰에서 특수성 있는 업무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 금년 처음으로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이 실제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도 지표로 반영

- (측정산식) 경호경찰 인력풀 교육 실시율(교육 인원수 / 경호경찰 인력풀) × 0.7
+ (경호경찰관 교육수료자 대상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균값) × 0.3

- (목표치 및 산출근거)

▶ 최근 3년(코로나19로 미 실시한 작년 제외) 교육 실시율 평균은 76%로 작년 제외 10% 상향한 목표치 81% 설정. 따라서 목표치는 56.7점 (81%×0.7)

▶ 이는 교육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교육계획 및 실시결과는 공문 또는 교관 출장기록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목표치 산출근거(경호인력풀 교육인원) >

구 분	'18년	'19년	'20년	평균	'21년 목표
교육훈련 실시율	75%	77%	미 실시	76%	81%

▶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10점 만점기준이며 올해 첫 시행으로 목표를 65%로 설정. 따라서 목표치는 19.5점 (65%×0.3)

▶ 측정산식에 따른 도합 목표치는 76.2점

② 경호 경찰 인프라 구축 (지침 마련 · 조직 확보 · 최신장비 도입 등) (40%)

- (개요) 빈틈없는 경호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지침·장비 등 기반 구축에 노력을 경주, 현장 경찰관들이 경호행사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측정산식) ▶ (A)경호업무 담당조직·부대 신설(양성) : 건당 10점
 ▶ (B)규칙·지침·매뉴얼 마련 : 건당 7점
 ▶ (C)신형 경호장비 도입 : 장비 1종당 3점
- (목표치 및 산출근거) 3년치 평균 23점 대비 10% 상향한 26점 이상일 경우 목표 달성

< 목표치 산출근거 >

구 분	'18년	'19년	'20년	평균	'21년 목표
경호 인프라 구축	A(1건), B(2건) 24점	B(3건) 21점	A(1건), B(2건) 24점	23점	26점

③ 경호업무 관계기관 협업 (20%)

- (개요) 경찰의 경호업무의 핵심은 대통령 경호, 4부요인 경호, 국가중요행사 지원 등으로 경호처 · 외교부·주한대사관 등 외부 관계기관과 협업 구축 필요. 긴밀한 협업을 위해 사전 회의 등 노력 집중
- (측정산식) (관계기관 회의 주관·현장점검 횟수 / 대통령 경호행사 건수)
- (목표치 및 산출근거) 3년치 평균 33.6% 대비 20% 상향한 41점 이상일 경우 목표 달성

< 목표치 산출근거 >

구 분	'18년	'19년	'20년	평균	'21년 목표
관계기관 회의 (현장점검 포함)	22%	20%	59%	33.6%	41%

기 본 방 향

- ◇ 현장중심 정책 지원과 제도·시스템 정비로 일선 경찰관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치안문제를 해결
 - △인력 △예산 △시설 등 기본적인 치안인프라를 확충하고, 업무 혁신·복지기반 확충 등 다각적인 처우 개선으로 조직의 활력 제고
 - AI·드론·빅데이터 등 첨단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현장 치안력 강화
- ◇ 청렴하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 혁신으로 국민에게 공감받는 경찰상 구현
 - 시민참여 중심의 종합적인 반부패대책 추진으로 한 차원 높은 쇄신을 이뤄내고, 경찰조직에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내재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없음*	4	4	16	47

*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 개선안('19.6.) 반영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 현장 자긍심 제고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없음
성과목표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인사·성과·교육 부문 직무만족도
	㉔ 정책추진 프로세스 강화로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견인	'21년 국정과제 수 성과지표 달성도 / 현장 인력 재배치 / 정책모니터링 활성화
	㉔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직무만족도 / 현장우수사례 표창비율 / 여성 경찰관 비율 확대
	㉔ 입법대응 체계화 및 현장 법률지원 확대로 경찰 법집행력 강화	입법대응 노력도 / 규제혁신과제 달성도 / 통합 법률 및 소송 지원체계 만족도 / 현장법률365 센터 대응 노력도
	㉔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 현장 활용도 / 인재채용률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성과목표 2.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현장활력 기반을 마련한다		조직문화 부문 직무만족도
	㉔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제도개선 실적 / 적극행정 면책실적
	㉕ 위기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예방·문제해결 중심 감찰활동 전개	제도개선 자료 제출 노력도 / 유가치 첩보 활용도 / 감찰수사 전문화교육 이수율 / 감찰활동 만족도
	㉖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 성평등 교육 정착도
성과목표 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장비·시스템 부문 직무만족도
	㉗ 치안R&D와 치안산업 진흥으로 현장 지원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현장 문제해결 발굴 건수 / R&D 연구결과물 현장 만족도 / 치안 장비·기술 수출상담 건수
	㉘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사이버위험 사전예방 노력도 / 사이버위험 대응 신속도 /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㉙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정보화 서비스」 구현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 경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도 / 비대면 업무환경 지원도
	㉚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경찰장비 현장 만족도 / 장비 규격 개선 실적 / 친환경 차량 보급률
	㉛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치안현장 헬기지원 성과 / 항공요원 안전관리 역량강화 / 예방정비 활동
성과목표 4.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복지 부문 직무만족도
	㉜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적극 지원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 유연근무제 활용 / 연가사용 실적
	㉝ 현장활력을 제고하는 복지기반 확충	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 / 직장어린이집 확충 예산 증가액 실적 / 퇴직(예정)경찰관 취업지원 성과
	㉞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재정지원도
	㉟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기반 마련	경찰청 SNS 활동지수 / 주요정책 언론홍보 실적 / 오보 및 온라인 이슈 대응 활동

(1) 주요 내용

- **<현장 중심 정책 개발>** △ 성공적인 경찰개혁 완수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조직 전반의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 － △ 인사제도 개선 △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로 직책에 따른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입법대응·법률지원으로 현장 법집행력 제고
 -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업무가 중심이 되는 문제해결형 감사·감찰활동을 추진하고, 경찰정책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 문화 정착
 - *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때 계획·이행·감시·평가의 모든 수준에서 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 **<첨단과학기술 활용>** 치안 R&D 및 데이터 활용을 기반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스마트치안을 구현하여 현장의 문제 해결
 - － 조직 및 사회변화에 대응하여 「차세대 정보화 서비스」를 발굴하고, 법집행 현장의 원활하고 안전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장비 개발·보급
 - **<치안현장 활력 제고>** 순직·공상 경찰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적인 재정·복지기반을 확충하여 자긍심과 사기 제고
- ⇒ 현장 활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조직의 목표 달성에 있어 선제적 요건이 되는 구성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의지 결집

구 분		성과지표
전략목표	현장 자긍심 제고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없음*

*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 개선안('19.6.) 반영

- 전략목표 Ⅲ 특성상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표 설정은 어려우나, 현장직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제고함으로써 전략목표 Ⅰ·Ⅱ달성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2)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 및 자치경찰제 전국시행('21. 7. 1.), 정보경찰 개혁 법제화 등 대대적인 경찰개혁의 목적과 취지를 현장에서 구현하고 국민안전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
 - － 다양한 제도·정책들을 현장에 안착시켜 국민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 사전·사후관리가 필수적
- 부서 간 경계가 보다 뚜렷해지는 직제개편 이후 조직 내 협업과 소통이 약화되는 ‘사일로 현상(Silo Effect)*’이 발생할 우려
 - * 조직·부서 간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내부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부서 간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현상
 - － 종합적인 관점에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융합행정을 고도화하여 ‘조직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며 직장협의회 등 현장소통도 활성화

(3) 참고자료

- 경찰청, 「경찰통계연보」
- 경찰청, 「2021년 주요 업무계획」
- 「경찰청 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0~2024)」

(1) 주요 내용

- <치안정책 방향성 확립> 조직 차원의 정책추진 프로세스(설계-실행-평가-환류)를 체계적 총괄, 정책 완성도를 제고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 견인
 - － △주요정책 간 유기적 목표설정 △정책 점검·환류 강화 △연구·지원 등 정책역량 제고를 통해 「국가-수사-자치」 3원체제 안착 도모
 - － 현장인력 증원·재배치 등 조직·인력의 효율적 운용으로 현장대응력을 뒷받침하고,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선제적·능동적 경찰행정 구현
-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 운영> △성별·입직별 균형인사 △여경 선발비율 확대 △우수사례 표창 활성화를 통해 현장활력 제고
- <법률지원 체계화> △경찰개혁 입법 지원 △법무지식정보시스템(PoLaw Search) △「현장법률365」 운영 △손실보상 등 법률지원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으로 적법하고 당당한 공권력 행사를 뒷받침
- <치안인재 양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전문성을 배양하고, △경찰정신 △청렴의식 △시민지향적 법집행 등 공직가치 내재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인사·성과·교육 부문 직무만족도
관리과제	정책추진 프로세스 강화로 국민체감 성과창출을 견인	'21년 국정과제 쏠 성과지표 달성도 / 현장인력 재배치 / 정책모니터링 활성화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직무만족도 / 현장우수사례 표창비율 / 여성경찰관 비율 확대
	입법대응 체계화 및 현장 법률지원 확대로 경찰 법집행력 강화	입법대응 노력도 / 규제혁신과제 달성도 / 통합 법률 및 소송 지원체계 만족도 / 현장법률365 센터 대응 노력도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 현장 활용도 / 인재채용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인사·성과·교육 부문 직무만족도	80.0	82.0	80.5	82.0	인사·성과·교육 부문 직무만족도는 '19년 상승 후 하락하였고, 전 3년도 실적 평균값(80.8)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 (81.3)을 고려, '21년 목표치는 반등을 목표로 예측값보다 높은 82.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인사·성과·교육 분야 문항 평균)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직무만족도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경찰 조직의 大변혁기를 맞아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새로운 조직구조와 업무체계의 안착이 필요한 시기

- ▶ **(국민의 기대)** 형소법개정 등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법집행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민의 관점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
- ▶ **(급격한 변화)** 경찰 조직이 「국가-수사-자치」의 3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무분장과 지휘체계, 업무수행방식 전반이 큰 폭으로 변화

- 정책추진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완성도를 제고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성과 균질성을 확보하고 국민 체감성과 창출 견인

- MZ세대('80~'00년생) 확대 등 시대 변화를 반영, 연령·경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설계 및 비대면교육 플랫폼 구축

(4) 참고자료

- 2021년 경찰교육훈련기본계획
- 2020년 ATD TK(美 교육기술 컨퍼런스) 토의자료
-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5 교육산업의 미래, 기술 혁신과 플랫폼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38 정책추진 프로세스 강화로 국민체감 성과창출 견인

□ 추진배경

- 올해는 경찰 조직의 대변혁기를 맞아,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새로운 조직구조와 업무체계의 안착이 필요한 시기
 - － (높아진 위상) 권한이 커진 만큼 법집행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민의 관점에서 엄정한 법집행을 기대
 - － (급격한 변화) 「국가-수사-자치」의 3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무분장과 지휘체계, 업무방식 전반이 큰 폭으로 변화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정책추진 프로세스(설계-실행-평가-환류) 전반에 대한 점검과 완성도를 제고, 체감성과 창출 견인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정책추진 방향 확립 및 체계적 관리 강화]

- <방향성 확립> △ 주요업무계획 △ 성과관리 시행계획 △ 치안종합성과평가계획 간 정책목표를 통일하고 실행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

- ▶ (주요업무계획)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정책목표로 설정
- ▶ (성과관리계획) 정책목표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성과지표, 추진계획 수립
- ▶ (치안종합성과평가) 비전·목표 달성을 위해 쏠 관서·부서·개인의 역량과 성과 평가
- ▶ (정부혁신·적극행정) 정부 추진전략과 방향을 분석, 자체 기본계획 수립

- <정책 점검·환류 강화> △ 집행력 제고 △ 총괄점검 강화 △ 환류 시스템 구축 등 내실있는 정책관리로 주요정책의 현장안착을 지원

- ▶ (집행력 제고) 신규정책 수립 시 △ 홍보 및 점검·환류 방안 △ 추진 로드맵 반드시 포함하여 정책추진의 책임성 확보
- ▶ (총괄점검 강화) 주요정책의 추진 현황을 누락 없이 한눈에 조망하도록 「정책추진 총괄 로드맵」 작성·운용
- ▶ (환류 내실화) △ 현장자문단 △ 정책모니터링 △ 설문조사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 정책의 합리성 제고 및 개선방안 발굴

- <관리자 책임성 강화> 실무차원에서 과오가 발생하더라도 관서장·중간관리자가 중첩적으로 확인·교정할 수 있는 종합적 체계 구축

- ▶ (문제인식) 실무차원에서 사건 등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자에게 상황이 인식되고 문제의 징후가 파악되는 프로세스 구축
 - ⇒ △보고사항 표준화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주요업무 관리자 책임 제고 등
- ▶ (법집행) 초동수사나 112 신고처리, 민원응대 등 현장활동 단계별 관리자의 책임성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오류를 최소화
 - ⇒ △수사단계별 관리자 역할 강화 △112출동 사후민원에 대한 대응 강화 등
- ▶ (사후관리) 특정 이슈의 개선대책으로 마련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정책 점검·환류 및 교육의 실질화·내실화
 - ⇒ △주요정책과제 현장점검 강화 △FTX 실질화 및 실패사례 교육 강화 등

- <모니터링 강화> 주요정책 시행 전후 내·외부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결과를 제공, 환류 지원을 통한 정책품질 개선 도모

- ▶ (정기조사) △치안고객만족도 △체감안전도 △직무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치안정책에 반영, 소통과 공감에 기반한 경찰활동 뒷받침
- ▶ (정책모니터링) 국·관 주요정책 시행 전후 내·외부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결과를 제공, 환류 지원을 통한 정책품질 개선 도모
 - ⇒ ‘20년 「제주 자치경찰 112신고처리 만족도 조사」 등 57회(’07년 개소 후 총 701회)
- ▶ (신뢰도 제고) △모바일 조사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정책연구용역(3~6月)
 - △모바일(카카오톡) 조사방식 접목(7月) 등 체감안전도 조사방식 개선
- ▶ (활용도 향상) △‘빅데이터 플랫폼 대시보드’에 조사결과를 시각화하는 사업 추진
 - △관서별 비교·추이 관찰 등 분석이 가능한 ‘영향요인 분석툴’ 개발

[「국가-수사-자치」 3원 체제 안착 지원]

- <시·도경찰청 정책역량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경찰청이 주체가 되어 정책의 수립·시행·환류 쏠 과정을 수행
 - －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의 정책역량 전반 강화 추진

- ▶ (인적역량 강화) 시·도경찰청 기획예산계 및 주요 자치사무 수행 부서를 대상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교육·훈련과 인센티브를 통해 역량과 의욕 고취
- ▶ (물적역량 강화) 정책 수립의 절차와 과정 전반을 정비하여 정책품질과 절차적 정의를 확보하고, 데이터분석·연구지원 등 정책지원 시스템 확충

- <자치사무 성과관리> 자치경찰 시행 후 전국적인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 지역 맞춤형 경찰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각 시·도 경찰청에서 목표수립·평가까지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제시

- ▶(계획 수립) 시·도경찰청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 맞춤형 지표를 마련하고, 국정과제 등 전국적 추진동력이 필요한 중요지표는 본청에서 관리토록 조정
※ 시범운영에 조기 참여하여 전국 시행 안착에 기여한 시·도경찰청에 인센티브 부여
- ▶(표준 제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율지표 수립 시 기본 모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성과과제 자율지표 Pool’ 제공
- ▶(업무 지원) 시·도경찰청의 성과목표 설계·평가 관련하여 구체적 업무 수행 절차를 교육·지원, 안정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점검

[인력·조직 등의 효율적 운용으로 현장대응력 뒷받침]

- <인력 증원> 現 정부 출범('17년) 이후 경찰인력 2만명 증원계획에 따라 민생치안·의경대체 분야 15,886명(2만명 대비 79.4%) 증원
- △ 책임수사 역량 강화 △ 아동학대 조기발견·수사·사후지원 등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력 증원 추진

< 現 정부 연차별 경찰인력 증원 현황(명) >

구분	계획	'17년	'18년	'19년	'20년	'20년 수시	'21년	'22년(잔여)
합계	20,000	1,870	2,120	4,582	3,991	538	2,785	4,114
	누적 (비율)	1,870 (9.4%)	3,990 (20.0%)	8,572 (42.9%)	12,563 (62.8%)	13,122 (65.5%)	15,886 (79.4%)	20,000 (100%)
민생	12,227	1,870	2,120	1,502	2,525	538	1,135	2,537
의경	7,773	-	-	3,080	1,466	-	1,650	1,577

- <인력 재배치> 부서장 책임제와 연계, △ 시·도경찰청장(경정 이하) △ 경찰서장(경감 이하) 주도로 관서별 실정에 맞춰 연중 정원 재배치
※ 행안부 권고기준(매년 쏘 부처 정원 1% 이상을 재배치)을 수용, 경찰청 전체 정원의 1% 가량인 1,200명 이상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시행
- <직급구조 개선> 계급별 적정수준의 정원을 확보하여 하위직에 편중된 침탐형 직급구조를 개선, 적정한 책임범위 확보

< 경찰·일반직공무원 간 직급구조별 비율 >

구분	총경(4급) 이상	경정·경감(5~6급)	경위(7급) 이하
경찰	0.52%	9.8%	89.68%
국가일반직	5.32%	30.19%	64.48%
지방일반직	1.43%	35.70%	62.90%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치안종합성과평가 계획 수립(하달)	'21. 2월	성과
	2021년 경찰청 주요업무계획 수립	'21. 2월	기획
	정책 총괄점검 및 환류 강화방안 공유·교육	'21. 3월	기획
	'22년 경찰청 소요정원안 확정(행안부 제출)	'21. 3월	조직
	'22년 상반기 경찰청 직제 등 개정	'21. 3월	조직
	국정과제 성과지표·세부이행계획 수립	'21. 3월	성과
2/4분기	경찰청 정부혁신·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21. 4월	기획
	경찰청 치안종합성과평가 중간평가 실시	'21. 6월	성과
	치안종합성과평가 사이버 강의 제작	'21. 6월	성과
3/4분기	경찰청 자체평가 중간점검 / 모바일 체감안전도 조사 접목	'21. 7월	성과
	시·도경찰청 사무분장규칙 개정	'21. 7월	조직
	성과 우수관서·부서 선발	'21. 8월	성과
	경찰청 정부혁신 경진대회 개최	'21. 9월	기획
	'22년 하반기 경찰청 직제 등 개정	'21. 9월	조직
4/4분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21. 10월	국회
	국정과제 실적보고서 작성·발표(국무조정실)	'21. 10월	성과
	경찰청 자체평가·치안종합성과평가 최종평가 실시	'21. 11월	성과
	경찰백서·통계연보 발간·배포	'21. 11월	성과
연중	치안환경 변화를 반영한 경찰인력 재배치	연중	조직
	임시회 등 국회 일정 시 업무보고·현안질의 대응 등	연중	국회
	경찰청 성과보고회 개최	분기별	기획
	VIP·총리 지시사항 관리·조치결과 보고	분기별	기획
	국정과제·경찰청 정책과제 추진사항 점검	분기별	성과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경찰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민생치안 확립과 직결되는 국민과, 인력증원·재배치 평가 등의 대상인 현장 경찰관
- 이해관계집단 : 정책추진 과정에서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본청 각 기능, 시·도경찰청 및 他 부처·국회 등 유관기관

□ 기대효과

- 경찰활동 全 과정(예방·법집행·수사·회복)에서 정책의 작동성과 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법집행 수준을 향상
- 새로운 경찰 시스템으로부터 야기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도경찰청의 정책역량을 강화하여 3원 체제를 성공적으로 안착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국정과제 全 성과지표 달성도 (40%)	76%	89%	92%	95%	금년은 現 정부 임기 마지막 해로 국정과제의 '성과달성도·정책효과성' 강조 및 각 성과지표 목표치 상향 설정 예정(국무조정실)인 만큼, 달성 난이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나, 2년 연속('20년~'21년) 정부업무평가 '우수'부처 달성을 위하여 ※ (평가 결과) '18~'19년 '보통', '20년 '우수' 금년도 목표치를 前 3년도 실적 평균 값(85.6%) 보다 10% 이상 초과 상향한 95% 달성을 제시함으로써 역대 최고 목표치 경신 및 도전적·적극적 목표설정	목표 달성한 지표 개수 ÷ 국정과제 全성과지표 × 100(%)	정부업무평가 성과지표 보고서 (작성 시 근거자료와 함께 국조실에 제출)
현장 인력 재배치 (30%)	878 명	1,633 명	1,748 명	1,500 명	경찰청은 '19년~'20년 대대적인 재배치로 지역간·기능간 치안격차를 일정 부분 해소한 가운데, 현장 중심 인력 운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현 기조에 따라 최근 3년 평균 재배치 인원(1,419명)의 106% 수준인 1,500명으로 적극적 목표치를 설정 이는 전년도부터 全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행안부 권고기준(정원의 1%, 경찰청 기준 1,200명) 보다 125% 높은 수준	현장 재배치인원 ÷ 목표치 × 100(%)	현장 인력 재배치 공문 등
정책모니터링 활성화 (30%)	58	50	57	60건	경찰청 주요정책 시행 전·후 내·외부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반영하는 환류 시스템 활성화 금년도 목표치는 전 3년도 실적 평균 값(55건) 보다 약 10% 상향한 60건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설정	정책모니터링 운영 횟수	정책모니터링 결과

39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 추진배경

- 국수본·자치경찰 시행 등 경찰 제도의 전환기를 맞아 현장에서 공감받는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인사 분야 직무만족도 제고
- 업무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을 통해 현장경찰관 자긍심 제고
- 또한, 사회 전반의 성평등 가치 확산 및 여성경찰관 역할 확대 등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맞춰 비율을 지속적으로 상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인사제도> △근속승진에 따른 인력운용방안 마련 △인사행정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 지원 등 추진
 - ▶(근속승진) △별도 근속 Track 신설 △경감급 인력운용안 마련
 - ▶(승진제도) △동료평가 도입 △동료위원 참여 실질화
 - ▶(균형인사) △경사 이하 입직자 승진기회 확대 △기획인재 운영 등
 - ▶(자치경찰) △인사 및 표창 관련 표준 조례안·위원회 규칙안 마련
- <현장 우수사례 포상> 치안 현장의 업무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포상하는 현장 중심의 포상제도 운영 기조 유지
 - － 특히, △칭찬플랫폼 운영 활성화 △베스트 팀장 등 우수 현장활동 사례 적극 발굴 포상, 활력있는 현장 업무 분위기 조성
- <여성경찰관 확대> '22년까지 여성경찰관 비율을 15%*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매년 신규 채용 시 여성경찰관 선발 확대 中
 - * '19년 12.6%(달성) → '20년 13.4%(달성) → '21년 14.2% → '22년 15.0%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충원계획 수립 시 여성경찰관 채용인원 목표치 반영	'21. 1월	
	1차 채용공고 시 시·도경찰청별 균형인사를 위한 여성경찰관 인원 배정	'21. 2월	
	현장정책자문단 구성원 및 소통계정 정비	'21. 3월	
	'21년 특별승진·승급 및 경찰청장 표창 배정계획 수립	'21. 3~4월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매주	
2/4분기	자치경찰 관련 표준 조례안 마련	'21. 4월	
	기능별·지역별 여성경찰관 비율 점검	'21. 6월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매주	
3/4분기	2차 채용공고 시 시·도경찰청별 균형인사를 위한 여성경찰관 인원 배정	'21. 7월	
	상반기 직무만족도 조사 중간 분석	'21. 8월	
	상반기 국·관 표창 수여현황 분석	'21. 8월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매주	
4/4분기	'21년 인사제도 개혁 추진결과 평가·분석	'21. 11월	
	칭찬플랫폼 포상 실시	매주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인사·포상제도는 쏠 직원의 직무만족도·업무성과에 직접적 영향, 이는 결국 치안역량과도 직결되므로 국민 또한 간접적 수혜자
- 이해관계집단 : 인사혁신처·여성가족부 등 정책 관련 부처는 물론, 인사 제도에 영향을 받는 쏠 직원 및 경찰관 지망생 등

□ 기대효과

-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제대로 평가·격려하는 조직 분위기 조성,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 전반의 치안역량 향상 견인
- 성별 균형인사를 통해 조직 내 실질적 성평등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맞춰 여성경찰관의 역할 재정립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인사직무만족도 (40%)	80.5	81.5	80.6	81.0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80.8보다 높은 81점으로 목표설정 ※ '17년도 80.7 / '16년도 80.8	인사관리 6개 항목 평균값	고객만족센터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결과
현장우수사례 표창비율 (30%)	37.3%	41.5%	43.8%	47.4%	3년 실적치 상승률 평균을 반영하여 47.4% 달성을 목표로 설정 ※ 현장 표창 비율은 30% 후반대를 유지 하여 오다가 19년부터 현장 사기진작을 위해 칭찬플랫폼 운영 등을 통하여 꾸준히 확대하는 중	경찰청장 표창 발부 대비 현장 우수사례 포상 비율	경찰청장 표창장 발부 통계
여성경찰관 비율 확대 (30%)	11.7%	12.6%	13.4%	14.2%	'22년까지 여성 경찰관 비율을 1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연도별 달성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 중으로 '21년 에는 14.2%로 목표 설정	여성경찰관 비율	인사시스템 통계 및 '21년 충원계획

□ 추진배경

- 경찰법(자치경찰)·형소법(수사구조개혁)·경직법(정보경찰개혁)등 '20년 경찰개혁 입법의 후속조치를 통한 각 개혁안의 조기 정착을 위해 법령, 규칙의 제·개정 등 세심한 법제 필요
- '21년 '혁신'과 '민생'이라는 정부 규제혁신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와 규제혁신 체감만족도의 동시 충족 필요
- 현장 법집행의 과오를 줄이고 당당한 경찰권 행사를 위해 △현장 법률 365 △손실보상 △경찰 법률보험 등 종합 법률지원체계 내실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찰개혁 관련 입법과제의 법적 검토 및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 및 규칙의 제·개정全过程를 체계적·전문적 관리
- 경찰에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에 대해 입법형식별 대응 절차를 확립하는 등 법제심사부터 국회까지 입법 대응을 총괄
- 현장 법률정보 공유 활성화 위해 「법무지식정보시스템(PoLaw Search)」에 △폴리폰 연동 △스마트폰 전용앱 △AI챗봇 개발 등 고도화 실시
- '21년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의 100% 달성을 목표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규제개혁을 추진
- KICS(형사사법전자화시스템)상 「현장법률 365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법률상담 고도화 및 상담 DB 제공으로 당당한 법집행 기초 마련
- 손실보상 범위가 확대(재산상 손실→생명·신체의 피해)됨에 따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 실시
- 「공무원 책임보험」('21. 1. 1. 시행) 등 소송지원 제도 안내 및 홍보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연간 경찰위원회 의결안 심사 수요 조사	'21. 2월	
	공무원 책임보험 제도 안내	'21. 2월	
	'2021 법제업무 매뉴얼' 간행 및 배포	'21. 3월	
	경찰청 기존규제 정비계획 수립	'21. 3월	
	경찰 법집행 규정집 편찬 기본계획 수립	'21. 3월	
	법무지식정보시스템 관리계획 수립	'21. 3월	
	경찰청 법제담당자 워크숍 실시	'21. 3월	
	국가 송무 관련 법무연수원 위탁 교육 실시(상반기)	'21. 3월	
2/4분기	'21년 정부규제입증책임제 정비계획 수립	'21. 4월	
	시·도경찰청 송무교육 계획수립	'21. 4월	
	손실보상 심사자료 및 결과 보고	'21. 4월	
	경찰청 소관 규제 법령 일제정비	'21. 5월	
	소송지원단, 법률보험 추진단 정기총회 개최	'21. 5월	
	경찰법률보험 재계약 추진	'21. 5월	
3/4분기	경찰법률보험 제도 안내	'21. 6월	
	상반기 국가·행정소송 및 손실보상 현황 분석	'21. 7월	
	규제혁신 발굴과제 중간점검	'21. 8월	
	현장법률 365 키스게시판, 법률상담 콘텐츠 표준화 작업	'21. 8월	
	법무지식정보시스템 폴리폰 연동 및 시범운영	'21. 9월	
	국가 송무 관련 법무연수원 위탁 교육 실시(하반기)	'21. 9월	
4/4분기	규제개혁 국조실 최종평가 대비 자체 예비 평가	'21. 10월	
	법무지식정보시스템 AI 채팅봇 시나리오 작성 및 시범 운용	'21. 11월	
	손실보상 심사자료 및 결과 보고	'21. 11월	
	하반기 국가·행정소송 상황 분석	'21. 12월	
	경찰 법집행 규정집 발간	'21. 12월	
	최종보고서 제출 및 '21년 규제혁신 실적보고회 발표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경찰과 경찰관 개인, 정책부서 및 규제개혁 관련 일반 국민
- 이해관계집단 : 국회 및 관계부처, 국회법안심사 관련 이해 당사자 등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건수)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입법대응 노력도 (30%)	신규		28%	30.8%	'21년 경찰청 소관 법령·행정 규칙 제·개정 심사 수요조사 (59건) 대비 상회 회신율 30.8%(77건)을 목표치로 설정	(심사 회신건수/심사 수요조사 건수 × 100) - 100	온나라 공문 기준												
규제혁신과제 달성도 (30%)	신 규	84%	92%	95%	"하단 참조"	(달성과제 / 규제혁신 선정과제) × 100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평가												
통합 법률 및 소송 지원체계 만족도 (20%)	신 규	77.1	79.5	81.88	'20년도 통합 법률 및 소송 지원체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79.5)보다 높은 81.88을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	"하단 참조"	경찰청 고객만족센터 설문조사												
현장법률365 센터 대응 노력도 (20%)	98.8	96.7	99.1	99.1%	"하단 참조"	질의사안 중 답변건수 / 질의건수 × 100	KICS 시스템 통계												
① 입법대응 노력도【목표치 30.8% / 가중치 : 30점】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경찰위원회 활성화와 법치행정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 상승으로, 상위법령과의 상충 정책위배·인권침해 여부까지 세밀하고 종합적인 법제심사가 필요 · 목표치 산출 근거 - '20년 입법대응 노력도의 심사 회신율이 목표치 보다 대폭 상회(100→128, 28%↑)하여 '21년 경찰청 소관 법령·행정규칙 제·개정 심사 수요 조사(59건) 대비 상회 회신율로 변경 - 상회 회신율 산식 : (심사 회신건수 / 심사 수요조사 건수 × 100) - 100 - '20년 수요조사 대비 상회 회신율 28%에서 10% 상향된 30.8%를 목표치로 설정 <table><tr><th>연도</th><th>수요조사 건수</th><th>심사회신 건수</th><th>수요조사 대비 상회 회신율</th></tr><tr><td>21년</td><td>59</td><td>77(목표치)</td><td>30.8%(목표치)</td></tr><tr><td>20년</td><td>60</td><td>77</td><td>28%</td></tr></table> ※ 목표치 수준의 적절성 여부 ▶ 경찰개혁과제가 대부분 완수되고, 금년도 재·보궐선거(4월), 대선기간(하반기) 등으로 인해 입법 활동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전 수요 조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법제심사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21년 경찰청 소관 법령·행정규칙 제·개정 심사 수요조사(59건) 대비 상회 회신율 30.8% (77건)을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 ② 규제혁신과제 달성도【목표치 95% / 가중치 : 30점】								연도	수요조사 건수	심사회신 건수	수요조사 대비 상회 회신율	21년	59	77(목표치)	30.8%(목표치)	20년	60	77	28%
연도	수요조사 건수	심사회신 건수	수요조사 대비 상회 회신율																
21년	59	77(목표치)	30.8%(목표치)																
20년	60	77	28%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을 지원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함과 동시에 규제 완화 추진

· **목표치 산출 근거**

-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규제정비 종합계획상 경찰청 소관 규제혁신 과제 9건 대상, 달성율(95%)을 목표치로 설정
-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기준인 2년간 실적치 상승세 8% 이상을 적용하면 임계치 100%에 도달하고 선정과제 특성상 100% 초과달성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실적 평균치로 대체
- 2년간 실적 평균 88% 이상을 적용해야 하나 전년도 실적 92%보다 상회하는 95%를 도전적인 목표치로 설정

③ **통합 법률 및 소송지원 체계 만족도【목표치 81.88점 / 가중치 : 20점】**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현장법률 365 서비스', '공무원책임보험·경찰법률보험 등 소송지원제도', '소송수행 지원' 등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이고 당당한 법집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실질적 지원활동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원활동별 만족도의 평균을 성과지표로 선정

· **조사 대상 : 경찰청 및 소속기관 소 직원(일반직 근로자 등 포함)**

· **목표치 산출 근거**

- '20년 법률 및 소송지원 체계만족도는 전년 대비 2.37점(77.13→79.5) 상승한 가운데, 현장법률 365 근무자 4명이 교대로 전국 경찰의 실시간 법률상담을 담당하는 등 힘든 여건 속에서도 최근 2년 상승세보다 높은 81.88점을 목표치로 설정

※ **참고 : 임계치 산정**

他 업무 지원기능에 대한 만족도 결과 중 최대치인 경찰장비만족도 점수 83.6점을 임계치로 봄

평균 (직무만족도 전체평균 포함)	경무행정 지원업무 만족도	경찰장비 만족도	정보화 업무 서비스 만족도	직무만족도			
				전체 평균	인사· 성과관리	복지	교육
81.53	83.0	83.6	83.1	82.1	80.45	77.25	81.2

④ **현장법률365센터 대응 노력도【목표치 99.1% / 가중치 : 20점】**

· **성과지표 선정 사유**

- 현장에서 법집행의 과오를 줄이고 당당한 경찰권 행사를 뒷받침하여, 일선 현장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현장법률 365센터의 대응 노력 필요

· **측정산식 및 목표치 산출 근거**

- KICS 內 현장법률365 질의응답 게시판 질의 대비 답변율(산식 : 성과기간 질의 사안 중 성과기간 답변건수 / 성과기간 질의건수 × 100)

※ '18년(98.8%), '19년(96.7%), '20년(99.1%), 3년간의 질의 대비 답변율을 토대로 가장 높은 99.1%를 목표치 산정

41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 추진배경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경찰정신 △청렴의식 △시민지향적 법집행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직·인권가치 내재화
- △국민의 안전욕구 증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 △경찰권 남용 우려 등으로 전문성 강화 필요
- 관련법령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교육·훈련 혁신계획 수립
 - － △자치경찰제 △국가수사본부 등 조직 大 전환기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찰교육도 원점에서 재검토, 새로운 교육체계 확립 필요
 - ※ 교육장소·강의내용·교수방법의 3요소를 고려하여 혁신계획 수립
 - － △신임교육 △직무교육 △기본교육 등 전체 경찰교육을 하나로 묶어 각 과정별 필요로 하는 중점교육목표 설정 및 교육제도 재구성
- 직책별 맞춤형 교육으로 역량과 소양을 겸비한 관리자 육성
 - － (치안정책과정) 서장으로서의 감성·인문소양 및 지휘능력 배양을 위해 인문학 및 체험 관련 교육시간 확대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문학 강의 △문화예술 체험 체계화 △정기 봉사활동 등 추진
 - － (경정·경감 역량강화과정) 직무 전문성을 갖추고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부서를 이끌 수 있도록 ‘중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인식·실천’ 중심으로 구성
 - ※ 직급에 따라 과장급(경정)은 리더십 비중(의사소통·갈등관리·협업 등)을 높이고, 계·팀장급(경감)은 직무 전문성 향상에 중점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Untact) 교육 확대

[플랫폼 구축]

-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 민간플랫폼 사용은 보안 문제 등 한계가 있어 경찰청 자체 플랫폼 개발 추진(1,000명 동시접속)
- (교육포털) 사이버교육이 급증함에 따라 교육포털 과부하로 장애 발생,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교육포털 고도화 추진

※ '21년 플랫폼 구축 7.6억원, 교육포털 고도화 2.8억원 예산 편성

[비대면 교육운영]

- 방역지침으로 교육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실시간 원격교육 진행
- * Blended learning :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및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한 교육 방법
- 기능별 직장교육·현장팀장훈련·전문교육에 우선 적용, 대면 교육 불가시 전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여 진행
- 비대면 교육의 실질적 활용을 위해 게이미피케이션 등 다양한 교육기법 도입 및 설문·평가 강화 추진

○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한 '팀 단위 시뮬레이션 훈련' 강화

- (팀장 교육 확대) 현장 대응부서(지역경찰·형사·교통외근·여청수사 기능) 팀장 대상 전문교육인 '현장 팀장 훈련과정' 전면 시행
- (지역경찰 팀 전문 훈련) 지역경찰 팀 역량 제고를 위해 시범운영('20.11월)했던 '집중훈련일'을 서울 등 8개 시·도경찰청 확대 시행

※ 집체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교육 등 유동적으로 진행

○ 경찰관 기본소양 및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 직무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경찰관 기본소양 향상을 위한 예술·인문학·감성 영역 교육 콘텐츠 개발

- 공감역량 향상으로 ‘유능한 법기술자’를 넘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권 친화적 경찰’ 구현으로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 실현
- 기능교육 특성화 및 무도·사격훈련 강화를 통해 직무 전문성 향상
 - (기능별 교육) ‘현장순회교육’은 지역경찰 교육으로 특화하고, ‘내근 직장교육’을 ‘기능별 직장교육’으로 개편하여 전문 교육 진행
 - ※ 현장순회교육으로 편성되었던 112·형사·교통외근·여청수사는 교육센터 전문교육 과정을 기능별 직장교육으로 전환 또는 과정 신설
 - (무도훈련) 물리력 행사규칙에 근거, 실습형 훈련인 ‘상황 기반 체포술 훈련’ 실시, 체포술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돌발 상황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및 경찰관 개인 스스로의 안전 확보
 - (사격훈련) 평균 60점 미만 「사격저조자」 실력 향상을 위해
 - △인재원 「사격술 향상과정」 확대 운영 △시·도경찰청 통계관리 강화
 - ※ 사격훈련 방법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진행
 - (체력검정) 공정한 평가 추진을 위해 △장기공상자 관리 강화 △체력검정 면제 사유 엄격 관리 및 「추가 체력검정」 확행
- 동료강사 제도의 활성화로 ‘서로 배우고 익히는 조직문화’ 마련
 - 다양한 직무분야의 현장 전문가를 발굴하여, 이들에게 강사 양성과정 및 강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 노하우 공유 추진
 - 동료들의 눈높이에 맞춘 분야별 교육 시행을 통해, 조직 발전 및 현장 대응력 제고의 핵심자원으로 동료강사의 역할 확대
 - 동료강사 강의경진대회, 역량강화교육, 시니어 동료강사 선발 등 강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강의 역량 향상 지속 추진
- 「경찰청장기 일반인 무도대회」를 통한 우수 선수 경찰 채용
 - 우수 무도선수를 경찰관으로 채용하여, 강력범죄 등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경찰 관서별 전문 체포술 교관 등 활용

- '19년·'20년 5개 무도 종목별*로 개별 대회를 진행하였으나, 경찰청장기 대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통합 무도대회 추진(10월)

* 태권도·유도·검도·레슬링·복싱 5개 종목

○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학습모임 지원·관리

- 실질적인 학습모임 유형인 「문제 해결형 학습모임」의 육성을 위해 '연구과제 선정'부터 '성과물 도출'까지 단계별로 관리

※ 학습모임 개설 및 매 분기별 운영사항 취합·평가

○ 교육생 교육효과 제고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 경찰대학·중앙경찰학교·수사연수원 증축·리모델링 사업 관리
- 신규예산 편성 노력 및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신임경찰관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한 중앙경찰학교 인프라 개선방안 연구

- 물적 인프라 외에 외부특강시 선발규정 강화 등 인적인프라 강화로 양질의 교육 제공 도모

○ 엄정하고 공정한 채용시험 관리로, 채용목적에 맞는 우수인재 선발

- 상·하반기 경찰공무원 공채·경채(5,889명) 및 일반직 경채(1회 451명, 2회 미정)를 통한 우수 인재 선발로 전문 치안인력 확보

2021년 채용 개요

- 경찰대학생 1회 50명, 간부후보생 1회 50명 <경위>
- 경찰관 공채 2회 5,068명 <순경 4,828(남: 3,507 여: 1,321), 101단 240>
- 경찰관 경채 2회 821명 <변호사 40, 피해자 40, 경찰행정 180, 전의경 87 등>
- 일반직 경채 1회 451명, 2회 미정 <시민청문관 198, 검시조사관 72 등>

- 보다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상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실시

※ △ 안내방송을 통한 필기시험의 통일적 진행 △ 필기시험 시 통신·전자기기 수거 개선 △ 시험문제 보안 철저 △ 엄격한 서류 검증 △ 이해관계자 시험위원 배제 등

○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채용제도 개선

-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 추진, 경찰행정학과 경채의 경우에도 병역미필자가 응시 가능하도록 개선(상반기 中)

- 체격·문신 등 신체검사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상반기 中)

※ 국·공립 및 종합병원에 채용신체검사서 양식 및 기준에 대해 안내 예정

○ 경찰행정 경채 이수과목 및 관련학과 등 자격기준 개선

- (이수과목) 필수과목 6개, 선택과목 30개 등 경행 경채 이수 필요 과목 관련 임용령 개정 및 유사과목은 고시로 명시 예정
- (관련학과) 기존에는 학과명에 ‘경찰’이 포함되면 인정(형식)했으나, 명칭 외에 커리큘럼이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도록 개선(형식+실질)

○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채용 홍보

- (채용박람회 참가) 채용박람회에 참가, 국민과 수험생에게 채용 정보를 제공하여 경찰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우수 인재 유치

※ 치안산업박람회(경찰청, 10월 예정), 공직박람회(인사혁신처, 12월 예정)

- (채용제도 안내) 채용제도 관련 변경사항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 및 경찰 관련 학과에 공문 발송하여 수험생에게 채용제도 안내

*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경찰 채용 관련 커뮤니티 등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1차 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21. 2월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21. 2월	
	제1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21. 2월	
	교육혁신 관련 현장토론회 개최	'21. 3월	
	2021년 현장교육 운영계획 수립	'21. 3월	
	2021년 경찰관 상시학습제도 운영지침 수립	'21. 3월	
	2021년 사격훈련·체력검정 운영계획 수립	'21. 3월	
	비대면 교육 플랫폼 구축계획 수립	'21. 3월	
	현장학습모임 활성화 계획 수립	'21. 3월	

2/4분기	경찰교육혁신계획 수립	'21. 4월	
	제1차 순경 공개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21. 5월	
	2021년 베스트 현장강사 선발 계획 수립	'21. 5월	
	본청 체력검정 추진(본 검정)	'21. 5월	
	본청 상반기 정례·특별사격 추진	'21. 6월	
	제1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21. 6월	
3/4분기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21. 7월	
	제2차 순경 공개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21. 7월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21. 7월	
	현장순회교육 직무연수 및 강의경진대회 개최	'21. 8월	
	'22년도 국외장기훈련 일반과정 선발·추천	'21. 9월	
	본청 하반기 정례·특별사격 추진	'21. 9월	
	제2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 수립	'21. 9월	
	비대면교육 플랫폼 사업 완료	'21. 9월	
4/4분기	본청 체력검정 추진(추가 검정)	'21. 10월	
	「경찰청장기 무도대회」 및 「경찰관 무도대회」 개최	'21. 10월	
	베스트 현장강사 선발	'21. 11월	
	현장학습모임 운영비 지원·평가	'21. 12월	
	제2차 순경 공개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21. 12월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21. 12월	
	제2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합격자 발표	'21. 12월	
	인사혁신처 주관 「2021년 공직박람회」 참가	'21. 12월	
	'22년 정기 승진시험 계획 수립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① 역량향상 직무교육을 받는 경찰청 소속 초 공무원
② 경찰관 역량향상에 따른 안전한 사회구현의 혜택을 받는 국민
- 이해관계집단 : 경찰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

□ 기대효과

- ‘공직가치’와 ‘인권가치’에 대한 교육강화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인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보호자’로서의 경찰상 확립
-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현장경찰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향상하고 對국민 치안 만족도 제고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전문경찰양성(IV-1 일반재정)				
① 우수인재확보 및 능력개발(4135)		일반회계	106	118
■ 경찰관채용교육(311)			106	1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교육 현장활용도 (80%)	신규	신규	90.5	91.4	직무전문성 강화 및 교육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교육센터·현장순회 교육·사이버교육의 현장활용도 평가 '20년 실적치가 90점을 초과, 정성 평가의 임계치에 도달한 점을 고려, 전년대비 1% 상승한 91.4점을 목표로 설정	(교육센터 설문결과 + 현장순회교육 설문결과 + 사이버교육 설문결과) / 3	교육센터, 현장순회교육, 사이버교육을 수강한 교육생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취합
인재채용률 (20%)	신규	신규	92.5	93.0	우수한 인재영입 및 선발, 필요인력의 적시 채용을 통해 질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 최근 2년간 지표 중 높은 수치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93.0으로 목표 설정('19년 92.0→'20년 92.5→'21년 93.0)	(채용인원 / 채용예정인원) × 100	금년 채용예정인원과 실제 채용된 인원을 취합하여 채용률 산출

(1) 주요 내용

- **<국민 중심 감사활동>** △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업무과오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종합적인 반부패대책 추진으로 공감대 확산
 - －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책임수사제·자치경찰제 등 개혁과제 중점 감사로 경찰개혁 완성을 지원하여 국민 편익 증진
- **<예방·문제해결 중심 감찰활동>** 선제적 비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부서장 책임제에 따라 관리자급 역할 확립을 위한 감찰역량 집중
 - － 「직무범죄전담 수사체계」를 통한 엄정한 조치로 한 차원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구성원의 지지 확보
- **<성평등한 경찰정책 및 조직문화 확립>** 경찰청 성평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지속적·단계적 추진을 통해 성평등한 경찰행정 제공
 - － 주요 경찰정책 및 매뉴얼·홍보물 대상 성별영향평가를 지속 운영하고, 성평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성평등 교육 저변 확대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현장활력 기반을 마련한다	조직문화 부문 직무만족도
관리과제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제도개선 실적 / 적극행정 면책실적
	위기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예방· 문제해결 중심 감찰활동 전개	제도개선 자료제출 노력도 / 유가치정보 활용도 / 감찰수사 전문화교육 이수율 / 감찰활동 만족도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 성평등 교육 정착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조직문화 직무만족도	87.8	89.1	86.7	89.0	조직문화 직무만족도는 '19년 상승 후 하락하였으며 전 3년도 실적 평균값(87.9)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86.8)을 고려 '21년 목표치는 반등을 목표로 '20년 실적보다 2.3%p 높은 89.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조직분위기 부문 6개 문항과 성인지 부문 5개 문항 평균)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직무만족도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감찰행정에 대해 내부에서는 '과도한 감찰'이라는 불만, 외부에서는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상반된 시각 존재

- － 「시민감찰위원회」·「감찰정보심의회」 등 내·외부 통제시스템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여론 반영

* (감찰행정 만족도 조사) '18년부터 연 1회 쏘 직원 대상 시행 / '21년은 정책환류 강화를 위해 설문문항 개편(기존 8개 → 20개) 및 연 2회로 확대

- 정부 홍보물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논란 등 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공직사회의 성평등 의식 제고에 대한 내·외부 요구 급증

▶ (정책·제도) <한겨레 등> “앞치마 여성·정장 남성, 정부 홍보물이 또...” 보도('21.1월)

▶ (조직문화) 행안위 업무보고時('20.7월) 「조직내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 마련 요구

- －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평등 거버넌스를 통한 외부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참고자료

- 경찰청, 「경찰 성평등정책 중장기(2020-2024) 비전 수립 연구」

42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 추진배경

- <감사행정> 정부는 출범 후반기를 맞아 개혁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 및 소통 노력 등을 강조
 - 경찰개혁 시행 이후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조직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감사 부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
 - 이에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면밀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하여 국민편익 증진 및 국민신뢰 제고 필요
- <적극행정 면책>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와 편익 증진을 위해 '19년부터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가운데,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력 중

▶(행안부) 공직자가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는 면책하도록 「재난안전법」 개정('20.8.18. 입법예고)

▶(인사처)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경우 징계 의결 전 자체감사 과정에서도 면책하도록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0.8.18. 국무회의 통과)

- 경찰청도 적극행정 면책 요건을 완화하고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 업무 중 발생한 과오는 면책·감경 중으로,
- 지난해부터 적극행정 면책 심사를 주요 성과과제로 반영하여 주요 국정과제인 적극행정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찰개혁의 완성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

- 자치경찰제·사회적 약자 보호 등 경찰개혁 과제들에 대한 중점적인 감사로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찰개혁 완성 지원
- 그간 추진한 경찰개혁 정책들이 취지에 맞게 현장에 정착되어 국민편익에 기여하는지를 점검하고, 미흡사항*들은 보완·개선안 마련

*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 △법령 및 규정의 한계 등

- 「경찰행정 사무감사규칙」 개정*을 통해 감사행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본청·시도경찰청 감사기능 정비

* △감사처분 심의회 △이의신청 제도 △감사결과 보고기간 현실화 등

○ 감사 전문성 강화 및 유기적인 감사 협조체계 구축

- 감사원(감사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활성화하고 본청 주관 경찰감사 맞춤형 교육을 통한 전문적 감사역량을 확보

※ (감사교육원) △전문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집합교육과정

(내부교육) △감사 전문화 과정(인재개발원) △최근 감사사항의 배포·공유

△ 최근 3년간 주요 반복 지적 사례 제작·배포 △전국 감사담당자 워크숍 등

- 유기적인 감사를 위해 시·도경찰청, 경찰위와 감사계획을 조율하고, 본청 감사담당자로 「감사컨설팅 전담팀」을 운영하여 자문과 협력을 실시

※ (감사컨설팅 전담팀) 시·도경찰청, 경찰위 감사시 본청의 기존 감사사항을 활용하여 지적예상 내용 및 감사기법을 공유하고 전수하는 등 감사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적극행정 면책 완화 및 사전컨설팅 지원 활성화

- 개인별 별도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업무의 공익성과 부서장·행위자의 적극성을 능동적으로 검토하여 면책제도 활성화

※ 부서장의 소신행정을 상시 모니터링, 적극적 지휘활동에 대한 면책 활성화

-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으로 관서장의 책임감있는 업무추진 독려
 - 기능별 업무과오가 발생한 사례를 분석하여 우려요인을 선정, 우려요인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리자에게 통보토록 한 후
 - 관리자가 과오발생이 우려되는 업무에 대해 주도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 종합적·체계적·객관적인 반부패 대책 추진
 - ‘학계·언론 및 반부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반부패 협의회」에서
 - △ 정책 수립 △ 이행 점검·평가 △ 환류 등 단계별 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 시민청문관(73명)을 중심으로 내부 교육활동 및 분기별 점검 테마를 선정해 부패 취약요소 집중 진단·예방 등 객관성 제고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반부패협의회 '21년도 제1차 정기회의 개최	'21. 1월	
	2021년 감사운영계획 수립	'21. 2월	
	감사관실 주관 전국 화상회의 실시	'21. 2월	
	시민청문관 간담회 개최	'21. 2월	
	시·도경찰청 또는 부속기관 종합감사	'21. 3월	
	경찰청 공직복무관리계획 수립	'21. 3월	
2/4분기	경찰청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종합대책 수립	'21. 4월	
	반부패협의회 '21년도 제2차 정기회의 개최	'21. 4월	
	개혁과제 추진 실태 특정감사	'21. 5월	
3/4분기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상황 모니터링	'21. 7월	
	적극행정 면책 및 사전컨설팅 실시 현황 분석	'21. 8월	
	시·도경찰청 또는 부속기관 종합감사(1개 기관)	'21. 9월	
4/4분기	스마트치안 업무추진 실태 특정 테마감사	'21. 10월	
	시·도경찰청 또는 부속기관 종합감사(1개 기관)	'21. 11월	
	시·도경찰청 감사활동 성과지표 평가 및 분석	'21. 11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 활동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및 경찰관
- 이해관계집단 : 경찰관 등 내부직원

□ 기대효과

-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 정착으로 국민편익 증진
-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국민 신뢰 제고
- 투명하고 공정한 징계행정으로 경찰개혁 완수

□ 관련 재정사업 내역

	회계구분	'20	'21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일반재정)			
■ 감사관감찰활동(7133-311)	일반회계	16.8억원	16.4억원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제도개선 실적 (60%)	94.5	150	166.5	183.2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지속 상승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업무중심 감사활동 노력으로 목표치 초과달성(11% 상승)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10% 상승한 183.2점을 목표치로 설정	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실적 - 산식 : ∑ (유형별 배점 × 조치수위별 배점) < 배 점 > <table><tr><th colspan="3">개선 유형별</th><th colspan="2">조치 수위별</th></tr><tr><td>법령 재개정</td><td>자체규정지침 제개정</td><td>기타 행정</td><td>개선요구</td><td>권고통보</td></tr><tr><td>5.0</td><td>3.0</td><td>1.0</td><td>3.0</td><td>1.5</td></tr></table>	개선 유형별			조치 수위별		법령 재개정	자체규정지침 제개정	기타 행정	개선요구	권고통보	5.0	3.0	1.0	3.0	1.5	감사결과 보고서
개선 유형별			조치 수위별																			
법령 재개정	자체규정지침 제개정	기타 행정	개선요구	권고통보																		
5.0	3.0	1.0	3.0	1.5																		
적극행정 면책실적 (40%)	12	57	109	120	'19년부터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으로 실적 상승 중이며, 최근 3년간 실적치가 지속 상승한 지표인 점을 감안, 전년 대비 10% 상승한 120건을 목표치로 설정	적극행정 면책 심사위원회 개최 건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통계자료															

43 위기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예방·문제해결 중심 감찰활동 전개

□ 추진 배경

- <최근 사례> 금품수수·정보유출 등 직무 관련 비위는 물론 ‘사건문의 금지’ 위반 등 반부패제도가 미작동한 사례와 함께,
 - 발생한 비위에 대한 보고 또는 언론대응 시 사실을 축소·은폐하다가 추후 밝혀져 의혹을 증폭시키는 사례도 발생
 - <추진 방향> 경찰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비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신뢰문제를 넘어 경찰개혁의 추진동력의 저해 우려
 - 이에 따라 감찰기능의 역할을 정비하여, 비위방지는 물론 사례 발생 시 신속·적확한 조치를 위한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
- 책임수사 안착 및 자치경찰 시행 등 중대한 경찰의 변혁기를 맞아, 비위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관리자급의 책임에 걸맞는 역할 확립을 위해 감찰역량 집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비위 예방과 신속·적확한 문제해결에 감찰역량을 집중]

(중점 사항)

- 각종 감찰활동(조사·확인·점검) 시 비위 예방, 문제해결적 관점에서 접근
- 확인된 비위는 감찰조사·인사조치 등 선제적·능동적·적극적으로 조치
- 비난성 사안은 초기단계에 신속정확히 파악 ⇒ 왜곡 차단 및 올바른 대응방향 설정

- <사전 예방> 비위 징후를 사전에 포착, 선제적·능동적으로 조치
 - (첩보 활동) 각급 감찰관은 중대비위 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의 경미한 조짐·징후의 사전 포착에도 집중, 적극적으로 첩보를 생산
 - (선제적 대응) 감찰활동 중 확인된 인적·물적 비위 취약요인은 해당 부서장·기능에 통보, 선제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

- <비위 발생 시> 비위사건은 발생 초기단계부터 신속·정확히 대응
 - (기본 방향) 경찰 관련 사건은 이슈 확산 등 파장이 큰 만큼 발생 직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방향 설정 및 왜곡 차단
 - (조치 사항) 각급 감찰부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관련 기능·홍보기능과 합동으로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 ※ 해당 관서장에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누락없이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서장이 대응방안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 역할을 수행
- <비위 발생 후> 사건 처리 시 발생원인 심층 진단, 재발방지 도모
 - (원인 진단) 금품수수·정보유출 등 고질적 직무비위 발생 시 관서장 주도하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원인진단을 적극 실시
 - (조치 사항) 관서별 자체 원인진단 결과를 분석, 제언사항(제도·지침·관행개선)은 관련 기능과 공유하고 각 시·도경찰청에 전파

[감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 환경을 조성]

- <인식의 전환> 경찰 신뢰저하와 직결되는 직무비위는 엄정 대응
 - (기본 방향) 각종 직무비위에 대해서는 온정적 시각에서 탈피, 심도깊은 조사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행위까지 적극 조치
 - (부서장 책임강화) 소극적·무사안일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행위책임 여부를 검토, 막연히 감독책임을 부과하는 관행 타파
- <비위감지 역할 충실> 감찰활동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진단망 구성
 - (각 관서 청문) 비위행위 관련 정보는 감찰첩보·인사참고자료 등 적정한 방식으로 관서장에게 보고, 지휘·감독권 행사를 보좌
 - (본청·시도경찰청) 관서별 중점감찰 대상에 따라 수집된 감찰정보는 본청·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직접조사·이첩하고 후속조치 지속 관리
 - ※ 他 관서 관련 비위정보는 상급기관(청문)에 보고하고, 상급기관에서는 ‘감찰정보심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이첩 등 필요한 조치 실시

[「직무범죄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직무범죄에 엄정 대응]

- <추진 방향> 정보유출·금품수수 등 직무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비난이 가중, 실효성있는 반부패 대책 필요
- 이에 대해 도입 중인 ‘직무범죄 전담 수사체계’를 적극 활용, 능동적인 첩보 수집을 진행하고 필요 시 감찰수사로 엄정 조치

【 직무범죄 전담 수사체계 주요 내용 】

•<조직 구성>

- (본청 직무범죄관리계) △시·도경찰청 감찰수사팀 총괄 관리 △직무범죄 첩보수집
△수사기능 감찰

- (시·도경찰청 감찰수사팀) △직무범죄 직접 수사 및 첩보 수집 △수사기능 감찰

•<담당 사건>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 <추진 사항> 도입 원년을 맞이하여, △인력·예산 등 기반 마련
△수사관 교육 △첩보수집망 구축과 함께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직접 수사로 체계 안착에 주력할 예정
- (첩보 수집) 수사 분야 직무범죄를 테마로 선정, △친분에 따른 봐주기 수사 △수사기밀 대가 금품 요구 등에 대한 첩보수집 강화
- (감찰 수사) 드러난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
- (기반 마련) 직제화·예산확보를 통해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직무범죄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 콘텐츠 마련

※ '21년 상반기 인사 시 쏠 시·도경찰청 소속 감찰수사 전담 인력 확보(43명)

[지속적인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공감받는 감찰행정 및 활동 유도]

-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내실화> 현장 여론을 보다 정확히 청취·반영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재구성하고, 조사결과는 각 관서에 통보, 감찰행정에 반영되도록 자율적 개선을 유도

※ '18년부터 연 1회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에 의뢰, 조사 시행 중이며 '21년은 실효성있는 정책 환류를 위해 연 2회 실시 예정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신임 감찰관 적격심사	'21. 1월	감찰 활동은 현안 발생에 따라 대응되는 특성을 감안, 세부 일정은 상시 변동 가능
	전국 청문기능 화상회의	'21. 2월	
	관서장·부서장 책임지휘 시스템 확립 실태 점검	'21. 2월	
	시·도경찰청 감찰수사팀 운영 방안 마련	'21. 3월	
	감찰정보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21. 3월	
2/4분기	감찰정보시스템 사용매뉴얼, 운영 지침 마련	'21. 4월	
	상반기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21. 6월	
3/4분기	감찰관 교육 콘텐츠 제작	'21. 7월	
	신임 감찰관 적격심사(하반기 인사요인 발생에 따라 운영 예정)	'21. 7월	
4/4분기	하반기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21. 10월	
	시·도경찰청 감찰활동 성과지표 평가 및 분석	'21. 11월	
	감찰첩보 제출 우수자 평가(특별승급·포상 수여)	'21. 12월	
연중	시기별·테마별 기획 감찰활동 실시(탄력 운영)	연중 실시	정기수시로 운영 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중간 점검을 통해 성과 관리 및 지속 보완 예정
	감찰정보 심의위원회 운영(월별 정기, 임시회의 상시 운영)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운영(정기·임시회의 개최)		
	감찰정보시스템 운영 정착을 위한 연중 점검·보완(사용자 피드백, 간담회, 업체 측 교섭, 문제점 진단 및 개선 조치 등)		
	직무범죄전담 수사체제 지원 방안(△ 직제화 △ 예산 △ 교육) 구축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및 경찰관
- 이해관계집단 : 경찰관

□ 기대효과

- 각급 경찰관서의 감찰 인력·역량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부패분위기를 제압할 수 있는 감찰활동망을 구성하고, 변화하는 치안여건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직무범죄 전담 수사체계’를 통한 능동적 첩보 수집 진행 및 감찰 수사 착수 등 엄정한 조치로 ‘제식구 감싸기’란 편견을 불식, 한 차원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
- 감찰업무를 전문화하고, 실효성있는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감찰행정에 대한 조직 구성원의 지지·신뢰를 확보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감찰첩보 활용도 (40%)	14.9%	39.1%	43.2%	47.5%	<제도개선 자료 제출 노력도> - 기존 지표(20%) - '19년의 이례적인 높은 실적(39.1%)과 지난 4년간 추세치(11.8%)를 종합적으로 감안,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20년도 실적 대비 10%이상 설정하여 47.5%를 목표로 설정	감찰첩보 내부 보고 제출 전체 현황 대비 제도개선 자료(기타 자료 포함) 현황	첩보관리대장 및 통계
	'17년 실적 : 7.6%						
	15.1%	35.0%	28.8%	31.6%	<유가치 첩보 활용도> - 신설 지표(20%) - 감찰정보의 실제 활용도에 대해 측정하는 지표를 금년 신설 '20년도 실적(28.8%) 대비 10%이상 설정한 31.6%를 목표로 설정	감찰첩보 내부 보고 제출 전체 현황 대비 유가치 첩보(감찰조사/사실확인/관련 기능 통보) 현황	
감찰수사 전문화교육 이수율 (40%)	미실시 (신규)			55%	금년도 신설된 감찰수사팀의 조기 정착을 위해 반부패수사과정 등 전문화 교육이수율 55%이상 달성할 것을 목표로 설정(14개청 2명으로 감찰수사팀 운영중임 감안)	반부패수사과정 등 수사교육 또는 본청 주관 교육 이수 감찰관 수 ÷ 시도경찰청 감찰수사계(팀) 인원	공문 및 결과보고서
감찰활동 만족도 (20%)	33.6%	51.1%	58.0%	63.8%	전년대비 10%이상 설정한 63.8%를 목표로 설정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 (쑤 직원 대상 메일 설문조사)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작성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지표 선정 배경 및 평가 시 당부 사항>

➤ (지표 도입 배경 및 달성 난이도 검토)

- 1) '제도개선 첩보 제출 노력도' 및 '감찰활동 만족도 지표'는 '19년 신설된 지표로, 당시 감찰개혁에 대한 내·외부의 관심도가 높고 개혁동력이 확보된 시기에 이례적인 실적을 거둔 관계로, 현 시점에서는 전년 이상의 실적을 거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 2) 기존 지표인 '제도개선 첩보 제출 노력도'만으로는 실제 첩보 활용도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기존 내부·외부 평가단의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실제 감찰조사, 진상확인 및 관련 기능, 소관 부서 이첩 등 실질적인 활용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수정 지표를 개설하였음
- 3) 또한, 금년 도입 및 시행하는 '직무범죄 수사 전담체계' 구축 과제를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직무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감찰수사 전문화교육 이수율' 지표를 신설하게 되었음
 - 원칙상 '감찰수사 전문화교육'은 경찰수사연수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 입교하여 교육이 진행되고, 한 과정당 수강인원이 연 약 60명인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55%로 산정함
 - ※ 반부패·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수사국 산하 전국 경찰관은 9,965명('20년 기준)

(평가 당부사항) △ 감찰개혁의 안착을 위해 그 수단인 성과지표가 달성 난이도가 높음에도 기존 지표를 유지하고 실적 추세 및 전년도 실적 대비 10% 이상의 목표를 공격적으로 설정한 점

△ 내부·외부 평가단의 지적을 적극 수렴하여 지표를 신설하고, 주요 감찰정책의 실효성있는 성과를 위해 신규 지표를 적극 신설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세부 설명자료]

① 감찰첩보 제도개선 활용도(40%)

①-1. 제도개선 첩보 제출 노력도(20%)—기존 지표

▶ **(산출방식)** 감찰첩보 중 제도개선 자료 및 기타자료로 분류된 첩보 건수의 비율

$$* \text{ (산식) } \frac{\text{제도개선자료} + \text{기타자료}}{\text{총 제출 첩보건수}} \times 100$$

▶ **(선정이유)** 그간 감찰첩보(비위정보/제도개선자료/기타자료) 중 감찰활동 자료를 위한 '비위정보' 수집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나,

- 향후 제도 개선 자료 및 기타 자료의 활용도를 성과지표화 하여 유의미한 첩보 수집·처리를 통해, 경찰행정을 점검·지원하여 조직운영을 보좌하는 감찰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예정

<감찰첩보 분류 : '경찰 감찰 규칙' 근거>

1. **비위정보** : 소속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정보
2. **제도개선자료** : 불합리한 제도·시책,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자료
3. **기타자료** : 관리자의 조직관리·운영 실태, 주요 치안시책 등에 대한 현장여론, 비위우려자의 복무실태 등 인사·조직 운영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①-2. 유가치 첩보 활용도(20%)–신규지표

- ▶ **(산출방식)** 전체 제출 감찰첩보 중 ① ‘비위 정보’의 경우 ‘감찰조사 착수 및 사실관계 확인 등’ 조치가 필요한 사안과 ② ‘제도개선 자료 및 기타자료’ 중 확인, 관련 기능 및 소관 시·도경찰청에 이첩하여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 첩보의 비율

*** (산식) (‘감찰조사 착수 및 사실관계 확인 비위첩보’+‘관련 기능 및 소관 시·도 경찰청 이첩 첩보’/총 제출 정보건수)×100**

※ 기존 첩보 제출 이력을 확인하여, 내용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 단순 참고 및 폐기 의견으로 평가하고 있어 중복 자료는 배제하고 있음

- ▶ **(선정이유)** 감찰첩보관련 기존 지표의 실효성에 대한 기존 내·외부 평가단의 의문 및 지적이 있어 이를 적극 수용하고, 감찰정보의 QC(quality control)를 통해 감찰정보의 실효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기 위함임

② 감찰수사 전문화교육 이수율(40%)–신규 지표

- ▶ **(산출방식)** 전국 감찰수사계(팀) 현원 대비 반부패수사과정 등 수사교육 이수자의 비율

*** (산식) (반부패수사과정 등 수사교육 또는 본청 주관 교육 이수자/시·도경찰청 감찰수사계(팀) 현원)×100**

- ▶ **(선정이유)** 금년도 신설된 감찰수사팀 조기 정착을 위해 전문화 교육 필요

- 반부패수사과정(경찰수사연수원)을 통해 직무범죄 체계·개념, 공무원 범죄 관련 수사기법·사례 교육진행
- 본청 주관 교육을 통해 현장 수사 사례 분석 및 공유

③ 감찰활동 만족도(20%)–기존 지표

- ▶ **(산출방식)**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에서 쏘 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찰활동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항목 중 ‘감찰활동 만족도’ 관련 3개 항목의 긍정적 답변(그렇다·매우 그렇다) 비율의 평균으로 산정

*** (설문 문항 예시)** ㉠ 감찰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감찰활동이 부정 부패 근절에 도움이 된다 ㉢ 감찰활동은 직원들이 보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

- ▶ **(선정이유)** △감찰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구성원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18년부터 추진한 「감찰개혁」 관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 및 내재화 여부는 고객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연중 감찰행정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엄정한 외부평가를 통해 미비점 보완 등 환류에 충실할 예정

44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 추진배경

-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공권력에 의한 2차 피해 방지 등 성평등한 치안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민적 관심 지속
 - － 아울러, 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성차별적 문화 개선의 중요성 증가, 공직사회에서의 성평등 의식 제고에 대한 조직 내·외부 요구 급증
- ▶(경찰정책) 디지털성범죄 관련 정책자료 제공 및 수사과정상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대응 언론자료 등 성차별적 요소 사전점검 실시
- ▶(조직문화) 행안위 업무보고時(20.7월) 「조직내 성범죄 근절 종합대책」 마련 요구

- 성평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단계적·지속적 추진을 통해 경찰 전반에 성평등 관점 구현, 성평등한 경찰행정 제공 및 조직문화 확립
- ※ 사업추진의 근거 : △ 「경찰 성평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974호), △ 「경찰청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4)」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경찰 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4)」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 －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해 분야별 성과를 지속 확산하고, 중장기 과제 이행기반이 정립될 수 있도록 연도별 계획 수립
- ※ ’20년 시행계획 수립·시행 결과, 총 54개 과제 중 41개 완료(이행률 75.9%)
- 경찰청 성평등 수준 진단 및 기능별 성평등 목표 수립^{〔신규〕}
 - － 경찰 성평등정책의 자율적 추진기반 조성하고자 경찰 성평등 수준 측정·분석하여, 기능·관서별 자체 성평등 목표 수립

▶(대상) 경찰청 국·관 및 부속기관, 시·도경찰청

▶(방법) 경찰 성평등 수준 측정 및 결과 공유 → 측정결과 의거, 자체 목표 수립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협의 후 목표 확정 및 시행 → 이행점검*

* 성평등위원회 성주류화 분과회의(반기별), 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연1회)

- **성별영향평가 시스템화를 통한 경찰정책 성주류화 확립**
 - － 경찰활동 내 성평등 가치 반영을 위해 「경찰 매뉴얼 관리규칙 (경찰청훈령)」상 업무매뉴얼 69종 대상 성별영향평가 실시^{〔신규〕}
 - － **全** 경찰관서에서 수립, 제작·배포하는 주요 경찰정책·계획 및 홍보물 등 대상 성별영향평가 지속 운영(지속)
- **성평등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성평등 교육 저변 확대**
 - － **全** 직원 대상 성평등 직무 교육 효과성 증대 및 코로나 장기화 대비, 사이버 교육 및 대면 교육 운영시스템 동시 구축·운영
 - ※ (교육 모니터링 실시) 내·외부 교육전문가로 모니터링단 구성, 교육과정별 (성평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용 적합성·교육환경 등 만족도 조사 실시
 - － 차별화된 경찰 맞춤형 성평등 교육 확대를 위한 내부 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 지속 추진(양성평등교육진흥원 협의)
 - ※ '20년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총 11명 전문강사 자격 인증
- **조직 내 성평등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 － 성차별 조직문화 사례 발굴·분석 및 개선안 도출, 카드뉴스 홍보 등 조직 내 ‘일상 속 성차별적 문화’ 개선 추진
 - － 성평등정책 및 성평등 관련 주요 이슈, 조직 내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경찰 성평등정책 소식지 정기 발간
- **경찰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를 통한 성희롱·성폭력 청정조직 구현**
 - － 「성범죄 예방 상시협의체」 지속 운영,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논의 및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이행점검
 - ※ 성희롱·성폭력 발생현황, 조사의 적절성, 2차 피해 발생여부 등 모니터링
 - － 전 직원 대상 「조직내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신입 여성경찰 다수배치 관서·성범죄 발생 관서 등 대상 현장점검^{〔신규〕}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경찰 업무매뉴얼 성별영향평가 실시	'21. 2~6월	
	경찰 성평등 수준 측정·분석	'21. 2~4월	
	경찰 성평등 교육 종합 운영계획 수립·시행	'21. 3월	
	△성평등정책 컨설턴트단 △성평등교육 전문강사단 워크숍 개최	'21. 3월	
2/4분기	경찰 기능·관서별 성평등 목표 종합계획 수립	'21. 5월	
	성평등한 조직문화 만들기 캠페인(설문조사→카드뉴스 홍보)	'21. 6~9월	
3/4분기	성평등 직무역량 강화 교육 사이버콘텐츠 제작	'21. 8월	
	양성평등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운영	'21. 9월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21. 9월	
4/4분기	조직 내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21. 10월	
	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1. 12월	
연중	성평등위원회 정기회의 개최(분기별)		
	경찰 성범죄 예방·근절 상시협의체 회의 개최(분기별)		
	△성평등 직무역량 강화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연중)		
	경찰정책·홍보물 대상 성별영향평가 실시(연중)		
	「성평등 뉴우-스, 새로쓰는 경찰이야기」 정기발간(반기별)		
	<성평등정책 이행점검> △「21년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반기) △「경찰 성범죄 근절 및 예방 종합대책」(분기) △기능별·관서별 성평등 목표 수립(반기)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국민, 쏞 직원(경찰·일반직·주무관 포함)

□ 기대효과

- 경찰정책 성주류화 및 쏞 경찰관 성평등 감수성 내재화를 통한 성평등한 경찰행정 구현,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기여
- 전 직원의 성평등 직무역량 내재화를 통해 경찰행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투영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을 최소화 하는 경찰활동 전개, 대국민 경찰정책 신뢰·만족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1-일반재정②)			
① 일반행정업무지원(7131) ■ 경무인사지원(313) - 성평등 인권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회계	3.04	3.8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60%)	신 규	67	89	89.3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청·기관별 실적보고 (분기별, 온나라 공문)
성평등 교육 정착도 (40%)	신 규	77	90.8	91.1	하단 참조	하단 참조	청·기관별 교육이수율

□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 주요 치안정책(법령·정책·홍보물·교육자료 등) 성평등 관점 적극 점검 및 개선

- **(지표 설정 필요성)** 대국민 접점이 높은 경찰 업무의 특성상 경찰 법령·정책·홍보물 등 경찰 정책에 대한 성평등 가치 제고를 통해 국민적 지지 및 성평등정책 추진동력 확보
- **(점수 산출)** 주요 경찰정책 관련 성평등 관점 개선 의견수용도(수용 건수/개선의견 건수)를 기준, 경찰청, 18개 시·도경찰청, 5개 부속기관 합산 수용도의 평균치를 평가
- **(측정방법)** 측정 기간 종료 후 양성평등기획계에서 청·기관별 결과 취합·산출('21.1.1.~10.31.)
- **(목표치 산출 근거)** '20년 경찰 콘텐츠 성차별 요소 사전점검제도 운영 결과, 개선의견 도출된 과제에 대한 의견 수용 건수는 679건, 의견 수용률은 89%

총 요청건수	개선의견 도출	수용건수	개선의견 수용률
1,040	679	604	89%

- 지난 2년간 실적 평균치(78%)보다 높게 목표치 설정하되, 제도운영의 질적 관리 강화를 위해 '20년(89%) 이후 매년 약 0.3%p씩 증가폭 설정, '24년에는 수용률 '90%'대 달성될 수 있도록 '21년도 목표치 설정(실적평균치 대비 11.3%p ↑)

2020년(실적)	2021년(목표)	2022년(목표)	2023년(목표)	2024년(목표)
89%	89.3%	89.6%	89.9%	90.2%

□ 성평등 교육 정착도

※ 경찰 성인지 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한 교육 참여 현황 관리

- **(지표 설정 필요성)** 성평등 교육이 쏠 직원 법정 의무교육('19.6.19,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이 됨에 따라, 경찰 필수 직무역량으로서 성인지적 관점 내재화 중요성 증가
 - 따라서, 경찰 조직 내 성평등 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쏠 직원 대상 참여율 관리가 필요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실질화를 위한 중간관리자 이상의 성인지 감수성 내재화가 중요한 만큼, 중간관리자 이상 참여율도 병행 관리 필요
- **(점수 산출)** 중간관리자 이상 참여율 및 쏠 직원 참여율을 함께 고려하되, 성평등 교육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쏠 직원 대상 참여율을 가중하여 점수 부여(소수점 두 번째 자리 버림) → 각 참여도 점수 합산으로 평가

합계(100%)	경감 이상 참여도(40%)	전 직원 참여도(60%)
100점	$[(\text{경감 이상 이수 인원} / \text{경감 이상 전체인원}) \times 100] \times 0.4$	$[(\text{교육 참여 인원} / \text{전체 인원}) \times 100] \times 0.6$

- **(측정방법)** 측정 기간 종료 후 양성평등운영계에서 청·기관별 결과 취합산출('21.1.1.~10.31.)

- **(목표치 산출 근거)** '20년 성평등 직무역량 강화교육 운영 결과, 참여율 90.8점 달성

A : 경감 이상 이수율(40%)			B : 전 직원 이수율(60%)			최종 실적 (A*0.4)+(B*0.6)
대상인원	이수인원	이수율	대상인원	이수인원	이수율	
16,489	14,515	88.0%	132,403	122,584	92.6%	90.8

- 지난 2년간 실적 평균치(83.9%) 이상으로 목표치 범위를 설정하고 전년도 실적 분석*하여, '21년도 목표치 설정(실적평균치 대비 7.2%p ↑)

* 전 직원 대상 이수율(92.6%)을 유지하는 한편, 중간관리자 이상 이수율(88%)은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바, '21년 경감 이상 이수율 1%p 증가를 목표로 하되, 경감 이상 이수율은 40%만 반영되는 점 감안하여 설정

21년 목표 산출	A : 경감 이상 이수율(40%)	B : 전 직원 이수율(60%)	최종 실적(A*0.4)+(B*0.6)
	89.0% (전년 대비 1%p ↑)	92.6% (전년 유지)	91.1

(1) 주요 내용

- **<치안 R&D와 치안산업 진흥>** 과학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연구개발 과제*를 지속 발굴, 현장 실증하여 스마트치안 역량 강화
 - * △실종아동 신원확인 △약물 성범죄 사전예방기술 △DNA기반 용의자 특성 추적 △보이스피싱 검거를 위한 4G·5G 전파탐지·추적 △안티드론 기술 등
-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로 국내 우수 치안분야 기술·장비의 상용화·사업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치안한류’를 통한 위상 제고
-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사이버위협에 대비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가 치안업무의 안전성 확보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체계적인 데이터 품질관리로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효율적인 치안활동 지원
-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정보화 서비스」 구현>** 조직 개혁에 발맞추어 정보화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현장대응역량 향상
 - ※ △차세대 무선통신 체계 구축 △원격근무환경 제공 △업무자동화 등
-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 최신 ICT기술과 정부의 친환경정책을 기반으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다양한 장비의 개발·보급 추진
 - ※ △긴급차량 전용 번호판 부여 △경찰차량 증차 및 보험개선 △친환경 차량·의류 확대 보급 △실종자 수색용 드론운영 고도화 등 현장 지원 강화
-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대테러·작전(범인추적 등), 교통관리, 재해·재난(인명구조·실종자수색) 등 공중치안 적극 전개로 국민안전 확보
 - 헬기운용 국가기관(경찰·軍·산림·소방·해경) 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형사고 발생 시 공동대응하고 상호 위탁교육 강화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장비·시스템 부문 직무만족도
관리과제	치안R&D와 치안산업 진흥으로 현장 지원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현장 문제해결 발굴 건수 / R&D 연구결과물 현장 만족도 / 치안 장비·기술 수출상담 건수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사이버위협 사전예방 노력도 / 사이버위협 대응 신속도 /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정보화 서비스」 구현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 경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도 / 비대면 업무환경 지원도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경찰장비 현장 만족도 / 장비 규격 개선 실적 / 친환경 차량 보급률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치안현장 헬기지원 성과 / 항공요원 안전관리 역량강화 / 예방정비 활동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장비·시스템 부문 직무만족도	83.6	85.5	85.8	87.0	장비·시스템 부문 직무만족도는 '18년 이후 지속 상승하였으며, 전 3년도 실적 평균값(85.0)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87.2)을 고려, '21년 목표치는 평균값보다 높은 87.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장비·시스템 분야 문항 평균)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직무만족도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가 R&D 사업은 ① 제한된 예산 범위 내 타부처와 경쟁하고 ②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신규사업(과제) 발굴·예산반영이 어려움
- ※ 경찰청 R&D 시행 초기('15년~)와 달리, 규모가 누적·확대되면서 신규과제 추가반영을 위한 재정당국 설득이 예전보다 어려워진 상황
- － 특히, 코로나19 대응·탄소중립 등에 대한 정부 긴급자금 투입으로 연구개발사업 등 일반사업 예산들은 전반적인 감액이 우려됨

- 현장 체감도 높은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학계 및 치안산업체와의 협력 증진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
- 범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과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에 따라 공공정책에서도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 경찰 데이터 활용 기반인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성능을 강화하고, 활용 영역을 경찰업무 전반(범죄예방·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확장
 - ※ '20~'22년 3년간 경찰청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160억) 구축 중
-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보화서비스 수요 발생과 시스템 도입 간 간극으로 국민 및 현장경찰관의 불만 우려
- 차세대 경찰 무선통신 체계를 구현하여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원격근무환경 구축

(4) 참고자료

- 치안정책연구소(www.psi.go.kr)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1년 사이버 위협 전망」
- 스마트 국민제보(onetouch.police.go.kr / 모바일 앱)
- 경찰항공 운영매뉴얼

45 치안R&D와 치안산업 진흥을 통한 치안현장 지원

□ 추진배경

-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분야 연구개발(R&D) 중요성 증대
 - 범죄의 예측·대응, 범죄자의 안전한 검거, 구조요청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 등 국민 안전과 관련한 치안 현장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융합·지원이 긴요
- 現 정부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R&D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

「국정과제 14-③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R&D 활성화」

-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범죄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안활동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 치안역량 강화

- 또한, 치안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찰청 주도의 직·간접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경찰 관련 학계 및 치안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의 협력 증진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되어야 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치안현장 문제해결형 연구개발과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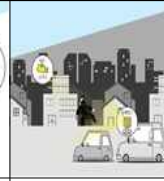
- 과학기술을 활용한 민생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는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지속적으로 확대, 현장 적용하는 것이 중요
- 매년 ‘치안R&D’ 예산을 증액하고 있으나, 치안현장의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규모는 적더라도 현장 적용성이 높은 신규과제 발굴, 확대

- ▶(’21년 신규) △현장·수사경찰관 의사결정 지원기술 △DNA 기반 용의자 특성 추정 기법 △보이스피싱 검거를 위한 4G~5G 전파탐지·추적 기술 △불법드론에 대한 드론포렌식 등 안티드론 기술 개발(다부처) 등
- ▶(기존과제) △긴급구조용 정밀측위 기술 △실종아동 신원확인 △치안현장 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폴리스랩) △약물 성범죄 사전예방기술 등

[치안 R&D 연구 성과의 현장적용 실증]

- '15년 치안R&D 시작 이후 연구성과가 도출되는 현 시점에서 결과물의 실제 현장적용과 현장의견 반영 등 실증 필요
- － 과제(7개)별 '현장 실증관서'에서 1년간 실증 추진, 실용성 강화
 - ※ '소형 드론을 활용한 현장경찰 지원', '접이식 방검방패', '블랙박스 영상수사' 등

【치안현장 맞춤형 사업(폴리스랩1.0) 7개 추진과제】

						
드론 현장경찰 지원	접이식 방검방패	스마트폰 지문식별	블랙박스 제보	성폭력 상담 챗봇	보이는112신고	경찰서류 모바일전환

- － 실증현장 참관 및 사용자(경찰관)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로 현장의견을 반영, 연구개발기술의 완성도 제고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치안산업 진흥]

-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접목한 직접 연구개발과 함께 치안산업 진흥*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
 - * 치안 관련 신규 창업지원, 핵심기업 육성, 국외판로 지원
- 치안분야 기술·장비의 상용화·사업화 등 치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제3회 국제치안박람회를 개최, 국내 우수한 치안과학기술 역량을 대내외 홍보하여 실질적 치안 산업 진흥효과 창출

「'20년 제2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추진성과(온라인)」

- ▶ (개요) △온라인 전시관(10.21.~12.31.) △수출상담회(10.21.~23., 송도컨벤시아)
- ▶ (성과) △박람회 접속자수 78,365명 △수출계약 추진액* 452억원(전년 대비 110건 ↑)
 - * '방폭보호의', '안티드론 통합시스템' 등 계약이 구체화 단계로 진입
- ▶ (참가자 반응)

- － (일반국민) “내년에는 실물로 관람하고 직접 체험하고 싶다.” 기대감 표시
- － (참가기업) “판로 개척의 가능성을 높여 내실있는 행사”라며, 향후 적극적인 참석 의사 표시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1~'25년도 R&D 중기사업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21. 1월	
	폴리스랩 본기획 사업 기획회의	'21. 2월	
	'국민안전 발명챌린지' 아이디어 접수	'21. 3월	
	치안산업 기업 간담회	'21. 2~3월	
2/4분기	폴리스랩 연구팀별 실증연구 추진	'21. 3~4월	
	'22년도 신규 요구사업 과제 기획	'21. 4월	
	'22년도 치안R&D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21. 4~5월	
3/4분기	'22년도 예산안(정부안) 심의 대응 및 협의·조정	'21. 6~9월	
	치안R&D 예산 국회심의 대응	'21. 9~11월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관련 주최 주관 회의	'21. 9월	
4/4분기	제3회 국제치안산업박람회 개최	'21. 10~12월	
	'23년 치안분야 R&D 투자 우선순위 제출(과기부)	'21. 10월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1. 10월	
	치안R&D 사업 연차평가 실시	'21. 12월	
연중	치안R&D 신규과제 수요조사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치안R&D’를 통해 현장치안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처가 가능해져 국민이 최종 정책 수혜자가 되며,
 - － 치안과학기술의 발전은 과거 인력투입 위주 방식에서 과학적 방식으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범죄예방·검거능력 향상으로 경찰관들도 수혜자가 됨
 - － 선진 치안기법·장비 개발은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육성 등 국가 경제발전 활성화 및 국내 우수한 치안장비·기술의 해외 전수로 ‘치안한류’로 표현되는 국가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이해관계집단> 중앙부처(과기부, 기재부, 산업부) 및 연구·전문기관(KIST, KISTEP, KIAT) 등과 치안R&D 확산을 위해 정책적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국민과 현장 경찰관 대상 의견수렴 및 홍보 추진

□ 기대효과

- 치안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확보를 통해 R&D 계속 과제의 내실 있는 진행과 신규과제 추가로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
- 기존 치안정책에 과학기술을 융합, 과학치안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한 현장치안력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등 급변하는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선제적인 대처가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1-일반재정②)			
① 정책연구개발(R&D)	일반회계	225.33	492.35
■ 실종아동 등 신원확인을 위한 복합인지기술(400)		12.50	13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사업(폴리스랩1.0)(401)		21.47	5.95
■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폴리스랩2.0) (402)		-	20.95
■ 긴급구조용 지능형 정밀측위 기술개발(500)		26.8	27
■ 자율주행차의 도로주행을 위한 운행체계 및 교통 인프라 연구개발(501)		37	36.91
■ 치안과학기술연구개발(611)		55.23	36.77
■ 국민위해인자에 대응한 기체분자 식별·분석 기술개발(613)		14.50	17
■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현장지원 기술개발(620)		17.62	92.01
■ 미래형 국민치안 서비스 개발(621)		12	20.2
■ 약물이용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휴대용 신속탐지기술 개발(623)		25.88	19.12
■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631)		-	28.26
■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634)		-	13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635)		-	161.9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현장 문제해결 발굴 건수 (30%)	7	6	8	8	3년간 실적치는, 하향 후 상승으로 7건이 평균치이나 이를 14.3% 상회한 8건을 목표로 설정	치안현장 문제 해결 신규과제 발굴 건수 (당해년도 문제해결 발굴건 + 차년도 신규 과제 발굴건) (예산확보)	정부예산안												
R&D 연구결과물의 현장 만족도 (30%)	신규	신규	84.3	86.4점	'15년에 시작된 치안분야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연구결과가 창출되면서 연구결과물의 현장 실증 등 현장 적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제 사용자인 현장 경찰관의 연구성과 만족도를 통해 성과 측정 '20년 최초 측정 신규지표임을 감안, 유사 지표인, ①인사교육직무 만족도, ②장비직무만족도의 최근 증가폭 1.9점을 적용하되, 도전적으로 10% 상승을 추가로 반영, 2.1점 상승한 86.4점을 목표치로 설정 」 유사만족도 추이 <table><tr><td></td><td>17년</td><td>18년</td><td>19년</td></tr><tr><td>인사</td><td>80.5</td><td>80.0</td><td>82.0</td></tr><tr><td>장비</td><td>85.1</td><td>83.6</td><td>85.5</td></tr></table>		17년	18년	19년	인사	80.5	80.0	82.0	장비	85.1	83.6	85.5	만족도 조사점수 (각 조사 부분 만족도의 평균)	전자우편 설문조사
	17년	18년	19년																
인사	80.5	80.0	82.0																
장비	85.1	83.6	85.5																
치안박람회를 통한 치안 장비·기술의 수출상담건수 (40%)	신규	220	330	451	2년간 실적치 결과 상승세 (110건↑)인 만큼 올해는 상승세보다 10% 상회한 121건 상향을 목표로, 총 상담건수 451건을 목표치로 설정	계약서 명시 수출상담건수 (‘21년 상담건 - ‘20년 상담건)	국제치안산업박람회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공식집계 (KOTRA)												

46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 추진배경

-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생활 전반에 비대면화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사이버 공격에서도 지능화 및 증가하는 추세
 -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1년 사이버 위협 전망 발표' 자료('20.12.)
- 범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 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 AI 기술 고도화 등 데이터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확산
 - ※ '20~'22년 3년간 경찰청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160억) 구축 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경찰 전산망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사이버위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어 체계 확대
 - － 경찰 전산망의 안정적인 관리와 국가 치안 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능형 지속 위협(APT)* 대응 시스템' 구축 추진
 - * 장기간에 걸쳐 메일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해킹 시도(Advanced Persistent Threat)
 - － 사이버 공격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공동 대응체계 확보
 - － 전 직원 대상으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실전과 같은 사이버 훈련을 진행하여 직원들의 대응 능력 향상 및 경각심 제고
 - ※ 실제 해킹메일과 유사한 형태로 '사이버 모의훈련' 연 3회 이상 실시
- 경찰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정보화 보안 활동 내실화
 - －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운영으로 정보화시스템 보안 강화, 무선 인터넷 등 사전 점검으로 사이버보안위협 대응 강화
 -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및 유출 예방으로 보호 체계 마련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경찰행정 지원]

○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결정·인공지능 활용 치안서비스 확대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경찰 업무에 접목하기 위한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연차적 추진 중

▶ 경찰청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20~'22년, 총 예산 160억)

구분	1단계 도입기('20년)	2단계 확산기('21년)	3단계 발전기('22년)
소요예산	57억 2,900만원	52억 8,300만원	약 50억원(추산)
인프라	핵심 인프라 구축	비정형 데이터 등 인프라 확장	인공지능 등 시스템 고도화
포털	포털시스템 구축	경찰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빅데이터 포털 고도화

- 인력 중심의 경찰활동에서 탈피, 데이터를 중심의 지능정보기술 활용으로 △ 현장 치안역량 강화 △ 조직·업무 효율화 등 도모

○ 고품질 치안데이터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마련

-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 정책, 기준, 절차 등 ‘데이터 품질관리체계’ 마련
 - ※ 데이터 품질관리 전문교육 확대 및 자체 점검을 지원하여 미비점 보완
- 경찰청 정보화시스템 대상 데이터 품질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294개 데이터의 품질관리 강화
 - ※ 품질관리 기준 수립 및 진단도구 배포로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

○ 치안 데이터 융·복합을 위한 ‘경찰청 데이터 표준’ 확산

- 통일된 데이터 형식 및 규칙을 적용하고 데이터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찰청 ‘데이터 공통표준*’ 확산 추진
 - * '20년에 기능별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 정의서 마련
- 모든 치안 데이터를 총괄하는 메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표준화 등 품질관리를 수행해 분석 신뢰성 담보
 - *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구성·항목·크기 등 ‘데이터에 대한 설명정보’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 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21. 1월	
	'21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계획	'21. 1월	
	사이버위협 대응 강화를 위한 웹메일 보안 강화 협조	'21. 2월	
	'21년 공공데이터 개방목록 정비 계획	'21. 3월	
	'21년 해킹메일 실전 대응훈련 계획	'21. 3월	
	'21년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사업 계획	'21. 3월	
2/4분기	'21년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계획	'21. 4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정비 계획 수립	'21. 4월	
	공공분야 「사이버공격 대응 훈련」 계획	'21. 5월	
	'21년 공공데이터 교육 계획	'21. 5월	
	'21년 정보보호 직무전문화 교육 계획	'21. 5월	
	경찰청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2차 구축사업 개시	'21. 6월	
	무선도청 탐지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21. 6월	
	'21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대상 DB 선정	'21. 6월	
	'21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21. 6월	
3/4분기	'21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 활용 수요 조사 계획	'21. 7월	
	사이버보안진단의날 상반기 운영 결과 보고	'21. 7월	
	'21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을 위한 현장지원반 운영 계획	'21. 8월	
	사이버 보안위협 정보공유 현황분석 보고	'21. 9월	
	통합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계획	'21. 9월	
4/4분기	'21년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정비 계획	'21. 10월	
	전국 경찰관서 보안감사 계획	'21. 10월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21. 11월	
	국정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21. 11월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2단계 구축사업 완료	'21. 12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하반기 운영결과 보고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및 쏠 경찰관
- 이해관계 집단 : 경찰시스템 운영 및 데이터 보유 부서

□ 기대효과

- 경찰이 보유한 범죄경력, 주민번호 등 민감 정보를 보호하고, 경찰 내부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보안위협을 사전 예방하여 경찰 전산망의 안전한 운영을 통한 대국민 치안서비스 지원
- 기존의 한정된 정보 및 개인의 경험칙에 의존했던 치안 활동을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결정과 효율적 치안활동으로 지원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1	'22
경찰청 정보화기반고도화(정보화)			
① '20년 경찰청 치안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일반회계	52.8	50
②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일반회계	9.3	10.3
③ 통합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계획	일반회계	5.8	5.8
④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구축	일반회계	9	
경찰청 유무선망개선			
① 보안관제시스템 구축	일반회계	4.2	4.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사이버위협 사전예방 노력도 (30%)	-	-	55.1	60.6	○ 최근 지능화·다양화 되어가는 사이버 공격에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현장점검, 교육 등 정보보호 활동을 추진 중 * 최근 침입방지,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고도화 추진(2년간) ○ 특히, 수많은 해킹 공격에 최신 정보보호시스템 구축·고도화를 통한 사전 차단이 효과적으로,	하단 참조	관련 시스템, 공문, 메모보고 및 증빙서류 등

					정보보호시스템을 통한 사전 차단율로 업무 추진 노력을 측정, 올해 목표는 전년 대비 10% 증가된 60.6점으로 적극 설정(신규)		
사이버위협 대응 신속도 (30%)	11.1	15.9	17.9	22.9	- 본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 274개 관서의 15만 여대 개별 PC에 대한 사이버위협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은 경찰 전산망 보호와 직결되는 요소 - 매년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등 대응 체계를 정비하여, 올해는 3년 평균 14.9점 대비 53%, 전년 대비 27.9% 높은 22.9점을 목표로 설정	하단 참조	관련 시스템, 공문, 메모보고 및 증빙서류 등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30%)	미흡 (59.4)	보통 (73.2)	우수 (82.6)	우수 (85)	- 행안부 주관 데이터 품질평가는 3개 영역·9개 지표로 각 국관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등 난이도가 높고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업무로, - 최근 데이터 품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18년 59.4점 '미흡'에서 '20년 82.6점(23.2↑) '우수'로 점수가 대폭 상승으로, 추세치(18%, 98점)를 적용 못할 정도로 임계치에 도달하였으나, '21년에도 '우수'기관 유지와 지속적 상승을 위해 3년 평균 71.7점 보다 13.3점(18.5%), 전년 대비 2.4점(3%) 향상을 목표를 설정	하단 및 별도첨부 참조	데이터 전문 평가 기관인 지능정보 사회진흥원의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10%)	-	59	75	90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데이터*를 개방 확대하여 민간에서 쉽게 활용토록 지원 * 범죄통계, 112신고 등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의 묶음으로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 정부정책에 따라 데이터를 적극 발굴하여 '20년은 전년 대비 16% 증가, 2년 평균 67개로, - 올해에는 전년 대비 20%, 2년 평균 대비 34%로 증가된 90개를 목표로 적극 설정 ※ '19년부터 경찰청 차원 공공데이터를 본격적으로 관리 시작하여 지표를 산정(18.12 행안부 전수조사)	하단 참조	공공데이터 포털 시스템의 등록된 보고서

측정산식	○ 사이버위협 사전예방 노력도(30%) - 최근 첨단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각종 정보보호시스템 고도화, 해킹 메일 훈련, 전문교육 및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사전 예방 보안활동을 추진 중 - 그중 수많은 사이버 위협 정보가 경찰청 정보통신망에 유입되기 전 사전차단은 효율적인 방식으로 최신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을 통한 '사전 차단율'로 정량적 측정 ※ '19 ~ 20년 침입방지,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126대 / '21년 지능형위협대응시스템 11대 구축 예정 - [측정방법] 사전 차단율 = $\frac{\text{사이버 위협 사전 차단 건수}^*}{\text{사이버 위협 총 건수}} \times 100$ * 정보보호시스템(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에서 사이버 위협 차단 건수 측정						

- 연도별 사전 차단율

※ 본청 기준

구분	사전차단율	총건수	차단건수
20년도	55.1	31,781,145	17,516,260
21년도	60.6	'20년도 대비 10% 상향 목표	

※ 주요 정보보호시스템 기능 설명

구분	내용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악성코드 감염 등 위험에 노출된 사이트에 대해 접속 통제
침입방지시스템	악성코드 의심정보 등 침입행위 탐지·분석·차단 조치
지능형위협대응시스템	잠복, 암호화 등 시스템에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인 공격에 대응

○ 사이버위협 대응 신속도(30%)

- 최근 사이버공격은 운영체제(OS)나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차단 할 수 있는 패치가 공개되기 전 그 취약점을 이용한 악성코드나 해킹 공격 기법이 주로 사용되며,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조치)은 경찰 정보통신망과 내부자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

- [측정방법] $\text{신속도} = \frac{\text{6시간내 조치 건수}}{\text{사이버위협 조치 필요건수}} \times 100$

- 연도별 조치 내역 및 신속도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구분	신속도	6시간 이내 조치 건수	6시간 이후 처리 건수	총건수
18년도	11.1	61	489	550
19년도	15.9	157	832	989
20년도	17.9	327	1,504	1,831
21년도	22.9	'20년도 대비 28% 상향 목표		

○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30%)

- 행정안전부 주관,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결과 반영, 결과는 경찰청의 전반적인 데이터 관리수준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정부업무평가 중 정부혁신평가에 반영
- 최종 데이터 품질진단 결과는, 데이터 전문기관인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품질평가 전문 위원이 5월부터 평가를 시작하여 10월중에 품질평가보고서를 각 기관에 배포

* 행안부 평가척도 : 우수(80점 이상), 보통(80점 미만 ~ 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 행안부 주관,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

▶ **개 요**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기관의 데이터의 품질관리 기반, 역량, 표준화, 오류 등 기관의 데이터 관리 전반에 대해 평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평가항목** : 데이터 품질관리 3개 영역, 9개 평가지표(별도 첨부자료 참고)

구분	지표	배점	주요 평가 내용
기관	품질관리 기반	5	기관 차원의 품질계획 수립하고 추진과제 이행 여부 점검
	품질관리 역량	5	데이터 품질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품질관리 교육 실적
	표준관리 체계	10	기관의 데이터 표준 정의와 적용 확산 노력 등 점검
	활용성 제고	10	치안 데이터 이용자 오류 처리절차 정의 및 접수·처리
DB	표준화 확산	15	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실제 각 DB반영 여부(표준적용률)
	DB 구조 안정화	15	각 DB의 구조, 산출물 등 현행화 여부
	연계체계 정비	5	연계 데이터의 관리정보, 품질점검, 담당자간 의사소통 등
	품질진단·개선	10	품질진단 대상과 진단기준 정의, 품질진단 수행
데이터	오류데이터 관리	25	진단대상 DB 및 데이터파일 오류율 점검

▶ **평가일정** : 기관별 실적 제출('21년 8월) → 중간평가 결과(10월)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10%)

- 모든 공공기관은 민간 창업, 범죄치안, 사회적 가치 등을 위해 국민 수요 중심의 개방 데이터를 발굴하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등록하여 관리
- 교통사고정보, 분실물정보, 실종아동정보와 같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개방목록(데이터의 묶음)을 적극 개방하여 정부정책에 부응(정부혁신평가 반영)

- **[측정방법] 목표치(90개) = 75개('20년 실적) × 1.2**

※ 그간 공공데이터 총 관리목록에서 올해는 공공데이터 신규개방 목록으로 집중 관리

〈붙임〉 행안부 주관,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3개 영역, 9개 평가지표)

영역	지표 (배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기관 (30)	① 데이터 품질관리 기반 (5)	①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 (90%) ②중장기(3~5개년) 개선계획수립 및 개선과제 이행	①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 (80%) ②품질점검 및 조치 결과 보고 및 공유	①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 (70%)	①기관 데이터 품질 관리 계획 수립 (공식화)	①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일부 수립하고 있거나 수립하고 있지 않음
	② 데이터 품질관리 역량 (5)	①품질관리 담당자 지정(평가대상DB 90%) ②데이터 품질관리 이해 관계자간 소통 정례화 (연간 2회 이상)	①품질관리 담당자 지정(평가대상DB 80%) ②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훈련 실시 (연간 2회 이상)	①품질관리 담당자 지정(평가대상DB 70%) ②데이터 품질관리 교육 훈련 실시 (연간 1회 이상) ③‘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교육’ 참여	①기관 품질관리 교육 훈련 계획 수립 (공식화) ②기관 품질관리 총괄 담당자 지정	①품질관리 교육훈련 계획을 일부 수립하고 있거나, 수립하고 있지 않음
	③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10)	①표준관리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90%)	①표준관리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80%)	①표준관리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70%) ②기관 데이터 표준 변경이력관리	①기관 데이터 표준 관리 계획 수립 (공식화) ②기관 표준 관리 절차 및 생성규칙 (기준) 정의준수 ③데이터 표준 정의	①데이터 표준관리 계획을 일부 수립하고 있거나 수립하고 있지 않음
	④ 데이터 활용성 제고 (10)	①수요자 요구사항 정책 반영	①데이터 품질 오류 분석 및 문제점 개선 ②데이터 품질 만족도 요구사항 조사 분석	①품질오류 신고내역 기록 관리 및 처리 기준 준수	①품질오류 신고 접수 및 처리기준 정의	①품질오류 신고 접수 창구를 일부 운영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않음
DB (45)	⑤ 데이터 표준확산 (15)	①법정부 데이터 표준 반영 ②DB 표준 적용 (80% 이상)	①기관 표준 전체 반영, 비표준 매핑 ②DB 표준 적용 (70% 이상)	①표준 현황 분석 정비 ②DB 표준 적용 (60% 이상) ③데이터 표준 변경 이력관리	①데이터 표준 적용 확산 계획 수립 ②평가대상DB 데이터 표준 정의	①평가대상 DB 데이터 표준을 일부만 정의하였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음
	⑥ 데이터 구조 안정화 (15)	①구조 산출물 현행화 (90% 이상)	①구조 산출물 현행화 (80% 이상)	①구조 산출물 현행화 (70% 이상) ②데이터 구조 변경 이력관리	①평가대상DB 데이터 구조 정의 및 산출물 관리	①데이터 구조를 일부만 정의하였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음
	⑦ 연계 데이터 연계체계 정비 (5)	①중장기(3~5개년) 계획에 따른 연계 데이터 품질개선	①조치 가능한 연계 데이터 품질개선 활동 수행 ②외부 기관 간 장·단기 의사소통 활동 수행 (연간 2회 이상)	①연계데이터 품질 점검(연간 2회 이상) ②연계데이터 송수신 내역 관리	①연계데이터 관리 정보 정의	①연계데이터 관리 정보를 일부만 정의하였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음
	⑧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관리 (10)	①개선과제 이행률 (90%)	①업무규칙 활용하여 품질진단(정합성) 실시 ②개선과제 이행률 (80%)	①품질진단 개선계획 수립 ②개선과제 이행률 (70%)	①평가대상 전체 칼럼에 대한 진단기준을 정의	①평가대상 전체 칼럼에 대한 진단 기준을 일부만 정의하였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음
데이터 (25)	⑨ 오류 데이터 관리(25)	①품질오류율 0.01% 미만	①품질오류율 0.1% 미만	①품질오류율 0.5% 미만	①품질오류율 1% 미만	①품질오류율 1% 이상

47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정보화 서비스」 구현

□ 추진배경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변화와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등 경찰 조직 개혁에 대응한 정보화 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
-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정보화 서비스의 발굴·개선과 기존 정보 통신 기반의 안정적 운영으로 효율적 현장 업무를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정보화 서비스 도입]

- 전국 단일의 차세대 경찰 무선통신 체계 구현
 - －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 전국 경찰 공통의 무선 통신망 구축과 차세대 무선통신 장비 도입을 완료
 - ※ '19년 중부권, '20년 남부권 도입에 이어 '21년은 최종적으로 수도권 4개청(서울, 인천, 경기남·북부)에 도입
 - － 노후화되고 지역별로 상이한 기존의 무선통신 장비를 대체 하고, 영상 송신 등 새로운 현장 지원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
 - 차세대 재난망 단말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 준비 병행
- 중단 없는 경찰 업무를 위한 원격근무환경 구축
 - －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연속적 업무수행을 위해, 폴넷·온나라·영상회의·메신저를 모바일 버전으로 도입하기 위한 ISP 추진
 - ※ ISP 추진과 함께 '비대면 업무환경 지원도' 성과지표 요소 발굴·개선
 - － 시·도경찰청 화상회의 서버 강화를 통한 안정성 확보와 함께 권한설정, 사용자 연동, 통계 등 화상회의시스템 기능을 고도화
 - ※ 전국 경찰관서 중간 관리자급 이상 PC용 웹캠 보급 병행(5천여대)

- 국민 편의를 위한 경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추진
 - 경찰 우편물 89종을 모바일로 발송하기 위한 고도화 추진
 -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연간 약 3,400만 건에 달하는 경찰 우편물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예산의 획기적 절감효과 기대

[국민과 현장 경찰 중심의 서비스 개선]

- 경찰 업무 효율화를 위한 업무자동화(RPA) 추진
 - 경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 반복적인 경찰 업무에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법을 적용
 -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 /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적극 활용 중
 - RPA 협의회 및 현장자문단을 운영하여 일선에서 필요한 RPA 업무를 발굴·추진, 업무 효율 및 업무처리 정확도 제고
- 국민·경찰 협력의 사회안전망,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 고도화
 - 급증하는 교통법규위반 신고 처리의 신속성 제고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딥러닝 기반의 교통법규위반 영상 분석 기술 개발 추진
 - ※ 치안빅데이터정책담당관실과 협업으로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 △ 사회 이슈 범죄신고 코너 개설 △ 제보영상 갤러리 기능 신설 △ 저장공간 증설 등 사용자 요구에 맞게 시스템을 개선
- 경찰 내부 포털인 ‘통합포털 폴넷’ 서비스 개선 추진
 - 다양한 경찰 업무시스템과 ‘통합포털 폴넷’과의 연계 확대를 통해 경찰 대표 포털로서의 역할 강화
 - 기능별 요청사항을 수용하여 각종 게시판 적시 개설·운영

○ 현장 근무자 지원을 위한 모바일 업무환경 개선 추진

- 자치경찰제 시행 등 변화에 따라 현장에 필요한 폴리폰 서비스를 추가 개발, 효율적인 외근 현장 업무를 뒷받침
- 노후 모바일 장비(폴리폰, 업무용폰, 모바일 프린터)를 최신 장비로 교체 보급, 일선 현장업무 효율성 제고

[정보통신 기반의 안정적 운영]

○ 정보통신 시스템·기반 유지관리 효율화

- 국관에서 개별 수행하는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단계적으로 통합, 체계적 사업관리 및 시스템 간 중복성 제거로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 정보시스템 48개, 본청 전산장비 6,954대에 대해 4차 통합유지관리 추진
- 경찰청 내 상용 메일 차단으로 웹메일시스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웹메일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이중화 추진
→ 웹메일 솔루션 및 각종 보안솔루션 도입으로 최적의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성능향상 등 안정적 메일 서비스 제공
- 광역 단위 강력범죄 등 수배차량의 신속한 추적 및 검거를 위해 운영 중인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WASS) 노후 장비 교체

○ 직무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 교체·보급

- 전국 경찰관서의 노후 사무용 PC 등을 적기에 교체 보급,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민생치안 대응역량 제고
※ △PC 19,000대 △프린터 6,000대 △노트북 2,000대 △망전환장치 800대
- 전국 경찰관서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간사용권 계약을 통해 라이선스 위반에 따른 분쟁 예방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MS 라이선스(윈도우 10, 엑셀 등), 한컴오피스, Adobe 3사의 소프트웨어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계획 수립	'21. 2월	
	언택트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ISP 사업계획 수립	'21. 2월	
	통합유지관리(4차)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21. 2월	
	경찰 공공앱 운영현황 자체 점검계획 수립	'21. 3월	
	스마트국민제보 기능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21. 3월	
	모바일프린터 구매 및 교체 계획 수립	'21. 3월	
	폴리폰 기능개선 계획 수립	'21. 3월	
	재난안전통신망 3단계 전환사업 계획 수립	'21. 3월	
	경찰 업무용폰 구매 계획 수립	'21. 3월	
	전국 경찰관서 노후 PC 등 교체 사업 계획 수립	'21. 3월	
	전국 경찰관서 사무용SW 보급 계획 수립	'21. 3월	
	영상회의 시스템 확대 구축 계획 수립	'21. 3월	
	경찰 웹메일 시스템 이원화 계획 수립	'21. 3월	
	경찰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연계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21. 3월	
	전국 경찰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계획 수립	'21. 3월	
2/4분기	전국 경찰관서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계획 수립	'21. 4월	
	모바일 오피스 언택트 근무환경 구축 ISP 착수	'21. 4월	
	경찰 폴리폰 구매 계획 수립	'21. 6월	
	재난망 단말기 구매 발주.사업 계약	'21. 6월	
	전국 경찰관서 사무용SW 보급 완료	'21. 6월	
	RPA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분석	'21. 6월	
3/4분기	모바일 오피스 등 경찰청 원격근무환경 구축 ISP 사업 완료	'21. 7월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완료	'21. 8월	
	경찰 웹메일 시스템 이원화 완료	'21. 8월	
	RPA 우수 안건 홍보	'21. 9월	
4/4분기	경찰 공공앱 성과측정 실시	'21. 10월	
	스마트국민제보 기능 개선	'21. 10월	
	영상회의 시스템 확대 구축 완료	'21. 10월	
	전국 경찰관서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완료	'21. 10월	
	전국 경찰관서 노후 PC 등 교체 완료	'21. 10월	
	통합포털 폴넷 기능 개선	'21. 10월	
	재난망 단말기 등 장비 설치 및 배부	'21. 12월	
	경찰우편 모바일 전자고지 연계시스템 시범 서비스	'21. 12월	
	통합유지관리사업 만족도 조사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모든 국민 및 경찰청 소 직원
- 이해관계집단 : 재난안전통신망 거버넌스 관계에 있는 행안부, 정보화사업 및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업체 등

□ 기대효과

- 경찰 조직 개혁에 대응하여 고도화된 새로운 정보화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현장대응역량 향상 및 對국민 치안만족도 제고
- △ 업무자동화 △ 정보화 서비스 개선 등 기능별 요청사항을 수용, 내실 있는 시스템 개선으로 수준 높은 정보화 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통합유지관리로 정보화시스템 안정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위험요소 사전 예방
- 『정보화서비스 고도화-개선-안정화』의 일련의 과정에서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개선, 각종 비용 절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경찰장비와 정보화운영체계를 선진화한다(IV-2-일반재정(3))				
① 경찰유무선망개선(4233) ■ 경찰유무선망개선(311)		일반회계	1,488	1,326
경찰장비와 정보화운영체계를 선진화한다(IV-2-정보화(1))				
①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4234) ■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511)		일반회계	626	63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30%)	84	100	118	116.8	아래참조	아래참조	시스템 통계 활용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20%)	84.6	86	83.1	85	아래 참조	아래 참조	내부직원 만족도조사 (고객만족모니터센터 의뢰) 및 스마트 국민제보 시스템 통계
경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도 (30%)	3,042	1,427	1,333	1,133	아래 참조	아래 참조	- 시스템 통계 활용
비대면 업무환경 지원도 (20%)	3,357	3,624	14,031	8,405	아래 참조	아래 참조	- 시스템 통계 활용
목표치 산출근거	○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 116.8점 - 경찰청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를 측정 - ① 통합포털 폴넷(30%) ② 스마트국민제보(30%) ③ 폴리폰(30%) ④ 수배차량 등검색시스템(10%) 등 4개 시스템 활용도를 반영 - 금년 목표치는 전년도 ② 스마트국민제보, ③ 폴리폰 활용도의 급격한 증가로 각각 상한 임계치에 도달한 점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01.6점에 무려 증가율 15%를 적용, 116.8점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 ○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 85점 - 국민 및 전국 경찰관, 일반직 공무원 대상으로 전국 경찰관서에서 활용 중인 다양한 정보화시스템 및 정보통신 장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 국민 대상 '스마트국민제보 만족도'를 포함, 입체적으로 조사·반영 - 최근 3년간 평균만족도가 84점 내외로 등락하고 있으나(상승 후 하강 국면), 금년 목표는 3년간 평균추세치인 -0.91%보다 무려 3.25% 증가한 2.34%를 적용, 85점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 ○ 경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도(감소지표) : 1,133분 - 경찰정보통신망 장애는 국가의 치안활동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장애시간 감소 노력을 위해 '경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도'를 신규지표로 설정 - 금년 목표치는 작년 전국 경찰관서 통신망 장애시간(1,333분)에 감소율 15%를 적용, 1,133분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 ※ 최근 3년간 평균 장애시간 1,934분 ○ 비대면 업무환경 지원도(화상회의시스템 이용현황) : 8,405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 업무환경 보편화 경향에 맞춰 '비대면 업무환경 지원도(화상회의 시스템 이용현황)'을 신규지표로 설정 - 금년 목표치는 전년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의 급격한 증가 및 백신 보급 상황 등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평균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 건수(7,004건)에 증가율 20%를 적용, 8,405건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설정						

측정 산식	○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 ① 통합포털 폴넷(30%) + ② 스마트국민제보(30%) + ③ 폴리폰(30%) + ④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10%) ※ 세부 기준은 다음페이지 참고 ○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 내부 직원 만족도(80%) + 대국민 만족도(20%) ▶ 내부직원(80%)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 장비 만족도 조사(80%) <고객만족센터 의뢰 설문조사 실시> ▶ 대 국민(20%) : 스마트국민제보 만족도(20%) <시스템 內 신고자 만족도> - 만족도 평정부여는 경찰청 고객만족센터의 7개 척도(매우불만족 : 0, 불만족 : 16.7, 다소불만족 : 33.3, 보통 : 50, 다소만족 : 66.7, 만족 : 83.3, 매우만족 : 100)의 점수를 활용 ○ 경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도(감소지표) - 시도경찰청.경찰서 대상 회선 장애로 인한 업무망 서비스 중단 시간 ※ 장애시간 : 18개 시도경찰청 누적 장애시간 매월 취합 ○ 비대면 업무환경 지원도(화상회의시스템 이용현황) - 전국 경찰관서 화상회의시스템 이용 실적(영상회의 실적 보고) - 이용실적 : 전국 경찰관서 화상회의시스템에서 회의 개설 건수

[붙임 1]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평가 세부기준

① 통합포털 폴넷 일평균 이용건수 (30%)

▪ 이용건수 : 게시물 등록건수 + 조회건수						
건수	~ 293,242건 (90%미만)	293,243건 ~ (90%)	325,826건 ~ (100%)	358,408건 ~ (110%)	390,991건 ~ (120%)	423,573건 ~ (130%)
점수	24점	27점	30점	33점	36점	39점

② 스마트국민제보 일평균 처리건수 (30%)

▪ 처리건수 : 국민신고·제보 건에 대한 업무담당자 일평균 처리건수						
건수	~ 3,420건 (90%미만)	3,421건 ~ (90%)	3,802건 ~ (100%)	4,182건 ~ (110%)	4,562건 ~ (120%)	4,942건 ~ (130%)
점수	24점	27점	30점	33점	36점	39점

③ 폴리폰 기능 개선건수 (30%)

▪ 개선건수 : 현장경찰관이 필요로 하는 기능개선 건수(연간)						
건수	~ 12건	13~14건	15건	16~ 17건	18 ~ 19건	20건 ~
점수	24점	27점	30점	33점	36점	39점

④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연간 이용건수 (10%)

▪ 이용건수 : (수배차량 등록 건수 + 검색 건수)						
건수	~ 20,821건 (90%미만)	20,822건 ~ (90%)	23,136건 ~ (100%)	25,449건 ~ (110%)	27,763건 ~ (120%)	30,076건 ~ (130%)
점수	8점	9점	10점	11점	12점	13점

※ 항목별 기준값은 3년 평균치 또는 전년 기준 대비 15% 상승값

48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 추진배경

- 법 집행현장에서 흉기피습, 교통사고, 재해재난 등 각종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보호장비의 개발·보급 필요
 - ※ 대통령께서도 제73회 경찰의 날 치사를 통해 **“경찰관의 부상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비 확충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18.10.)
- 스마트 치안 구현을 위한 최신 ICT기술과 정부의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경찰업무 특성에 적합한 첨단장비 개선 및 개발
 - * 개인·회사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정책으로 향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야 함을 선언(’20.12.)
- 희망품목 적기보급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개선·개발로 품질향상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현장경찰관의 적극적 업무수행과 안전을 위한 경찰장비 개발 및 지원 강화]

- <안전장비 총괄> 각 기능별 안전장비 개선 및 추가 도입이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해 「규격심의위원회*」에서 논의·조정 추진
 - ※ 안전장비 성능, 안전 등에 대해 조율하고, 규격(잠정 규격 포함)을 확정지어 우수 장비 도입이 가능하도록 규격심의위원회(정보화장비정책관 주재) 개최
 - 안전장비 개발 시 외부위원인 장비자문위원회* 참여로 전문성 향상
 - ※ 규격심의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新장비 개발 관련 기술 분야 검토 등 자문 참여
- <신체보호장비 보급> 흉기피습, 교통사고 및 재해재난에 대비한 안전장비 개선·보급과 사용·관리 영상 제작으로 활용도 제고

<’21년 보급장비 특징>

구분	방검패드(외근조끼용)		방검장갑
디자인			
특징	가슴부위 삽입구조	윗가슴보호대 추가	방검성능 향상

- ‘LED안전호루라기’ 등 시인성을 강화하는 피복·장구류 보급으로 교통사고 등 사건처리 시 경찰관 사고 예방
- 재난상황 초동조치에 필수적인 안전모·화재대피마스크·안면보호경 등 현장경찰 재난장비에 대한 개선·보급 추진

LED안전호루라기	신호장갑(예시)	시인성 향상조끼(예시)	신체보호장비	화재마스크	안전모
					

- <긴급차량 전용번호판 부여> 번호판 앞 3자리에 특수번호를 부여하고 특수번호 차량이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도록 제도 마련
- 국토부 관련고시 개정, 특수번호판 교체 및 시스템 개선 후 시행('21. 9.)

구분	내 용	대상차량	예 시
방안	· 긴급차량에 특수번호 998번 부여 · '한글'로 기관(경찰·소방) 구분 · 기관별 3만개 번호 부여	112·고속·교통 등 순찰차 및 형사·과학수사 등 도색 차량	경찰 998 가 xxxxx 998 고 xxxxx 998 구 xxxxx

- <경찰차량 증차 및 보험 개선> △'21년 증차 예산 57억원 증액(14→71억원) 순찰차·범죄수사차량 등 219대 구매·보급 △보험사업비 증액(36억 5,700만원) 기본·특별약관의 보장범위 대폭 강화
* 보험사업비: '20년 118억 6,700만원 → '21년 155억 2,400만원(30.8% 증액)

< '21년 보험 주요 내용>

구분	기본 보장					특별 약관		
	대인	대물	자손		자차 (부담금)	탑승자 상해	피단속차량 운전	법률지원
			사망·장애	부상				
'20년	무한	1억	1억	1,500만원	100만원	탑승자만	112·교통·고속순찰차	112·교통·고속·형사·의경운전
'21년	무한	3억	2억	3,000만원	최저 20만원 ~ 최대 50만원	사건지원자 및 일시하차자 포함	형사·수사차량 추가 운전→운행확장	수 차량

- (기본) 신체보상 상향, 치료비 및 위자료 추가 보상 등 현실화

- ▶ (자기신체 손해) '자기 신체사고'를 '자동차 상해'로 개선하여 실제 치료비 지급, 휴업손해비 및 위자료 등 추가 보상 가능
- ▶ (대물) 대물보상(1억→3억)을 상향, 고급차량 사고 대비 및 자기부담금을 하향(사고당 100만원 → 20~50만원), 차량 수리 예산 절약

－ (특약)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 형사처벌 대비 법률지원 상향

- ▶ (탑승자 상해) 상해치료비 산정(90일 → 전체기간), 사건지원자 및 일시하차자 추가포함
- ▶ (피단속·용의차량 운전) 형사·수사대상 차량 추가, 운전을 운행으로 변경하여 보장범위 확대
 - ※ △운전: 차량 본래 용법으로 사용 △운행: 운전 및 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행위 포함
- ▶ (법률지원) 스쿨존 사고 등 형사처벌 대비 법률지원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 △형사 합의금 사망 2천→3천·상해 1천→3천, △변호사비용 3백→5백, △스쿨존 벌금2천→3천

[첨단기술 활용과 저탄소화 정책 기반의 경찰장비 도입으로 스마트 치안 구현]

- <실종자 수색용 드론운영 고도화> '21년 드론 38대 추가 보급에 따라 운용 인력풀 구성·교육 및 드론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합현황 관리 추진
- <저고도 무인기 감시기술 개발> 소형 무인이동체를 탐지·식별 가능한 광학·열영상 탐지 장비와 연동되는 레이더 지속 개발
 - ※ <개발주관> 전자통신연구원 <참여> (주)한화시스템, (주)인텔텔레콤, (주)RFPT



- <친환경차량 확대 보급> 노후 업무용차량 161대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및 수소전기순찰차 시범관서 대상 효과분석 후 확대 보급
 - － 연구용으로 제공된 고속형 수소전기버스* 시범운용 추진('21.3.~, 1년간)
 - * 특징: 탑승인원 28+1(조정가능) / 주행거리 : 485km(고속도로) / 대기시간 : 41시간
 - － '21년 신규 판매하는 중형 전기차 10대를 구매하여 리프트 경광등 등 특장 후 전기순찰차 시범운용 추진('21. 11.)

< 수소전기버스 제원 비교 >

외부이미지	주요제원 및 성능		저 상 형	고속형
 【저상형】	제원	길이(mm)	10,995	11,760
		넓이(m)	2,490	2,495
		높이(mm)	3,420	3,710
		인승	20+1	28+1
 【고속형】	성능	연료용량	33.1kg	41kg
		최고속도(km/h)	84	141
		항속거리(km)	429	485
		대기시간	36시간	41시간

- <친환경 의류 도입> 리사이클(Re-cycle)이 아닌 업사이클(Up-cycle)로 디자인·품질이 향상된 ‘친환경 의류’ 제작, ‘그린 뉴딜’ 선도적 추진
 - 착용감, 기능성을 높인 친환경 소재로 △ 간이근무복 상의 △ 생활편의복 △ 파카 충전재를 제작하여 시범착용 추진(~5월)
 - 재활용 소재에 대한 이미지 쇄신을 위한 내·외부 전략적 홍보 추진

<친환경 의류 시범착용 대상>

구분	간이근무복 상의	생활 편의복 상·하의		흑한파카 내피(충전재)
디자인 (예시)		< 동 계 >		
		 	 	
대상	경찰 부대, 112상황실 요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대생, 간후보, 신임의경		신임 의경

[희망품목 적기보급과 품질향상을 통한 현장활력 제고]

- 근무 부서에 적합한 희망품목 보급과 적기보급 추진
 - 상·하반기 인사 발령에 맞춰 신청 기간을 연 2회 운영하고 적기 보급을 위한 MAS 구매(조달청 쇼핑몰을 통한 구매) 추진
 - 현장 소통을 통한 희망품목 품질 향상 추진
 - 현장에 적합한 장비 개발을 위해 현장평가단 구성·운영
 - 희망품목 보급상황 및 장비사용·관리법 등 정기적 공지
 - 현장의 요구를 다양하게 수렴하여 희망품목 지속 개선·개발
- ※ 수렴 창구: 장비포털 내 희망품목 연구소, 장비과에 바란다, 폴넷 현장활력소 등

< '21년 개선·개발 예정 희망품목 >

품목	LED 전자호루라기	방한장갑	방한화	신형 경기동화	기능성 하의
형태 (예시)					
특징	현장 안전확보	보온성 강화	원터치 스파이크	디자인·기능 개선	허리 E-Band 적용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1년 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계획 수립	'21. 2월	
	적정 물리력의 대체총기 개발시험평가	'21. 3월	
	안전장비 보급계획 수립	'21. 3월	
	'21년 1차 희망품목 신청기간 운영	'21. 3월	
2/4분기	경찰 무인비행장치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21. 4월	
	범인안전검거를 위한 대체장비 개발 연구수행	'21. 5월	
	경찰 무인비행장치 전문화 교육 추진	'21. 6월	
3/4분기	재활용 섬유 활용 "친환경 의류" 시범운영 및 홍보	'21. 7월	
	경찰 무인비행장치 구매 및 제안서 평가 계획 수립	'21. 8월	
	여름근무복 등 여름지급 품목 보급	'21. 9월	
4/4분기	'21년 2차 희망품목 신청기간 운영	'21. 10월	
	112순찰용 전기 순찰차 개발 및 시범운용	'21. 11월	
	외근조끼용 방검패드 등 안전장비 보급	'21. 11월	
	'21년 경찰 드론 운용 자료집 제작	'21. 11월	
	적정 물리력 대체총기 안전성 검사 종료	'21.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경찰장비(피복·장구·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찰관·전의경

□ 기대효과

- 과학기술을 활용한 치안 R&D 활성화를 통해 범죄 대응역량 강화라는 국정과제 및 친환경 정부시책에 부응하는 첨단장비 개발·운용, 국민들의 스마트 치안 서비스 제공
- 현장 경찰관에게 적합하고 유용한 다양한 신체보호장비 개발·보급으로 현장 경찰관 신체안전 확보를 통한 당당한 법집행 지원
-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품목 지속 개선·개발에 의한 품질 향상 및 적기보급으로 내부 만족도 향상서비스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성과계획서상 재정사업 관리과제명(I-1-일반재정②)				
① 경찰장비현대화(4231)	일반회계		2,708	2,634
■ 경찰기동력강화(311)			766	751
■ 차량관리(312)			1,138	1,064
■ 피복관리(313)			574	559
■ 장비관리유지(314)			230	26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경찰장비 현장 만족도 (50%)	76	82	83.6	87.8	경찰 장비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A/S 만족도 포함)을 측정하는 지표/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 "상"에 해당하는 추세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4.9%) 이상인 87.6점으로 선정	① 신규도입 장비 현장 의견 반영도 + ② 성능 향상 및 만족도 + ③ A/S 만족도 등 각 설문 항목 평균치 추출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	고객만족모니터센터 전 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장비 규격 개선 실적 (35%)	22	32	35	45	현장활동에 적합한 장비 개선·개발 지표로 목표치의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 "상"에 해당하는 추세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27%) 이상인 45건으로 선정	현장 활동에 적합한 장비 개선·개발 지표 경찰규격심의위원회에서 제정(신규도입)·개정(성능향상)된 규격 개선 건수 ※규격 소속기관만이 사용하는 주요 물품에 대해 정한 표준「장비 관리규칙」제37조)	경찰규격 심의위원회 결과 제·개정하여 반영된 수치를 정량 적용
친환경 차량 보급률 (15%)	신규			80%	하단 참조	(친환경 차량 수 / 노후로 인한 교체 업무 용 차량 수) x 100	친환경 차량 교체비율 수치 정량 적용

친환경
차량
보급률

<산출 근거>

- 정부의 '2050탄소중립' 정책과 도심지 미세먼지 경감 등 친환경 정책 활성화를 위해 '21년부터 공공부문 친환경차량 의무구매제*' 도입
 - * 대기환경보전법, 동법 시행령·규칙 등 법규와 관련, 국가기관의 업무용 차량 구매 시 80%이상 친환경 차량(수소 또는 전기차)로 구매 의무 부과
- 2021년 주요업무 중 친환경 차량 확대 보급계획에 따라 '21년도 노후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교체 추진
- 최근 2년간 경찰청 업무용 친환경·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현황 및 보급률

연도	구매 차량 수	친환경차(수소·전기)		하이브리드차	
		구매	보급률	구매	보급률
19년	153	2	1.3%	107	70%
20년	244	0	0%	182	74.5%

⇒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업무용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이 평균 0.65%로 거의 보급되지 못한 수준이었으나 법령에 의해 일정비율 이상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실정, 이에 따라, 매년 구매 차량 중 **80%를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지표로 설정

※ 2023년부터 친환경차량에서 하이브리드차량을 제외하는 환경부 계획에 따라 수소전기차로만 지표 산출

<측정 산식>

$$[\text{측정방법}] \text{ 보급률} = \frac{\text{친환경 차량 수}}{\text{노후로 인한 교체 업무용 차량 수}} \times 100$$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긴급자동차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보급률 목표 구간 설정>

달성도	초과달성 (110% ↑)	달성 (109~100%)	일부 미달성 (99~80%)	상당부분 미달성 (79% ↓)
목표치의 적극성				
높음(上)	88%	87.2 ~ 88%	87.12 ~ 64%	63.2%

< 관련 법령 >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조의2(저공해자동차의 종류) 1.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2. 제2종 저공해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3. 제3종 저공해자동차: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는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4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① 법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율 중 80퍼센트 이상을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 ▶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구매·임차 자동차의 제외 차종 등) ① 해당 연도에 구매·임차한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종류 및 적용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2025년 12월 31일
-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2. 31.>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9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고가의 국가자산인 헬기를 치안현장에 최대한 활용

▶ 헬기 1대 가격 : 국산 참수리헬기(KUH-1P) 기준 **240억원**

▶ 경찰헬기(19대) 유지 비용 : 정비비·유류비·보험료 등 年 **105억원**

- 최근 국내·외 사고 등 감안, 비행·정비 완벽한 안전관리 필요

▶ '18. 7. 17. 해병대 헬기 시험비행 중 추락사고 발생(사망 6명)

▶ '19. 10. 31. 소방청 헬기 독도 환자이송 중 사고 발생(사망 7명, 헬기침수)

▶ '20년 대만 軍 헬기추락(참모총장 등 사망 8명), 미국 농구선수 헬기사고(사망 5명)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치안현장 헬기지원 성과]

- 범인추적·교통관리·인명구조·실종자수색 등 헬기 활용한 공중 치안 전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질서 유지
- 대테러·작전, 재해·재난 상황 및 대규모 국가적 행사 경비 등 국가·사회안전 확보에도 만전
- 무선영상전송장비·응급의료장비·항공유조차 등 임무장비 구매 및 헬기 운용예산 확보, 헬기 운항·관리 기반 마련

[항공요원 안전관리 역량 강화]

- 조종사·정비사 대상 분야별 안전관리 전문교육 실시
 - － (조종사) 기종별 모의비행 훈련, 각종 돌발위기 상황 대처훈련
 - － (정비사) 정비품질 향상을 위한 정비 전문화 교육
- 항공요원 직무능력 향상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항공관련 자격증 유지 및 취득 노력

[예방정비 활동]

- 항공 정비요원들의 적극적인 정비 노력을 통해 항공기 고장 원인을 자체 발견, 대형 항공사고 사전 예방

⇒ 1993년 이후 이어온 경찰항공 무사고(27년간) 전통 계승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21년 경찰헬기 '항공 종합보험' 가입계획보고	'21. 1월	(협업, 추진계획 등)
	2021년 상반기 항공요원 인사관련 보직관리 위원회 개최	'21. 1월	(추진계획, 의견 등)
	'21년 헬기운용기관(4) '항공 종합보험' 가입 및 예산집행	'21. 2월	(협업, 추진계획 등)
	헬기 제조사, 외주정비업체 현장점검 및 간담회	'21. 2월	(추진계획, 협업)
	신규헬기 2대 중간검수 및 진행사항 현장점검	'21. 3월	(협업, 의견 등)
	'21년 항공경찰 '화상(언택트) 워크숍' 계획수립 및 개최	'21. 3월	(협업, 의견 등)
2/4분기	항공기 결함 사례집 책자발간, 시·도경찰청 항공대 배포	'21. 4월	(추진계획, 의견 등)
	항공영상 무선전송장비 수신안테나 추가 설치	'21. 4월	(정책, 협업, 노력도)
	P4G 정상회의 경찰헬기 지원계획수립	'21. 5월	(협업, 추진계획)
	국가기관 통합 항공안전 현장점검 계획수립	'21. 6월	(협업, 의견 등)
	대형재난대비 범부처 헬기 독도함훈련	'21. 6월	(정책, 추진계획)
3/4분기	상반기 경찰헬기 운용결과 분석 및 활성화 계획수립	'21. 7월	(추진계획 등)
	시·도경찰청 항공대 인사심의 위원회 개최 및 인사	'21. 7월	(추진계획 등)
	조종사, 정비사 항공안전교육 등 관련 추가 업무협의	'21. 8월	(협업, 노력도)
	추석 연휴 헬기지원 및 운용계획 수립	'21. 9월	(추진계획 등)
	전국 시·도경찰청 항공대 '항공안전 현장점검'	'21. 9월	(추진계획, 의견 등)
4/4분기	조종사 항공신체검사 계획에 의한 검사 완료	'21. 10월	(추진계획 등)
	시·도경찰청 항공대 자체 치안종합성과 평가	'21. 10월	(협업, 노력도)
	헬기응급의료장비(EMS-Kit), 무선전송 수신안테나 구매 및 설치	'21. 11월	(정책, 노력도 등)
	시·도경찰청 항공대간 유조차, 장비 교체	'21. 11월	(추진계획 등)
	'21년 경찰항공 교육훈련분석 및 '22년 교육 계획수립	'21. 12월	(의견, 정책 등)
	'21년 헬기 예방정비분석 및 개선대책 계획수립	'21. 12월	(정책, 노력도)
연중	헬기활용 대테러·작전 합동훈련	'21. 1~12월	(정책, 협업, 노력 등)
	KAI, 육군 항공학교 등과 협의 외부 모의비행 교육훈련	'21. 1~12월	
	월별 항공경찰 우수사례 취합 및 마일리지 심의	'21. 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 집단 : 헬기 운용기관, 외주업체(헬기제작, 정비업체)

□ 기대효과

- 국민 생명·신체 보호 및 국가·사회안전 확보에 기여
- 경찰항공 무사고 안전비행 전통 계승으로 경찰 신뢰도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헬기운용 및 현대화(IV-2-재정②)			
① 헬기운용 및 현대화(4232)	일반회계	321 (321)	363 (363)
■ 헬기운용 및 현대화(311)		321	36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치안현장 헬기지원 성과 (40%)	-	456	694	764	하단 참조	항공요원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 심의 결과(월1회)에 따른 항공대별 점수 합계	폴넷 게시판, 시·도경찰청 보고문서, 본청 심의결과 공문(매월)																											
	【 산출근거 】																																	
	□ 항공요원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40%)																																	
	○ 다양한 치안현장에 헬기를 활용한 실적 중 우수사례에 점수를 부여하는 지표로서 내부망 게시판(칭찬플랫폼) 또는 문서 보고로 확인 가능(매월 심의·집계, 항공대 평가자료로 활용)																																	
	< 점수부여 기준 >																																	
	<table><tr><th>항 목</th><th>내 용</th><th>평가점수</th></tr><tr><td>주요 범인검거</td><td>헬기수색으로 범인을 발견(추적), 지상경력과 공조하여 검거</td><td>5~10점</td></tr><tr><td>인명구조</td><td>헬기로 요구조자를 구조하거나 수색을 통해 발견한 경우</td><td>5~8점</td></tr><tr><td>실종자 발견</td><td>헬기 수색으로 실종자를 발견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td><td>3~5점</td></tr><tr><td>대테러·작전훈련</td><td>헬기 활용 대테러·작전 훈련</td><td>2~5점</td></tr><tr><td>주요상황관리</td><td>재난·재해 및 주요 경비상황 현장 출동, 상황관리에 기여</td><td>2~4점</td></tr><tr><td>교통관리</td><td>헬기를 이용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거나 주요 교통사범 단속</td><td>2~4점</td></tr><tr><td>단순이송</td><td>수사관, 피의자, 경미한 환자, 변사체 등을 이송한 경우</td><td>2~5점</td></tr><tr><td>기 타</td><td>- 항공전체 인명사고 없이 무사고 비행시 매월 1점 부여 - 조종, 예방정비 등 주요활동 사항, 방송·SNS 홍보 노력도 등</td><td>1~10점</td></tr></table>						항 목	내 용	평가점수	주요 범인검거	헬기수색으로 범인을 발견(추적), 지상경력과 공조하여 검거	5~10점	인명구조	헬기로 요구조자를 구조하거나 수색을 통해 발견한 경우	5~8점	실종자 발견	헬기 수색으로 실종자를 발견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	3~5점	대테러·작전훈련	헬기 활용 대테러·작전 훈련	2~5점	주요상황관리	재난·재해 및 주요 경비상황 현장 출동, 상황관리에 기여	2~4점	교통관리	헬기를 이용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거나 주요 교통사범 단속	2~4점	단순이송	수사관, 피의자, 경미한 환자, 변사체 등을 이송한 경우	2~5점	기 타	- 항공전체 인명사고 없이 무사고 비행시 매월 1점 부여 - 조종, 예방정비 등 주요활동 사항, 방송·SNS 홍보 노력도 등	1~10점	
	항 목	내 용	평가점수																															
	주요 범인검거	헬기수색으로 범인을 발견(추적), 지상경력과 공조하여 검거	5~10점																															
	인명구조	헬기로 요구조자를 구조하거나 수색을 통해 발견한 경우	5~8점																															
	실종자 발견	헬기 수색으로 실종자를 발견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경우	3~5점																															
대테러·작전훈련	헬기 활용 대테러·작전 훈련	2~5점																																
주요상황관리	재난·재해 및 주요 경비상황 현장 출동, 상황관리에 기여	2~4점																																
교통관리	헬기를 이용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거나 주요 교통사범 단속	2~4점																																
단순이송	수사관, 피의자, 경미한 환자, 변사체 등을 이송한 경우	2~5점																																
기 타	- 항공전체 인명사고 없이 무사고 비행시 매월 1점 부여 - 조종, 예방정비 등 주요활동 사항, 방송·SNS 홍보 노력도 등	1~10점																																
※ 평가점수는 범인검거, 인명구조 등 국민 생명·신체 보호와 관련된 항목에 고득점 부여, 대테러·작전 훈련 추가, 기타 활동은 중요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매월 1회 경찰청 항공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전 항공대에 결과 하달																																		
○ '20년도 실적(694점) 보다 10% 이상 높은 도전적 목표치(764점) 설정																																		
< 목표치 산출근거 >																																		
<table><tr><th>구분</th><th>'18년</th><th>'19년</th><th>'20년</th><th>'21년 목표</th></tr><tr><td>항공요원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점)</td><td>-</td><td>456</td><td>694</td><td>764</td></tr></table>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목표	항공요원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점)	-	456	694	764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목표																														
항공요원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점)	-	456	694	764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항공요원 안전관리 역량강화 (30%)	80	61	106	101	하단 참조	항공요원 전문기관 위탁교육훈련 인원 및 자격증 취득점수	본청 결과보고(공문)
	【 산출근거 】						
	□ 항공요원 전문기관 위탁교육훈련 인원 및 항공관련 자격증 취득 건수						
	○ 항공요원(조종사·정비사) 직무능력 향상과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교육실적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교육결과와 항공관련 자격증(수료증)** 취득 결과 등을 통해 확인 * 전문기관(항공관련) : 군·산림청 등 국가기관, 항공대학 및 헬기·엔진 제작사 등 민간전문기관 ** 항공관련 자격증(수료증) : 항공조종정비안전 등 관련 개인별 자격증 또는 수료증 취득(이수유지포함) ○ '21년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교육 여건에서도 최근 3년간 평균(82명, 58건) 대비 교육인원 23%, 항공관련 자격취득 20% 높은 도전적 목표치 설정						
	< 목표치 산출근거 >						
	구 분		'18년	'19년	'20년	평균	'21년 목표
	교육훈련 인원(명)		80	61	106	82	101
	자격(수료)증 취득 건수		44	84	46	58	70
예방정비 활동 (30%)	103	132	132	135 (신규)	하단 참조	헬기 고장요인 발견 건수	항공대, 정비대 정비 결과보고(공문)
	【 산출근거 】						
	□ 헬기 고장요인 발견 건수						
	○ 자체 정비능력 향상과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사들의 정비역량을 평가하는 신규 지표로서 고장요인 발견 건수*는 공문으로 확인 가능 * 외주정비(제작사·정비업체) 또는 감항검사에서 발견한 건수는 제외하고, 경찰 자체정비 중 헬기 고장요인(고장·결함)을 발견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한 건수만 포함(사례, 특별검사) ○ '20년은 최근 3년간 평균(122건) 대비 11% 높은 도전적 목표치(135건) 설정						
	< 목표치 산출근거 >						
	구 분		'18년	'19년	'20년	평균	'21년 목표
	고장요인 발견건수(건)		103	132	132	122	135

(1) 주요 내용

-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한 현장활력 제고> 일·가정 양립, 우수직원 격려, 내부소통 활성화 등으로 ‘출근하고 싶은 직장’ 조성
- <복지기반 확충>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구축하고, 조직원들이 자긍심·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 복지제도 마련
 - ※ △ 직장어린이집 등 가족친화 복지시설 확충사업 진행 △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체계로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 △ 퇴직경찰관 전직지원 및 인프라 확대
- <현장 재정지원 강화> 치안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집행 점검체계를 운영하여 재정사업의 관리·집행 효율화
- <국민 소통 강화>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맞춤형 홍보로 긍정적인 경찰 이미지 정립
 - ※ 전문가 협업 시스템 구축 △ ‘유튜브 정책방송’ 등 SNS상 홍보 활성화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팀 운영 △ 경찰 관련 미디어콘텐츠 제작 등

구 분		성과지표
성과목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복지 부문 직무만족도
관리과제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적극 지원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 유연근무제 활용 / 연가사용 실적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 / 직장어린이집 확충 예산 증가액 실적 / 퇴직(예정)경찰관 취업지원 성과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재정지원도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주요 치안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기반 마련	경찰청 SNS 활동지수 / 주요정책 언론 홍보 실적 / 오보·온라인 이슈 대응활동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복지 부문 직무만족도	76.1	77.8	77.3	78.0	복지 부문 직무만족도는 '19년 상승 이후 하락하였으며, 전 3년도 실적 평균값(77.1) 및 과거 추세선을 기준으로 예측한 값(78.3)을 고려, '21년 목표치는 평균값보다 높은 78.0으로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직무만족도 조사 결과(복지 부문)	경찰청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주관 직무만족도 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코로나19 장기화로 조직원들의 사회적 활동 반경이 장기간 제한됨으로써 직무만족도 및 활력이 근본적으로 저하될 우려
 - －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장려하고, 유연근무 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추진

▶ (국정과제 연계)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71번, 고용부)
 ▶ (연가사용 활성화) △계절휴가 △권장연가제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등
 ▶ (유연근무 권장) △집단 유연근무(월 2회) △점심시간 연계 이용 장려
- 경찰개혁 본격화에 따라 조직 비대화·수사권 남용 우려가 증가, 특히 부정이슈 발생 시 경찰개혁과 결부하여 비판하는 경향
 - ※ 「정인아·이용구·박원순까지 '부실', 안개 낀 경찰의 '책임수사」 題下(노컷, 1. 6.)
 - － 부정이슈 감지 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팀(홍보-감찰-해당 기능)'을 구성하여 신속·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적극적인 대응활동 전개

① 파급력이 큰 부정이슈에 대해 홍보 기능에서 안전 발제, 관련 기능 총력 대응



② 본청·시도경찰청 단위 감찰·해당 기능에서 현장 방문하여 팩트체크



③ 대응 수위 및 방법을 결정(사과·개선 등), 언론 및 SNS 통해 홍보



④ 이슈 발생부터 소멸까지 과정을 정리·공유하여 유사사건 발생 시 참고

(4) 참고자료

- 경찰청(www.police.go.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경제활동인구조사」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 추진배경

- 치안정책 수립·집행 쏠 과정에서 상향 의견반영이 가능한 업무·회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실무적으로 호응받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
- 또한, 기능 상호간 정책 소통·공유, 예산업무 교육 등 정책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경찰의 원활한 직무수행 도모
- 일·가정이 양립 가능한 조직문화 개선*,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 우수직원 격려 등 활력 제고를 통해 경찰의 대국민 치안역량 강화

*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과 연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조직원 상호간 치안정책 소통채널 마련, 화합의 조직문화 선도
 - － 경찰청 주요 일정관리*, 업무회의 준비**(자료취합·전국전파) 등 적극적 지원으로, 효과적인 치안정책 수립·집행이 가능한 환경 조성
 - * 대·내외 일정 총괄, 각 기능 계획 반영(수시)일정 전국 배포(매일 08:00)
 - ** 월·금(국·관, 쏞과장) 시행 일일회의 준비, 자료 전국 배포(회의 당일 08:00)
 - － 일일회의를 구성원 상호간 치안정책을 공유하는 소통공간으로 조성, 조직원들의 의사가 정책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
 - * △현장활력소(내부 게시판) 등 직원들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토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정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상향식 환류 시스템 구축
△의무안건을 제출하는 회의가 아닌, 2~3가지 현안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의견표출이 가능한 브레인스토밍 방식의 업무회의 기획(금요일회의)
 - － 기능간 중재·갈등완화 등 능률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총괄 지원

- 모두와 소통·화합하는 행사를 추진, 치안 현장의 활력을 제고
 - － 치안현장·노고부서 적시 방문, 칭찬플랫폼을 통한 우수직원 격려* 등 내부 사기를 진작시키는 행사를 추진, 일선 현장의 활력 제고
 - * 칭찬플랫폼, 베스트 경무인, 베스트 팀장 등 격려·포상제도 운영 중
 - － ‘경찰문화대전’, ‘휴가체험기 공모전’ 등 업무 외적으로 직원 상호간의 소통 창구도 마련하여, 즐겁게 일하는 분위기 형성
 - －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등 각종 경찰 행사*를 주관 및 지원, 경찰 조직 내부는 물론, 국민과도 소통·화합하는 문화 정착
 - * 시무식, 위촉식, 시상식, MOU 체결, 정부행사, 종교행사, 복지시설 방문 등
- 휴식 있는 삶과 일·가정의 균형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
 - － ‘휴식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를 조성, 年 연가사용 목표일수 설정하고, 연가사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
 - ※ △계절휴가 △권장연가제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등 적극 활용 / 명절·공휴일 전후로 연가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본청부터 솔선수범하며 관리자는 일정 일수를 의무 사용토록 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 조성
 - － 또한, 유연근무제도도 적극 권장, 육아 등 자녀돌봄과 자기개발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 ※ 경찰청 집단 유연근무제(월2회) 유지,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제 이용 장려, 부서장 이상은 월 1회 이상 반드시 유연근무제 활용토록 강제성 부여
- 경찰청 예산·사업을 뒷받침하는 신속하고 전문화된 회계업무 지원
 - － 경찰청 전 국·관별 주요 추진 사업에 맞춰 신속·공정한 계약 절차를 진행(통상 年 1,650건), 원활한 치안정책 추진을 지원
 - － 본청 사업담당, 관서별 회계담당 등 대상 △회계교육 △회계실무 제작 △현장컨설팅 등 추진, 전문화된 회계업무 지원기반 조성
 - ※ 본청 예산·사업담당자 대상 계약절차 교육 / 국가계약 및 회계 전문화 교육 과정 진행 / 사례 중심 회계실무 제작 / 상·하반기 현장컨설팅 실시 등

- 조직개편에 따른 신속한 사무공간 조정 및 방역조치 철저 이행
 - －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른 사무공간 최적화*, 사무실 조도, 공용시설물 방역** 등 다양한 청사환경 개선을 추진, 쾌적하고 편안한 업무여건 조성
 - * 국가수사본부장 집무실 및 관련 수사부서 사무공간을 복관 위주로 배치하여 업무·행정적 효율성 도모
 - ** 각 사무실과 회의실·식당 등 공용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방역으로 단 한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직장 내 집단감염 사례 발생치 않음
- 노조·직장협의회와 상호 협력을 통한 행복한 일터 조성
 - － 노사 합동워크숍 등 다양한 노·사협력 프로그램, 단체교섭을 추진,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통한 행복한 근로환경 정착
 - － 지난 '20.6.11. ‘공무원직장협의회법’ 개정으로 각 관서별 직장협의회가 설립, 적극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1년 경찰청 시무식	'21. 1월	
	노조·직장협의회 임원진 간담회	'21. 2월	
	노무담당자 화상회의 실시	'21. 2월	
	제11회 영예로운 제복상 시상식 개최	'21. 3월	
	노무담당자 워크숍 실시	'21. 3월	
	'21년 전국 회계담당 워크숍 실시	'21. 3월	
2/4분기	식목일 기념 행사 개최	'21. 4월	
	직장협의회 관련, 기관장·현장직원 대상 교육	'21. 4월	
	회계실무편람 발간·배포	'21. 4~5월	
	'21년 근무혁신 기본계획 수립	'21. 4~5월	
	직장협의회 정기회의	'21. 4~6월	
	경찰박물관 어린이날 기념 행사 개최	'21. 5월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노사 합동워크숍 실시	'21. 5월	
	상반기 전국 찾아가는 회계부서 현장컨설팅 실시	'21. 5~6월	

3/4분기	'21년 상반기 '베스트 경무인' 선발	'21. 7월	
	휴가체험기 공모전 개최	'21. 7~10월	
	경찰청 주무관노조 노사 합동워크숍 실시	'21. 7월	
	제22회 경찰문화대전 개최	'21. 9~10월	
4/4분기	제76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21. 10월	
	경무 행정지원업무 내부만족도 평가	'21. 10월	
	'21년 하반기 '베스트 경무인' 선발	'21. 11~12월	
	하반기 전국 찾아가는 회계부서 현장컨설팅 실시	'21. 11~12월	
	근무혁신 우수 관서 포상계획 수립	'21. 12월	
연중	주요 치안현장 방문	수시	
	경리 회계과정, 사·도경찰청 회계과정, 회계담당 조달청 위탁 교육 실시	수시	
	관서별 연가사용 현황, 유연근무실태 및 불필요한 대기 점검	분기별	
	경찰청 '숨은일꾼' 선발·포상	분기별	
	사랑나눔 운동(봉사활동, 헌혈, 바자회 등) 추진	연중	
	청사 시설점검, 방역 및 노후설비 보수 등 지원	연중	
	칭찬플랫폼 우수사례, 베스트팀장 선정	연중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보장 및 합리적 노사문화 조성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행정지원, 근무혁신(유연근무, 연가 등), 내부소통(조직원 간 갈등 치유, 스트레스 해소) 등은 전 기능 대상 추진과제로 경찰청 소 직원인 수혜자
- 또한,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경찰의 치안서비스 품질 향상은 국민들에게 영향, 최종적 수혜자는 치안서비스 당사자인 전 국민

□ 기대효과

- 행정지원이 뒷받침된 치안정책 추진은 치안성과 창출로 직결되고, 궁극적으로 경찰 전체의 치안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내부만족도, 업무효율성 증대는 치안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 만족·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50%)	82.8	82.4	83.0	85	하단 참조	10월 중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	경찰청 고객만족센터 의뢰, 내부망 메일 이용 설문조사

- **(지표 개요)** 경무담당관실의 행정지원업무에 대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 경찰청 소속 직원 중 10,000명을 임의 선정(경무기능 제외)하여 10월 중 내부망 메일로 설문조사 실시
- **(’21년 목표치)** ‘근무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성 판단 가이드라인에 따라 3년 실적 평균치인 82.7점을 상회하는 점수 85점을 도전적 목표로 설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유연근무제 활용 실적 (20%)	64.2	66.8	70.4	73.7	하단 참조	일반대상자 중 월 1회 이상 유연근무제 사용한 인원 비율	경찰청 e-사람 시스템상 산출

- **(지표 개요)** ‘생산적 근무여건 조성, 업무효율 향상 노력’에 대한 지표로, 인사처 평가지표 기준에 맞추어 경찰청 소속 일반대상자 중 월 1회 이상 유연근무 활용한 인원 비율로 평가
- **(’21년 목표치)** ’18년 근무혁신 추진으로 유연근무 사용 인원이 급증한 후 제도 정착 등 최근 3년간 안정화 및 임계치 도달되었다고 판단되나,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그간의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도전적으로 목표치(4.7%) 설정

* (’19년) 전년대비 3.9% 상승, (’20년) 전년대비 5.1% 상승 → (’21년 추세치) 4.7%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연가사용 실적 (30%)	경정·5급 이상<15%>	47.8	47.3	44.9	48	하단 참조	1인당 평균 연가사용 비율 (1~10월)	경찰청 e-사람 시스템상 산출
	경감·6급 이하<15%>	47.3	48.8	52.9	55.8			

- **(지표 개요)** 적극적인 연가사용을 통하여 직원들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객관적 지표로, 1인당 평균 연가사용 비율(연가사용일수/연가부여일수)을 평가
- **(’21년 목표치)**

- <경정·5급 이상> 관리자 직급인 경정, 5급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 19 사정으로 연가사용이 쉽지 않아 다소 목표치에 미달하였으나, 관리자의 연가사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전적으로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실적을 넘어서는 48%를 목표로 설정(’20년 실적 기준 6.5% 상승)
- <경감·6급 이하> ’18년 근무혁신 추진으로 연가사용 비율이 급증한 후 임계치 도달했다고 판단되나, 지속적인 연가활성화를 위해 3년간 실적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도전적으로 55.8% 목표 설정(’20년 대비 5.5% 증가)

* (’19년) 전년대비 2.9% 상승, (’20년) 전년대비 7.8% 상승 → (’21년 추세치) 5.4%

51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 추진배경

- 경찰관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치안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폭넓은 복지제도 기반 확충 추진
 -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제2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2019~2023)’
-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한 보수·수당 개선과 퇴직(예정) 경찰관 지원 확대, 각종 복지시설 확충 등을 통해 현장 활력 제고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건강관리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에 헌신한 순직·공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신체적·정신적 맞춤형 건강증진체계로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

- 현장경찰관 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 － 현장 경찰관들에게 충분한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마음동행센터 상담인력 증원 추진
 - ※ ('21년) 총 21명, 개소당 1~2명 → ('22년 이후) 총 54명, 개소당 3명
- 신체·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고도화
 - － ‘특수’ 검진에 걸맞도록 직무특성을 고려한 유해인자별 검진 항목 도입 등 특수건강검진 고도화 추진
 - ※ 1인당 검진비: ('21년) 81,493원 → ('22년) 217,793원
 - －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분석*을 지속 진행하고, 주요 스트레스 요인·증상의 예방·치유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개발 추진
 - *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 이용자의 기능별·지역별·성별·스트레스 요인 및 증상 / 사망전 스트레스·위험신호 등 자살원인 관련 자료

- 기존 생명지킴이 동료강사 142명에 더해 신규 동료강사 134명 추가 양성, 생명지킴이 인력풀 구성·운영
 - ※ 연 1회 보수교육 수료 및 연2회 이상 생명지킴이교육 진행을 통해 강사자격 유지
- 복지정책 추진체계 확립 및 관계망 확충
 - 개정 경찰복지법에 따른 건강정책 추진기반 마련
 - ※ △「경찰복지법」상 심신건강연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건강진단 의무화 (3월 본회의 통과) △경찰공무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실시
 - 복지정책심의위원회 자문회의 활성화를 통해 의견수렴 강화
 - ※ 복지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정책에 반영

[시설·여가 복지 확대하여 경찰 가족의 행복 증진]

- 직장어린이집·연수시설 등 가족친화 복지시설 확충사업 진행
 - 직장어린이집 확충 3·4차 사업 병행 및 5차 사업 예산 확보 추진

< 어린이집 확충 계획 > ('20) 49개소(2차 22개소) ⇨ ('21) 69개소(3차 20개소)
⇨ ('22) 85개소(4차 16개소) ⇨ ('24) 102개소(5차 17개소)

 - 강릉·신안수련원 증·신축 사업 진행 및 노후수련원 시설 개선
- 비연고지 인사발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관사 확충
 -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 도입에 따라 직제신설된 직위에 대해 신규 임차관사(49세대) 예산 확보 추진
 - 신축 30년 이상 된 국유관사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신축 20년 내에 있는 국유관사는 리모델링 진행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강화
 - 국내 주요 온라인 교육업체와의 제휴 협약방안 검토, 순직자 및 장기공상 퇴직자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부담 완화
 - 경찰관 자녀에게 지원 자격 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대학 현황 파악, '2022학년도 경찰자녀 대학 특별전형 안내' 제작·배포

○ 정책 소통·환류체계 운영

- 개편된 ‘POL복지’ 게시판을 활용, 주요 복지제도·혜택을 상시 안내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제언도 지속 수렴

게시판명	내 용
복지알림	복지분야별(건강·보훈·퇴직 등), 생애주기별(임산·육아·교육·퇴직 등) 복지제도 등 안내
복지혜택	제휴할인, 경찰공제회 공지 등 안내
복지제언	복지정책 관련 현장 의견 게재(신규아이템 건의, 제도 개선사항 등)

[순직·공상경찰관 예우 및 지원체계 강화]

○ 순직·공상자 예우 및 지원체계 강화

- 공상경찰관들이 휴직기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연장 추진(최대 3→5년, 「국가공무원법」 개정 / 인사처 협조)
- 전사·순직 통합전산시스템상 전사·순직대장 등 한글화 작업 실시

[퇴직경찰관 전직 지원 및 인프라 확충]

○ 퇴직(예정) 경찰관 전직지원 여건 개선

- ‘경찰관 전직지원시스템(가칭)’ 도입, 경찰전직지원센터 인력 확충, 전직지원교육 확대 등을 위한 예산 확보 지속 추진
 - ※ 지원시스템 도입 및 발전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병행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 원격·비대면 전직지원 운영 확대
 - ※ 온라인 상담 전국 확대, 온라인 유관기관 기업 간담회 실시 등

[경찰 업무특성을 반영한 보수·수당 현실화]

- 역할과 책임에 상응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공안직 수준 기본급 조정’을 위한 공감대 조성 및 관계기관 협의 진행
- 112출동수당 확대 등 노고부서 사기진작을 위한 ’22년 경찰청 수당조정요구안 마련, 「공무원 수당규정」 개정 추진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순직·공상퇴직 자녀 입학·졸업 격려	'21. 1월	
	'21년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계획 수립	'21. 3월	
	'20년도 경찰병원 고유사업 자체평가 계획 수립	'21. 1월	
	'21년 순직·중한공상·국가유공자 불승인자 소송비 지원계획 수립	'21. 3월	
	'21년 공상자 특수요양비 지원계획 수립	'21. 3월	
	'21년 생명지킴이강사 양성 및 기존 강사교육 실시 계획 수립·하달	'21. 2월	
	'21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 수립·하달	'21. 3월	
	'21년 임차관사 예산 배정계획 수립	'21. 2월	
	'21년 경찰청 중요직무급 운영 계획 수립	'21. 3월	
	제2차 경찰복지기본계획 '20년 시행계획 수립	'21. 3월	
	'21년 경찰전직지원교육 운영 용역업체 선정	'21. 3월	
	'21년 전직지원계획 수립·하달	'21. 3월	
	'21년 복지카드기금 사용계획 수립·시행	'21. 3월	
	'21년 동호회 활동 지원계획 수립·시행	'21. 3월	
	'21년 야간근무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등 시행계획 수립	'21. 3월	
	어린이집 BTL사업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21. 3월	
	전국 공상경찰관 대상 집중치유프로그램 및 템플스테이 실시 계획	'21. 3월	
2/4분기	국고보조금 집행 관련 담당자 온라인 교육 실시	'21. 5월	
	'21년 복지시설 보수예산 배정계획 수립	'21. 4월	
	5차 어린이집 BTL사업 한도액 요구서 기재부 제출	'21. 5월	
	4차 어린이집 BTL사업 실시협약 체결	'21. 6월	
	'21년 경찰청 수당조정요구안 마련·제출	'21. 5월	
	전국 경찰수련원 성수기 대비 점검계획	'21. 6월	
	호국보훈의 달 전사 경찰관 추모행사 개최	'21. 6월	
	'21년 순직경찰관 영결식 용역사업자 선정	'21. 6월	
3/4분기	'22년 마음동행센터 인력증원 및 생명지킴이 교육(신규) 관련 예산 증액 추진	'21. 7월	
4/4분기	경찰 추모주간 순직경찰관 유가족 위로 행사 개최	'21. 10월	
	직장보육시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21. 10월	
	어린이집 표준설계 지침 수립 완료	'21. 11월	
	퇴직예정경찰관 가이드북 제작	'21. 11월	
	3차 어린이집 BTL사업 준공	'21. 12월	
	'21년 경찰전직지원사업 평가 보고회 개최	'21. 12월	
	'22년 경찰전직지원 컨설팅 운영업체 선정	'21. 12월	
	'21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결과 분석 및 추가 개선사항 검토	'21. 12월	
연중	사이버경찰청 순직경찰추모관 內 행사갤러리 업데이트, 순직자 추가등록	연중	
	위험직무공상자 특별위로금, 공상자 특수요양비, 순직공상 불승인 소송비 지원	연중	
	전직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소식지 제작·게재	연중	
	경찰관 전직지원 교육 운영	연중	
	야간근무자 대상 특수건강검진 시행	연중	
	현장근무자 대상 예방접종(DPT 등) 시행	연중	
	초직원 대상 자살예방 교육 실시	연중	
	전국 공상경찰관 대상 집중치유프로그램 및 템플스테이 실시	연중	
	전국 경찰복지시설 점검 계획 수립·시행	연중	
	강릉수련원 증축 및 신안수련원 신축 설계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직접적인 복지 혜택을 받는 재직·퇴직경찰관을 포함한 경찰 조직원과 그 가족이 대상이며,
 - － 경찰복지로 인한 자긍심·사명감 제고가 경찰관의 적극적·헌신적인 업무수행으로 이어져 국민도 간접적인 수혜대상임
- 이해관계집단 :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 등 정책추진과 관련된 정부 부처, 경찰병원·경찰공제회·마음건강센터 등 관계 기관·단체

□ 기대효과

- 현장 치안 활동을 위한 복지기반 마련을 통해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찰관의 삶의 질 향상 및 자긍심 함양
 - － 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 및 자긍심 제고를 통해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이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 구축, 이를 통해 ‘가장 안전한 나라,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을 위한 기반 마련
- 경찰관의 직무특성에 맞게 심리·신체적 건강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고, 국가에 헌신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순직·공상자를 예우하여 사명감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경찰복지증진(V-4-일반재정④)				
① 경찰복지증진(7135)			552.35	664.04
■ 경찰복지증진(311)		일반회계	474.1	545.91
■ 퇴직경찰관 취업지원(312)			19.85	19.85
■ 경찰관서 직장보육시설 운영 (민자)(751)			58.40	98.2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 현장경찰관 마음건강관리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 (30%)	2,895	6,183	8,961	9,588	'20년 실적(8,961)*107%	마음동행센터 상담제공 인원수	상담 위탁업체 비용정산 근거자료

- **(지표개요)** 마음건강관리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나, 경찰의 불규칙적인 근무여건 및 경직된 조직문화로 자발적 참여가 쉽지 않은 만큼 정신적 공상 예방을 위해 조직적 차원의 적극적인 ‘긴급심리지원·지정상담’ 필요
 - △ 긴급심리지원 : 충격사건 담당 경찰관 대상 사건 직후 한 달 간 최대 4회 상담
 - △ 지정상담(정신건강검진) : 형사 등 스트레스 고위험부서 대상 1:1 검사·면담
- **(’21년 목표치)** ’19년도 하반기 마음동행센터 9개소 신설(9→18개소) 및 상담사 9명 증원 등 ’20년부터는 전국 18개 마음동행센터를 운영 중으로 당분간 추가적인 마음동행센터 개설 계획은 없어 기존과 같은 이용자 수의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
 - 특히,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전망으로 기록치 않은 여건임에도 목표치를 전년 대비 7% 상향하여 도전적으로 설정
 - △24시간 콜센터 운영·홍보 강화로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자발적 상담 적극 유도 △충격사건 반복 노출 등 고위험군인 지역경찰 팀장 대상 지정상담 의무실시 △마음동행센터 홍보 포스터·리플릿, 영상 제작·배포 등 적극 홍보로 이용실적 제고

< 직장어린이집 확충 예산 확보 (신규지표)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직장어린이집 확충 예산 증가액 실적 (40%)		13,830	12,353	14,106	가장 높은 실적(13,830)*102%	직장어린이집 확충사업 22년도 예산 - 21년도 예산	연도별 예산 자료

- **(지표개요)**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을 구축하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직장어린이집 확충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21년 목표치) 가장 높은 실적인 '19년도 증가액 13,830백만 원보다 2% 상향한 14,106백만원 증액으로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

※ 연도별 예산 및 증가액

(단위:백만원)

구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목표치
예산	17,827	31,657	44,010	58,116
증가액	-	13,830	12,353	14,106

< 퇴직경찰관 취업 지원 >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퇴직(예정)경찰관 취업지원 성과 (30%)	65.0	68.3	70.3	71.3	하단 참조	해당연도 취업인원 / 전직지원센터 컨설팅 인원	전직지원센터 제출 자료

- (지표개요) 국정과제인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와 관련한 지표로서, 전·현직 경찰관에 대한 취업지원정책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 ('21년 목표치) '21년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 대비 1% 상승한 71.3%로 설정
 - '20년 상승폭(2.0%)과 비교 시 낮은 수치로 판단할 수 있으나 취업제한기관이 '17년 이후 '20년에 5.9% 증가(975개)하는 등 퇴직경찰관의 재취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임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찰전직지원센터의 본격 운영이 지연되고 기업 운영도 위축되는 등 취업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취업 인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21년의 목표치를 '20년 실적치보다 1% 상향하여 71.3% 도전적으로 설정
 - * 신종코로나로 채용계획 변경 등 취업시장도 영향(중소기업신문, '20.2.13.)
 - ※ 현 목표치 71.3%는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률이 감소*하는데 반해 증가하는 수치임은 물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 67.1%(한국교육개발원, '19.12.31. 기준)을 감안하면 이미 임계치에 도달한 수치로서 달성을 보장할 수 없는 매우 도전적인 수치임
 - * 20.1월 기준 43.4% → 21.1월 기준 40.9% (2.5% 감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취업 인원은 질 높은 일자리로의 연계를 반영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한 수치로 산정(시·일급 일자리·사회공헌형 일자리0.5명, 감시·단속직 0.7명)

구분	'18년	'19년	'20년
취업성과	1,170명	1,209명	1,230명
컨설팅 인원	1,800명	1,770명	1,750명
취업률	65.0%	68.3%	70.3%

□ 추진배경

-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변화된 조직 위상 강화에 걸맞는 예산 확보를 통해 치안인프라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 재정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적기 집행으로 치안 시책의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요인 해소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현장에서의 원활한 정책수행을 뒷받침하고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 치안역량 강화 기반 조성
 - － 치안 여건변화를 반영한 계속·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내·외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전략적 예산확보 추진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수·고용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 집행 추진
 - － 예산집행점검 체계 구성·운영, 중점관리대상사업 관리 및 집행 효율화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낭비요인 최소화
- 경찰개혁과제 완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 근무환경 개선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하여 대내외 만족도 향상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연중	'21년도 조기집행 관련 예산집행심의회(차장 주재)	매월	
1/4분기	'21 ~ '25년도 중기사업계획 작성·제출(기재부)	'21. 1월	
	'21년도 재정사업 조기집행 계획 수립	'21. 1월	
	국유재산 결산('20회계연도, 관리운용보고서)	'21. 1~2월	
	시설사업 현장점검 및 예산 재배정 검토	'21. 1~3월	

2/4분기	'21 ~ '25년도 중기사업계획 심의(기금 포함, 기재부)	'21. 2~4월	
	예산(기금 포함) 편성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21. 2~5월	
	'21년도 1분기 집행결과 분석 및 평가 계획 수립	'21. 4월	
	'21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수립 및 하달	'21. 4~5월	
	'22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편성 협의·조정	'21. 4~5월	
	'22년도 우리청 예산안 편성(설명회·심의회)	'21. 4~5월	
	'22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제출(기재부)	'21. 5~6월	
3/4분기	'21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안(정부안) 협의·심의	'21. 6~8월	
	'22년도 예산안(정부안) 협의·조정(기재부)	'21. 6~8월	
	'21년도 재정사업 조기집행 평가	'21. 7월	
4/4분기	예산국회 심사 대응(기금 포함, 행안위·예결위·기재위)	'21. 9~12월	
	예산(기금포함) 이월·불용 실태 점검	'21. 10~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및 경찰청 소속 초 직원
- 이해관계집단 : 기획재정부·국회 등 외부 기관

□ 기대효과

- 선진 치안인프라 구축 및 현장치안역량 강화로 치안강국으로 도약
- 환경변화와 내·외부 고객 요구에 부응한 「예산편성-확보-집행-평가-환류」 시스템 구축, 재정성과 평가체계 확립 등 책임성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8	'19	'20	'21																					
재정지원도(공통)	61.40	79.54	67.21	69.48	각 지표별 평균보다 높은 목표 설정 예산확보액 지표를 정부 증가율 대비 경찰청 예산 증가율로 반영하여 정부 기조에 따른 변동성 감소	① 예산확보수준×50% + ② 예산집행률×30% + ③ 국유재산 증가율×2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dBrain) 관련 공문 등																		
예산확보수준 (50%)	41.9	81.7	51.42	58.5	최근 일자리 및 복지 지출소요 확대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 상황이 지속되고 의경감축에 따른 관련사업이 축소되는 등의 재정 여건으로 사실상 증액은 어려움 사업비·기본경비 등 재정담당관실의 예산확보 노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경찰청 증가율/정부 증가율(정부안 총지출 기준)' 최근 3년 평균(58.34)보다 높은 목표 설정 <table><tr><td>총지출 증가율</td><td>'18</td><td>'19</td><td>'20</td><td>'21 (목표)</td></tr><tr><td>정부</td><td>10.5</td><td>7.1</td><td>5.6</td><td rowspan="3">58.5</td></tr><tr><td>경찰청</td><td>4.4</td><td>5.8</td><td>2.9</td></tr><tr><td>확보수준</td><td>41.90</td><td>81.69</td><td>51.42</td></tr></table>	총지출 증가율		'18	'19	'20	'21 (목표)	정부	10.5	7.1	5.6	58.5	경찰청	4.4	5.8	2.9	확보수준	41.90	81.69	51.42	(경찰청 증가율 /정부 증가율) *정부안 총지출 기준
총지출 증가율	'18	'19	'20	'21 (목표)																					
정부	10.5	7.1	5.6	58.5																					
경찰청	4.4	5.8	2.9																						
확보수준	41.90	81.69	51.42																						
예산집행률 (30%)	79.3	78.9	85.0	80.1	집행률 지표는 당해연도 편성된 사업비 성격 및 외부 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지표로 최근 3년 실 적은 등락이 반복되고 있음 다만 '20년 실적치는 2천억 감액 추경으로 예산현액이 줄어들어 집행률이 급격히 상승함. 감액 추경이 없을 경우 집행률은 76%로 '21년은 증가세 반영이 아닌 감액 추경을 배제한 실질적 3년 평균 (78.06%)보다 높은 80.1%로 역대 최고 수준의 도전적 목표 설정	(10월말 집행액 /연간집행계획) ×100 * 사업비 기준 (조기집행)																			
국유재산증가율 (20%)	28.82	24.82	37.63	51.15	컨설팅의견을 반영, 국유재산 전체를 반영할 수 있는 '국유재산 증가율로 지표 변경하여 대표성 강화 국유재산증가율 3년 평균 실적 (30.42%) 및 연평균 증가율 (15.5%)보다 높은 51.15%로 역대 최고 수준의 도전적 목표 설정	(해당연도 국유재산 결산액/ 전년도 국유재산 결산액) x10																			

53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주요 치안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기반 마련**

□ 추진배경

- 국가수사본부 출범(1월) 및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7월) 등 경찰개혁 본격화에 따라 경찰 비대화·수사권 남용 등 우려 목소리도 증가
- 주요 추진 정책 및 부정 이슈 관련 신속·정확한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 우려 불식 및 신뢰도 향상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문가 자문단 등 협업 시스템 구축 ➡ 홍보 역량 전문화
 - － ‘교수·유명 크리에이터·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 홍보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최신 트렌드 및 홍보노하우 전수

 - ▶ **(구성)** △ 홍보 관련학과 교수 △ 인플루언서·유튜버 △ 미디어 제작진(PD·작가) △ 광고·영상제작업체 임원 등 분야별 전문가 풀(Pool) 구성(5-7명)
 - ▶ **(운용)** ‘정기적 간담회 개최(반기)’, ‘수시 자문 및 의견공유’ 등 소통 채널 구축
 - ▶ **(활용)** 콘텐츠 제작·운용 관련 자문 이외, 홍보물 공동 기획·제작, 출연 등 참여형 콘텐츠 협업 제작 및 홍보 콘텐츠 채널 공유
 - － 경찰청 정책기자단(일반국민)의 SNS 콘텐츠 제작 및 블로그 기사 작성 등 참여 확대를 통해 국민들의 치안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 ※ 선발 인원 확대(30명→40명), 영상 크리에이터 선발(15명) 등 양적·질적 성장 도모
- 정책홍보 전용 유튜브 채널 신설 및 콘텐츠 공유 체계 활성화
 - － **(정책 방송)** 정책홍보 전용 경찰청 뉴스 채널을 신설, 정책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함으로써 정책홍보 영상의 실효성을 최대화
 - ※ 채널명은 「경찰청정책방송」, 부제는 「Police Policy」로 선정 / 채널 내에서 정책을 설명해 주는 대표 캐릭터 ‘폴리(Poly)씨’ 개발

- (폴-톡) SNS 채널별 주요 정책과제 중 △공감대 확산 필요성
△온라인 관심이 높은 콘텐츠 등을 카톡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
※ 전국 ‘경무관 이상 지휘부’ 및 ‘경찰 협력 기관·고객’ 대상 전파

○ 치안 정책 공감대 향상을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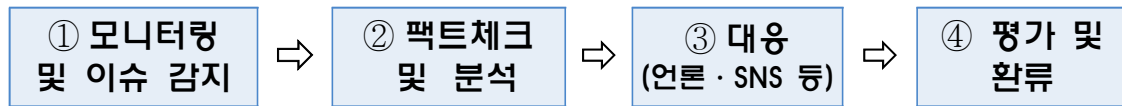
- (라이브 방송) ‘SNS 라이브 방송’ 실시간 댓글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아나운서 출신 등 일반인 진행자 및 게스트를 섭외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타겟팅 홍보 실시
- (타깃맞춤형) 경찰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집단(경찰시험 준비생 등)을 타깃으로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 구독자 유입 등 매체 파워 강화
※ 경시생과 함께 하는 중앙경찰학교 탐방 브이로그, 채용 담당자가 알려주는 꿀팁 및 변화되는 시험 제도 등 경시생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시리즈로 제작
- (콜라보) 타부처·지자체, 민간기관, 유명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등과 협업, 콘텐츠 개발 및 채널 공유하여 SNS 전파력 증대
※ <例> 1. 국토부와 협업, 키포드 등 이륜차 안전 영상 제작, 채널 동시 업로드(’20.5월)
2. 유명 아이돌 ‘나윤’(모모랜드)과 협업하여 웹드라마 <더폴리스> 제작(’20.9.월)
- (참여형)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정기적 소통 창구를 개설하여 ‘정책기자단’, ‘경찰 관련학과 대학생’, ‘경찰준비생’ 등과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국민 관심사항 청취 및 의견 수렴
- (月 테마 선정) 주요 정책 추진일정 및 사회 이슈에 따라 정책 홍보 과제 선정, 적시성 있는 홍보를 통해 치안정책 체감도 향상

< 월별 중점 정책홍보 테마(案) >

구분	1월	2~3월	4월	5~6월	7~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홍보 테마	아동학대 근절	사기범죄 근절	교통사고 사망 감소	젠더폭력 근절	자치경찰 시행	학교폭력 근절	경찰의 날	가정폭력 근절	연말연시 특별치안 대책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팀 운영, 부정 보도 확산 차단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경찰 관련 보도는 즉시 해당 기능에 전파하고 부정 이슈 감지 시 ‘홍보·감찰·해당 기능’으로 대응팀 구성, 신속·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적극적인 대응 활동 전개



- ① ‘단독보도’ 등 부정이슈 확산 및 파급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홍보 기능*에서 안건 발제, 관련 기능 간 총력 대응

※ 부정·비난이슈라 하더라도 단순 일회성 기사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목 및 내용 수정’ 등 기존처럼 홍보 - 해당기능 협조 대응

* 보도 전 또는 보도예상 사안도 필요시 감찰 및 해당 기능에서 안건 발제

- ② 중요 비난 이슈 발생시 본청·시도경찰청 단위 감찰 및 해당 기능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 확인

※ 정확한 팩트체크가 선행되어야 비난 장기화 및 제2·제3 이슈 확산 방지

- ③ 팩트체크를 기반으로 ‘대응·사과·개선책 마련’ 등 대응 수위와 방법을 결정, 홍보 기능에서 언론 및 SNS* 채널을 통해 홍보

* ‘사실은 이렇습니다’ 카드뉴스·영상 등 제작, 홈페이지 및 SNS 통해 확산

- ④ 이슈 발생부터 대응과정 및 소멸까지 이슈관리 과정을 정리·공유함으로써 유사사건 발생 시 참고자료로 활용

○ 경찰 관련 미디어 콘텐츠(영화 등) 제작 활성화를 통해 이미지 제고

- 서울영상위원회 등 방송 관계자 대상 경찰관서 견학 및 상호 현장 강연 활성화 등을 통해 관련 콘텐츠의 질적 성장 도모
- 외신 대상 K-방역, 치안한류 등 한국 경찰의 전문성을 알릴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 및 기획보도 추진

⇒ 영화·드라마 등 미디어 매체를 통해 주요 현안 및 활동상을 자연스럽게 노출·부각, 경찰에 대한 이해 및 이미지 제고

< '21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정책홍보 유튜브 전용채널 신설	'21. 2월	
	전국 홍보담당관 화상회의	'21. 2월	
	연간 정책홍보 추진 계획 수립	'21. 3월	
	정책 기자단 선발	'21. 3월	
	디지털 홍보 전문가 자문단 구성	'21. 3월	
2/4분기	방송·영화 제작진 경찰교육기관 교류 강연	'21. 4월	
	정책인지도 조사	'21. 5월	
	경찰 홍보활동 인식도 조사	'21. 6월	
3/4분기	경찰의 날 영상 제작 계획 수립	'21. 7월	
	미디어트레이닝	'21. 8월	
4/4분기	경찰의 날 영상 제작·배포	'21. 10월	
	정책인지도 조사	'21. 10월	
	경찰 홍보활동 인식도 조사	'21. 11월	
	방송·영화 제작진 간담회	'21. 12월	
연 중	경찰청 SNS 라이브 방송(Polive) 실시	격주1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 언론사, 정부부처 홍보부서, 경찰청 정책부서

□ 기대효과

-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쌍방향(interactive) 홍보를 통해 치안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및 정책 추진 기반 확보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맞춤형 홍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 정립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20	'21
대국민 치안정책 제공(IV-4-일반재정④)			
① 대국민치안정책제공(7134)	일반회계	15	15
■ 대국민소통강화(311)		13	13
■ 경찰청홈페이지운영(511)		2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21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20	'21			
경찰청 SNS 활동지수 (35%)	1,708,794	1,760,057	5채널 친구 수	하단참조	각 계정 통계 활용
	238,118,969	250,024,917	5채널 도달 수		
	1,367	1,294	5채널 콘텐츠 수		
	819,134	860,090	블로그 기사 조회 수		
	-	15건	경찰 내부 직원 활용 유튜브 조회 10만 이상 콘텐츠 수		
주요 치안정책 언론홍보 노력도 (30%)	1,100건	1,260건	문체부 정부업무평가 '차관급 기관' 기준은 월 50건 이상이 만점이지만, 전년 대비 약 15%(월 105건)를 상향한 목표치 설정	하단참조	언론보도 실적 취합
오보 및 온라인 이슈 대응 활동 (35%)	238건	233건	최근 3년 실적 평균치 대비 10% 상향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	하단참조	오보 및 온라인 이슈 대응 실적 취합
【성과지표】 ○ 측정산식 : 1) 경찰청 SNS 5채널 친구 수(10%) 2) 경찰청 SNS 5채널 도달 수(10%) 3) 경찰청 SNS 5채널 콘텐츠 수(10%) 4) 블로그 기사 조회 수(2%) 5) 경찰내부 직원 활용 콘텐츠 건수(3%) ○ 측정방법 - 측정대상기간 : '21. 1. 1. ~ '21. 12. 31. - 측정수행기관 : 5채널 통계(페이스북, 유튜브<공식+정책>, 카카오톡스토리, 밴드) - 측정대상 표본수 및 선정방법 : 각 계정 친구수, 도달수, 콘텐츠수, 기사조회수 확인					

○ 목표치 설정근거

- 1) 전년도 실적, 목표치(1,760,057명) = 1,708,794('20년 실적) x 1.03
- 2) 전년도 실적, 목표치(250,024,917명) = 238,118,969('20년 실적) x 1.05
- 3) 전년도 실적, 목표치(1,294건) = {1,242('18년)+1,274('19년)+1,367('20년)} / 3
- 4) 전년도 실적, 목표치(860,090건) = 819,134('20년 실적) x 1.05
- 5) 전년도 실적, 목표치(15건) = 14건('20년 실적) x 1.07

○ 지표설정 필요성

- 경찰청 SNS 홍보 활성화 정도를 양적·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친구 수, 도달 수, 콘텐츠 수를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인기 채널인 유튜브(공식+정책), 페이스북, 다수의 친구를 보유한 카카오토티와 밴드를 목표채널로 선정
※ 금년도 신설된 유튜브 정책 채널의 확산을 위해 측정 지표로 추가
- 다만 각 지표 증가폭이 이미 임계치에 도달하고,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향상을 중시하는 문체부 기조에 따라 질적 지표(도달수, 기사조회수)는 5% 증가, 양적 지표인 친구수는 전년 기준 3% 증가, 콘텐츠수는 3년치 실적 평균을 목표
※ 콘텐츠 수는 매달 100개 이상을 게시해야 하므로 이미 양적 포화 상태임을 고려
- 이 밖에 경찰 내부 직원*(영상 크리에이터, PD, 아나운서 출신 등)을 활용한 홍보콘텐츠 제작건수 및 조회수*를 지표에 반영하여 홍보예산 절감 효과 등 창출
* 유튜브 조회수 10만 이상 콘텐츠 연간 15건 이상(실제상황 영상 포함)

② 주요 치안정책 언론홍보 실적(30%)

- ☞ 올해도 코로나19 관련 이슈가 이어지며, 경찰 관련 보도는 지속적으로 소강 상태 예상, 백신 접종 등 쏠 국민적인 관심 사안을 전·후로 백신 관련 경찰 수송전담 TF 및 가짜뉴스 근절 활동 등 경찰 활약상을 경찰청 쏠 국·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하여 주요 치안정책 언론홍보 노력도 제고

○ 점수 산출

- 연간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관련 보도건수 평가(본청 출입 35개 언론사)
※ <국정과제> 민생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정책> 아동학대 범죄 대응 강화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예방 등 정책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1. 1. 1. ~ '21. 12. 31.
- 매월 대변인실 홍보협력계 업무 담당자 취합·평가

○ 지표설정 필요성

- 언론은 국민들이 정책·뉴스를 접하는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경찰청 주요 정책을 신속·정확하게 알려,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
- 특히 경찰청은 차관급 기관임에도 장관급 기관의 월별 만점 기준치(월 80건 이상)를 훨씬 상회하는 목표를 설정(월 105건)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언론홍보 추진

③ 오보 및 온라인 이슈 대응 활동(35%)

- 점수 산출 : 연간 오보 및 온라인 이슈 대응 건수를 평가
- 측정방법
 - 측정기간 : '21. 1. 1. ~ '21. 12. 31.
 - 매월 대변인실 업무 담당자 취합.평가
- 지표설정 필요성
 - 오보 및 온라인 이슈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전달, 허위·왜곡된 정보의 확산 차단
- 목표치 설정근거
 - 최근 3년 실적(175-224-238건) 평균치 대비 10% 상향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233건)
 - ※ 단, 오보 및 온라인 이슈 발생 후 24시간 이내 대응·조치된 건에 한해 인정

IV.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1) 기본 방침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거, 주기적 과제 점검 및 정책 반영
 -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제4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관리과제는 반기 1회 과제별 추진실적 등을 점검하고 성과 미흡과제에 대한 보완 필요사항 발굴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으로 이행상황 점검의 전문성·객관성 확보
 - △ 교수 △ 법조인 △ 언론인 등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경찰청 성과관리 이행상황에 대한 객관적 점검 실시

(2) 자체평가위원회 및 평가조직

- 자체평가위원회는 외부위원 27명(△ 교수 △ 연구원 △ 언론인 등)과 내부위원 3명(차장·기획조정관·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구성
 - ※ 관련근거 :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제386호)
- 자체평가위원회는 ‘전체위원회’, ‘6개 분과위원회’로 운영
 - 전체위원회는 성과관리 전략(5년 단위)·시행계획(1년 단위) 및 자체평가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치안정책 방향 공유 등 진행
 - 분과위원회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 주요과제의 사전 컨설팅, 이행상황 점검, 본평가, 이의제기 심사, 추진상황 모니터링 등 활동
-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자체평가위원의 평가업무 지원 및 성과평가 제도 안내·교육, 평가지침 수립·제공 등 담당

(3) 이행상황 점검 세부 계획

- 국조실 「정부업무 성과관리 운영지침」 및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을 바탕으로 자체평가위원회 주관 점검 실시
 - －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 자체평가위원 및 전문가의 과제별 컨설팅 및 내부 구성원 대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계획 수립
 - － 중간 점검 : 분과위원회별 1개의 부진과제 선정하여 집중 관리
 - － 최종 점검 : 자체평가위원이 평가기준에 맞추어 대상과제 점검

【 이행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일정 】

구 분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전문가 대면컨설팅	3월	■ '21년 경찰청 성과관리시행계획 지표 수립의 적절성, 목표치의 적극성 등에 대한 전문 평가위원 컨설팅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3월	■ '21년 성과관리시행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의결 ■ 신규 자체평가위원 위촉식 ※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지침 고려하여 서면 진행
상반기 추진실적 중간점검 실시	7월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
자체평가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8~9월	■ 평가위원의 치안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방문 ※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지침 고려하여 유동적 실시
본 평가	11월	■ 각 과제에 대해 추진과정, 목표달성도, 평가결과 활용 여부 등을 종합 평가
추가 평가	'22. 1월	■ '21년 실적 최종치 및 추진계획 이행여부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 ※ 행정관리역량평가 병행 실시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지급	'22. 3월	■ 성과평가 결과 반영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

(4) 부진과제 관리 방안

- <성과관리지원팀> 혁신조정담당관·성과관리계장 및 외부전문가 등 구성, 컨설팅 및 중간점검 과정에서 선정된 부진과제에 대해 집중관리

【 성과관리지원팀 구성 및 역할 】

- ▶ 구성 – 총괄팀 : 혁신기획조정담당관(팀장)·성과관리계장
 – 분과별 지원팀 : 성과담당자(3명) / 외부전문가(6명)*
 * 미흡과제 담당 분과위원회에서 과제 관련 전문성이 높은 위원으로 선정
- ▶ 역할 : 자체평가 운영 지원 및 부진과제 심층분석 등 환류 관리

- <부진과제 선정> △ 추진계획 준수 정도 △ 정책과제 수행 노력도
 △ 업무추진 과정 협업도 △ 정책소통 및 환류 등 4개 항목 점검
 ※ '21년 분과위원회별 과제(평균 8.8개) 중 부진과제(분과별 1개, 하위 11%) 선정
- <부진과제 관리> 부진과제는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관리하고
 본평가 시 이행여부를 평가에 반영('정책 환류 노력' 평가지표)
- 성과관리지원팀이 과제별 개선·보완 대책의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미흡사항을 지원하는 등 부진과제 성과향상 도모
- 본평가(11월)에서 부진·개선 필요과제의 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최종결과는 내년도 과제·지표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 구축

【 부진과제 관리체계도 】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 성과관리 제도 간 연계

【 관리과제(자체평가 정책과제) 평가 ⇨ 치안종합성과평가 ⇨ 성과급 】

- 시행계획 관리과제 평가결과를 경찰청 내부 평가제도인 치안종합성과평가와 연계, 본청의 조직(부서) 및 개인 평가에 반영

부서 평가	평가요소	국·관	과	계
	관리과제(정책과제) 평가	50%	50%	50%
	부서 기본업무	50%	50%	50%

개인 평가	구분	국·관	과장	계장	일반직원
	부서평가(100~50%)	100%	90%	60%	50%
	기여도평가(50~0%)	-	10%	40%	50%

- 평가결과를 개인 성과급(성과상여금·성과연봉) 결정에 반영

구분	평가항목				합계
	관리과제	기본업무	개인기여도	역량평가	
국·관	40	40	-	20	100
과장급	36	36	8	20	100

구분	평가항목				합계
	관리과제	기본업무	개인기여도	역량평가	
계장급	24	24	32	20	100
일반직원	20	20	40	20	100

(2) 평가결과의 활용

○ 조직 부문

- 중간점검을 활용하여 치안정책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성공·실패사례 공유 및 향후 정책 수립·추진에 반영

- 직제개정, 소요정원 요구 시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업무 프로세스 향상 방안 마련 및 예산 수립에 주요 판단자료로 활용

○ 개인 부문

- 성과중심 조직운영 정착을 위해 환류 범위를 지속 확대하되, 성과관리제도 정착 및 수용도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추진
- 개인별 성과평가 이력관리제를 통해 개인·부서의 성과보고서 및 평가결과를 누적 관리, 승진·보직인사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성과우수 관서·부서·개인에게 표창 및 포상금 수여, 특별승급, 성과급 지급, 교육 기회 부여 등 'Positive 환류 방식' 운용

【 평가결과 활용 범위 】

구 분	활 용 범 위	주 요 내 용
혁 신 기 조 정	치안종합성과평가	본청 부서평가에 반영(50%)
	성과연봉·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80%)
	우수관서 포상	우수관서 선발기준으로 활용
	우수부서 포상	우수부서 선발기준으로 활용
인 사	심사승진	개인평가 등급을 심사승진 참고자료로 활용
	가점평정	일반직 가점평정에 반영
교 육	국비 국내대학원 선발	최근 3년간 평가결과를 객관평가에 반영(30%)
	국비 유학생 선발	최근 3년간 2회 이상 C등급 시 선발 배제
외 사	주재관 선발	최근 3년간 평가결과를 객관평가에 반영(30%)

3. 변화관리 계획

(1)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 운영

【 조직 전반의 개혁·혁신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의 기반 마련 】

- <인력 효율화> △ 수사 △ 지역경찰 △ 피해자보호 등 민생안전 중심 인력 증원과 치안수요·업무량 기반 정원 재배치로 능률성 극대화
 - － 계급별 적정수준의 정원을 확보하여 하위직에 편중된 침탐형 직급구조를 개선, 적절한 책임범위를 확보하고 활력있는 현장경찰 활동을 지원
- <경쟁력 제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적극적인 현장대응을 가능케 하는 「부서장 책임제」* 도입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환경 적응력 향상
 - * △ 부서장의 권한·자율성 보장 △ 지휘역량 향상(보직자격제 등) △ 평가 환류체계로 구성
- <적극행정 활성화>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성화 △ 인센티브 강화* △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 등 조직분위기 쇄신으로 성과 창출 독려
 - * 적극행정 우수자 선발하여 성과급 최고등급(S-S) 부여(年 20명 내외)
 - －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합리적 평가·보상체계 운영> 관서·부서·개인의 평가결과를 성과급에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협업을 유도하면서도 개인 성과달성에 동기부여
 - ※ 자체 성과관리시스템 활용, 평가기간 동안의 개인별 보직이력을 반영하여 성과급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과 그 보상을 합리적 연계
- <성과기반 인사정의 실현> 개인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개인등급을 승진·보직인사·각종 선발 등 인사 전반 참고자료로 활용

【 종합적·입체적 시책 창안 및 정책 환류·점검으로 미래 성과 견인 】

- <‘포스트 코로나’ 치안전략> 급변하는 치안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업무체계와 인재양성 시스템을 혁신하고 지능형 치안행정 구현
 - － 팬데믹은 경기침체·사회해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점 고려,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보호활동 전개
- <경찰활동 모니터링>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을 통해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현장직원의 평가와 의견을 지속 수렴·분석
 - － 국민의 만족에 대한 대표적인 결과지표인 체감안전도·고객만족도를 비롯하여, 개별 정책 시행 전후 모니터링한 결과를 환류에 활용
 - ※ 경찰청 빅데이터 플랫폼과 연계, 정책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비교분석 수행 (관서간 비교, 취약분야 확인, 시계열 추이관찰 등) 및 시각화자료 현출
- <통계 인프라 확충> 매년 신규지표를 반영한 「경찰통계연보」를 발간, 주요지표의 성과측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 관리
 - － 사이버경찰청 웹사이트에 경찰통계연보·기능별 통계 등을 적극 공개함으로써 경찰의 주요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2) 성과지표 개발·관리 노력

- <전문가 성과지표 컨설팅> 관리과제 지표 설계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의 대면컨설팅을 거쳐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매년 1/4분기)
 - ※ 성과지표의 대표성·중요성·적정성 등을 체크리스트로 평가, 지표 보완·개선에 반영
- <성과지표 Pool 및 이력관리> 자체 치안성과관리시스템을 이용, 2006년부터 각 부서별 성과지표 Pool 운영 및 이력관리 실시
- <성과지표 일몰제 운영> 매년 쏘 지표를 원점에서 재검토, 최근 3년간 목표치 및 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지표 개선방안 마련

【 외부전문가 평가단 구성 현황 】

분과	담당 분야	과제수	분과위원회 명단	
			분과위원장	위원
1	기획 / 홍보 / 정보화	8개	허금탁(분과위원장)	최여경, 조준억, 안상현
2	경무 / 감사	9개	박동균(분과위원장)	강영석, 윤지섭, 최경희, 이승은
3	경비 / 정보 외사 / 치안상황	11개	이상훈(분과위원장)	서찬동, 이은영, 금현섭
4	수사 / 형사 / 사이버	8개	김익재(분과위원장)	이찬희, 장다혜, 신승근, 김수진
5	수사기획 / 수사인권 과학수사 / 안보수사	9개	차용진(전체분과위원장)	박미랑, 김지윤, 조은경
6	생안 / 교통 / 자치경찰	8개	강원석(분과위원장)	송건섭, 조진형, 김상옥, 김경희

['21년 정책과제 대면 컨설팅 결과]

- ▶ 일시 · 장소 : '21. 3. 8.(월) ~ 3. 12.(금), 경찰청 기획회의실
- ▶ 참 석 : 자체평가위원회 위원(21명), 과제담당 계장(53명)
- ▶ 컨설팅대상 : 본청 부서 정책과제(53개)
- ▶ 결 과 : 정책과제에 대하여 대표성·적극성 있는 지표로 개선을 유도하고, 업무절차 개선 권고 등 총 53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 실시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1) 기본 방침

- <개요> 주요과제 중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선정, 「기획→집행→환류」 전 단계에서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 등 현장의견 수렴·반영
- <대상과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안정책을 선정
 - － 국정과제·연두 업무보고 등에 포함된 주요과제 중 현장의견 수렴 및 환류의 필요성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수렴 진행
- ※ 필요 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추가 가능하며, 안보사업 등 특수정책 분야와 법령상 비공개대상 사업 등 공개적 의견수렴이 어려운 과제는 제외

【 '21년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

연번	부서	정책과제
1	자치경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
2	정보분석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범죄정보 수집으로 국민안전 확보
3	아동청소년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4	여성안전기획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및 여성안전망 구축
5	피해자보호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확대 및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6	교통안전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7	사이버수사기획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8	외사기획정보	선제적·예방적 외사경찰 활동으로 사회안전 확보
9	반부패	반부패·공공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10	인권보호	인권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스템 구현
11	수사인권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관련 제도 개선
12	디지털포렌식	디지털증거분석 역량 강화로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 확보
13	대테러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14	감사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15	양성평등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2) 과제별 의견수렴 방법

- <주체> ‘현장의견 수렴 대상과제’ 담당부서 및 과제담당자로, 객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외부 조사전문기관 등 활용 가능
- <시기> 해당 정책의 ‘수립 → 집행 → 평가 → 환류’ 전 과정
- <대상자> 정책 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수요자·이해관계자(유관기관·관련단체 등) 및 현장직원 등 적정 대상자 선정
- <방식> 해당 정책의 효과발생 예상시기, 정책수요자, 지역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적합한 의견수렴 방식 선정
 - ※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설문조사 △전문가회의 등

(3) 의견수렴 관리 체계

- <결과 관리>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성과관리계)에서 과제별 현장의견 수렴 결과 파악,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노력도를 자체평가에 반영
 - ※ 본평가 시 ‘대내·외 의견수렴 및 정책환류 노력도(배점 15점)’ 평가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소계	성과지표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3	3	0 (0%)	0 (0%)	0 (0%)	3 (100%)	2 (67%)
성과목표	12	12	0 (0%)	0 (0%)	0 (0%)	12 (100%)	3 (25%)
관리과제	53	151	0 (0%)	0 (0%)	69 (46%)	82 (54%)	139 (92%)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 국조실 정부업무평가실 개선안('19.6.) 반영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5대 범죄 검거율	5대 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 살인·강도·강간(강제추행)·절도·폭력	80.0	정량	결과	
II. 공정한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기관 신뢰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기관별 신뢰 정도 - 경찰'	2.5	정성	결과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경찰 수용 건수 ÷ 전체 권고 건수 × 100	95	정량	산출	
III. 현장 자긍심 제고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	-	-	-	-	

< (참고) 성과지표의 유형 >

분 류		내 용	예 시
정량적 측정 여부	정량지표(계량지표)	구체화된 양적 수치로 측정가능 (평가자 주관 개입 불가)	10만 명당 5대 범죄 발생율
	정성지표(비계량지표)	양적 수치로 측정이 불가능 (평가자 주관 개입 가능)	체감안전도
정보의 성격	투입지표(Input)	예산·인력 등 투입물의 양	투입 예산액
	과정지표(Process)	사업 진행 과정의 산출물	사업 진도율
	산출지표(Output)	사업완료 후 1차적 산출물	교육 수료자 수
	결과지표(Outcome)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단속·검거율 / 대상자 만족도

※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지표 활용이 바람직하나, 결과지표 측정이 어려운 경우 과정·산출지표 사용을 권장(국조실 「성과지표 개발·관리 매뉴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Ⅰ.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1.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사회안전성 인식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우리 사회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5.3	정성	결과	국가승인 통계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범죄안전도	경찰청 주관 대국민 전화조사 (외부 조사업체 이용, 일반 국민 총 51,400명 대상)	85.0	정성	결과	
3.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 추진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교통문화 지수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80.0	정성	결과	국가승인 통계
4. 국제·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사이버범죄 검거율	'21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73.0	정량	결과	
전략목표Ⅱ. 공정한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1.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부패인식지수(CPI)	국제투명성기구(TI) 주관 부패인식수준 조사	63.0	정량	결과	국제평가 지수 (CPI)
2.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인권침해 권고율	인권침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권고건수÷ 전체 권고건수×100	8.7	정량	결과	
3.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수사·형사 분야 치안고객만족도	경찰청 고객만족모니터센터, 알림톡(카톡) 이용 수사·형사 분야 접촉고객 실시간 전수조사	70.0	정성	결과	
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안전체감도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의식 조사	2.90	정성	결과	
전략목표Ⅲ. 현장 자긍심 제고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인사·성과·교육 부문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인사·성과·교육 분야 조사결과 평균	82.0	정성	결과	
2.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현장활력 기반을 마련한다	조직문화 부문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조직분위기·성인지 분야 조사결과 평균	89.0	정성	결과	
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장비·시스템 부문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장비·시스템 분야 조사결과 평균	87.0	정성	결과	
4.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복지 부문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복지 분야 조사결과 평균	78.0	정성	결과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 I.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성과목표 1.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탄력순찰 이행도	탄력순찰 희망장소와 순찰차 순찰계획 間 일치율	75	정량	산출	국정14 성과지표
		CPTED사업 노력도	(경찰 제안으로 추진된 셉테드 사업 건수)÷(전국 지자체가 추진한 셉테드 사업 총 건수)×100	86	정량	산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대비 시·도 조례 정비	17개 시·도별 조례 공포 시기에 따라 점수 산정	85	정량	산출	국정13 성과지표
		시·도자치경찰 위원회 운영 실질화	17개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라 점수 산정	80	정량	산출	국정13 성과지표
		자치경찰제 교육·홍보 등 대내외 공감대 확보	△ 교육 △ 설명회 등 △ 대외 설명자료 제작 △ 대국민 홍보의 4개 분야 점수합산	70	정량	산출	
112중심 치안상황 관리 고도화		112신고접수 만족도	①신속성 + ② 친절성 + ③전문성 및 ④종합 만족도 조사결과	87.2	정량	결과	
		국민 긴급신고 신속현장대응달성도	지령 후 현장 도착시간 (112시스템 자동 추출)	5분 5초	정량	결과	
		위기관리역량지수 (공통)	시도경찰청·경찰서별 훈련 횟수+경찰서별 교육횟수	1371	정량	산출	
살인·강절도·폭력 등 강력범죄 엄정 대응		살인·강도·절도 통합 검거성과	{{범죄통계시스템 살인·강도·절도 검거건수+즉결시스템 절도 처리건수}}/({범죄통계시스 템 살인·강도·절도 발생건수+즉결통고처분 시스템 절도 처리건수}}	62.1	정량	결과	
		강절도 피해품 회수건수	범죄통계시스템 회수건수+즉결통고처분시 스템 회수건수	59,000	정량	결과	
		상습 주취폭력배 검거인원	상습 주취폭력배 검거인원	6,175	정량	결과	
		인피뽕소니 검거율	인피 뽕소니 검거건수/ 발생건수	94.6	정량	결과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범죄정보 수집으로 국민안전 확보		재난 및 안전정보 건문 작성 실적 및 활용도	보고서 작성건수+ 정보 활용도	9,756점	정량	결과	
		치안시책 보고서·정책 참고자료 준법 준수율	(전체 보고서 작성건수 -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 위반 징계요구·수사의뢰 건수)÷전체 보고서 작성건수×100	100%	정량	결과	
		범죄정보 수집 활성화 지수	(배당건수÷제출건수)×100	31.52%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성과목표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선도프로그램 연계율(공통)	(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 전체 소년범)×100	38.2	정량	결과		
		선도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재입건인원÷선도프로그램 연계인원)×100	20.6	정량	결과		
		아동학대 보호조치율	(임시조치 신청건수÷ 아동학대 112신고건수)×100	12.7	정량	결과		국정14 성과지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수사 및 여청수사 역량 제고	성폭력 미검률	{1-(성폭력범죄 검거건수/ 발생건수)}×100	4.3	정량	결과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 연계율	아동학대 피해자 해바라기센터 지원 /아동학대 사건(%)	50	정량	결과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및 여성안전망 구축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공통)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연계건수(20%)+ 피해자 보호지원 건수(80%)) /성폭력 발생 건수}×100	45.2	정성	결과		
		가정폭력 사건대응률(공통)	{(가정폭력 검거건수+ 피해자 보호조치건수)/ 가정폭력 신고건수}×100	61.8	정량	결과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확대 및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 지원활동률	중요범죄 피해자 지원활동건수÷중요범죄 발생건수×100	155%	정량	결과	국정14 성과지표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	회복적 경찰활동 실시건수	720건	정량	결과		
		민간단체와의 협업 노력도	민간단체 업무협약 체결건수	18건	정량	산출		
성과목표 3.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 추진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사고 사망자 증감률	{(금년 사망자수)- (전년 사망자수)}÷ (전년 사망자수)×100	-9.8%	정량	결과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	{(금년 부상자수) -부상자수} ÷(전년 부상자수) × 100	-1.6%	정량	결과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통관리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만 명당)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망사고 사망자수÷ 총 고령운전자(65세 이상 면허소지자)수×10,000	1.70	정량	결과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편의 제공을 위한 노력도	법령개선: 도로교통법 등 법령개정 건당 배점	100	정량	산출		
			<table><tr><td>법</td><td>대통령령</td><td>부령</td><td>훈령·지침</td></tr><tr><td>5</td><td>3</td><td>2</td><td>1</td></tr></table> 기관협업도: 부처별 협업 사항에 대해 기관별 배점					법
법	대통령령	부령	훈령·지침					
5	3	2	1					
<table><tr><td>외국 협업</td><td>정부 기관</td><td>민간 기관</td><td>타 국관</td></tr><tr><td>5</td><td>3</td><td>2</td><td>1</td></tr></table>	외국 협업	정부 기관	민간 기관	타 국관	5	3	2	1
외국 협업	정부 기관	민간 기관	타 국관					
5	3	2	1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교통사고 심각도 감소율	당해년도 월평균 교통사고 심각도지수×12	0.124	정량	결과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율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중 사망자수÷(해당연도 인구÷100,000)	1.8	정량	결과	
성과목표 4. 국제·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지수	비대면(온라인)교육 및 기업체·군장병 가산점 적용한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활동지수	242,773	정량	결과	
		사이버 첩보활용 지수	B등급 이상 첩보건수/ 전체 첩보건수	25.0%	정량	결과	
		사이버국제공조 활성화 지수	(국제공조요청건수/ (사이버수사관인원)×100	340%	정량	결과	
	사이버범죄 검거 및 피해 보호조치 등 수사활동 강화	사이버범죄 검거 증가율	{{'21년 사이버범죄 검거건수÷'21년 적정 검거건수}-1}×100	15	정량	결과	
		피해 보호조치 증가율	{{'21년 피해보호조치 (삭제·차단) 요청건수 ÷'21년 적정 요청건수}-1}×100	47	정량	결과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인터폴 조직 및 D/B 활용도	인터폴 전용통신망 DB 관련 활동내역	106.7	정량	산출	
		국외도피사범 송환인원(공통)	국외도피사범 송환 D/B	326	정량	결과	
		해외파견자 증원 및 교육·업무 노하우 공유 등 활동 실적	해외파견 인력증원 +교육·업무노하우 공유 등 활동	95.3	정량	산출	
	선제적·예방적 외사경찰 활동으로 사회안전 확보	외사정보 활용도	양적평가+질적평가	1,925	정량	결과	
		다문화 치안활동 실적(공통)	월별실적* 합계/ 실적산출월수×100 *Σ활동별(가중치×수혜자수)/ 체류외국인수	0.39	정량	산출	
		대테러·방첩 활동 실적	외사 보안사업 개척점수+교육점수	720	정량	산출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교류지수(공통)	{국제교류×0.3+청·차장급 교류×0.2+국·과장급 이하 교류×0.1}+정부치안 외교지원(정부부처·국제기 구 협력×0.25 + 국내외 의제발굴·사업지원×0.15}	19.78	정량	산출	
		치안인프라 전수지수(공통)	Σ (치안인프라 전수 사업별 파견·교육기간×교육인원)	30	정량	산출	
		홍보지수	국외 홍보 건수×0.4+ 국내 홍보 건수×0.3+ 내부 홍보 건수×0.3	7.7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Ⅱ. 공정한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성과목표 1.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반부패·공공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인원	공공분야 고위직 부패사범 검거인원	660	정량	결과	
		공직선거 5대 선거범죄 검거율	공직선거 5대 선거사범 기소송치인원/공직선거 전체 기소송치인원	39.8	정량	결과	
		국민권익위 이첩 사건 신속처리율	'21. 1월 ~ 10월 권익위 이첩 접수 사건의 '21. 12월까지 종결률	58.0	정량	결과	
	마약류·조직폭력· 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마약류 사범 검거성과	마약류 검거인원	8,377	정량	결과	
		조폭 검거성과	조직폭력배 검거인원	2,878	정량	결과	
		국제범죄사범 검거성과	국제범죄수사인력 1인당 검거인원	1,718	정량	결과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수사관 1인당 경제범죄 기획수사 검거인원	주요 기획수사 검거인원/ 전국 수사관 인원	10.7	정량	결과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 검거율	범죄 조직원 검거인원/ 발생건수×100	25.4	정량	결과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 합계(억 원)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금액 합계	1005	정량	결과	
	기초치안 확보 및 유흥시설 등 합동단속으로 생활질서 확립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지수	생활질서 위반사범 단속점수÷기능 인원수	28.8	정성	결과	
성과목표 2.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인권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스템 구현	인권영향평가 반영률	인권영향평가 의뢰부서 반영건수/권고·의견표명 및 제언건수×100	60	정량	결과	국정13 성과지표
		한국형 동료개입 프로그램 전문강사 활용률	현장 투입 강사 수/ 한국형 동료개입 프로그램 전문 양성 강사 수×100(%)	80	정량	결과	
	인권 보호와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준법관리 역량강화	(준법관리계 점검· 교육×70%)+ (시·도경찰청 자체교육×30%)	53.5	정량	산출	
		행정지도 건수	행정지도 건수	30	정량	산출	
		대화경찰 역량 강화	(대화경찰 교육인원수× 70%)+(대화경찰 교육 수료대상 업무적응도 조사결과 평균×30%)	442.6	정량	결과	
		대화경찰 운영실적	대화경찰 운영건수/100명 이상 집회시위 건수	62	정량	산출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평화적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 및 상향분야 정보관 역량 강화	사전 정보활동을 통한 법과 원칙에 따른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률	경찰활동실적+국민평가	62.10	정량	결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율	(시·도경찰청 보고서 총 획득점수/각 청 정보관 현원)을 통한 등급별 달성점수×50%+ (연 교육인원/목표인원)×50%	100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관련 제도 개선	② 인권보호 제도 개선(60%)	[유형별 등급 × 등급별 점수] <table><tr><th>등급</th><th>내용</th><th>점수</th></tr><tr><td>A</td><td>수사인권 관련 법령 제·개정</td><td>10</td></tr><tr><td>B</td><td>수사인권 관련 행정규칙 및 지침 정비</td><td>5</td></tr><tr><td>C</td><td>인권보장제도 도입·개선</td><td>3</td></tr></table>	등급	내용	점수	A	수사인권 관련 법령 제·개정	10	B	수사인권 관련 행정규칙 및 지침 정비	5	C	인권보장제도 도입·개선	3	40	정량	결과	
		등급	내용	점수															
	A	수사인권 관련 법령 제·개정	10																
	B	수사인권 관련 행정규칙 및 지침 정비	5																
	C	인권보장제도 도입·개선	3																
	② 인권·윤리의식 제고 위한 교육·홍보활동 (40%)	교육(교육활동·건당 3점, 교육자료 배포·1점), 홍보(언론홍보·건당 5점, 홍보자료 배부·건당 1점)	15	정량	산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집회시위 현장 대응 시민 만족도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 대해 조사(긍정답변율)	70	정량	결과														
	집회시위 현장 법집행 기준 확립	훈령·지침 개정 건당 15점 매뉴얼 제작 및 전국 단위 배포 건당 10점	30	정량	산출														
	경찰관기동대 창설 달성도	'21년 목표인 10개부대 창설시 20점(미창설 1개부대마다 -4점)	10개 부대 창설	정량	산출														
성과목표 3.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기반 마련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예산·인프라 확보 노력도	예산확보수준, 관련 예산 집행률, 관련 사업 진척도	90	정량	산출													
		책임수사 과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KICS) 반영도	책임수사 과제 시스템 반영건수/책임수사 과제 등 전체 기능개선 요청건수×100	85.0	정량	결과													
		전문 수사인력 확보	수사분야 경채자, 과팀장 자격제 이수율, 전임수사관 인원	90	정량	산출													
		전문 수사인력 양성	수사연수원 전문·심화과정 수료인원, 전문수사관 인증인원	3,123	정량	산출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수사권개혁 관련 연계법령 정비 노력	{{검토보고서 작성 및 주무부처 협의×5}+ (국회·학회·언론 등 배포·대응 횟수×3)}×0.1	18.0	정량	산출													
		제·개정 법령 및 수사절차 이해도 제고	(현장간담회 등 참여, 언론 등 홍보활동, 전문가면담·학술 세미나 등 실시 횟수)×0.1	8.0	정량	산출													
		수사제도 개선 및 수사권개혁 지속 추진	{{검토보고서 작성·배포횟수} +(QnA 상담×0.1+지침 개정) +(관련기관 협의 개최횟수)}×0.1	8.0	정량	산출													
	국민중심 책임수사 완성을 위한 심사체계 구축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위한 심사체계 구축 노력도	법령 제·개정, 사건심사건수, 심의위원회 발족 및 개최횟수, 교육이수율 등	70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경찰 사건기록 관리체계 등 업무기반 마련	협의건수, 법령·지침 정비 및 수립, 관련 사업 진척도, 교육 이수율	70	정량	산출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제 구축 이행도	사건 진행상황 통지율, 통지 관련 지침 등 시행 건수, 수사민원 상담 건수	70	정량	산출	
		수사 공정성 확보 및 수사기법 연구·지원 강화 노력도	수사공정성 및 수사기법 관련 지침 등 시행건수, 별정통신사와의 협조시스템 개선 여부	70	정량	산출	
	미래환경을 대비한 경찰책임수사 지원 강화	범죄분석 지원지수	$\sum(\text{출동건수} \times \text{건별활동점수})$ + (노력점수)	166	정량	산출	
		법과학 분석률	$(\text{지문·영상·3D얼굴인식}$ $\text{분석건수}) / (\text{지문·영상·3D}$ $\text{얼굴인식 접수건수}) \times 100$	66	정량	산출	
		통계분석 시스템 이용지수	SCAS, GeoPros 접속건수 합산	2,707,860	정량	산출	
		현장감식 증거물 채취율	현장감식 채증물 등록건수/현장임장건수	175.8	정량	산출	
	디지털증거분석 역량 강화로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 확보	디지털포렌식 인력 전문화	수사연수원 디지털포렌식 교육 및 디지털포렌식 전문화 위탁교육 실적(수료인원×1) + 워크숍 등 본청 주관 교육실적(수료인원×0.5)	415	정량	산출	
		디지털포렌식 도구·시스템 개발 및 활용도	(신규 도구·시스템 개발 및 장비도입건수×1)+(도구·시 스템 고도화 건수×0.8) +(주요 디지털포렌식 도구 활용도×1)+(디지털 포렌식 도구 홍보실적×1)	34	정량	산출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법 연구 실적	(연구보고서 등 분석기법 연구건수 <상×1.2/중×1/ 하×0.8>)+(세미나·학술대 회 등 개최 건수×0.5)+ (디지털포렌식 지식 공유 건수×0.1)	38.5	정량	결과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견인하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	대국민 교류 지수	고객만족도 조사×0.5 +진술청취이행률×0.5	86.6	정성	결과	
		현장지원 지수	현장지원 활동을 정량화, 합산 점수산출	31	정량	산출	
		과학수사 활동 지수	현장임장률×0.5 +증거채취율×0.5	1.46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성과목표 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2021년 대테러·작전 인프라 구축 달성도	완료 목표시기 달성 시 점수의 90% 부여, 1개월 단축·지연시 5% 가감	경찰특공대 창설-10월 해안경계 과학화-9월 드론테러대응 장비도입-12월	정량	산출	
		대테러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현장요원 대상 대테러 교육을 年 2회 이상 실시한 경찰서 비율(%) (집체·사이버교육 포함)	100	정량	산출	
		대테러 교육 성취도	경찰서 현장요원 교육대상자 대상 인식개선도 설문조사 (긍정 답변율)	70	정성	결과	
		현장 중심 대테러 안전관리에 따른 체감안전도	외부 여론조사업체 통해 조사(긍정 답변율)	70	정량	결과	
안보수사 역량·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및 예방적 안보상황 관리		안보수사 역량강화 인프라 구축	인프라 구축 노력도	46	정량	산출	
		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탈북민 범죄예방교육 +신변보호활동 성실이행도 +탈북민 보호 우수사례	36	정량	결과	
		안보취약요소 개선 활동	분석 판단 보고 및 공문을 통해 개선 추진한 사항	10	정량	산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중요 안보사범 검거 지수	(정보사범 검거×2점)+(그 외 사범 검거×1점)	692	정량	결과	
		첨단안보 대응활동 지수	(첨단안보 내사 착수건수)×2점+(첨단안보 첩보 중 '일보' 이상 평가 건수)×0.5점+(피해자 보호조치 건수)×0.1점	755	정량	결과	
		디지털 포렌식 활성화 지수	(현장지원횟수/디지털포렌식 지원횟수×100)×0.5+ (선별압수/현장지원횟수 ×100)×0.3+(포렌식 전문교육 이수인원)×0.2	125.8	정량	산출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 보호를 위한 안보정보 분석 능력 강화		안보수사정보 활용도	(양적평가)정보 분석 보고서 생산(65점)+ (질적평가)정보 분석 보고서 현장 활용도(170점)	235	정량	결과	
		안보정세분석 전문성 강화	안보정세분석서 보고서 생산(18점)+ 정세분석 전문성 강화(18점)	36	정량	산출	
경호역량 강화를 통해 빈틈없는 경호업무 수행		경호 경찰 전문화 교육 및 설문조사	경호경찰 인력풀 교육 실시율×0.7 교육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균×0.3	76.2	정량	결과	
		경호 경찰 인프라 구축	경호업무 담당 조직·부대 신설-건당 10점 전국단위 규칙·지침·매뉴얼 마련-건당 7점 신형 경호장비 도입·장비 1종당 3점	26	정량	산출	
		경호업무 관계기관 협업	관계기관 회의(현장점검) 주관·참석÷대통령 행사 건수×100	41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전략목표Ⅲ. 현장 자긍심 제고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성과목표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정책추진 프로세스 강화로 국민체감 성과창출 견인	'21년 국정과제 수성과지표 달성도	목표 달성한 지표 개수÷ 국정과제 수 지표×100	95	정량	결과	
		현장 인력 재배치	현장 재배치인원	1,500	정량	결과	
		정책모니터링 활성화	정책모니터링 운영 횟수	59	정량	산출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직무만족도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 중 인사분야 6개 항목 평균	81	정성	결과	
		현장우수사례 표창비율	경찰청장 표창 발부 대비 현장 우수사례 포상 비율	47.4	정량	산출	
		여성경찰관 비율 확대	여성경찰관 비율	14.2	정량	산출	
	입법대응 체계화 및 현장 법률지원 확대로 경찰 법집행력 강화	입법대응 노력도	(심사 회신건수/심사 수요조사 건수×100)-100	30.8%	정량	산출	
		규제혁신과제 달성도	(달성과제/규제혁신 선정과제)×100	95%	정량	결과	
		통합 법률 및 소송 지원체계 만족도	지원활동별 만족도 평균	81.88	정성	결과	
		현장법률365 센터 대응 노력도	질의사안 중 답변건수/ 질의건수×100	99.1%	정량	산출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 현장 활용도	(교육센터 설문결과+ 현장순회교육 설문결과+ 사이버교육 설문결과)/3	91.4	정성	결과	
		인재채용률	(채용인원/채용예정인원)×100	93.0	정량	결과	
성과목표 2.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현장활력 기반을 마련한다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제도개선 실적	감사를 통한 제도개선 실적 - 산식 : ∑(유형별 배점× 조치수위별 배점)	183.2	정량	산출	
		적극행정 면책실적	적극행정 면책 심사위원회 개최건수	120	정량	산출	
	위기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예방·문제해결 중심 감찰활동 전개	제도개선 자료 제출 노력도	(제도개선자료+기타자료)/ 총 제출 첩보건수)×100	47.5	정량	산출	
		유가치 첩보 활용도	유가치 평가 첩보/ 총 제출 첩보 건수×100	31.6	정량	결과	
		감찰수사 전문화교육 이수율	반부패수사과정 등 수사교육·본청 주관 교육 이수 감찰관 수/ 시·도 경찰청 감찰수사계(팀) 현원	55	정량	산출	
		감찰활동 만족도	수 직원 대상 매일 설문 조사 결과	63.8	정성	결과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주요 치안정책 성평등 관점 개선 노력도	주요 치안정책 관련 성평등 관점 개선 의견수용도 (수용 건수/개선의견 건수)	89.5	정량	산출	
		성평등 교육 정착도	(경감 이상 참여인원수/ 경감 이상 전체인원수)×0.4 +(교육참여 인원수/ 전체직원 인원수)×0.6	91.1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성과목표 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치안R&D와 치안산업 진흥으로 현장 지원	과학기술을 이용한 치안현장 문제해결 발굴 건수	치안현장 문제해결 발굴건수 (당해년도 문제해결 과제 발굴건수+차년도 신규 과제 발굴 건수)	8	정량	산출	
		R&D연구결과물 현장 만족도	만족도 조사 점수 (각 조사부분 만족도의 평균)	86.4	정성	결과	
		치안 장비·기술 수출상담 건수	국제치안박람회 수출상담 건수 ('21년 수출상담건 - '20년 수출상담건)	451	정량	산출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사이버 위험 사전예방 노력도	사이버위험 사전차단건수/ 사이버위험 총건수×100	60.6	정량	결과	
		사이버 위험 대응 신속도(공통)	6시간내 조치 건수/ 사이버위험 조치 필요건수×100	22.9	정량	산출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행안부 주관, 치안 데이터 품질관리 수준 평가 (3개 영역, 9개 평가지표) 점수 결과 반영	우수 (85점)	정량	결과	정부혁신 평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전년 대비 20% 개방 확대	90	정량	결과	정부혁신 평가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정보화 서비스」 구현	정보시스템 현장 활용도	통합포털 폴넷(30%)+ 스마트국민제보(30%)+ 폴리폰(30%)+ 수배차량검색시스템(10%)	116.8	정량	결과	
		정보화업무 서비스 만족도	만족도 조사 결과	85	정성	결과	
		경찰정보통신망 장애 발생도	회선장애로 인한 업무망 서비스 중단시간	1,133	정량	결과	
		비대면 업무환경 지원도	화상회의시스템 이용실적	8,405	정량	산출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경찰 장비 현장 만족도	신규도입 장비 현장 의견 반영도+성능향상 및 만족도+A/S 만족도 등 각 설문항목 평균치 추출	87.8	정성	결과	
		장비 규격 개선 실적(공통)	경찰규격심의위원회에서 제정(신규도입)·개정(성능향 상)된 규격 개선건수	45	정량	결과	
		친환경 차량 보급률	(친환경 차량 수/ 노후로 인한 교체 업무용차량 수)×100	80	정량	산출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치안현장 헬기지원 (공통)	항공요원 우수사례 마일리지 점수 심의 결과(월1회)에 따른 항공대별 점수 합계	764	정량	산출	
		항공요원 안전관리 역량강화	항공요원 전문기관 위탁교육훈련 인원 및 관련 자격증 취득 건수	101 70	정량	결과	
		예방정비 활동	헬기 고장요인 자체 발견 건수	135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21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성과목표 4.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적극 지원	경무 행정지원업무 만족도	10월 중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	85	정성	결과	
		유연근무제 활용	일반대상자 중 월1회 이상 유연근무제 사용한 인원 비율	73.7	정량	산출	
		연가사용 실적	1인당 평균 연가사용 비율	경정·5급 이상 : 48 경감·6급 이하 : 55.8	정량	산출	
	현장활력 제고를 위한 복지기반 확충	현장 경찰관 대상 마음건강관리 실적	마음동행센터 상담 제공 인원수	9,409	정량	결과	
		직장어린이집 확충 예산 증가액 실적	직장어린이집 확충사업 22년도 예산 - 21년도 예산	14,106	정량	산출	
		퇴직(예정)경찰관 취업지원 성과	해당연도 취업인원 / 전직지원센터 컨설팅인원	71.3	정량	결과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재정지원도(공통)	예산확보수준(×50%)+ 예산집행률(×30%)+ 국유재산증가율(×20%)	69.48	정량	산출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주요 치안정책· 현안에 대한 신뢰·지지기반 마련	경찰청 SNS 활동지수	각 계정 통계 활용	1) 1,760,057 2) 250,024,917 3) 1,294 4) 860,090 5) 15건	정량	결과	
		주요정책 언론홍보 실적(공통)	연간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관련 보도건수(월)	105	정량	결과	
		오보 및 온라인 이슈 대응 활동	오보 및 온라인 이슈 대응 건수	233	정량	결과	

성과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전략목표 I. 범사회적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성과목표 1.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주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			
	㉠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 활성화	범죄예방정책	국정 14-1, 업무 II-①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시행	자치경찰	국정 13-3, 업무 I-②
	㉢ 112중심 치안상황 관리 고도화	위기관리	국정 55, 56, 업무 III-②
	㉣ 살인·강절도·폭력 등 강력범죄 엄정 대응	강력범죄수사	국정 14-1, 14-2 업무 II-②, II-③
	㉤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범죄정보 수집으로 국민안전 확보	정보분석	업무 II-①
성과목표 2.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한다			
	㉥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및 위기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아동청소년	국정 14-2, 업무 II-③
	㉦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엄정수사 및 여청수사 역량 제고	여성청소년 범죄수사	국정 14-2, 업무 II-③
	㉧ 여성대상범죄 대응체계 고도화·여성안전망 구축	여성안전 기획	국정 14-2, 66 업무 II-③
	㉨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확대 및 내실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	피해자보호	국정 14-2, 업무 IV-①
성과목표 3. 사람이 우선인 교통정책 추진으로 일상생활 속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안전	국정 55, 업무 II-③
	㉪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통관리	교통기획	국정 55, 업무 II-③
	㉫ 공감받는 교통인프라 구축으로 국민중심 교통안전 확보	교통운영	국정 34, 55, 업무 II-③
성과목표 4. 국제·사이버 범죄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이버공간 확보	사이버수사 기획	업무 II-①, III-③

성과 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14 사이버범죄 검거 및 피해 보호 조치 등 수사활동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대통령 지시-9604 업무 II-②, III-③
	15 인터폴 등 국제공조 활성화를 통한 국제치안환경 적극 대응	인터폴 국제공조	국정 10 업무 III-③, IV-②
	16 선제적·예방적 외사경찰 활동으로 사회안전 확보	외사기획정보	국정 14-2, 65 업무 II-①, II-③, III-④
	17 외국경찰기관과의 협력 활성화로 해외 치안협력 네트워크 강화	국제협력	업무 IV-②
전략목표Ⅱ. 공정한 법집행으로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			
성과목표 1. 구조적 부패·부조리를 엄단하여 공정한 사회를 이룩한다			
	18 반부패·공공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반부패 공공범죄수사	업무 III-①
	19 마약류·조직폭력·외국인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	마약조직 범죄수사	국정 14-2 업무 II-①, II-②
	20 경제범죄 검거활동 및 수사역량 강화	경제범죄수사	대통령 지시-9829, 9830, 9588 총리 지시-5009663 업무 II-②
	21 기초치안 확보 및 유흥시설 등 합동단속으로 생활질서 확립	생활질서	국정 55, 56, 업무 II-③
성과목표 2. 민주·인권 경찰을 구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22 인권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스템 구현	인권보호	국정 13-4, 업무 IV-①
	23 인권 보호와 준법역량 강화를 통한 바람직한 정보경찰상 구현	정보관리	국정 13-4, 업무 I-③
	24 평화적 준법 집회·시위문화 정착 및 상황분야 정보관 역량 강화	정보상황	국정 13-4
	25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관련 제도 개선	수사인권	업무 I-①
	26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집회시위 문화 정착	경비	국정 14-5, 업무 III-①
성과목표 3. 수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27 차질 없는 경찰수사 개혁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 기반 마련	수사운영지원	국정 13-4, 업무 I-②
	28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구조개혁 및 수사제도 개선 지속 추진	수사구조개혁	국정 13-4, 14-7

성과 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㉔ 국민중심 책임수사 완성을 위한 심사체계 구축	수사심사정책	업무 I-①
	㉕ 미래환경을 대비한 경찰책임수사 지원 강화	범죄분석	국정 14-4 업무 I-①, II-①
	㉖ 디지털증거분석 역량 강화로 디지털포렌식의 신뢰성 확보	디지털포렌식	국정 14-4 업무 III-③
	㉗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견인하는 과학수사 역량 강화	과학수사	국정 14-4 업무 I-①, II-② 업무 III-②, IV-④
성과목표 4. 안보·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을 유지한다			
	㉘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	대테러	국정 14-5, 업무 III-④
	㉙ 안보수사 역량·탈북민 신변보호 강화 및 예방적 안보상황 관리	안보기획관리	국정 13-4 업무 I-③, II-③
	㉚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안보수사활동 강화	안보수사지휘	업무 III-①
	㉛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 보호를 위한 안보정보 분석 능력 강화	안보범죄분석	국정 14-1 업무 I-③, III-④
	㉜ 경호역량 강화를 통해 빈틈없는 경호업무 수행	경호	업무 III-④
전략목표Ⅲ. 현장 자긍심 제고로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뒷받침한다			
성과목표 1. 현장 중심의 정책을 개발·지원하여 치안역량을 강화한다			
	㉝ 정책추진 프로세스 강화로 국민체감 성과창출 견인	혁신기획조정	국정 13-3, 14-5 업무 I-②, III-②, IV-④
	㉞ 현장 활력 증진을 위한 인사제도 운영	인사	업무 IV-④
	㉟ 입법대응 체계화 및 현장 법률지원 확대로 경찰 법집행력 강화	규제개혁법무	국정 14-6
	㊱ 올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치안인재 양성	교육정책	국정 13-4, 업무 II-④
성과목표 2.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현장활력 기반을 마련한다			
	㊲ 국민 중심 감사활동 전개로 공정·투명한 치안행정 확립	감사	업무 IV-③
	㊳ 위기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예방·문제해결 중심 감찰활동 전개	감찰	업무 III-②, IV-③
	㊴ 경찰정책의 성주류화 실현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	양성평등정책	국정 66, 업무 IV-①

성과 목표	관리과제	소 관	국정기조 연계
성과목표 3.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치안을 통해 현장대응력을 강화한다			
	48 치안R&D와 치안산업 진흥으로 현장 지원	과학치안정책	국정 14-3, 업무 Ⅲ-②
	48 경찰 전산망 보호 및 데이터 기반 경찰행정 지원	정보화장비 기획	국정 8, 업무 Ⅱ-①
	47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차세대 정보화 서비스」 구현	정보통신	국정 56, 업무 Ⅲ-③, Ⅲ-④, IV-④
	48 현장 중심 경찰장비 개발·보급으로 치안현장 활력 제고	장비	국정 14-3, 업무 Ⅲ-②
	49 치안현장 헬기활용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항공	업무 Ⅱ-③, Ⅲ-②
성과목표 4.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으로 활력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한다			
	50 소통에 기반한 치안정책 수립·집행 적극 지원	경무	국정 14-6, 71 업무 IV-④
	51 현장활력을 제고하는 복지기반 확충	복지정책	국정 14-6, 업무 IV-④
	52 국민만족 치안을 위한 현장 재정지원 강화	재정	국정 14-6, 업무 IV-④
	53 국민과의 소통 강화로 주요정책·현안에 대한 신뢰·지지기반 마련	홍보	업무 IV-③